

軍



Military History

2014. 9. 제92호

史

- 영국의 평화운동과 노먼 에인절의 평화사상, 1900~1920
- 7월 위기와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에 대한 재고찰
-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영
-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 임진왜란 한·일 함선 전투력 지수 연구
- 17C 조선의 포수 훈련방식과 군율
- 러일 비밀협약과 러시아의 몽골정책
-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평화유지활동과 내전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 아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 92 號
2014.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4. 9. 제92호

- | | | |
|-----|---|---------|
| 1 | 영국의 평화운동과 노먼 에인절의 평화사상,
1900~1920 | 이내주 |
| 31 | 7월 위기와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에 대한 재고찰
- 독일과 러시아의 위협인식 - | 오인환 |
| 65 |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영 | 이신재 |
| 103 |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 우석훈 |
| 139 | 임진왜란 한·일 함선 전투력 지수 연구 | 정완희·민승식 |
| 167 | 17C 조선의 포수 훈련방식과 군율 | 김영준 |



軍史



- | | | |
|-----|---|--------------|
| 199 | 러일 비밀협약과 러시아의 몽골정책 | 석화정 |
| 233 |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에 관한 연구
- 태평양전쟁기와 미 군정기 미국의 승인 정책을 중심으로 - | 김영호 |
| 265 | 한국의 평화유지활동과 내전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 KMAIR
김인수 |
| 299 |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 이라크 전쟁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 | 설인효 |

부 록

- | | |
|------------------------|-----|
| 1. 연구소 동정 | 331 |
|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 333 |
| 3. 『軍史』誌 투고안내 | 337 |
| 4. 연구윤리예규 | 340 |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평화운동과 노먼 에인절의 평화사상, 1900~1920*

이 내 주**

1. 머리말
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평화운동
3.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과 에인절의 평화사상
4. 제1차 세계대전과 에인절의 국제평화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말에 이르러 통일 후 국가 결속 작업을 마무리한 독일제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국제적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보어전쟁(1899~1902)을 수행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영국은 독일 해군력의 증강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 S1A5A2A03034238).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건함경쟁’으로 불리는 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듯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한 세대 동안에는 실질적인 군비증강과 ‘적과의 전쟁에 대비하자’는 구호가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가효율화운동(National Efficiency Movement) 및 의무병역제(compulsory military service) 도입과 같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장들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20세기 초반기는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대중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 즉 평화에의 열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획기적인 한 사건이 전쟁 발발 불과 5년 전에 일어났다. 평화주의(pacifism)를 내세우며 전쟁을 반대하는 노먼 에인절(Norman Angell, 1872~1967)의 책,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이 발간된 것이었다.¹⁾ 1910년에 일반대중에게 선을 보인 이 책은 이후 불과 3년 사이에 2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에는 한 해에 5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이 책은 무려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평화에 대한 염원과 신조를 심어주었고, 이러한 공헌 덕분에 에인절은 193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였다.²⁾

1) 원래 에인절은 1909년 *Europe's Optical Illusion*이라는 총 120여 쪽에 달하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이를 전체 분량이 330여 쪽에 달할 정도로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제목까지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in Nations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로 변경하여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공전(空前)의 히트를 기록한 것이었다. *The Great Illusion*은 전체 3개 파트(Part I The Economics of the Case, Part II The Human Nature of the Case, Part III The Practical Outcome), 총 17개장으로 구성되었다.

2) K. Robbins, "Chapter 1 The Anatomy of the Peace Movement" in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Cardiff: Univ. of Wales Press, 1976), p.16. 그리고 에인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넓게는 유럽, 좁게는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19세기 중엽 이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및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마틴 시아델(Martin Ceadel)의 분석처럼, 섬나라라는 안보전략상의 상대적인 이점 및 일찍부터 자유주의가 꽃피어 다양한 주장들이 허용되어 온 정치문화로 인해 영국은 평화운동의 요람으로 인식되어 왔다.³⁾ 다양한 평화운동들 중 특히 에인절의 지적(知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학파의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이 평화운동의 큰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후에 콕턴주의(Cobdenism)라고 알려진 그의 평화사상은 국제 자유무역을 토대로 타국에 대한 내정(內政) 불간섭, 중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 상호 군사력 감축 등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었다. 그의 제자 및 추종자들은 1870년대 이후 콕턴 클럽(Cobden Club)으로 알려진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영국 정부의 정책에 스승의 사상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지만, 19세기 말 이래 유럽 열강들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던 탓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에인절의 저서가 발간됐고, 그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대중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인절이 내세운 평화주의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근대 국가시스템 상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에 결국에는 패자(敗者)는 물론이고 승자(勝者)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비합리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일반대중이 건재하고 있는 한 전쟁은 일어날

위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다음 저서가 유용하다: Martin Ceadel, *Living the Great Illusion: Sir Norman Angell, 1872~1967* (Oxford: Oxford Univ. Press, 2009).

3) Martin Ceadel, "Chapter 9 A Legitimate Peace Movement: The Case of Britain, 1918~1945", in Peter Brock & Thomas P. Socknat (eds.), *Challenge to Mars: Essays on Pacifism from 1918 to 1945*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99), pp.144~145.

수 없다는 논지였다.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본질적으로는 콤팩트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보다 진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에인절의 주장은 “전쟁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다”는 대전 직전의 우세한 일반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1914년 8월 대전 발발 이후에도 약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던 에인절의 평화주의는 전쟁의 총력전화가 심화되면서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즉,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결 국면 상황에서 “전쟁 발발은 불가능하다”고 외친 그의 주장은 이론적, 논리적 차원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상세계에서나 가능한 ‘공허한 메아리’ 또는 ‘터무니없는 수사(修辭)’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호워드 웨인로스(Howard Weinroth)에 의하면, 그의 책은 ‘신평화주의(New Pacifism)’⁴⁾의 등장을 고무하였고, 전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그의 평화사상은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자, 급진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정계의 주요 인사 등 거의 전 계층을 망라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거대한 환상』에서 제시된 에인절의 평화사상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후하여 한 세대에 걸쳐서 전개된 영국의 평화운동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에인절의 등장 이전까지 영국 평화운동의 흐름을 개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어서 『거대한 환상』에서 설파(說破)되고 있는 에인절 평화사상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이전 평화사상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4) 신평화주의는 에인절이 주장한 바와 같은 새롭고 합리적인 평화주의를 보다 오래 되고 전통적인 케이커주의 및 톨스토이 유형의 평화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세기의 전환기 이래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들 구(舊) 평화주의 및 신(新) 평화주의는 필요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Howard Weinroth, “Norman Angell and the Great Illusion: An Episode in Pre-1914 Pacifism”, *Historical Journal*, Vol. 17(3) (Sept. 1974), pp.551~574를 참고할 것.

통해 대전 직전에 그의 평화사상이 일반대중에게 크게 어필했던 이유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 발발로 곤경에 처했던 에인절이 평화사상의 기본 틀을 ‘전쟁의 무익성’에서 ‘집단안보’를 통한 국제평화 정착으로 전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벌인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평화운동

전쟁과 평화는 서로 대비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곤 한다. 전쟁은 흔히 투쟁과 기근, 죽음과 파괴, 그리고 어두움과 절망 등으로 비유되는데 비해, 평화는 질서와 조화, 화합과 공존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과 평화를 구분하는 선은 분명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각국은 흔히 전쟁상태도 그렇다고 평화상태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생존해 왔다. 전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이상(理想)으로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것은 최근세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평화운동(peace movement)은 한 세기 이전에 미약하게 불붙기 시작한 소수 지식인들의 각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제고가 하나의 과제로 부상한 것은 나폴레옹 전쟁이 남긴 유산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인간행동의 여러 측면들이 특히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의문시되기 시작했다. 노예제, 아동 학대, 무절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악이 인간사회에서 추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1816년 6월

런던에서 영국 최초의 평화협회(Peace Society)가 설립되었다.⁵⁾ 주로 웨이커교도(Quakers)였던 이 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국제적 연대를 형성,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약 20년 후 이들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중산계급 중심의 캠페인으로부터 믿음직한 우군(友軍)을 얻었다. 19세기 중엽 산업도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곡물법 폐지운동을 벌이던 콕턴과 브라이트(John Bright)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각국 간에 놓인 무역장벽의 제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쟁 방지책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이들이 보기에 전쟁이란 영속적 평화 유지의 근간인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귀족적인 시대착오주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당시 영국 파머스턴 정부의 강성(強性) 외교정책은 평화운동 진영을 실망시키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크림전쟁(1854~56)은 평화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일반여론조차도 평화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헨리 리처드(Henry Richard) 및 윌리엄 크리머(William R. Cremer)와 같은 유력한 평화 운동가들의 활동, 그리고 국제적으로 1899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개최 등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까지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여전히 미약하고 제반 난제에 직면해 있었다. 평화 단체들의 연말 총회보고서를 통해 볼 때, 이들은 개인적 실망, 재정 부족, 그리고 정치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의욕만 있을 뿐 실제로는 내세울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평화운동 지도자들은 평화운동에 대한 당시대 일반대중의 냉담한 태도에

5) Peter Brock, *Pacifism in Europe to 1914*(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2), p.378.

6) 최현미,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 사학』, 제72집(2003), 349~389쪽을 참고할 것.

크게 실망하였다. 실제로 당시 영국 노동계급은 자국 정부의 제국주의 진출과 보어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보어전쟁에 대해 다른 지방들보다 비판적 성향이 강했던 웨일스에서 실시된 1900년 선거에서조차 정부의 전쟁정책을 지지한 후보가 당선될 정도였다.⁷⁾

당시 영국의 분위기가 평화운동을 활성화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당대의 식자층도 인식하고 있었다.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홉슨(J. A. Hobson)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평화적 분위기의 취약성을 간파했으며, 정치사상가 홉하우스(L. T. Hobhouse) 역시 평화, 군축, 그리고 개혁 등에 대한 외침들은 이제 모두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점을 인정했다.⁸⁾ 이들 외에도 자유주의 성향의 지성인들은 세계가 조화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원리에 대한 강한 반대 사조에 직면해 있다고 느꼈다. 노동자들은 위대한 대영 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긍심에 도취되어 더 이상 개혁을 외치는 대중 집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중산계급조차 사회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질서의 확립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실시된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거둔 압승은 평화주의자들에게 오랜만에 희소식이었다. 자유당 내에는 급진주의자나 비국교도 출신의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기에 태생적으로 평화운동 진영은 자유당을 지지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평화운동가들은 자유당이 국제평화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시적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한 예로 당대의 대표적 평화운동가로서 190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던 크리머는 1907년 영 왕실이 주는 기사작위를 받았고, 같은 해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7)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9.

8) 특히 홉슨 사상에 대해서는 David Long, "J. A. Hobson and Economic Internationalism",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161~188을 볼 것.

국제평화회의에 영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1907년 모임 시에는 자유당 정부의 외무상이던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에게 독일과의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⁹⁾

당시 국제적 상황 전개도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고무하였다. 1907년 그동안 중앙아시아의 전략지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대립해온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제 유럽의 열강들은 삼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삼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이라는 적대적인 양대 군사블록으로 나뉘어 분쟁과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왕실 간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던 영국과 독일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과 평화란 단어는 영국 정치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편승해 평화운동가 혹은 평화주의자(pacifist)라고 불린 인사들도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¹⁰⁾ 당대의 대표적 활동가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 비슬리(Edward S. Beesly)의 평가처럼, 1907년이야말로 영국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분기점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전쟁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¹¹⁾

당시 평화운동 계열 팸플릿이었던 *Herald of Peace*가 논평한 바대로 제1차 대전 발발 7~8년 이전에 영국에서 평화운동은 ‘새롭고 보다 강력한

9)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9.

10) 평화주의자(pacifist)란 용어는 1907년에 이르러서야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이들을 범주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왜냐하면 평화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군비증강을 비롯한 전쟁을 고무하는 일체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는바 당시 평화주의자라고 불린 자들은 대부분 자유당 내 급진파 의원이나 독립노동당 의원들로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정부의 외교정책이 비록 군비증강이나 전쟁을 고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간혹 평화에 대한 자신의 양심 포기과 판단 유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들 초기 평화주의자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았고, 진정한 평화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점차로 평화주의자에게 평화의 문제는 정당의 정책을 초월하는 숭고한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1)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Oxford: Clarendon Press, 2001), p.176.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기존 평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적극 환영하였다. 평화운동가들은 전국규모의 회합을 개최함은 물론 당시 창설된 전국평화협의회(British National Peace Council) 조직을 활용, 평화운동을 하나의 통합된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¹³⁾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및 그로 인한 여론의 지지 덕분에 평화운동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몽상가라는 그동안의 통상적 인식으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흡하나마 실질적인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1908년 런던에서 열린 모임 시에 영국 내 모든 평화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윈저성에서 국왕과 자유당 정권의 신임 수상이던 허버트 애스퀴스(Herbert Asquith)의 환대를 받았다. 이때 향후 모든 국가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조정재판소를 통해서 국제 분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¹⁴⁾ 또한 이러한 전국적 모임을 계기로 4년 전에 설립된 바 있는 전국평화협의회는 기반을 보다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향후 이 단체가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온 평화운동 관련 각 분파의 활동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평화운동 내의 이러한 동향은 당시 영국 보수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던 군국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고조되는 전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병역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군의 원로였던 로버츠 원수(Field Marshal Roberts)는 영국민의 애국심 약화 및 국가방위에 대한 무관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전국의무병역제연맹

12) *Herald of Peace*, Jan. 1913, p.12.

13)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77.

14)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1.

(National Service League)의 창립을 주도했다. 이 단체는 1909년 한 해에만 무려 3만 5천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¹⁵⁾

이외에 로즈베리나 밀너 같은 당대의 유력 정치가들도 ‘지금은 전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적극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평화협회의 지도부는 이를 평화의 진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자유당 내 일부 의원들의 캠페인을 지지했다. 군국주의적 사조에 반대하는 일반대중의 모임이 전국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의무병역제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영국민의 자유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며 오히려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운동은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다. 평화주의자들은 자유당 정부의 의무병역제 도입 포기가 자신들이 실행한 반대활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실질적 측면에서 이들이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다. 국제적으로 열강들 간에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유럽 내에서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기초한 기존의 평화운동은 시대가 요구하는 행동 지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종교문제에는 무관심했으나 평화적 이슈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당시 영국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거대한 환상』을 발간, 평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노먼 에인절이었다.

15)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3.

3.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과 에인절의 평화사상

대전 직전 시기에 벌어진 평화운동의 제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노먼 에인절을 추종하는 평화운동이었다. 기존의 평화운동 진영이 ‘신평화주의’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대상은 바로 에인절의 캠페인이었다.¹⁶⁾ 그는 1910년 소개된 저술 (『거대한 환상』)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책은 발간 직후 무려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거의 50쇄를 거듭하면서 1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¹⁷⁾ 자신의 평화사상을 가능한 한 널리 전파하여 전쟁을 방지코자 한 에인절의 노력은 단기간 내에 브리튼 섬을 넘어서 독일과 미국으로까지 전파되었다.¹⁸⁾ 특히 1909년 이래 영국에서는 독일과의

16)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89.

17)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6.

18) 1913년에 에인절은 직접 독일을 방문, 주요 도시들(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뮌헨, 괴팅겐, 베를린 등)을 순회 강연하면서 주로 독일의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미국의 경우, 제1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하여 조속한 종전을 위한 미국의 역할 수행을 독려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에인절에 대한 명성은 이미 그의 책이 출판되었을 시에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나 서평을 통해서 식자(識者)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1911년 초반에 에인절의 『거대한 환상』에 대한 미국 언론매체의 반응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사고를 한껏 자극하고 진정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은 독자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는 당대의 수많은 저명인사들 및 비평가들로부터 무한한 칭송을 받고 있다(*New York Times*)”; “인간의 진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에 잡고 읽어보아야만 하는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책이다. 비록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핵심 논지는 거의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다(*Boston Herald*)”, “최근에 발간한 책 『거대한 환상』에서 저자 에인절은 우리들에게 감정적 혼돈 속에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듯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선사하고 있다(*Life*)”, “에인절은 그동안 평화운동 단체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주장해온 것들보다도 보다 설득력 있는 제안들을 한꺼번에 그의 책에서 선사해 주고 있다(*Army and Navy Journal in New York*).”

건함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해군예산의 증액 문제가 재차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호전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열세한 입장에 처해 있던 평화주의자들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자신들의 신조인 자유무역과 군비축소 정책을 새롭게 제기하는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기존 평화사상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론적 공백을 메꾸면서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당시 영국의 식자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영국 국내에서의 반향이 대단하였다.¹⁹⁾ 1913년까지 전국적으로 런던, 맨체스터, 리즈, 글래스고를 비롯한 영국의 도시들에서 50개 이상의 에인절 평화사상 연구그룹이 결성됐고, 적어도 10개 대학에서 토론클럽이 등장하였다.²⁰⁾ 역사가 키스 로빈스(Keith Robbins)의 평가에 의하면,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제1차 대전 발발 수년 전 기간에 영국에서 국제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회자된 개념이었다.”²¹⁾

19) 에인절의 책에 대한 영국 언론들의 반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다른 어떠한 책도 『거대한 환상』보다도 주목을 끌거나 사고를 자극하는 책은 없다(Daily Mail)”, “노먼 에인절은 우리 세대의 저술가로서는 아마도 18세기에 조나단 스위프트 이래 가장 위대한 팸플릿 작가들 중 하나인 콕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Nation)”, “에인절의 중심 태제는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여 1756년에 일어났던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외교혁명을 촉발할 것이다(Edinburgh Review)”, “비관자들은 에인절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분석에서 어떠한 심각한 결점을 결코 찾아 내지 못할 것이다(Daily News)”,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읽어야만 하는 책이다(War Office Times)”, “최근 수년 동안 이토록 흥미롭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London Investors' Review)”, “어느 날 갑자기 에인절이 그의 책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온 유럽의 정치가 및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The New Statesman).”

20)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당시 학생회 회장으로서 이후 에인절의 핵심 추종자이자 조연자로 활동한 해롤드 라이트(Harold Wright)의 주도하에 에인절의 평화사상을 스터디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후원에 부응하고 평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하에 에인절은 1913년에 *War and Peace*라는 이름의 월간 잡지를 창간하였다(J. D. B. Miller, *Norman Angell and the Futility of War*, London: Macmillan, 1986, p.7).

21) Keith Robbins, “Public Opinion, Press and Pressure Groups”, in F. H. Hinsley (ed.), *British Foreign Policy under Sir Edward Grey*(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p.77.

평화주의에 대한 그의 새로운 메시지는 정복전쟁의 경제적 불합리성이라는 단순한 명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기존에 평화운동가들이 내세웠던 도덕성(morality)보다 오히려 자기이익(self-interest)을 강조한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실천 가능한 전쟁반대 이론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자신의 책에서 에인절은 각국의 군사력과 이에 내재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점(利點)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평화운동의 주창자들은 간혹 전쟁은 비록 그것이 비도덕적일지언정 승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어느 국가든지 타국의 재산을 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평화주의자들의 도덕적인 호소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던 평화운동에 대해 에인절은 시의 적절하게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던 것이다.²²⁾ 그의 사상은 평화에 대한 참신한 논의를 갈망하고 있던 평화주의자들은 물론이고 국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할 묘책을 찾으려 초심초사하고 있던 유력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근본적으로 에인절은 전통적인 평화운동과 그 맥을 달리하였다. 그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강조하고 전쟁을 전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평화사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평범하지 않은 그의 성장 배경이 있었다.²³⁾ 실제로 1910년 책이 주목받기 이전까지

22) 에인절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도 영속적으로든 일정 기간이든 간에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타국의 교역활동을 파괴하거나 크게 훼손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교역은 천연자원의 존재 여부 및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만일 독일의 침략으로 인해 영 제국이 완전히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에 기초하고 있는 산업과 금융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 측 자본도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3)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적 구조 때문에 패전국으로부터 어떠한 공물을 수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4) 어떠한 국가도 영제국의 식민지들을 차지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영국은 이러한 손실로 인해 비록 정서적으로는 손상을 입는지 모르나 물질적으로는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3rd ed. (London: William Heinemann, 1911), pp.27~29를 볼 것.

23)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Albert Marrin, "Chapter 1. Finding the Life's

그는 전문적인 평화운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영국의 링컨셔에서 태어난 그는 사업으로 성공한 부친 덕분에 유년시절을 영국에서 보낸 후 고등학교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대학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닐 수 있었다. 이후 잠시 영국으로 귀국했다가 10대 후반에 도미(渡美)하여 1890년대의 대부분을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소떼를 돌보는 카우보이로 일했다. 이때 틈틈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덕분에 1898년 미국의 군소 신문사들을 위해 일하는 파리 주재원이 될 수 있었다. 파리에서 일하던 중 1905년 영국의 신문 재벌 노스클리프 경 소유의 *Daily Mail*지 유럽 담당 편집자로 채용되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에인절은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군비경쟁과 국제적 위기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복잡하게 뒤엉킨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신문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집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09년에 그는 자비(自費)로 100여 쪽 분량의 『유럽의 착시(錯視, *Europe's Optical Illusion*)』라는 책자를 발간²⁴⁾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수정 및 보완한 『거대한 환상』으로 일약 출판계의 신데렐라로 부상한 것이다. 그는 책 판매는 물론이고 영국 전역에서 쇄도하는 강연 요청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에인절이 빠르게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당시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절친으로 보수진영의 대표적 정치가였던 에셔 경(Lord Esher)의 적극적 후원이 있었다.²⁵⁾ 에인절의 책을 읽고 “산업화된 다른 국가를 쳐들어가는 침략

Work”, in *Sir Norman Angell*(Boston: Twayne Publishers, 1979), pp.15~55를 볼 것.

24) 이때 에인절은 *Daily Mail*에 기고자로 명기되고 있던 자신의 긴 본명(Ralph Norman Angell Lane)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간 이름인 Norman Angell이라고 필명을 사용했는데, 『거대한 환상』이 대히트를 치면서 이후 그는 Norman Angell로 알려지게 되었다.

25) K. Robbins, *The Abolition of War: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1914~1919*, p.15.에서 경은 에인절의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단순히 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행동으로 옮겨

전쟁은 무익하다(futile)”는 그의 논지에 크게 공감한 에셔 경은 당시 외무상이던 그레이에게 이 책에 대해 말했고, 후자는 런던 길드 홀에서 행한 영국의 외교정책 관련 연설에서 에인절의 주장을 언급했다. 또한 당대의 저명한 기업가였던 리처드 가턴 경(Sir Richard Garton)은 에셔 경의 조언 및 제안에 따라 사재(私財)를 출연, 1912년에 에인절 후원재단(Garton Foundation)을 설립했다.²⁶⁾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기존 평화사상과는 달리 에인절의 평화사상(Norman Angellism)은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군비 증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군비축소를 위한 호소는 무의미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거대한 환상』에서 에인절은 과거 시대에 전쟁은 승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을지 모르나 산업화된 오늘날에는 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및 국제질서의 필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전쟁은 승자나 패자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의문의 여지없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감히 여러 독자들에게 에인절이 최근에 선보인 『거대한 환상』을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책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상을 뒤집는 강도(強度)에서 갈릴레오의 지동설도 에인절의 논제에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6) 여러 명의 은행가들과 더불어 에셔 경과 전임 수상이었던 발푸어(A. J. Balfour)가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 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널(*War and Peace*, 1913년 10월 초판 발간)을 발행하고 스터디 과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인절이 직접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에인절은 미국의 카네기재단 및 몬트리 그룹과 같은 부유한 퀘이커교도 가문으로부터도 기금을 받았다. 이토록 에셔가 에인절의 책에 집착한 이유는 당시 심지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위대한 국가건설 및 국부증대의 중요 수단으로 전쟁을 옹호하는 기류에 대한 반대 논리를 바로 에인절의 논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렬한 호응에 보응한다는 맘이 있었는지 에인절은 『거대한 환상』의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1914년 초에 출판한 또 다른 책(*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y*)을 에셔 경에게 헌정하였다.

그동안 인정되어 온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상업적, 사회적 이점은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의 부와 번영은 이 나라를 침략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강대국들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되고 있는 이러한 이론은 순전히 착시(錯視)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군사적, 정치적 힘은 해당 국가에 어떠한 상업적 이점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부를 빼앗고 파괴하는 것 역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정복함으로써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²⁷⁾

다시 말해, 군사적 승리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발상은 이제는 일종의 ‘거대한 환상(great illusion)’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당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번영의 초석이 되는 국제교역 및 금융제도를 와해시킴으로써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재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평화사상의 핵심 개념들 중 하나인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개념은 그가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것은 아니었다. 이는 19세기 중반 국제 평화운동의 대부였던 콕턴의 주장에다가 이후 발달된 국제 금융망의 중요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콕턴이즘(Cobdenism)이라 불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재구성한 것이었다.²⁸⁾ 콕턴이 정부 간섭이 없는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처럼 에인절 역시 평화를 달성하는데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비록 자신의 평화사상에서 정부 역할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는 근본적으로 일반대중의 역할을 신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을 세계평화 유지의 주역으로 인식한 일부 평화주의자들과는 출발부터 구별되었다.

그렇다고 에인절이 콕턴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었다.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지적 선배였던 콕턴에 비해 보다 자유주의적이면서도

27)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1911), p.vi.

28)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90.

덜 급진적이었다.²⁹⁾ 콕턴과는 달리 그는 귀족, 군수업자, 그리고 신문발행인 등을 비난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금융이익의 상호의존(mutuality) 관계에 대한 이론을 널리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서유럽 강대국들 간에 전쟁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에인절은 ‘전쟁의 무익성’을 내세우면서 당대의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던 정복과 힘의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어느 한 국가가 무력을 통한 대립, 군국주의, 전쟁이나 정복 등의 수단으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국제적 금융 및 교역의 발달로 인해 각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한 산업국가의 운명은 다른 국가의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국제 금융은 매우 상호의존적이고 교역 및 산업과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적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자국의 교역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힘이나 군사력이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국제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 고로 이러한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소국의 상인이나 제조업자들도 국제시장에서 강대국의 산업가들과도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에인절 평화사상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일반대중에 대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에인절이 느끼고 있던 딜레마는 일반국민들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반대되는 정부의 군비증강과 호전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사실이었다. 일반대중은 평화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³¹⁾ 하지만 이들이 전쟁 발생 원인에 대해 아무리 많이

29)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91.

30)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1911), pp.vii.

31)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에인절은 교육을 통해서 일반대중이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4. 제1차 세계대전과 에인절의 국제평화 활동

평화에 대한 에인절의 과도한 낙관주의는 심지어는 흡슨으로부터 ‘평화주의자의 환상’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³²⁾ 비단 흡슨과 같은 학자들만 에인절의 평화사상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는 당대의 평화 관련 저널들로부터 크게 두 방향에서 비판을 받았다. 우선,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금융을 평화문제에 접근하는 토대로 보기에는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오직 심오한 심적 격변에 기초한 도덕적 저항을 통해서만 전쟁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에인절의 평화사상에 내포된 물질주의를 비판하였다. 그가 19세기 중엽 이래 평화운동 안에서 확산되고 있던 일종의 세속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화 운동가였던 스미스(E. G. Smith)는 당장은 에인절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그의 평화사상으로는 평화를 구출할 수 없기에 평화운동은 예전처럼 순수한 도덕적 열정의 시대로 뒤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³³⁾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08.

32) Paul Laity,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p.191.

33) 이러한 비난에 대해 에인절은 *Concord*지에 “Are we sordid?”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응수하였다(*Concord*, Oct. 1913, pp.93~94). 그는 스미스의 사상은 수도원에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고 있는 소수의 성자들에게나 어필할 수 있을 뿐 결코 일반대중의 사고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에인절의 평화사상에 대한 두 번째의 도전은 급진주의 진영으로부터 왔다. 일반적으로 급진주의자들은 군수업자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에인절이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듯하자 비판의 날을 세운것이다. 예를 들어, 『거대한 환상』에 대한 서평에서 패러(J. A. Farrer)는 에인절의 책 속에서 “진정한 국가이익과는 반대로 사익(私益)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급의 이익이 옹호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³⁴⁾ 왜냐하면 에인절은 국제적 경제활동, 특히 자본의 활발한 이동을 강조하였는데 당시 군수업체들이 국제적으로 거대 자본집단으로 대두하면서 에인절이 군수업체들의 활동까지도 허용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당대 영국의 대표적 군수업자들 중 하나였던 윌리엄 암스트롱(William Armstrong)이 대금(貸金)만 지불한다면 세계 어느 곳의 누구에게든지 자사(自社)가 제작한 전함을 판매할 수 있다고 천명하자 에인절의 평화사상에 대한 급진주의자들의 의구심은 심화되었던 것이다.³⁵⁾

무엇보다도 에인절에게 결정적 타격을 준 사건은 1914년 8월 초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비록 그 자신은 대전 전에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거대한 환상』과 다른 소책자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유럽의 선진 산업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창해온 터인지라 어찌되었든 대전 발발로 인해 그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산업국가인 영국은 중간자적 위치에서 이 충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의 소망과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 발발 직후 영국정부가 내린 신속한 참전 결정은 그동안 전쟁의 무익성을 주장하며

34) *Concord* (Dec. 1910), pp.141~143.

3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줄고 「W. 암스트롱과 영국 군수산업의 성장, 1854~1900」 『영국연구』 제28호(2012. 12월), 37~64쪽을 참고할 것.

평화사상을 설파했던 에인절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유럽대륙에서의 전쟁 발발 소식에 처음에는 실의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던 에인절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전쟁의 무익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론을 제시해 온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대전 발발 직전에 일부 인사들과 함께 영국의 참전 반대를 촉구할 목적으로 중립연맹(Neutrality League)을 창설했다.³⁶⁾ 이들은 영국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채 유럽대륙 교전국가들 간에 평화 교섭을 중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서유럽 국가들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결국에는 러시아가 유럽을 압도하는 군사국가로 대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인 1914년 8월 4일 영국정부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중립연맹은 유명무실해 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그의 활동이 비애국적으로 비친 탓에 에인절은 대전 이전 자신의 적극 후원세력이던 보수진영 인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에인절은 대외적으로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으로 전쟁 반대를 지지한 인사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던 노동당으로 옮겨갔다. 여기에서 그는 노동당 내의 급진적 정치가들 - 트레벨리언(Charles Trevelyan), 모렐(E. D. Morel), 폰손비(Arthur Ponsonby), 스노든(Philip Snowden), 맥도날드(Ramsay MacDonald) 등 - 과 민주통제연합(Union of Democratic Control, UDC)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³⁷⁾ 전쟁은 에인절을 보다 좌파

36)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01.

37) M. Swartz, *The Union of Democratic Control in British Politics during the First World War* (Oxford: Oxford Univ. Press, 1971), pp.21~23. UDC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으나, 에인절은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가

성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UDC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자 그는 이제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에인절 자신도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정치가들과의 동참 활동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비록 현실정치에서는 노동당에 발을 담갔으나 본질적으로 그의 정치적 성향은 19세기 영국 중산계급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잇는 급진주의(radicalism)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인절이 팔짱만 끼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대전 이전 자신이 제기한 국제관계 및 평화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응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에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는 영토할양이나 배상금 부과가 없는 평화, 모든 국가가 별다른 제약 없이 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평화의 수립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영국의 일반대중에게 자신의 견해를 어필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에인절은 활동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자신의 평화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개인적 여건에 더해 외부적 상황도 에인절의 도미(渡美) 결심을 도와주었다. 전쟁상태가 지속되면서 1915년에 접어들어 UDC가 내세운

능한 한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고 주로 UDC의 목표 및 이념 제기와 같은 교육관련 이슈에 관심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는 기질적으로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좋아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대전 전에 가턴재단과 같은 보수당 진영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았던 터인지라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가 난처했기 때문이다. 노동당 진영에의 가입으로 그가 느낀 불편한 심경은 대전 이후 잠시 동안 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시에도 지속되었다(Angell, *After All*, pp.227~228). 어찌되었든 에인절처럼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가입한 덕분에 설립 초반에 UDC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38) A. S. Johnson, "Norman Angellism Applied", *New Republic*(21 Nov. 1914), pp.20~22.

목표들 -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 및 비밀 외교정책 반대, 각국 대중정당 중심의 전후처리 논의, 패전국에 대한 응징 반대 및 임의적인 국경선 조정 반대 - 이 대외적으로도 관심을 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밀외교의 철폐 및 국제적인 상호이해를 통한 평화의 모색은 이 시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을 비롯한 미국 진보주의 진영의 호응을 받았다. 때마침 1915년 초에 카네기재단이 그해 여름에 코넬 대학교에서 개최될 하계 캠프에 에인절을 강사로 초청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드디어 그해 5월 중순 에인절은 미국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넜다. 계획된 하계 스쿨 종료 후 그는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평화운동을 지속하였다. 그는 저술활동을 통해 유럽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후 미국이 국제평화를 위해 취할 리더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⁹⁾ 무엇보다도 당시 미국 정계의 실력자였던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윌슨 대통령에게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⁴⁰⁾

미국 체류 기간에 그는 무엇보다도 전후에 현실화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운동의 핵심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⁴¹⁾ 전쟁이 진행되면서 에인절은 비인회담 이후 형성되었던

39) 이와 관련된 대표적 저술로 *America and the New World-State: A Plea for American Lead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1915)을 들 수 있다.

40) 과연 에인절이 어느 정도나 윌슨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에인절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사적으로 윌슨을 한 차례 만나 대화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짧은 것이었고, 에인절은 주로 저술활동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기하였다(Norman Angell, *After All: The Autobiography of Norman Angell*, New York: Farrar, Straus and Young, 1951, pp.210~211). 예컨대, 에인절은 앞에서 언급한 *America and the New World-State* 이외에 여러 글들(*The Dangers of Half-Preparedness*, *The World's Highway*, *The Political Conditions of Allied Success*, *War Aims* 등)을 *New Republic*에 기고한 바 있었다.

41) 전간기 동안에 에인절은 세실 경(Sir Robert Cecil) 및 머레이(Gilbert Murray) 등과 더불어 국제연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다. 영국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는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노동당에 가담하였고, 1929~31년에는 브래드퍼드 북

유럽의 협조를 뒤이은 새로운 형태의 ‘유럽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원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포함하는(곧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을 망라하는) 일종의 동맹체제인 ‘국제연맹’의 설립으로 나아갔다. 이는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적 안보까지 책임지는 국제기구였다. 이는 특히 1930년대에 그가 역설한 이른바 ‘집단안보’라는 개념에 근접한 것이었다. 실제로 종전 후인 1919년에 애인절은 베르사유 평화조약 회담 현장을 참관할 목적으로 파리로 갔다. 이곳에서 그는 논의되고 있는 조약의 내용들이 평화회담 개최 이전에 자신이 발표한 글에서 비판적으로 예견한 바대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⁴²⁾

집단안보에 대한 논의는 콤팩트학파의 불간섭주의와 유사한 견해를 견지해 오던 애인절의 초기 입장이 바뀌었음을 암시했다.⁴³⁾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여론의 호응이나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정복전쟁의 무익성을 알리는 데 열중했듯이 이제는 집단안보의 원칙과 논리를 설파하는데 주력하였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하에서 자국만의 국가안보를 추구하려고 할 시 이는

쪽(Bradford North) 지역구의 노동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1931년에 그는 맥도날드 수상에 추천으로 기사작위를, 1933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30년대에 국제연맹을 통한 집단안보를 강력하게 지지한 그는 1935년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공에 대한 국제연맹의 미온적인 대처에 크게 실망하였다. 또한 그는 점증하는 국제적 긴장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던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 노선에 공감하면서 윈스턴 처칠을 적극 지지하였다. 제2차 대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그는 대전 후 영국으로 되돌아 와서 여생을 보내다가 1967년에 죽었다. 평생 그는 국제관계와 관련된 40권 이상의 책을 발간하였다. 그에 관한 개인 자료들(personal papers)은 그의 유지에 따라서 미국 인디애나 주 먼시(Muncie)에 소재한 Ball State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2) 그가 발간한 글은 *The Peace Treaty and the Economic Crisis of Europe* 이었다.

43)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p.112.

국가 불안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질서 있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 법, 그리고 기구 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범세계적 차원의 무력 공동체가 요구되었다.⁴⁴⁾ 에인절은 이러한 논리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등이 나치 독일의 호전성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회피하고 있던 1930년대 동안 국제연맹의 운용에,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의 역할에 적용했다.

5. 맺음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에인절은 제1차 대전 발발 수년 전에 『거대한 환상』을 발간했다. 여기에서 그는 전쟁의 ‘무용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가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열기는 기존 평화운동과 결합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제1차 대전이 발발하기 몇 달 이전에 에인절은 장차 벌어질 전쟁은 과거 전쟁에 비해 덜 잔인할 것이라는 예견을 담은 또 다른 소책자를 발간했다.⁴⁵⁾ 하지만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그의 예상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쟁 기간 내내 그는 ‘이상주의’의 화신으로 지목되어 현실주의 진영의 주 비판 대상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에인절은 현실 감각을 결여한 채 공상적인 평화사상을 내세운 인물일까? 유럽 열강들이 치열하게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던 대전 이전 상황에서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과연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었을까?

44) N. Angell, “International Anarchy”, p.48.

45) Norman Angell,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y*(London: Heinemann, 1914).

그의 주장과는 달리 군비경쟁이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승리라는 것이 ‘거대한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무익성(無益性)을 주장한 그의 사상이 ‘거대한 환상’은 아니었을까?

물론 애인절이 활동한 전(全) 시대를 관통해 그의 주장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견해는 ‘이미 증명을 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일반화는 공개적으로 비난을 자초하였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에 대한 혐오로 인해 그는 주권국가 및 이에 대한 해당국 국민들의 귀속의지를 저평가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이성의 능력을 과도하게 신뢰한 탓에 일반대중의 전쟁에 대한 충동이나 욕구가 교육을 통해 억제될 수 있다고 과신하였다. 국제경제에 대한 콧단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탓에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식민지는 유지비용이 더 소요되고 그곳의 주요 자산을 식민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집착한 탓에 그는 식민지가 나름대로 식민모국에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했다.

오늘날 애인절의 평화사상이 무시되고 있다면, 이는 아마도 국제관계에서 합리주의(rationalism) 사조가 제2차 대전 이후에 낡은 사상으로 낙인찍히고 그 반대로 현실주의(realism)가 주류로 대두했기 때문일 것이다.⁴⁶⁾ 애인절은 군비 증강은 그 자체로 서로 간에 적대감을 고무할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적대적인 양국 국민들 간에 협력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전쟁 이외에는 군비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애인절의 견해는 오늘날 상황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현실적인 요소를

46) J. D. B. Miller, “Chapter 5 Norman Angell and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 - War Idealism Reassessed*, p.118.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20세기 전반기에만 유효했던 것일까? 다시 말해, 그는 실현될 수 없는 주장만을 외친 ‘이상주의자’에 불과했던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사상 중 상당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름대로 의미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⁴⁷⁾ 1980년대에 접어들어 그의 평화사상 및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재평가가 볼드윈(David Baldwin), 밀러(J. D. B. Miller), 그리고 나바리(C. Navari)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이들은 20세기 전체를 관통해 볼 때, 에인절이 내세운 국제관계 이론은 상당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수정주의적 시각을 내세운다.⁴⁸⁾ 에인절의 주저인 『거대한 환상』은 대표적인 반전(反戰) 저작이지만, 동시에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를 크게 발전시킨 역작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평화운동에서 에인절이 이룩한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및 이론적 발전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 에인절이 체계화한 상호의존 관계는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상호의존이론이며, 국제적 시스템의 변화를 사회변화와 접맥시킨 선구적 연구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환상』에서 그가 역설한 산업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에 대한 논제는 중요하고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에인절이 평화를 유지하는 힘으로서 상호의존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측면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특히 국제관계에서 현대까지도 여전히 유용하고 어느 면에서는 자본주의

47) 예컨대, 그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실체, 산업화된 강대국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무익함, 국가 간 상호의존의 중요성,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속성, 민족주의와 같은 오도된 열정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의 측면에서 사상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48) C. Navari, “The Great Illusion Revisited: the International Theory of Norman Angel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1989), p.341.

화가 만연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분석적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에인절의 평화사상은 그 시대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평화의 수사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상적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는 ‘평화의 복음’임에 분명하다.

(원고투고일: 2014. 7. 1, 심사수정일: 2014. 8. 12, 게재확정일: 2014. 8. 20)

주제어 : 제1차 세계대전, 노먼 에인절, 거대한 환상, 평화운동, 상호의존성, 전쟁의 무의성, 리처드 컵턴, 신평화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민주통제연합

49)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David Baldwin, “Interdependence and Power: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4(1980), pp.471~506 ; C. Navari, “The Great Illusion Revisited: The International Theory of Norman Angel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1989), pp.341~358을 참고할 것.

<ABSTRACT>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and Norman Angell's Ideas on Peace, 1900~1920

Lee, Nae-joo

In the years before the First World War, Norman Angell(1872~1967) published a book, *The Great Illusion*, which analyzed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industrial states, the ills of armed conflict, and the disutility of war. It was widely acclaimed and promoted with fervor by proponents of the peace movement and even by the general public. It had been sold over two million copies from 1910 to 1913, and had been translated into twenty-five languages.

Angell's main theme was the futility of war. According to him, the notion that one nation could gain interests by armed confrontation was a 'great illusion'. Large industrial powers had become so economically interdependent with one another that the war was profitable neither for victor nor for loser. Angell's ideas on peace cannot be lightly dismissed, for in th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Great War they inspired the 'New Pacifism' and also exercised a pervasive influence upon the minds of peace movement activists and politicians, deluding them with an optimistic view of world peac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analyze his ideas on peace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Angell's doctrine, coming as it did at a moment of crisis in European affairs, contributed to rejuvenate the old faith in the peace movement and to reinforce the tradition of liberal internationalism in Britain. By doing this it refurbished and perpetuated the 'pacifist illusion'. And his discussion on industrial states' interdependence and the underlying irrationality of war is significant

and useful even today, especially in examining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ey Words : The First World War,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Peace Movement, Interdependence, Futility of War, Richard Cobden, New Pacifism, Liberal Internationalism, Union of Democratic Control

7월 위기와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에 대한 재고찰

- 독일과 러시아의 위협인식 -

오 인 환*

1. 서론
2. 7월 위기와 위협인식
3. 독일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4. 러시아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5. 결론 : 위협인식의 연쇄반응과 정보전, 그리고 독일 패러다임

1. 서론

20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과 전차와 같은 무기체계의 본격적인 활용에 의한 전쟁양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전쟁수행을 위해 총동원되는 총력전이라는 개념을 낳은 전쟁으로 기억된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양차대전이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한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20세기의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재조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그 주된 원인이 독일의 세계정책(Weltpolitik)이었든, 술리펜 계획이었든 독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과, 독일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 국가들의 군주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군부의 서로 다른 판단으로 인한 연쇄적인 정책결정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독일이 사라예보 사건 이전부터 영국과의 경쟁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주장한 피셔¹⁾에 의해 제기되었고, 독일의 세계정책을 분석한 가이스(Immanuel Geiss)²⁾에 의해 지지되었다. 폴 케네디 또한 영국과 독일의 패권경쟁이라는 측면³⁾에서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테일러의 경우⁴⁾,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시간표에 의한 전쟁(War by Timetable)’ 논의를 통해 술리펜 계획의 경직성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전쟁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원인에 관한 그 간의 논의는 피셔 논쟁과 독일의 책임론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최근의 연구 중 새뮤얼 윌리엄슨(Samuel Williamson, Jr)은 특히 독일의 원인제공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연구되었던 1차 세계대전 연구의 편향성을 독일 패러다임(the German Paradigm)⁵⁾으로 지적하며, 독일의 원인

1) Fritz Fischer, 「World Policy, World Power and German War Aims,」 in H.W. Koch(e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The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London:Macmillan, 1984, pp.128~188.

2) Immanuel Geis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in H.W. Koch(e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The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London:Macmillan, 1984, pp.65~79.

3) Paul Kennedy,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London, 1980)

4) A.J.P.Taylor, 「War by Time-table,」 *From the Boer War to the Cold War: Essays on Twentieth-Century Europe*, London:Hamish-Hamilton, 1995.

5) Jack Levy and John Vasquez,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Structure, Politics, and Decision-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30~35.

제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만큼 다른 국가의 원인제공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그 만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 의거한 독일의 전쟁책임과 배상금 부여로 인한 정치적, 도덕적, 법적인 독일에 대한 책임론이 전쟁 발발 원인 분석에 영향을 주어 객관적인 원인 평가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독일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연구들은 과연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독일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피셔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1972년 에르트만(Erdmann)이 리츨러(Riezler)의 일기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에르트만과 제힐린(Zechlin)은 독일의 제국수상 베티만-홀벡(Theobald von Bethmann-Hollweg)의 경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전쟁을 의도하지 않았으며⁶⁾,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한 것은 세계열강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닌 방어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⁷⁾ 닐 퍼거슨(Niall Ferguson) 또한 피셔가 독일이 영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패권을 추구하였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영국에게 독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외교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독일이 팽창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한 위협에 몰린 상태에서의 도박(gamble)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⁸⁾ 그리고 퍼거슨은 이 같은 도박의 선택도 사실 러시아의 총동원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 존 키건은 테일러의 '시간표에 의한 전쟁'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미 1904년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군사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6) 정상수, 「1914년 7월 위기: 발칸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길목에서」, 『역사교육』 125권, 역사교육연구회, 2013, 294~296쪽.

7) Bernd Jürgen Wendt, 「1차 세계대전 발발에 관한 토론의 현황」, 정현백 옮김, 서양사론, 1985, 127쪽.

8) Niall Ferguson, *The Pity of War*, Penguin Press, 1998, p.25

9) 정상수, 전제서, 2013, 324~327쪽.

보불전쟁 이후 신속한 병력의 동원과 배치를 위해 다소 경직되지만 구체화된 동원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키건은 이러한 군사계획은 군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고안되었을 뿐이며, 군부의 계획은 정치인들에 의해 언제나 거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근거로 1905년에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준비되었던 솔리펜 계획을 베트만 - 홀벡은 1912년 12월에 되어서야 알게되며, 군사정책과 전쟁계획은 육군성(the War Ministry)과 의회가 배제된 채 총참모부(the Great General Staff)가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¹⁰⁾

요컨대, 독일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이 아니라 유럽전쟁을 감수하고, 또 의도했다는 주장과, 독일은 당시 유럽의 세력균형과 동맹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¹¹⁾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반드시 유럽전쟁을 의도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선택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관점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국면이 바로 7월 위기(the July Crisis)라 볼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6월 28일 직후 발발되지 않았으며, 최초의 군사적인 침공은 8월 4일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라예보 사건과 전쟁 발발 사이의 기간인 7월 위기에서 각 국가의 위협인식과 연속적인 선택 가운데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6월 28일과 8월 4일 사이의 기간-7월 위기-에 나타난 독일, 러시아의 위협인식과 정책결정을 정치인과 군부로 나누어 1차 세계대전 당시 각 국가의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국가의 의도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만약 독일이

10) John Keegan, *The First World War*, London:Hutchinson, 1998, pp.30~31.

11) 당시 이중제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의미하며, 편의상 오스트리아로 지칭한다.

팽창적인, 혹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독일의 정치인이었는가? 아니면 독일의 군부였는가?, 아니면 군주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당시 유럽 국가들의 군주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군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의 차이와 그에 따른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은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의도의 복잡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당시 유럽 국가들의 위협인식과 의도를 하나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고는 잭 레비, 새뮤얼 윌리엄슨, 로널드 밥로프(Ronald Bobroff), 정상수 등의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 7월 위기에 나타난 독일과 러시아의 입장을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 패러다임을 재평가하며, 각 국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위협인식을 가졌던 정치인과 군부의 입장의 차이를 확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 문제에서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러시아 또한 7월 위기 중 사라예보 사건을 유럽전쟁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7월 위기와 위협인식

국제정치학에서 언급되는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¹²⁾이란, 일반적으로 상대국가의 의도와 능력을 한 국가가 얼마나 위협으로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한 점은 위협인식도 하나의 인식(perception)이라는 점이다. 즉, 실제로는 위협이 아닌 상황임에도

12) Raymond Cohen,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risi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pp.3~5.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위협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관련 국가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국가가 상대국가에 대해 위협이 될 만한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때, 상대국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위협적인 의도가 없음에도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나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인(misperception)이 실제 상황에서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위협인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인 가브릴로 프린치프(Gavrilo Princip)에 의해 살해된 시기부터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기까지의 일련의 외교와 동원령 결정에서 나타나는 각 국가의 위협인식은 발칸지역에서의 갈등이 유럽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대한 지원이 큰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유럽전쟁에 별다른 이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영국이 참전하였으며, 또한 발칸 지역에서의 갈등 해결을 의도할 것이라고 예상된 러시아가 오히려 국지전을 넘어선 유럽전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도 7월 위기 중 나타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이 달랐기 때문이며 7월 위기 중 나타난 당시 유럽의 외교와 동원령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인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군부와 최종적인 군사작전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간의 긴밀한 조정(consultation)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과 군부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군부의 동원계획은 7월 위기 간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논문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른 연구들의 특징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제국주의, 군사주의, 비밀외교, 민족주의, 공세지상주의(the Cult of the Offensive) 등의 한 거시적 요인이나 한 국가의 정책에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데 있다.¹³⁾

니얼 퍼거슨은 오히려 당시 비밀외교가 식민지 문제와 해군문제에 대한 타협을 이뤄내는데 성공적이었으며, 독일과 영국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¹⁴⁾ 잭 레비(Jack Levy)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이 당시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았던(inadvertent) 전쟁이었다는 관점을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commonly-held view)으로 표현하며 7월 위기와 동원령 결정과 관련된 복잡한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¹⁵⁾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한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각 국가의 계층(classes)과 정치인, 군부,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정당이라는 서로 중첩되어 있는 권력 네트워크(power networks)가 서로에 대한 조정에 실패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다.¹⁶⁾ 휴 스트레천(Hew Strachan) 역시 독일의 세계정책은 독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사용하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의 세계정책 자체가 독일로 하여금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만 독일의 세계정책이 해군과 식민지, 그리고 경제라는 세 가지

13)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Decisions for War, 1914~19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5~8.

14) Niall Ferguson, *The Pity of War*, Penguin Press, 1998, pp.442~444.

15) Jack Levy, Thomas Chirstensen and Marc Trachtenberg, 「Correspondence: Mobilization and Inadvertence in the July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Summer, 1991(Vol. 16, No. 1) p.189.

16)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741.

측면에서 당시 유럽의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¹⁷⁾

3. 독일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총살을 당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발칸지역에서의 전쟁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자 하였다. 7월 2일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셉(Franz Joseph I)은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응징하겠다는 친서를 독일 황제인 빌헬름 2세(Wilhelm II)에게 외교부 차관 호이오스(Alexander Graf von Hoyos)를 통해 보낸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원하는 것은 세르비아와의 전쟁 시 필요한 독일로부터의 지원약속이었다. 7월 5일 정오 즈음, 호이오스로부터 오스트리아 황제의 친서를 전달받은 오스트리아 대사 쇠기에니(László Szógyény-Marich)는 빌헬름 황제를 포츠담에서 만나게 된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여기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설사 유럽에서의 심각한 문제(serious european complications)가 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가능한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이 7월 5일의 언급과 7월 6일에 이어진 독일 지원에 대한 재확인이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백지위임장(carte blanche, blank check)이며, 독일에게 전쟁 발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 요컨대, 빌헬름 2세는 7월 5일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중용했고, 그것이 가능한

17) Hew Strachan, *The First World War*, Penguin Press, 2003, p.37.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오스트리아에 전달하였으며, 7월 6일에는 베트만 - 홀벡이 독일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을 보증하였던 것이다.¹⁸⁾

피서는 독일의 백지 위임장과 이후의 전쟁 수행이 세계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독일의 정책의도의 결과였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지역, 발칸지역, 터키 내 독일의 경제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원인을 독일이 제공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백지위임장으로 해석되는 7월 5일의 빌헬름 2세의 언급은 우선 당시 삼국협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했던 당연한 지원약속이었다. 무엇보다 7월 말에 베트만 - 홀벡이 보여주었던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국지전(Halt in Belgrade)에 대한 추진을 고려할 때¹⁹⁾, 과연 독일이 유럽전쟁을 원했는가, 왜 베트만 - 홀벡이 국지전을 추구했음에도 7월 위기가 유럽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당시의 동맹관계 속에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협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적대적인 동맹국으로부터의 고립에서 빠져나와야 했다.²⁰⁾ 즉, 적대적인 동맹에 대한 위협인식이 백지위임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독일은 삼국협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의 유럽전쟁은 아니었다는 점은 베트만 - 홀벡의 국지전 구상과 7월 위기 중 러시아의 외상 사조노프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개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통해

18) Annika Mombauer,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Controversies and Consensus*,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2, pp.14~15.

19) 정상수, 「1차 세계대전의 원인: 독일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Vol.22, 1998, 139쪽.

20) Holger Herwig, *The First World War: Germany and Austria-Hungary 1914~1918*, London:Arnold, pp.18~19.

알 수 있다.²¹⁾ 빌헬름 2세도 7월 말의 모습을 보면 베트만 - 홀벡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이것은 언급한 백지위임장으로 해석되는 7월 5일과 6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우선 7월 5일의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²²⁾ 그럼에도 혹여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프랑스도 재정적 여유가 없기에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이다. 빌헬름 2세는 이러한 예상 속에서 이른 바 백지위임장을 주었다. 그는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응징이 8일 후에 세르비아의 굴복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7월 6일 노르웨이 여행을 떠나기 전, 해군부 차관 카펠레(Eduard von Capelle) 제독을 신궁전으로 불러 이야기하였다.²³⁾

빌헬름 2세는 이처럼 자신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약속이 유럽전쟁으로서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예상가운데 노르웨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빌헬름 2세가 독일이 개입된 유럽전쟁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7월 23일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에 대해 세르비아가 의외로 사라예보 사건 재판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항목 외에 모두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독일 군부를 실망시켰다는 사실²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베트만 - 홀벡 또한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의 소식을 듣고 만약 이 전쟁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만의 전쟁으로 국지화될 수 있다면 유럽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²⁵⁾ 만약 오스트리아가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 정상수, 전계서, 2013, 314쪽.

22) 상계서, 302쪽.

23) 상계서, 303쪽.

24) Annika Mombauer, op.cit., 2002, p.15.

25) A.J.P.Taylor, op.cit., 1995, p.156.

세르비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1913년 발칸전쟁으로 인한 세르비아의 영토확장과 사라예보 사건으로 실추된 오스트리아의 위신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제국으로서 발칸지역에서 그 세력을 유지해주는 것은 다소 불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기에 베트만-홀벡은 발칸지역에서의 국지전을 추구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제국의 위신을 유지하는 것과 세르비아문제가 독일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무엇보다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고, 베트만-홀벡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허윅(Holger Herwig)의 경우, 베트만-홀벡이 전쟁을 통해서나 외교를 통해서나 독일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외교보다는 전쟁을 통한 사라예보 사건의 해결을 추구하고, 유럽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석한다.²⁶⁾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베트만-홀벡이 7월 위기 동안 보여준 러시아와의 외교협상, 발칸지역에서의 국지전 구상(Halt in Belgrade), 그리고 7월 29일 이후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물론 베트만-홀벡 또한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전쟁이 유럽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7월 위기의 최후의 순간까지 유럽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7월 23일 베트만-홀벡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의 전쟁에서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유럽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대사 푸르탈레스(Friedrich von Pourtalès)에게 러시아 외상인 사조노프(Sergey Sazonov)와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7월 24일 푸르탈레스는 우선 사조노프를 만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세르비아의 행위는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양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조노프는

26) Holger Herwig, op.cit., 1997, pp.20~21.

이를 반대하였다. 사조노프는 오히려 최후통첩 내용이 세르비아가 수용하기 지나친 내용을 담고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삼국협상과 삼국동맹국으로 구성된 강대국 회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베트만-홀벡이 의도했던 외교협상은 7월 26일에 다시 진행되었다. 사조노프는 푸르탈레스의 주선으로 오스트리아 대사인 사파리(Frigyes Szapáry)를 만나게 된다. 그는 러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최후통첩에 담긴 오스트리아의 요구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파리는 베트만-홀벡이 구상했던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영토획득을 목적으로 세르비아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 주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전달한다. 이에 더해 푸르탈레스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다시 대두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문제는 단순한 배려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²⁸⁾ 베트만-홀벡이 오스트리아의 응징이 영토확장을 의도한 것이 아닌 발칸지역에서의 안정화라는 내용이 러시아에 신속하게 전달될 경우 러시아의 개입을 막고 유럽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과 같이, 러시아에서의 외교협상을 주도했던 푸르탈레스 또한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조노프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의 의견을 구했다고 전달하면서 궁극적으로 사조노프가 일전에 언급했던 6개국의 회담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7월 27일 다시 베트만-홀벡은 푸르탈레스로 하여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응징을 통해 영토를 획득하지 않을 것이고, 세르비아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원령을 억제할 것을 사조노프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²⁹⁾ 7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만-홀벡은 자신의 국지전 구상이 더 큰 유럽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7) 정상수, 전계서, 2013, 314~317쪽.

28) 상계서, 318쪽.

29) 상계서, 319~321쪽.

있었다.³⁰⁾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이미 7월 25일 동원준비령에 대한 발표를 결정한 바 있었고, 이것은 총동원령의 전단계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선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7월 27일에 독일 외교관들의 전보에 의하면 러시아 부대들이 오스트리아-독일 국경선으로 배치되고 있었으며, 7월 28일에는 갈리시아 방면의 네 개 군관구의 동원이 이뤄졌다.³¹⁾ 베트만-홀벡은 오스트리아를 통해 영토를 병합하지 않는 발칸에서의 국지전 구상에 기반한 외교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적인 동원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다소 늦게 저녁 8~10시가 되어서야 러시아의 동원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여러 고위 관리들은 동원자체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아직 독일은 자국의 여론과 영국의 문제로 인해 대응을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베트만-홀벡이 국지전 구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세르비아에 대한 국지전이 아닌 강대국간의 협상을 통한 세르비아 문제 해결을 오스트리아에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7월 29~30일이다. 잭 레비는 이때 독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위협인식으로 작용한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영국이라고 주장한다.³²⁾ 그는 7월 28일까지만 해도 베트만-홀벡이 국지전 구상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에게 외교협상을 요구하면서 7월 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은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중요한 전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지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베트만-홀벡의 전제에는 영국의 참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7월 25일 영국의 외상 그레이(Sir Edward Grey)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조노프의 6개국 회담 제의에 동의하면서

30)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op.cit., 2004, p.86.

31) Hew Strachan, op.cit., 2003, p.21.

32) Jack Levy, Thomas Christensen and Marc Trachtenberg, op.cit., 1991, pp.190~191.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에 동참하는 모습을 초기에 보였지만, 7월 29일 런던 주재 독일대사 리히노브스키(L. M. Lichnowsky)를 통해 베트만 - 홀벡은 만일 독일과 프랑스가 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영국은 개입할 것이라는 그레이 외상의 입장을 전달받게 된다.³³⁾

베트만 - 홀벡은 7월 위기 중에 고수했던 발칸지역에서의 국지전 구상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가 강대국 중심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 7월 30일 베트만 - 홀벡은 비엔나의 치르스키 대사에게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세르비아와의 평화를 모색하도록 설득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다. 그리고 5분 후 다시 오스트리아 외무성에 직접 독일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면서 격화될 수 있는 갈등을 막고자 했다.³⁴⁾ 베트만 - 홀벡은 이처럼 7월 위기중에 벨그라드에서의 정지(Halt in Belgrade)라는 국지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7월 29~30일에는 아예 국지전이라는 선택 자체를 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지만, 당시 독일 군부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 그리고 전쟁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독일의 육군성 장관(War Minister)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과 육군참모총장 몰트케(Helmuth von Moltke the Younger)는 베트만 - 홀벡과 같은 위협인식과 그에 기반한 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7월 25일 휴가를 떠났던 몰트케가 베를린으로 돌아온 이후, 독일의 군부는 정보망을 통해 러시아가 동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7월 25일과 26일에 입수하게 된다. 7월 27일에 여전히 7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트만 - 홀벡과는 다르게 7월 28일 독일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직전의 상황임을 파악한다. 그리고 같은 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팔켄하인은 몰트케에게

33)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498쪽.

34) 상계서, 500쪽.

더욱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기 시작한다.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본 베트만 - 홀벡과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군부의 위협인식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

독일 군부의 외부위협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의 근거로 잭 스나이더(Jack Snyder)는 당시 군부의 공세지상주의(the Cult of the Offensive)와 연관시킨다. 몰트케(Helmuth von Moltke the Elder)와 쉘리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도그마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³⁵⁾ 하지만, 쉘리펜 계획과 군부의 공세지상주의의 존재여부와 그 영향력은 상당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쉘리펜 계획의 역할과 공세지상주의에 대한 반론은 테렌스 주버(Terence Zuber)의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³⁶⁾ 그는 쉘리펜 계획이라고 여겨지는 1905년의 메모가 과연 선제공격을 전제하고 있고, 신속한 동원을 추구하는 매우 경직된 계획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흔히 쉘리펜 계획이라고 불리는 1905년의 메모는 그 무렵 쉘리펜이 실시한 다른 군사훈련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일탈에 가까울 만큼 동떨어진 작전개념이었다.³⁷⁾ 단적으로 1905년 11월~12월 위게임에서 오히려 벨기에를 통한 우회기동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35) Jack Snyder, *The Ideology of the Offensive: Military Decision Making and the Disasters of 1914*, 1984, Cornell University Press, pp.155~156.

36)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17.

37) 배명훈, 「'쉘리펜 플랜' 논쟁의 전략사상적 기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2007, 21~22쪽. 배명훈은 쉘리펜 계획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력회전과 섬멸을 강조하는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으로 독일 군부를 분석한 것이며, 주버의 주장과 쉘리펜의 다른 계획들을 참조할 때 오히려 쉘리펜은 우회와 기동을 강조한 측·후방에 대한 공격과 전쟁수행을 강조했고 섬멸을 위한 경직된 계획과 선제공격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쉘리펜 계획은 조미니와 리텔하트와 같은 계열의 전략사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철도에 대한 쉘리펜의 강조는 유연한 병력활용을 위한 기동에 대한 강조이지 단일한 작전선에 따른 속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독일이 아닌 프랑스였고, 술리펜은 프랑스의 선제공격으로 우방이 된 벨기에의 앤트워프 요새로 병력을 이동시켜 프랑스군 좌측면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따라서, 당시 독일 군부의 위협인식과 공세적인 모습을 스나이더나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술리펜 계획 자체의 공세적인 성격과 공세지상주의로 환원시키는 것은 무리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7월 위기에 나타난 팔켄하인과 몰트케의 위협인식을 보면, 멀리 있는 영국보다는 실제로 독일의 동부지역에 국경을 연하고 있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베트만 - 홀베크와는 달리 상당한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독일 군부의 입장에서 7월 위기 중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위협으로 인식한 이유는 7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된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그 움직임이 1912년 1차 발칸전쟁 당시 러시아가 보여준 다소 즉흥적인 동원준비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1912년 발칸지역의 분쟁에 개입을 시도한 오스트리아에게 압력을 넣고자 했던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항한 시범적인 동원조치를 보여주었다. 그에 반해, 1914년 7월 위기 중 러시아가 보여준 동원준비는 오스트리아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 국경에 걸쳐 이뤄졌고 여기에는 독일과의 접경지대도 포함되었으며, 7월 26일 이후로 독일 정보국은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³⁸⁾ 이 같은 정보는 몰트케와 팔켄하인과 같은 독일 군부의 수뇌부에게 전달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동원속도가 독일보다 느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국한되지 않은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예상하던 몰트케는 7월 28일에 베트만 -

38)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51~52.

홀베크에게 군사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푸르탈레스를 통해 사조노프를 설득하고 있었던 베트만 - 홀베크는 러시아가 곧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 만약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독일은 방어적인 모습을 취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계산도 함께 깔려있었다.³⁹⁾ 7월 29일 독일 총참모부의 예상대로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팔켄하인과 몰트케, 베트만 - 홀베크는 빌헬름 2세가 있는 포츠담으로 찾아가 급박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팔켄하인은 이미 시작된 군사적 조치들이 정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는 전쟁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빌헬름 2세는 다시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지만, 베트만 - 홀베크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지한다.⁴⁰⁾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만 - 홀베크는 영국이 중립을 지켜준다면 그나마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7월 29일 밤, 그는 영국대사 고센(W.E. Goschen)을 통해 영국이 만약 중립을 지켜준다면 네덜란드의 중립을 보장하고 동시에 프랑스에게 손해를 끼칠 영토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그레이 외상은 이를 거절하고, 분쟁이 만약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와 독일이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된다면 영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답을 받게 된다. 7월 30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그 이전부터 러시아의 동원에 대해 정보를 들었던 몰트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문서들을 봐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우선 보류한다. 7월 31일에 도착한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고 난 후, 몰트케와 베트만 - 홀베크는 모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⁴¹⁾ 결국 독일은 7월 31일 총동원령을

39)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45~46.

40)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op.cit., 2004, p.87.

41)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47.

발동하고, 러시아에는 군사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다. 프랑스에게도 입장을 질문하였으나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한다는 답을 남기며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다.⁴²⁾

요컨대, 7월 위기 중 나타난 독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위협인식은 크게 육군성 장관이었던 팔켄하인과 육군참모총장 몰트케로 대표되는 독일 군부의 인식과 독일의 제국수상이었던 베트만-홀벡과 카이저 빌헬름 2세로 대표되는 정치인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7월 5일과 6일에 흔히 백지위임장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약속은 당시 1912년과 1913년 두 차례에 걸친 발칸전쟁 이후에 발칸지역에서 더욱 위축되어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동맹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라는 삼국협상 국가에 둘러싸인 독일이 유일한 동맹국가 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인식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 지원약속에는 빌헬름 2세와 베트만-홀벡의 인식이 주로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 일으키는 전쟁은 신속하게 이뤄질 보복전이며,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을 ‘전제’로 한 지원약속이었다. 신속한 공격이 더욱 좋다고 빌헬름 2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 속에서 프랑스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더욱 없애는 것이 독일의 입장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지, 독일이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베트만-홀벡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던 국지전 구상,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과의 외교를 통해 강대국들의 군사행동을 저지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모습은 오히려 독일의 공세지상주의, 혹은 세계정책, 백지위임장 등을 근거로 제시된 독일에 대한 전쟁원인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42)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504쪽.

베트만-홀벡의 국지전 구상이 포기되고 다시 강대국의 협상과 중재에 의한 해결로 입장이 변화하는 7월 29일~30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중립보장의 실패이다. 잭 레비의 경우, 독일의 입장에서 전쟁 발발시 영국의 중립보장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전쟁의 중립보장요청이 거절된 이후에서야 베트만-홀벡이 평화적 해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크 트라첸버그(Marc Trachtenberg)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이 베트만-홀벡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지전 구상이 더 큰 전쟁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아예 오스트리아로 강대국에 의한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정책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⁴³⁾

이러한 논쟁은 본 고에서 서술한 독일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소 달랐다는 점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국을 중요한 위협 혹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군부가 아니라 베트만-홀벡 수상이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 개입이 불확실하거나 러시아의 동원준비로 인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르탈레스를 통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영국까지 개입하게 된다면 국지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고, 러시아의 동원자체가 전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 러시아의 동원준비와 부분동원령의 발동으로 인한 부대의 배치가 발칸 전쟁시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독일 점령지대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정보국을 통해 얻은 팔켄하인과 몰트케에게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인식의 대상은 러시아였다. 즉, 러시아의 동원령과 전쟁 발발 시 영국의 중립보장 실패가 각각 독일 군부와 정치인에게 주된 위협인식의 대상이 되었으며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베트만-홀벡의 국지전 구상과

43) Jack Levy, Thomas Chirstensen and Marc Trachtenberg, op.cit., 1991, pp.197~198.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독일도 총동원령과 선전포고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러시아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주로 다뤄졌던 독일의 전쟁 책임과 원인제공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격화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른 국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7월 위기 중 베트만 - 홀벡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베트만 - 홀벡의 초기 구상인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면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간의 충돌로 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지전 구상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동원준비령, 부분동원령, 그리고 총동원령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위협인식을 증대시키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수는 7월 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사라예보 사건을 유럽전쟁,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국제법상 세르비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실제 개입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사표명에 주목하고 있다.⁴⁴⁾ 바르토프 또한 러시아가 제3차 발칸전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7월 위기를 대륙전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상수와 바르토프는 1차 세계대전으로 사라예보 사건의 갈등이 증폭되는데 러시아의 군대동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44) 정상수, 전계서, 2013, 300쪽.

전술한 바와 같이 마크 트라텐버그도 영국의 중립거부보다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이 베트만 - 홀벡의 일시적인 정책전환에 중요한 변수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상수는 사조노프가 이미 유럽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보는 반면, 밍로프는 러시아의 동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억제를 위한 강한 결심의 표현이었으며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 차이를 보인다.⁴⁵⁾ 이 같은 논점은 러시아의 동원령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7월 위기의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장에서 다소 다른 의미에서 위협으로 인식된 국가가 러시아와 영국이었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었고, 러시아가 7월 위기 중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세르비아의 독립 보장과 러시아 제국 위신이였다. 1908년부터 1913년의 발칸 지역에서의 위기에서도 세르비아의 독립이 위협된 적이 없었지만 7월 23일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보낸 최후통첩은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⁴⁶⁾ 또한, 러시아는 당시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전보를 해독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기 위해 필요한 8개 군단 이상의 11개 군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동원은 세르비아가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 또한 위협인식을 증대시켰다.

발칸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의 상실은 곧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여겨졌고,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강경한 대응은 독일의 배후 지원이 없이 가능할 수 없다고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는 생각했던

45)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27.

46) 오스트리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세르비아는 최후통첩의 10개 항목 중에서 사라예보 사건 재판심의를 오스트리아 관리의 참여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주권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것이다.⁴⁷⁾ 당시 러시아의 정책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농림부장관 크리보셰인(Krivoshein)과 사조노프는 강경파에 속했고, 7월 24일 러시아의 긴급대신회의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참석한 관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는 7월 24일 아침, “이제 유럽전쟁이다(C'est la guerre européenne)”라고 말하며 유럽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 정상수는 사조노프가 포앙카레(Poincaré)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던 7월 20일~23일 사이에 먼저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문 준비를 알고 있었고, 이미 유럽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⁴⁸⁾ 7월 초에 주 이탈리아 독일대사 플로토프(Hans von Flotow)가 이탈리아 외상에게 오스트리아가 강경한 대응을 세르비아에 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달한 이후, 이탈리아 외상은 페테르부르크와 비엔나에 전보를 통해 두 지역의 특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암호해독 작업을 통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었던 것이다.⁴⁹⁾

정상수는 특히 사조노프가 7월 24일 러시아 프랑스대사 팔레올로규(Maurice Paléologue)와 영국대사 뷰캐넌(George Buchanan)에게는 러시아의 강경대응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7월 26일 독일대사 푸르탈레스와 오스트리아 대사 사파리에게는 러시아가 평화를 위해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중재자로서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또한 같은 관점에서 해석한다. 사조노프는 러시아가 광대한 영토와 미약한 교통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령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독일의 신속한 대응을 막으면서 동원준비령을 내리기 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7월 위기를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베트만-홀베크과는 다르게 사조노프가

47)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243~247.

48) 정상수, 전계서, 2013, 314~315쪽.

49)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49~50.

7월 위기를 유럽전쟁으로 확대시키고자 했다고 보고 있으며⁵⁰⁾, 러시아의 동원령은 같은 맥락에서 실제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러시아가 부대 동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자 했던 점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지만,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과의 관계, 그리고 동원령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만약 정상수와 같이 사조노프가 유럽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을 추진한 것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반면 김용구는 7월 24일 러시아 대신회의에서 차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지만, 사조노프는 당시 오스트리아만을 상대로 하는 부분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서술한다.⁵¹⁾ 정상수는 김용구의 의견에 대해 이는 독일 정부가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을 때 변명에 가깝게 제시했던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적절치 못한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터너(Turner)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러시아가 부분동원령만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며, 총동원령으로의 전환은 어떤 동원령이든지 일단 실행되었을 경우, 동맹체제에 의거해 연쇄적인 선전포고와 전쟁참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총동원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만약 러시아가 유럽전쟁을 처음부터 추구했다면 총동원령을 바로 내리지 않고 부분동원령이라는 중간단계를 시행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7월 25일에 니콜라이 2세(Nicholas II)가 부분동원령을 시행할 때에도 재차 독일접경지대가 아닌 오스트리아 접경지대에 대한 부대배치를 강조한 점과 7월 29일에 사조노프가 독일 대사에게 동일한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한 사실⁵²⁾에

50) 정상수, 전게서, 2013, 322~324쪽.

51)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503쪽.

52)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50.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즉, 정상수의 주장은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을 구분하려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분동원령을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력을 위한 조치로 활용하려고 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 윌리엄슨과 밥로프의 연구는 정상수와 같이 사조노프가 애초부터 유럽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이들은 우선 7월 24일과 25일에 이뤄진 동원준비령(preparatory measures)이 1913년에 새롭게 도입된 동원준비시기(the Period Preparatory to Mobilization/War)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총동원을 가속화시키기 프로그램 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분동원령은 사실 1904~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당시에 사용했던 계획이었으며, 또한 1차 발칸전쟁시에 갈리시아 방면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의 동원에 의해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신속한 총동원이 가능한 동원준비시기 프로그램을 고안했었던 것이다.⁵³⁾ 따라서 부분동원령(partial mobilization)과 동원준비시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원준비령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조노프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동원준비령이 총동원령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부분동원령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실행은 될 수 있었지만, 총동원을 목표로 하는 동원준비령과는 상충하는 계획이었기에 총동원이 진행되는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었다.⁵⁴⁾

밥로프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사조노프와 니콜라스 2세가 부분동원령을 통해 1912년 가을에 오스트리아에 가했던 협상을 위한 압박을 재현하고자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니콜라스 2세는 네 개 군관(오데사, 키예프, 모스크바, 카잔)과 흑해와 발틱함대에 대한 부분동원령을 육군성장관 수흐린노프(Sukhomlinov)와 육군참모총장 이아누세비치

53)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48.

54) Jack Levy, 「Preferences, Constraint, and Choices in July 1914」,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3, Winter, 1990~1991, p.179.

(Ianushkevich)에게 명령하였고, 만약 오스트리아 군대가 세르비아의 국경을 넘을 시에는 오스트리아 국경지대로만 부대를 배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이 군사력 시위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군사적인 조치를 억제하고, 독일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준다.⁵⁵⁾ 이러한 의도에서 부분동원령이 하달되었지만 니콜라스 2세와 사조노프는 물론 심지어 수흐린노프와 이아누세비치조차 동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알고 있지 못했다. 사조노프는 7월 24일 대신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25일과 26일에 시행에 들어간 동원준비령이 사실은 총동원의 준비단계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와의 접경지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국경지대에서 실시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조노프와 니콜라스 2세는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을 단계적으로 의도하였지만, 실제 군부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총동원령의 초기 계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용구가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언급한 것은 7월 24일에 결의된 동원준비령이 그가 구상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를 위한 부분동원령과는 다른 동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몰랐다는 점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슨과 밥로프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니콜라스 2세와 사조노프가 여전히 전쟁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한다. 니콜라스 2세의 경우, 역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독일의 빌헬름 2세와의 서신교환을 통해 서로 상대방이 군사적인 조치를 멈추기를 기대했으며, 7월 29일에는 총동원령을 내렸다가 빌헬름 2세의 서신을 받고 부분동원령으로 명령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⁵⁶⁾ 같은 기간의 사조노프는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에서만 이뤄지는 부분동원령을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과의 외교전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밥로프는 사조노프가 지속적으로

55)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op.cit., 2004, pp.108.

56)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51, 249.

부분동원령이라는 군사적 조치가 외교전에서 러시아가 나름의 영향력(leverage)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본다. 특히 사조노프는 베를린의 대리공사를 통해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서 대사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을 전달하도록 하여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을 확대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7월 29일에 독일 대사를 불러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만 부분동원이 이뤄지며 러시아의 동원이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정상수는 사조노프의 지시에 의해 수흐린노프가 7월 26일 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무관 에겔링(Eggeling)에게 독일 국경선에 해당하는 군관 구에는 동원령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전쟁을 구상했던 러시아의 원래 의도를 은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고 해석한다.⁵⁷⁾ 그러나 동원준비령은 부분동원령과는 다르게 총동원을 지향하는 조치임을 사조노프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위장전술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대화이며, 오히려 동원계획에 대해 무지한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을 의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7월 29일 오후, 사조노프는 독일 대사로부터 러시아가 군사적인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독일 또한 동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게 된다. 이 시점이 이미 독일의 동원준비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독일의 대한 위협인식이 확인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밥로프는 사조노프가 군사적 동원을 통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억제와 그것이 실패할 경우의 군사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을 통한 러시아의 억제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7월 28일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의 실패와 오스트리아를 지원할 독일에 대한 위협인식이

57) 정상수, 전계서, 2013, 320쪽.

강화되면서 7월 31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⁵⁸⁾

총동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동원준비령이 내려지면서 사조노프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과의 접경지대에도 동원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독일 정보국에 의해 포착되면서 독일 군부의 위협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사조노프의 경우, 군부와 의 소통과 조정된 계획의 실행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상수는 이 같은 정치인과 군부의 다른 위협인식과 동원령의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7월 31일의 총동원령이라는 결과를 통해 사조노프의 외교를 해석했기 때문에, 사조노프가 처음부터 유럽전쟁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생각했다는 해석을 다소 과장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분동원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총동원을 목표로 한 동원준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부분동원령은 총동원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전투준비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의 총참모부(high command staff)에 의해 선호되었던 것은 총동원령이었다. 부분동원령이 하달된 지 이틀 째, 동원계획을 담당했던 다닐로프 장군(General Iu. Danilov)은 가까운 사조노프의 자문에게 부분동원을 총동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고 언지한 바 있고,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장군들과 군부의 대다수는 사조노프와는 다르게 동원계획상의 문제로 인해 총동원령을 지지하고 있었다.⁵⁹⁾

부분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한 억제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독일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위협이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7월 29일 이후 사조노프 또한 군부와 합세하여 빌헬름 2세와의 서신교환으로 인해 총동원령과 부분동원령을 번복하면서 갈등하고 있던 니콜라스 2세에 총동원령에 대한 압력을 넣기 시작하게 되었다.⁶⁰⁾ 다른 군사적인 조치의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설득당한 니콜라이

58)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51, 251.

59)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48.

60) Michael Mann, op.cit., pp.762~763.

2세는 결국 7월 31일 총동원령을 하달하면서 독일의 동원령과 선전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⁶¹⁾ 요컨대, 강경파에 속하는 사조노프의 경우도 초기에는 부분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고려할 때 그의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국정에 국한된 부분동원령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분동원령과 총동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동원준비령에 대한 무지와,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동원령보다는 총동원령을 내리기를 바라며 사조노프와 니콜라이 2세를 설득했던 군부의 정보전과 위협인식으로 인해 결국 러시아는 총동원령이라는 1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7월 위기 중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 위협인식의 연쇄반응과 정보전, 그리고 독일 패러다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최근 연구의 입장은 크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패러다임을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과 독일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독일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논의는 독일의 세계정책, 술리펜 계획, 공세지상주의, 영국과의 해군경쟁, 제국주의와 7월 위기 중 백지위임장과 같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의 지원약속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독일 패러다임은 그 동안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 이후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기까지 7월 위기에서 드러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에 기반한 외교협상, 정보전, 그리고 정책의 조정은 사라예보 사건이 유럽전쟁으로,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 것이 독일뿐만이

61) Jack Levy, op.cit., 1990~1991, p.180.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7월 위기에는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시도한 오스트리아, 7월 위기중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프랑스, 7월 말이 되도록 전쟁 발발 시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다가 7월 29일이 되어서야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침범할 시에는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영국, 그리고 동원준비령, 부분동원령, 총동원령을 통해 독일의 위협인식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발칸지역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강대국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위협인식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본고는 영국의 중립거부와 러시아의 동원령 중 어떤 요인이 독일의 위협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왜 부분동원령을 하달한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다가 급작스럽게 총동원령을 하달하게 되는지와 같은 논쟁이 되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상 베티만-홀벡은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영국을 설득하다가 7월 29일~30일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에게 강대국에 의한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요구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러시아의 총동원령 이후 동원령을 발동하게 된다. 국지전 구상에서 강대국에 의한 중재로 베티만-홀벡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베티만-홀벡은 영국의 참전 혹은 중립이라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고, 팔켄하인과 몰트케와 같은 군부의 경우 이미 동원준비령을 통해 독일 국경지대에 부대를 동원하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속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더 중요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 세계 제국으로 팽창하려는 의도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독일 패러다임의 한 측면임을 알 수 있다.

베트만 - 홀벡과 같은 독일 정치인의 위협인식과 판단을 통해 다소 부풀려진 독일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총동원령과 관련한 위협인식과 판단은 1차 세계대전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논의가 부족했던 러시아의 역할 또한 독일 패러다임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상수는 7월 위기 중 러시아가 갈등을 격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동의하나, 사조노프와 군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조노프와 니콜라이 2세의 위협인식과 동원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부와는 달랐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사조노프가 애초부터 유럽전쟁을 의도했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친다. 반면, 윌리엄슨과 밥로프는 동원준비령이 총동원을 위해 고안되어 있었던 측면을 사조노프가 이해하지 못한 점과 부분동원령을 시도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한 억제력을 처음 시도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군부와 정치인 간의 인식의 차이, 부분동원령이 가능한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였고 이미 동원준비령을 통해 독일 국경에 부대가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총동원령이 더 효율적일 것을 강하게 주장한 군부의 설득에 의해 러시아는 결국 총동원령을 7월 31일에 하달하였던 것이다.

1914년의 7월 위기가 있기 1, 2년전인 1912년과 1913년에 1,2차 발칸전쟁이 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불가리아가 패배하고 세르비아의 영토확장이 이뤄진 1913년 2차 발칸 전쟁의 결과는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 7월 위기 못지않은 위협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전쟁은 모두 발칸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처럼 유럽전역에서의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세르비아, 불가리아에 의해 오토만 제국이 패배한 1차 발칸전쟁에서도 베트만 - 홀벡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독일이 참전할 것을 밝힌 바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7월 위기의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인 또한 모두 자신의 동맹국과 지원국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1, 2차 발칸전쟁과 같은 국지전이나 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오스트리아의 강경파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독일과 러시아의 군부는 또한 나름의 위협인식과 동원과 전쟁계획 속에서 갈등이 안정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독일 패러다임의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러시아의 동원령은 독일의 위협인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군부간의 정보전은 직접적으로 양국 군부의 위협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의 정치인들이 억제, 혹은 협상과 국지전으로 마무리하려던 7월 위기가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⁶²⁾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7월 위기, 1차 세계대전, 위협인식, 러시아, 동원, 정보전, 독일 패러다임

62)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484~488쪽.

<ABSTRACT>

The July Crisis and the Causes of the First World War Revisited: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s of Germany and Russia

Oh, In-hwa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ermany and Russia during the July Crisis in 1914, focusing on the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s of both Great Powers. Specifically, it argues that Russian decisions during the July Crisis—including preparatory mo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the general mobilization—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scalating the July Crisis into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By clarifying the threat perceptions of the political leaders and the military, the study also tries to help resolve debates on the German and Russian decisions.

The so-called German “Blank Check” was given to Austria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ustria would defeat Serbia shortly and the crisis would be over. Furthermore, German Chancellor, Theobald von Bethmann-Hollweg, was concerned about losing one of Germany's few allies, Austria. This threat perception led the Chancellor to pursue the localization of the July Crisis, and persuade Russia not to intervene. However, Russia's preparatory mobilization measures near German borders, discovered and reported by German intelligence, strengthened the threat perception of the German military towards Russia, inducing the more aggressive positions of Erich von Falkenhayn and Helmuth von Moltke the Younger.

Sang-Soo Jung has asserted that Sergey Sazonov, the Russian Foreign Minister, pursued the European War after the Austrian ultimatum against Serbia. Jung emphasizes that Sazonov's remark – Russian mobilization was only aimed at Austria, not at Germany – was made to deceive Germany. However, this argument is too simplistic,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at Russia just attempted to deter Austria and Germany through mobilization at first. As Samuel Williamson and Ronald Bobroff have argued, Sazonov tried to deter both Austria and Germany with preparatory measures and partial mobilization, without knowing that preparatory measures were actually part of a general mobilization program. Having realized that deterrence had failed, Sazonov soon convinced Nicholas II to order a general mobilization with the military, who also thought that partial mobilization was infeasible.

In short, the Russian mobilization, including preparatory measures and the general mobilization, prompted Germany to mobilize her troops, finally escalating the July Crisis into the continental war and ultimately the First World War. Though Jack Levy contends that the British rejection of the German request on the 29th and the 30th the July was a more direct factor in the shift of German decision, the Russian mobilization stil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erms of the German military's threat perception. The gap between political-military threat perceptions helps to elucidate and analysis the decision-making process during the July Crisis. It also contributes to challenging the German Paradigm, refocusing on the roles of countries other than Germany in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Key Words : the July Crisis, the First World War,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 Russia, Mobilization, Intelligence, the German Paradigm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영

이 신 재*

1. 서론
2. 전쟁과 라디오 방송
3. KFVN 설치와 운영
4. KFVN 운영성과 분석
5. 결론

1. 서론

1987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굿모닝 베트남(Good Morning, Vietnam)」은 전쟁터에서 라디오의 효용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는 베트남전쟁 당시 사이공(Saigon, 현 호찌민)에서 운영되던 미군의 라디오 방송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군 장병들은 주인공인 DJ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전쟁터에서 결전의 용기를 얻었다. 비록 이 영화는 반전영화로 평가되지만, 전장(戰場)에서 라디오 방송의 실태와 그 효과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어느 정도인지 잘 그려내고 있다.¹⁾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 또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²⁾ 건국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해외파병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은 라디오방송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장에서 운용한 것이다. ‘주월(駐越)한국군방송국(KFVN: Korean Force Vietnam Network, 이하 KFVN으로 기술)’으로 불리던 당시 라디오방송국은 1965년 12월 시험방송을 시작해 1973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까지 무려 7년 이상 지속되었다. 전체적인 운영은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모습과 흡사했다. 여기에는 남녀 아나운서를 비롯해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많은 수의 방송요원이 파월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했다.

당시 KFVN은 건국 이후 해외에서 진행된 첫 국군방송이자 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해외 한국어 방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FVN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송사(史)에 일부가 기술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연구논문 한편 확인하기 쉽지 않다.³⁾ 일부 방송 역사서에 이들 자료가

1) 영화 제목인 “굿모닝 베트남”은 주인공인 DJ가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 외치는 멘트였다.

2)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쟁의 명칭은 ‘베트남전쟁’이다. 베트남의 지명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전쟁 당시 사용했던 한글 지명으로 표기하고 영문표기를 부기하였다. 또한 월남은 남베트남, 월맹은 북베트남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했던 한국군에 대한 명칭은 고유명사의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주월 한국군사령부’, ‘주월 한국군’, ‘파월 한국군’으로 표기하였다.

3) KFVN에 대해서는 국군홍보관리소(현, 국방홍보원)에서 발간된 『국군방송사』에 일부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1977년에 발간된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한국방송사』를 편찬하면서 특수방송으로써 국군방송을 포함하여 편찬하였다. 그러나 『국군방송사』의 경우 전체 249쪽 분량이지만, KFVN에 대한 자료는 개관(概觀)의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5쪽에 불과하다. 『한국방송사』의 경우에도 2쪽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04년에 출간된 『국군방송 50년사』는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총 703쪽의 분량 중에서 6쪽의 화보와 13쪽에 걸쳐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기에도 당시 참전자들의 회고글을 포함하여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국군홍보관리소, 『국군방송사』, 1988;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04;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사』, 1977.

남아 있어 KFVN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국 현황을 나열한 정도이며 구체적인 방송국 설치 배경과 과정, 방송국 운영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결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일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당시 군의 작전 및 방송운영에 대한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베트남전쟁 연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방송국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것은 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의 방송국 운영이라는 데서 나아가 한국방송사의 첫 해외 한국어 방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KFVN에 대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파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건국 이후 최대의 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 방송국 운영사례는 향후 중요한 참고사례로써 충분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전쟁과 라디오 방송의 관계에 대해 라디오의 유용성과 전장에서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KFVN의 설치목적과 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KFVN의 운영성과를 장병 사기진작, 심리전 수단, 방송기술적 성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이다.

2. 전쟁과 라디오 방송

19세기 후반에 라디오(Radio)가 발명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라디오의 시대’⁴⁾가 열리게 되었다. TV가 나온 이후에도 라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전장에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전장에서 라디오를 활용한 사례는 많다. 가까운 예로서 6·25전쟁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2개의 라디오방송을 운영하였다. 1942년 8월부터 미 국무성에서 운영하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⁵⁾과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이후 시작된 유엔군사령부의 라디오 방송인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⁶⁾가 그것이다. VOA는 미국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방송 메시지의 요체는 반공과 친미였다.⁷⁾ VUNC는 운영주체가 미 극동사령부 심리전과로 심리전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⁸⁾ 이 두 방송은 운영주체와 내용은 일부 달랐지만, 심리전 방송이라는 본질은 동일하였다.

6·25전쟁 이전까지 주한미군을 위한 방송도 존재했다. AFKN(America Force Korea Network)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방송(WVTP)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1945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국한

4) 라디오가 주로 활약한 시기는 1920년부터 50년까지 약 30년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일상·목철수, 『세계선전선동사』, 도서출판 이웃, 1989, 205쪽.

5) 박용규,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 제58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4, 357쪽.

6) 이 명칭은 초기에는 Voice of General MacArthur's Headquarters, Voice of the Free Peoples of the World 등으로 불리다 후에 VUNC로 사용되었다. 장영민,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281쪽.

7) 장영민, 「한국전쟁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제90호, 부산경남사학회, 2014, 258~259쪽.

8) 장영민,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281쪽. VUNC는 1971년 6월 30일 폐국 될 때까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전략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WVTP가 최초의 미군방송국이다. 미 국방성이 주관하였고, 주한미군을 위한 영어방송이었지만, 한국인들도 많이 청취하였다. ‘미군이 주도하는 곳에는 미군방송이 있다’는 원칙이 한국에도 적용된 것이었다. WVTP의 운영은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정훈과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1950년 6월 28일 방송이 중단되었다.⁹⁾

전쟁기간 중 유엔군사령부는 KBS를 심리전 방송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개전 직후부터 종전에 이를 때까지 심리전 전담부서를 통해 KBS 방송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전 방송의 기능을 유지할 의도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KBS의 방송시설 복구와 확충사업을 지원하였다.¹⁰⁾

일본도 라디오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은 만주국과 대동아 공영권의 통치를 위해 라디오를 활용하였다.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한 뒤 괴뢰국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선전활동에 주력했다. 여기에 지리적, 계층적 경계를 뛰어넘는 월경성(越境性)과 전파의 동시성(同時性)을 지닌 라디오가 활용되었다.¹¹⁾ 또한 1930년대 전쟁의 격화 속에서 생활조건을 공유하는 청취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방송을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청취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하에 이른바 단체 청취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¹²⁾

이밖에도 독일 히틀러(Adolf Hitler)의 경우처럼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라디오를 독재자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한 사례는 잘 알려져

9) 박용규, 앞의 글, 357~365, 375쪽. 여기서 WVTP는 방송국 호출부호이다.

10) 장영민,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KBS 통제와 지원」, 『한국언론학보』 제56권 1호, 2012, 한국언론학회, 442~444쪽.

11) 정지희, 「듣는 주체의 창출과 전시 동원-전쟁기(1931~45) 일본의 라디오 청취지도-」,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동양사학회, 402~403쪽.

12)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파 라디오 방송」, 『만주연구』 제10집, 만주학회, 2010, 127~128쪽.

있다.¹³⁾ 소련에서도 라디오는 당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민중교육의 수단, 공산주의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¹⁴⁾

그렇다면, 라디오가 전장에서 활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라디오의 기능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였다. 라디오라는 매체는 방송을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다수의 청취자에게 전파가 미치는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수신기 1대만 있으면, 전파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다. 라디오의 이 같은 기술적 특징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자국 장병들에게는 뉴스와 오락을 제공하고, 대적(對敵), 대민(對民) 심리전에서도 유용성이 있었다.

특히, 심리전에서 라디오 매체는 많은 장점이 있었다. 국경선에 제한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장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라디오 방송은 대상자들이 방송을 듣고 이해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으며, 문맹일지라도 방송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채로운 프로를 융통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타 매개체와는 달리 선전이라는 인상을 피하면서 선전 주제를 쉽게 전달하고 인식시킬 수 있다. 방송 아나운서의 언어, 감정 등으로 친밀감과 정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¹⁵⁾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라디오는 전장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효율적인 도구였다. 일반적인 경우 라디오는 뉴스와 오락,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선전

13) 히틀러는 라디오를 통해 파시즘을 널리 침투시켰다. 그의 라디오 활용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염가의 보급형 라디오(VE=폭스 앰프행거)를 제작하여 300만대 이상 보급하여 전체 청취자 수를 1933년부터 1942년 사이에 450만에서 1,600만으로 늘렸다. 둘째는 공공시설에 확성기를 부착한 라디오 설치, 셋째는 라디오 감시관을 두고 자신들의 희망대로 방송을 청취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유일상·목철수, 『세계선전선동사』, 100쪽.

14) 알렉스 인켈스 저, 이규중 역, 『소련의 여론』, 대학문화사, 1985, 259~260쪽.

15) 육군본부, 『야전교범 33-5 심리전』, 1988, 102~103쪽.

(propaganda)의 도구로, 또 전장에서는 심리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라디오는 효율적인 전시 선전도구로 가치를 인정받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전파전쟁’의 유력한 무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¹⁶⁾ 전장에서 라디오 방송은 철저한 계획하에 전투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3. KFVN 설치와 운영

가. 방송국 설치목적

한국군은 6·25전쟁을 통해 라디오가 전장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본격적인 파병이 추진되면서 KFVN 설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라디오 방송국 개설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남베트남 수상으로부터 전투사단의 증파 요청을 받은 직후인 1965년 6월 23일 이었다.¹⁷⁾ 이날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대미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 10개 항의 협의내용 중 마지막 10번째가 ‘야전 이동방송국’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각서 상에 제시된 방송국 설치 이유는 “해외인 작전지역에서 임무기간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군 자체 야전 이동방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치 목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6) 서재길,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183쪽.

17) 베트남 파병은 이동외과병원 130명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이 1964년 9월 1차로 파병되었다. 이후 비둘기 부대로 명명된 군사원조단 2000여 명이 1965년 2월 2차로 파병되었다. 이때까지 한국군은 비전투부대로 규모도 2000여 명이었고, 주둔지도 사이공지역에 집결되어 있었다. 이때까지 방송국 설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투부대의 파병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송국 설치도 함께 추진되었다.

첫째, 파견장병의 대공정신 교육 강화, 둘째, 적의 방송 방해전파 발사 및 대적심리전 방송 실시, 셋째, 본국방송의 중계로서 국내 소식 전달, 넷째, 장병의 오락 및 위문방송으로서 사기진작, 다섯째, 전황보도였다. 이를 위한 송신용 차량(출력 중파 5kW) 1대, 송신용 탑차(200피트 안테나) 1대, 방송용차 1대의 지원도 요청하였다.¹⁸⁾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비치(Dwight E. Beach) 대장은 1965년 7월 9일자 전문을 통해 한국측의 제안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동용 방송국 대신 남베트남 심리전부와 협조하여 남베트남 국립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¹⁹⁾ 결국 유엔군사령관의 제안과 남베트남의 협조로 방송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약정서 제11항에는 “군사목적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한국군은 월남 당국과 사전협조 후 월남내의 고정방송국, 기타 방송수신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²⁰⁾

방송국 설치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한국군이 제시한 방송국 설치 목적은 매우 명확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군이 제시한 설치 목적은 다섯 가지였으나 방송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국군 장병이고, 두 번째는 남베트남 주민, 베트콩(Viet Cong: Vietnam Communist), 북베트남이었다. 한국군장병들에 대해서는 대공교육 강화와 국내소식전달, 장병 오락 및 위문을 통한 사기진작이 목적이었다. 남베트남 주민, 베트콩, 북베트남에 대해서는 대적 심리전 방송이 목적이었다. 실제로도 KFVN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었다.

먼저, 대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베트남

18) 국방부, 「대미협의각서(1965. 6. 23)」, 국방부, 『전투사단 파월협정문(HB02626)』, 1965. 여기서 HB02626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사료 관리번호임.

19)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관 공한(1965.7.9)」, 국방부, 『전투사단 파월협정문(HB02626)』, 1965. 당시 비치 대장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USMAC-V)의 보고를 근거로 남베트남측과의 협조를 제시하였다.

20) 「한·월 군사실무약정서(1965. 9. 5)」.

전쟁이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베트남이나 북베트남과의 전쟁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소련과 중공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이념전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었다. 전쟁에서 이념 문제가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라디오를 통한 장병 대공교육을 제일의 방송국 설치목표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군은 방송의 목표를 “지휘의도의 전달, 반공사상의 고취, 한·월 친선과 이해증진, 진중생활의 명랑화”²¹⁾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송의 교육적 목표는 방송편성에서도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심리전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것은 첫 번째인 장병 대공교육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당시 주월한국군은 한국군의 심리전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 북한방송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²²⁾ 실제로 북한은 1965년 12월 1일부터 하노이(Hanoi) 방송을 통하여 양호한 감도로 우리말 방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사이공에서 실시하는 우리말 방송보다 감도가 월등하게 양호하여 병사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²³⁾ 또한 한국군의 평정작전을 위해서는 남베트남 주민 및 베트남, 북베트남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세 번째로는 장병들에 대한 국내 소식 전달, 오락 및 위문방송으로서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였다. 전장에서 자국 방송을 들으며, 자국 음악과 뉴스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해외에서 한국의 소식은 파병장병들을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로 묶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1) 맹호 정훈참모부, 「정훈장교 회의자료(1971. 12. 4.)」,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56~57쪽

23) 당시 북한 방송은 뉴스 해설 및 한국 민요 등을 방송하면서 중간에 한국 동요를 방송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뉴스 및 북한소식, 남한소식, 향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시 낭독, 국제정세해설(주로 월남전쟁) 반미선전 및 민요, 동요 등이었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58~59쪽.

그러나 방송국 설치에는 이 같은 명시적인 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목적도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베트남이라는 전장의 광활성에 따른 작전의 효율성 제고 수단과 한국 근로자들의 파견에 따른 측면이다.

먼저, 베트남 국토의 광활성에서 제기되는 작전의 효율성 측면이다. 1969년 기준 한국군의 전술책임지역은 6,800km²였다. 이는 당시 베트남 국토의 1/25의 면적이면서 남한 면적의 약 1/14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었다.²⁴⁾ 한국군 주둔지역간 거리는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주둔한 사이공에서 9사단이 주둔한 나트랑(Nha Trang)까지는 410여 km, 나트랑에서 수도 사단이 주둔한 퀴논(Quy Nhon)까지는 200여 km, 퀴논에서 해병 제2여단이 마지막으로 주둔한 호이안(Hoi An) 근처 다낭(Da Nang)까지는 300km나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거리는 한국군을 통합 관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었다. 이런 작전환경에서 라디오는 작전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둘째는 베트남 현지에 거주중이거나,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방송이었다. 라디오 방송의 정보제공 기능은 현지 한인들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베트남과 1956년 5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했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남베트남 현지에는 많은 숫자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진출하게 되었다.²⁵⁾ 이들에게 라디오방송은 장병들에게처럼 한국의 소식을 전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당시 한국군은 장병들에 대한 대공교육 강화와 사기진작 및 뉴스보도, 그리고 심리전 작전의 수단이라는 목적으로 방송국 설치를

24)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전투제원』, 1969.

25) 1965년부터 1971년까지 파견된 근로자는 총 25,082명이었다. 이는 동 기간 한국인 근로자 해외진출 총인원 52,520명의 47.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시 한국인 근로자들은 RMR-BRJ, PHIL CO 등 28개 외국인 회사와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한진상사 등 58개 한국회사에 근무하였다.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국방부, 1971, 563~567쪽.

추진하였다. 더불어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작전수단으로, 또 현지
에 나가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의
목적에서 방송국 건립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방송국 설치과정

1965년 9월 20일 주월한국군사령부 설치령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
다.²⁶⁾ 이어서 1965년 9월 25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에 의해 주월한국
군사령부가 서울 필동에서 창설되었다.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된 이후 국방부는 방송국 설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해외에 방송국 설치에 방송장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국가주권과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였고, 방송인력 선발 등 해결되어야 할 제반문제가 있었다.

우선 국방부에서는 「한·월 군사실무약정서」를 근거로 남베트남에
방송국 설치를 요청했다. 1965년 9월 30일 한국 대사관 및 IMAO
(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Office, 국제군사원조처), 남
베트남군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에는 필요장비 3대는
USMAC-V(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주월미
군사원조사령부)에서 수령하고, 사이공, 퀴논, 캄란(Cam Ranh) 3개
지역에 설치하게 하며, 이 지역의 전력공급과 방송 전파발사 사용을 위한
남베트남 정부의 승인 및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5년 11월 1일 개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²⁷⁾

이후 남베트남 군 및 외무부와 협조를 진행하여, 1965년 11월 23일
남베트남 정부(외무부)로부터 위의 3개 지역에 방송국 설치 승인을 받았
다.²⁸⁾ 12월 6일에는 남베트남 당국에 정식으로 무전국 설치허가를 신청

26) 법제처, 『주월남공화국 한국군사령부 설치령(안)』, 1965년 9월 20일.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222쪽.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222쪽.

했고, 전파관리당국에서는 1965년 12월 11일 주월한국군 사이공 방송국에 주파수 1,440kHz, 지방국에는 1,400kHz의 남베트남 주파수 할당사실을 주월 대사를 통해 전달해 왔다.²⁹⁾

방송기술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방송을 운영할 인력의 현지 적응도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1965년 10월 20일 현지 방송국 설립을 위해 국방부 국군방송실장인 이봉은 서기관을 포함한 방송실무요원 제1진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하였다. 1진으로 파견된 국군방송 실무진들은 1965년 11월 15일 남베트남의 퀴논에서 남베트남 방송국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25분씩(07:35~08:00) ‘국군의 방송’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³⁰⁾ 그리고 남베트남군 방송국의 협조로 중파(610KC, 출력 20kW) 및 단파(7,265KC, 출력 5kW)로 매일 07:35~08:00까지 25분 방송시간을 획득하였다. 이후 본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프로그램 송부로 1965년 12월 1일부터 방송을 실시하였다. 당시 가청범위는 중파 610KC는 남베트남의 전 한국군이 청취 가능한 것이었고, 단파 7,265KC는 남베트남 전역에서 가청되는 것이었다.³¹⁾

그러나 방송인력의 추가 확보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지 않았다. 1965년 12월 26일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은 국방부 정훈섭외국장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방송인력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문에는 1965년 11월 12일 건의한 방송요원을 시급히 인선 파견하여 줄 것과 현재 파견 중인 이봉은 외 1명에 대하여 3개 지구 방송국 설치 추진과 현재 임시로 실시되고 있는 남베트남 정부 방송국 한국어 방송을 위하여 장기 파견(1년간)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³²⁾

이에 따라 국군방송실에서는 본격적인 방송국 개국을 준비하기 위해

29)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국방홍보원, 2004, 457쪽.

30)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457쪽.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222쪽.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1, 60쪽.

1966년 2월 22일 KBS직원을 포함한 방송요원 13명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하여 3월 2일에는 퀴논에서 50W의 시험방송을 거친 후 4월 15일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해외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다.³³⁾

제1차로 퀴논 방송국이 개국되고, 방송 출력 증강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군의 증파가 이루어짐에 따라 퀴논방송국 1개만으로는 모든 부대에 방송을 전파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방송실에서 방송요원 제2진을 파견하여 1967년 2월 1일 사이공 방송국, 1967년 4월 4일에는 나트랑 방송국, 1968년 3월 1일에는 호이안 방송국, 1969년 3월 1일에는 투이호아(Tuy Hoa)에 중계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방송국은 모두 KFVN라는 단일 호출부호를 가지고 운영되었다.³⁴⁾

다. 방송국 구성 현황

방송국은 주월한국군사령부 정훈참모부 소속이었다. 정훈참모부란, 정신전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참모부서이다. 1964년 5월 15일 제정된 육군의 ‘전시 정훈업무규정’에 따르면 전시 정훈업무를 “전쟁목적을 올바르게 주지시켜 조국의 자유와 국권을 수호하게끔 필승의 신념으로써 최후 일각까지 용전 분투케 하는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³⁵⁾ 이 같은 업무에 따라 방송국이 정훈참모부에 속했던 것이다.

정훈참모부 산하에는 정훈과, 방송과, 행정실, 영화촬영반이 있었다. 방송국은 방송과(課)의 예하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방송과는 정훈참모의 지시를 받아 예하 방송국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였다.³⁶⁾

방송과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령인 방송과장을 포함 47명의

33)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457쪽.

34)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457~458쪽.

35) 정훈50년사 편찬위원회, 『정훈50년사(1940~1989)』, 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684쪽.

36) 주월한국군사령부, 『편성 및 기능(HB01598)』, 33~34쪽.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는 실질적인 방송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편성관,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 37명의 인력이 군속(현재의 군무원)³⁷⁾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상세한 인원편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월한국군사령부 정훈참모부 방송과 편제³⁸⁾

직책	병과	편제	계급	군
방송과장	정훈	1	중령	육군
방송기재장교	통신	1	소령	육군
방송운영장교	정훈	1	소령	육군
방송실장	정훈	6	소령	육군
방송실장	정훈	1	소령	해병
편성관		1	3갑	육군군속
프로듀서		6	3을	육군군속
프로듀서		2	3을 1, 4갑 1	해병군속
엔지니어		12	3을 6, 4갑 6	육군군속
엔지니어		2	3을 1, 4갑 1	해병군속
아나운서		12	3을 6, 4갑 6	육군군속
아나운서		2	3을 1, 4갑 1	해병군속
		37	3갑 1, 3을 21(해3) 4갑 15(해3)	

출처: 주월사, 『주월사편성표 및 민사원조기획 보고(HB01853)』, 1967, 19~20쪽.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에 군속은 총 40명이 편제되어 있었다. 이들 중 거의 대다수인 37명이 방송국의 운영인력이었던 셈이다.³⁹⁾ 방송관련

37) 군속명칭은 1980년 12월 31일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군무원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계급체계를 1~9급으로 개정하는데, 3급을류는 5급(사무관), 4급갑류는 6급(주사)로 개정됨. 육군본부, 『인사운영사 제1집』, 육군인쇄공창, 1985, 1095쪽.

38) 정훈참모(육군대령) 예하에는 총 55명이 편제되어 있었으나, 방송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훈과장, 정훈하사관, 교육병 등은 제외함

39) 주월사, 『주월사편성표 및 민사원조기획 보고(HB01853)』, 1967, 20쪽. 나머지 군

인력인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국군방송에 근무 중이었거나, 또는 KBS, MBC, DBS 등 방송분야에 종사했던 인력들이었다. 당시 방송국 내에서는 파월인력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아나운서의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선발 인원들은 출국 전 약 2~3개월의 교육을 거쳐야 했다.⁴⁰⁾ 그러나 시기에 따라 방송요원의 보충문제도 제기되었다. 파월기간 만료에 따른 후임자의 선발, 신원조회, 여권 수속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방송 운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자아나운서의 경우가 자주 그러했다.⁴¹⁾

방송요원들은 남베트남 현지에서 각 방송국에 배치되어 보통 1~2년간량 근무하였다. 인원에 따라서는 귀국한 이후 다시 선발되어 재출국하는 사례도 있었다.⁴²⁾ 국군방송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기간 KFVN에서 활동한 요원 중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은 아나운서 43명(현역 5명 포함), 프로듀서 24명, 엔지니어 29명(현역 3명 포함) 등 총 96명(현역 8명 포함)이다.⁴³⁾

라. 방송국 운영 현황

KFVN은 주월사 정훈참모부 소속으로 4개의 방송국과 1개의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방송국은 한국군 중 맹호부대가 처음 남베트남에 주둔한 퀴논지역에서 1966년 4월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1967년 백마부대의 증파와 해병2여단이 호이안 지역으로 주둔지를 이동함에 따라 추가 방송국이 설치되었다. 또 사이공 지역에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 운영되면서

속인 2급갑(대령급) 3명은 민사심리전참모처 정치담당, 경제담당, 사회담당에 보직되었다.

40) 부정길, 「사이공 방송국의 향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82쪽.

41) 주월한국군 정훈참모부, 「업무지원 개선방안 건의(1972.7.4)」,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42) 최대영, 「젊다는 것, 그것은」,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615~616쪽.

43)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1쪽.

방송국은 모두 4개로 증가하였다. 한국군의 주둔지역과 이들 지역간의 가청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계소도 추가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가청범위 확대를 위해 통신출력 증강 작업을 추진하여, 1969년 이후에는 모든 한국군 주둔지역에서 방송청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주월사 예하 한국군 방송국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월사 예하 한국군 방송국 현황

방송국	개국일	방송출력	폐쇄일	청취지역 (부대)	근무요원(누계)			
					장교	문관	사병	계
귀논	66.4.15	10kW	73.1.30	맹호, 100군수	6	36	21	63
나트랑	67.4.10	5kW	73.1.30	백마, 십자성, 야전사령부	5	37	14	56
사이공	67.2.1	5kW	73.2.12	주월사, 백구, 비둘기, 공지단	6	30	12	48
투이호아 중계소	69.3.15	1kW	73.1.30	백마 28연대		3	8	11
호이안	67.4.10	1kW	72.1.3	청룡	5	24	12	41
총계					22	130	67	219

출처: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한국군 주둔지역에 위치한 방송국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한국군 부대의 정훈참모(중령) 통제를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이공 방송국은 주월사 직할이고, 귀논 방송국은 맹호부대, 나트랑 방송국과 투이호아 중계소는 백마부대, 호이안 방송국은 청룡부대의 협조와 통제를 받았다.

예하방송국의 방송요원에 대한 인사는 주월한국군사령부 본부가 하였다. 방송요원들은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이었으며,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해당 방송국이 있는 지역 주둔부대에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 배치되었다. 방송국의 방송업무전반에 대해 주월한국군사령부 정훈참모부 방송과의 통제를 받았다. 예하 방송국에는 기본적으로 프로듀서 2명, 아나운서 2명, 엔지니어 2명 등 5~7명이 배치되었다. 각 주둔부대 정훈참모

소속이던 소령이 방송국장으로 보직되었다.⁴⁴⁾

예하 방송국은 해당 지역부대장에게 배속(경제, 행정 및 군수지원 제공)되었다. 따라서 철군시에는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동시 철수하게 되어 있었다.⁴⁵⁾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청룡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호이안 지역에 있던 방송국이 1972년 1월 3일 철수하였다. 이어서 한국군의 본격적인 철수가 진행되면서 방송국도 함께 폐국 및 철수의 과정을 거쳤다. 1973년 1월 25일, 주월사령부의 방송폐쇄 지시에 따라 귀논과 나트랑 방송국은 1973년 1월 30일 22시부, 사이공 방송국은 1973년 2월 12일 22시부로 폐쇄되었다.⁴⁶⁾

마. 방송시간과 프로그램 제작

KFVN의 방송시간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은 1965년 12월 첫 시험방송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발전하였다.

먼저, 주월사 방송국의 방송시간은 주당 총 67시간 이었다. 월~금요일은 1일 9시간(06:00~08:00, 12:00~14:00, 18:00~23:00), 토요일과 일요일은 1일 11시간(12:00~15:00, 17:00~23:00)이었다.⁴⁷⁾ 방송시간의 증가는 인력과 방송시설의 보강, 그리고 청취자의 요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KFVN의 기본프로편성 비율은 교육 25%, 보도 13%, 심리전 7%, 군가 5% 정도였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연예, 오락, 일반교양이었다.⁴⁸⁾

프로그램은 제작과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한국 국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남베트남 현지 방송국에서 제작한

44)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198쪽.

45)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46) 주월사 정훈부, 「방송폐쇄지시」,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47)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48) 맹호 정훈참모부, 「정훈장교 회의자료(1971. 12. 4)」,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프로그램이었다. 본국 대 현지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은 대략 6:4 정도였다. 본국프로는 주로 보도(18.5%), 오락 (17.7%), 음악(16.3%) 연예(11%) 등이었다.⁴⁹⁾ 한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KBS, MBC, TBC, CBS 등)에서 제작한 주요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CM(광고방송)을 삭제하고, 편집한 다음 항공기로 수송하여 지원하였다.⁵⁰⁾

〈표 3〉 1971년 KFTV 프로그램 편성 현황

구분	자국제작	본국제작
교육	정훈교실(승공의 길, 복귀의 최악상) 주 10분 월남어강좌(일상용어 해설) 주 70분 심리전 방송(대 민사심리전) 주 60분 정글속의 메아리(전공미담 소개) 주 20분 군가 및 진중가요 보급 주 70분 오늘도 명랑하게(경쾌한 음악과 스파트) 주 70분	연속낭독(전쟁수기 및 자수간첩수기) 주 60분 인생광장(교양강좌) 주 10분 장막을 헤치고(공산세계의 최악상) 주 20분 김삿갓 북한방랑기(북한 실정적 풍자) 주 70분 연속방송극(반공, 사극) 주 120분
일반 교양	마음의 산책(영업소개) 주 70분 군중시간(설교 및 신앙강좌로 인격도야) 주 10분 이 한밤 그대와 함께(정서순화) 주 120분	심자성 밤하늘에(정서순화와 인격도야) 주 20분 백만인의 퀴즈(퀴즈문답) 주 45분 명랑백일장(오락프로) 주 30분
보도	7시 아침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1시 낮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7시 저녁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9시 밤뉴스(대내 및 본국뉴스) 주 70분 주간종합뉴스(대내 및 본국 뉴스) 주 10분	향토소식(고국 각 지방의 발전상 소개) 주 20분
오락	즐거운 한나절(가요, 스파트) 주 180분 팝송 하이웨이(팝송과 스파트) 주 180분 가요 스파트(국내 및 대내사연과 가요 스파트) 주 180분	민속의 잔치(민요와 우리나라 고전음악) 주 45분 신인무대(아마추어 노래자랑) 주 45분 KBS향연(국내가수 노래잔치) 주 45분 위문열차(장병위문과 음악) 주 20분 희망의 구름다리(국내엽서와 음악 스파트) 주 18분 경음악코너(외국경음악) 주 60분

출처: 맹호 정훈참모부, 「정훈장교 회의자료(1971. 12. 4)」,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49)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50)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2쪽.

현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주월사령부의 방송활동 목표를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당시 주월사는 방송활동의 목표를 ① 군사령관 방침전파, ② 주월군 활약상 보도, ③ 승공사상 고취, ④ 국제친선과 이해증진, ⑤ 진중생활의 명랑화로 상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현지 제작한 자국 자체 프로그램은 교육(10%), 군가 및 진중가요(10%), 스팟(Spot, 속보) (10%), 지시 및 방침(5%), 한월친선(1.5%)의 내용 등이었다.⁵¹⁾

바. 방송장비 현황

주월한국군 방송국은 처음에는 남베트남 국영방송의 장비를 임차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공이나 다낭의 남베트남 방송국을 임차하여 방송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지원으로 독자적인 방송장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8년 이전까지만 해도 방송출력이 250W정도로 대단히 미약한 것 뿐만 아니라 방송제작 장비 또한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 중 일부는 노후화된 군용통신장비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녹음 및 복제시설 등 방송장비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당시 주월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효율화 대책으로 4개 방송국을 통제할 수 있는 1개 방송국(중앙통제방송국)의 증설 이외에 방송장비 교체, 출력 5kW의 송신시설 보강, 녹음 및 복제시설의 구비, 방송요원의 증편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⁵²⁾

그러나 당시 제시한 대책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출력 증강과 제작장비 보강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군의 작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별봉사계획’에 의거, 미국측과 KFVN 시설보강과 출력증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미국측의

51)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52) 주월사, 『주월사 부대현황(HB02225)』.

지원으로 1969년 3월 1일에는 투이호아에 출력 50W의 중계소를 설치하였다.⁵³⁾

지역방송국의 방송장비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졌다. 방송장비는 방송 제작장비, 송신기, 그리고 중계기 등으로 구분된다. 각 방송국별로 방송 장비의 구체적인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71년도 퀴논 방송국의 방송장비 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용 녹음기, 편집용 녹음기, 취재용 녹음기 등의 방송제작장비, 송신기, 그리고 방송의 안정적인 전력지원을 위해 발전기가 인가대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성능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다른 방송국의 장비와 성능도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 1971년도 퀴논 방송국 방송장비 현황

장비명	인가수	보유수	비고
방송용 녹음기(고정)	2	2	성능양호
편집용 녹음기	2	2	성능양호
취재용 녹음기(휴대용)	2	2	성능양호
송신기(고정)	1	1	성능양호
믹서(고정)	1	1	성능양호
발전기(60)	2	2	성능양호

출처: 맹호 정훈참모부, 「71년도 정훈활동 지침(1971. 2. 15)」,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53)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사』, 933~934쪽.

4. KFVN 운영성과 분석

지금까지 KFVN의 설치목적과 과정,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7년여 간 운영된 KFVN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방송국 설치의 주된 목적이었던 파월 한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기진작 측면, 심리전 수단 측면, 그리고 방송국 운영의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방송기술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가. 파월 장병 사기 진작

KFVN의 주 방송대상은 파월장병이었다. 장병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전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남베트남 현지에 파견된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KFVN의 1차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 무엇보다 이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파월장병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베트남전쟁이 종전된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조사의 실현성이 의문시 되는 점이 있다. 이점에서 베트남전쟁 기간 정훈참모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방송 청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⁵⁴⁾

주월사 정훈참모부는 1972년 5월 1일~6월 15일까지 한국군을 대상으로 방송청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방송국은 사이공, 퀴논, 나트랑 3개 방송국이었다. 조사인원은 퀴논 방송국 600명, 사이공 방송국 400명, 나트랑 방송국 청취지역(9사단, 100군수사, 야전사) 800명 등 1,800명(장교 350명, 병사 1450명)이었다. 18개 문항의 설문지

54) 물론 이것이 군의 내부조사결과인 점에서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객관식 15, 주관식 3)를 이용하였다.⁵⁵⁾ <표 5>는 당시 설문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방송청취 설문조사 결과

질문사항	응답 결과
방송청취수단	개인라디오 39%, 동료라디오 57%, 확성기 4%
개인별 청취율	매일 듣는다 47%, 가끔 듣는다 43%, 전혀 안 듣는다 10%
부대별 청취율	전투부대 60%, 행정근무부대 92%
1일 청취시간	7~8시간 9%, 5~6시간 12%, 3~4시간 32%, 1~2시간 47%
청취시간대	20~22시 33%, 12~14시 30%, 18~20시 22%
청취감도	잘 들린다 70%, 낮에만 들린다 23%, 밤에만 들린다 5%, 전혀 안 들린다 2%
방송내용	흥미 있다 44%, 생활에 도움이 된다 24%, 그저그렇다 23%, 흥미없다 9%
좋아하는 프로	뉴스 24%, 음악프로 43%, 연속방송극 19%, 오락프로 13%
좋아하는 아나운서	여자 40%, 남자 17%, 아무나 무방하다 43%
듣지 않는 이유	근무시간 48%, 취미가 없어서 13%, 내용이 흥미 없어서 15%, 라디오가 없어서 24%
월남어 프로	꼭 필요하다 39%, 필요없다 24%, 너무 어렵다 26%, 너무 짧다 11%
미국의 소리	도움이 된다 65%, 필요 없다 35%
싫어하는 프로	월남어 교육 83%, 미국의 소리 중계 17%
좋아하는 프로	대중가요 29%, 가족통신 29%, 한밤의 음악편지 21%, 연속방송극 21%

출처: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청취 여론결과 하달(1972.7.7)」,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설문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병들은 라디오방송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55)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설문 계획(1972.5.1)」,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여론 결과 하달」(1972.7.7),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관계철(HB01713)』.

청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절반 이상이 매일 3~4시간 이상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다. 청취감도도 70%가 잘 들린다고 했고, 전혀 안 들린다는 2%에 불과했다. 이는 라디오 방송이 기술적·내용적으로 장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이다. 또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의 라디오를 이용해 듣고 있어 상당수의 라디오가 보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대별 청취율이 전투부대 보다 행정부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전투부대는 작전 임무 등으로 인해 청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7명이 흥미가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좋아하는 방송프로는 음악프로 43%, 뉴스 24%, 연속방송극 19%, 오락프로 13% 순이었다. 방송 내용이 흥미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듣지 않는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때문이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라디오 방송은 자연스럽게 장병들을 위무(慰撫)하고, 전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방송과견요원이었던 부정길의 증언은 라디오가 장병들에게 끼쳤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월한국군 소속 김재웅 소위의 엽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아마도 군방송이 없었다면 전투에 나가지 않으려는 병사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귀대해서는 물론이고 작전 중에도 틈만 생기면 라디오를 대고 있으니까요. 어떤 녀석은 라디오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나도 물론 고국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절로 시름까지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방송이란 것이 이처럼 위대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항상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병들이 이국 땅에서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⁵⁶⁾

56) 부정길, 「사이공 방송국의 향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84쪽.

타국에 파병간 한국 장병과 현지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라디오방송은 매우 귀중한 존재였다. 이것은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뉴스제공이라는 당초 방송국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결과였다. 귀는 방송국 개국 당시 방송국장 한용희는 방송이 “한국의 흠냄새를 풍겨주고 있다”⁵⁷⁾고 표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KFVN의 당초 설립 목적인 장병 사기진작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심리전 성과

KFVN의 설립목적 중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심리전 분야였다. 심리전이란 일반적으로 군사적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전을 특정집단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⁵⁸⁾ 심리전은 대상에 따라 대외 심리전, 대내 심리전, 대적 심리전, 대민 심리전 등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전쟁 당시 KFVN이 수행하였던 심리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군 장병들이 적국의 심리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 심리전, 둘째, 남베트남 현지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對民) 심리전, 셋째, 북베트남과 북한 등 지원 국가 병력들을 대상으로 한 대적(對敵) 심리전이다. 여기서는 심리전 대상에 따라 각각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내 심리전 : 장병들에 대한 적 심리전 오염 방지

북한은 1965년부터 하노이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평양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한국 민요와 동요를 방송하였지만, 내용은 북한소식, 반미선전 등을 내 보내고 있었다.⁵⁹⁾ 한국군방송국이 아직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57) 『동아일보』, 1966년 5월 14일자.

58) 조영갑, 『민군작전과 심리전』, 국방대학교, 2006, 72쪽.

59) 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58~59쪽.

전이라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KFVN 설립 1진으로 베트남 현지에 갔던 한수연은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월남에는 우리 장병들뿐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고국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노이에서 송출하는 평양방송이 있었는데 모두 그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방송내용은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월남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이었고, 가요는 전부 국내에서 인기 있고 귀에 친숙한 곡들이었다.⁶⁰⁾

북한과 북베트남이 한국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 방송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67~1970년까지 적성방송은 총 22,765회가 청취되었다. 방송 내용으로는 선동의 내용과 한국·미국·남베트남·일본을 비난하는 내용, 베트남전 반대, 북한찬양, 선동과 허위 사실 전파 등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허위사실 전파로 총 10,440건(46%)이었다. 그리고 한국비난 2,578건(11%), 미국비난 2032건(9%), 북한 찬양 1982건(8.7%) 순이었다.⁶¹⁾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적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남베트남 정부와 협의하여 임시로 귀논에 있는 남베트남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하루 25분씩 국군의 방송을 실시했다.⁶²⁾ 아울러 한국군 방송국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에 방송국을 개국하고, 출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한국군 주둔지역에서는 북한방송보다는 한국군 방송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어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심리전 방송프로그램은 심리전 목적에 맞추어 목표 대상 집단의 흥미와 관심을 북돋을 수

60) 한수연, 「정성 심(心)」,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53~554쪽.

61)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194~195쪽.

62) 한수연, 위의 글, 553~554쪽.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뉴스보도, 음악, 연설, 대담, 토론, 좌담, 스포츠, 종교 프로 등이 있는데, 심리전에서는 적절히 조화하여 상대방의 심리에 자극을 줄 수 있게 프로를 편성하여야 한다.⁶³⁾

KFVN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전 기능에 대응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KFVN의 방송활동의 제1목표는 군사령관 방침전과였다. 이어서 승공사상 고취도 포함되어 있었다.⁶⁴⁾ 이런 방송 목표는 당시 방송계획에도 반영되었다. 이런 사례로는 방송내용에 각 참모부별 교육내용을 반영한다든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의 내용을 방송에 포함, 전달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1972년 제1차 참모부별 방송계획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주월한국군 사령부 각 참모부서가 방송의 기능을 이용하여 장병들에게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지휘방침과 ‘3훈 5계 정신’⁶⁵⁾을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1972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방송국을 이용 매주 금요일 10분간 교육하였다.⁶⁶⁾

예하사단에 속해 있는 방송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1972년 맹호사단의 경우 귀는 방송국을 통해 매주 월요일 10분씩 장병심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⁶⁷⁾ 예하연대의 정훈과장이 순번제로 방송국에 나와 정신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였다.⁶⁸⁾ 또, 사단 웅변대회에서

63) 육군본부, 『야전교범 33-5 심리전』, 1988, 104쪽.

64) 주월사 방송과, 「역사자료」, 『방송관계철(HB01713)』.

65) 3훈 5계란 1970년 5월 1일 주월한국군사령관 이세호 장군이 지휘각서 제1호로 하달한 기본활동지침으로, 3훈은 ①우리는 적에게 용감하고 무서운 “한국군”이 되자 ②우리는 월남인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른 “따이한”이 되자 ③우리는 우방군에게 군기 엄정하고 신의 있는 “코리안”이 되자이며, 5계는 복무중 범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계율로 명령불복, 경계태만, 사육범행, 대민사고, 허위보고이다.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전사편찬위원회, 1985, 742쪽.

66) 정훈참모부, 「참모부별 방송교육계획(1972.3.30)」, 주월사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67)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2. 1. 1~1972. 12. 31)』(HB01868).

68) 맹호 정훈참모부, 「71년도 정훈활동 지침」(1971.2. 15)」,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입상한 장병들의 응변내용을 녹음하여 매일 10분간 1주일에 걸쳐 방송하기도 하였다.⁶⁹⁾ 전투전과 보도라든지 속보 또는 사령관의 담화문 등 주월한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내 보낼 때에는 송출면적이 넓은 남베트남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서 통일된 방송을 시도하기도 했다.⁷⁰⁾

방송을 통한 정신교육 효과는 입증되었다. 장병들은 라디오가 제공하는 각종 스팟(Spot)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절반 가까운 장병들은 이런 교육으로 정신무장이 강화되었다(47%)고 하였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6%였다.⁷¹⁾ 또한 대내 심리전의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베트남 전쟁기간 한국군 참전 인원은 연인원 324,864명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월북으로 추정되는 실종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⁷²⁾ 이 같은 수치는 당시 북베트남군뿐만 아니라 북베트남에 파견 나온 북한 심리전 요원의 전단 살포 및 라디오 선전활동이 빈번했음을 고려할 때 대단히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KFVN을 통한 장병 교육 및 심리전 오염방지 활동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대민 심리적 성과

남베트남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방송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자. 남베트남 현지 주민들은 KFVN의 주 청취자 중 한 부류였다. 과거

『참고철(HB01383)』.

69) 맹호사단 정훈참모부, 「응변대회 실시 지시」(1971. 12. 21), 수도사단 60포 작전과, 『참고철(HB01383)』.

70) 부정길, 「사이공 방송국의 향수」,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585쪽.

71)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설문 계획(1972. 5. 1)」,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 (HB01713; 주월사 정훈참모부, 「방송 청취 여론 결과 하달」(1972. 7. 7),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72)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9쪽, 43쪽. 이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기간 실종 처리된 한국군은 총 8명이다. 이중 1명은 2002년 유해가 발굴되었고, 3명은 순직 및 전사 처리되었고, 4명은 현재까지 수배중이다. 현재까지 수배 중인 4명 중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3명이며, 이중 2명은 북한의 전단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진해서 월북했는지, 아니면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갔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6·25전쟁 당시 한국 상류층에서 미군방송을 전황보도 및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차원에서 청취하였던 것처럼, 남베트남 주민들 또한 한국방송을 즐겨들었다.⁷³⁾ KFTVN은 남베트남 주민들이 한국군을 보다 친근하면서도 청취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월남어 방송과 위문공연, 그리고 고별방송을 예로 들 수 있다.

월남어 방송은 KFTVN에서 일부시간을 할애하여 월남어로 방송하는 프로였다. 한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월남어 교육이 아니라 남베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북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마치 6·25전쟁시기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유사한 것이었다.

월남어 방송은 귀는 방송국의 경우 1972년 6월 15일부터 하루 30분(오후 2시와 밤 10시부터 각각 15분)씩 운영하였다. 뉴스와 짝맞춘 남베트남 대중가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거나 한국군의 참모습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순서로 짜여졌다.⁷⁴⁾ 월남어 방송은 1972년 4월 안케패스(AnKhe Path) 작전 때 월남어 방송을 실시해서 작전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⁷⁵⁾ 이를 계기로 주월사 정훈참모부는 “격변하는 전황 속에서 지역 내의 주민이 여하한 상황아래서도 한국군을 지지 신뢰하고 우리의 작전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심리전 방송을 전개”한다는 목적하에 방송을 계획·시행하였다. 방송의 구체적 내용은 ① 한국군 소개 및 작전보도 ② 민사심리전 방송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불안감 제거, 작전부대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의식 고취, 첩보제공에 대한 구체적 방법, 한국군의 참모습 선양 ③ 승공

73) 부정길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에는 베트남 자국방송을 비롯해 주월한국군방송과 미군방송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국군방송은 군인들은 물론이고 남베트남인까지도 사이공의 소리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회고한다. 부정길, 앞의 글, 584~585쪽.

74) 『동아일보』, 1972년 8월 9일자. 당시 월남어 방송은 귀는 방송국장 보좌관이며 외국어대학교 월남어과를 졸업한 허원구 중위와 남베트남군에서 파견 온 중사가 담당하였다.

75) 『동아일보』, 1972년 8월 9일자.

사상 양양을 위해 공산당의 죄악상과 그들의 말로 소개, 민주주의의 장점과 이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식고취 ④ 한국문화소개로 한·월 일체감 형성 등이었다. 월남어 방송은 1차적으로 귀는 방송국에서 실시하고 효과에 따라 지역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남베트남인 방송 요원(아나운서)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⁷⁶⁾ 그러나 월남어 방송은 4개월 가량 시행되다 1972년 10월 6일부로 잠정 중단되었고, 10월 21일부로 완전 중단되었다.⁷⁷⁾

두 번째로 장병 위문공연을 들 수 있다. 이 공연은 단지 장병들뿐만 아니라 현지주민들에 대해서도 공연하였다. KFVN의 PD로 근무했던 정연익은 “사이공에서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장병 및 현지주민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었지만, 한국공연단이 제일 인기가 높았다. 한국 공연이 있는 날이면 사이공은 전쟁의 시름을 잊고 현지주민들이 장병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시내를 주유하기도 하여 통제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연이 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남베트남 주민들에게 선무사상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⁷⁸⁾고 했다.

세 번째로 KFVN의 고별방송은 한국군의 철수에 맞추어 남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방송이었다. 이것은 당시 남베트남인들에게 한국군이 어떤 이미지로 남기를 희망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고별방송의 의도는 “월남땅에 첫발을 내디딘 1965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76) 정훈참모부, 「대적 대민 월남어 심리전 방송 계획(1972. 5. 26)」,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77) 정훈참모부, 「대월남어 방송 폐쇄(지시)(1972. 10. 21)」,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미 미군이 철수하였고, 한국군도 해병대가 1972년 2월 철수하고, 1973년 초부터 본격적인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이기에 한국군 철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8) 정연익, 「잊을 수 없는 나트랑 방송국」,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612쪽.

남베트남 현지주민들에게 주월한국군의 용맹성을 마지막까지 심어주자”는 것이었다.⁷⁹⁾

3개 방송국별로 45분 분량의 고별방송을 제작하는데, 내용은 남베트남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군 파월의 의의(10월 유신에 관한 내용 포함), 파월 및 방송국 연혁, 방송기간의 업적, 전투부대의 활약과 대민지원의 성과, 주월군 10대 뉴스, 주월한국군 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과 특수 프로그램 소개, 각 부대장 고별인사, 명예로운 철군과 우리(10월 유신사항 포함)의 각오, 이별의 노래였다.⁸⁰⁾

KFVN은 남베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남어 방송을 비롯해 위문공연, 고별방송 등을 편성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한국군에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점에서 KFVN의 대민 심리적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대적 심리전 성과

대적 심리전은 베트남 및 북베트남, 그리고 북한 등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베트남전쟁 당시 KFVN이 대적 심리전을 어느 정도로 실시했는지 상세한 자료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부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대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다.

주월사 자료에 따르면, 1972년의 경우 KFVN 귀농방송국의 경우 1~4월에는 매일 10분씩(토, 일 제외) 대적선전 및 주민선무방송(월어)를 실시하였고, 5월 이후에는 30분으로 시간을 증가하여 실시하였다. 1~4월 기간 중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보내는 한국어 방송도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⁸¹⁾ 그러나 이 같은 대적 심리전 활동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시 한국군 방송을 청취했던

79) 주월사 정훈부, 「방송폐쇄지시」,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80) 주월사 정훈부, 「방송폐쇄지시」, 주월사 방송과, 『방송관계철(HB01713)』.

81)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2. 1. 1.~1972. 12. 31)(HB01868)』.

인원들을 조사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당시 북한을 포함해서 베트남과 북베트남에서 KFVN을 청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KFVN에 엔지니어로 참가하여, 2년 여 기간 동안 호이안, 퀴논, 사이공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최대영은 북한 파견인원과 접촉했던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한번은 낮방송을 끝내고 송신기를 내리는데 수신 모니터에서 이북 특유의 사투리가 흘러나왔다. “김기찬 아나운서, 최대영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의 방송 매우 잘 들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고생 많습다. 지금부터는 북조선 방송을 시작할끼니 잘 들으시라요. 또 봅세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런 일이 있는 후로 방송보안에 대한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은 물론이다.⁸²⁾

그렇다면 한국군의 대적 심리전 효과를 평가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 전쟁기간 한국군에 귀순한 적군의 통계자료는 대적 심리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65~1970년까지 귀순자는 2,379명이었다. 2,379명 중 베트남군은 1,579명, 북베트남군 36명, 기타 적군 동조자 및 적성주민 764명이었다.⁸³⁾

그러나 이러한 실적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대적 심리전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디오 방송국은 심리전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국 아나운서가 대민지원 성격을 띤 선무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민간인 마을에 파견되어 수행하기도 하였다.⁸⁴⁾ 그러나 대적 심리전은 라디오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주월한국군의 심리전 작전은 주로 참모부로 편제되어 있던 민사심리전처에서 담당하였다.

82) 최대영, 「젊다는 것, 그것은」,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616쪽.

83)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188~189쪽.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귀순자는 총 현황을 살펴보면, 2487명이었다.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7, 134쪽.

84) 최대영, 위의 글, 616~617쪽.

라디오방송국은 이런 심리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방송 이외의 심리전 활동으로는 전단, 확성기 방송, 영화, 연예공연, 사진전시, 태권도 시범, 국산 달력 배부, 포스터, 표어, 의장대 시범, 스케치 전시회, 군악연주 등이 실시되었다.⁸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디오 방송의 대적 심리전 성과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대적 심리전에 라디오 방송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 방송기술적 측면 성과

KFVN 운영의 성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방송기술적 측면이다. 장병사기 증진 및 심리전에서의 성과가 방송국 설치목적 측면에서 분석한 성과라면, 방송기술적 성과는 방송국 운영의 결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송기술적 측면의 성과는 크게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향상과 방송운영 장비 및 기술의 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기술은 베트남 현지 제작기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제작의 향상이었다. 당시 국내 방송사들은 베트남 현지에 방송을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내 프로그램 제작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방송운영장비를 지원받았다. 관련하여 당시 미국 기술진으로부터 방송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송 기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한국군 및 한국방송기술의 성장으로 나타났다.⁸⁶⁾ 그리고 1973년 3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당시에는

85)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71』, 400~401쪽.

86) 방송기술인력으로 호이안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던 최대영은 당시 미 RCA사에서

운영하던 장비를 모두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들 장비는 국내에서 국군방송의 제작에 사용됨과 함께 KBS와 협조하여 난청지역 송신소(원주방송국, 인제송신소, 양구송신소)에 배치되어 국내방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⁸⁷⁾

5.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전쟁시기 KFVN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라디오 방송은 동시간대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라디오의 유용성은 여러 전장에서 활용되었고,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 또한 이를 운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KFVN은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되면서 장병사기진작과 뉴스제공, 그리고 심리전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해외 한국어 방송국이었다. 1965년 12월의 시험방송부터 1973년 2월 방송국이 폐쇄되기까지 7년여간 운영되었다. 그 성과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병사기진작 측면에서 방송국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파월장병 대다수가 방송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송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남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장병 및 근로자를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일체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심리전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당시 북베트남과 북한의

과전된 미국인 기술고문과 필리핀인 엔지니어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최대영, 앞의 글, 615~616쪽.

87) 방송장비를 KBS에 양도할 때는 군원문제로 미국정부의 승인도 필요했다.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50년사』, 207쪽, 460쪽.

심리전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한국군 라디오 방송은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리전 오염방지와 대민, 대적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한국군방송은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군을 알리고 한국군을 선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비록 3명의 월북(또는 추정) 인원만 발생했을 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기간 총 2,487명의 북베트남 및 베트남을 귀순하는 데 선무방송, 전단 등 다른 심리전 매체와 함께 크게 일조하였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군의 방송기술 및 국내방송기술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다양한 방송장비의 확보와 철수 후 국내 방송에 활용된 것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방송제작 경험, 국내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현지 방송 등을 통해 전반적인 방송 기술의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전장에서 자국의 방송을 운영해본 경험은 계속해서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군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경험적 자산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결과 당시 KFVN은 세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미군의 라디오 방송처럼 파월장병들에게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는 과거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친미와 반공을 목표로 운영하였던 VOA방송처럼 한국과 한국군을 베트남 주민들에게 알리는 선전효과와 반공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는 6·25전쟁시기 유엔군사령부의 라디오 심리전 방송이었던 VUNC처럼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심리전 작전기능을 수행하였다. 결국 KFVN은 베트남 현지에 있었던 한국군 및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남베트남 현지인들과 북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심리전, 그리고 한국의 대외홍보라는 복합적 성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일부 방송역사서에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던 최초의 해외방송국인 KFVN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던 점은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전파가 국가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주권국가로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군 용병 논란’에 대해서도 중요한 반론의 증거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적 한계와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송국 운영에 대한 성과는 한국군자료에 의한 평가라는 제한이 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북베트남 등 방송 청취자 측의 반응도 운영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북베트남에서 전개하였던 라디오를 비롯해 심리전 전개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당시 방송제작 및 운영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한 구술사적 접근은 문헌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송의 운영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주월한국군방송국, 국군방송,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남베트남(월남), 라디오, 전쟁, 심리전, 북한방송, 정훈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 Force Vietnam Network(KFVN)'s Installation and Operation during the Vietnam War

Lee, Sin-jae

Headquarters of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ROKF-V) established on its own radio station in 1965 and operated it during the Vietnam War. The name of radio station was "Korea Force Vietnam Network(KFVN). KFVN had been operated for more seven years from December, 1965 to February, 1973. KFVN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that KFVN was the first overseas Korean broadcasting system in the Korean broadcasting history. However, despite of those highly evaluation for the KFVN, the study of that topic had not been for a long time.

This paper is the study of the KFVN during the Vietnam W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KFVN's main focus and process, and analyze of outcome of operations.

KFVN had transmitted broadcasting of various programs of news, entertainment, music,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And also it enhanced the morale of the soldiers, and performed psychological warfare toward ROK soldiers, South Vietnam's peoples and the North Vietnam as well.

During the operation time period of KFVN, it had three major achievements. Firstly, KFVN had contributed to ROK military soldiers's morale during the Vietnam war. Secondly, KFVN played a important role in psychological warfare. KFVN also had improved Korean broadcasting technic and skills.

Key Words : Korea Forec Vietnam Network(KFVN), Korea Force Network (KFN), Vietnam War, Korea Force-Vietnam, The Republic of Vietnam(South Vietnam), Radio, War, Psychological Warfare, North Korea's Broadcasting,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우 석 훈*

1. 머리말
2. 새로운 長城의 築造
3. 遼河 유역의 邊崗 유적
4. 맺음말

1. 머리말

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는 그 기원부터 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구려라는 국명은 城邑(성읍)을 의미하는 ‘溝婁(구루)’에서 유래한 것¹⁾으로서 고구려 지방에 흔히 붙는 忽 또는 骨(홀 또는 골) 또한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²⁾

고구려의 성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수단인 동시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였으며, 지방 통치를 위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사 연구에서

* 인하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1) 『三國志』 卷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傳. “溝婁者, 句麗名城也.”

2)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53~369쪽.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³⁾ 건국 이래로 도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성을 축조하여 외세의 침입에 대비한 고구려는, 중국 여러 왕조들의 침입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만의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⁴⁾ 이러한 군사방어체계는 6세기 말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침입한 수와의 전쟁에서 그 위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축조한 천리장성은 7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오던 기존 방어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당 전쟁을 앞두고 ‘장성’이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어체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요동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諸城(제성)들에 대한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⁵⁾

3) 지방통치 거점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82~284쪽;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269~302쪽이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余昊奎,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91, 한국사연구회, 1995; 여호규, 「遼河中上流東岸地域의 高句麗城과 地方支配」, 『역사문화연구』1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2 등이 있다.

4) 고구려 초기의 군사방어체계에 관한 연구는 遲勇, 「高句麗都城의戰略防禦系統」,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部, 1993; 여호규,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1, 國防軍事研究所, 1998; 林起煥, 「高句麗 前期 山城研究: 高句麗 山城의 기초적 검토」, 『國史館論叢』82, 國史編纂委員會, 1998 등이 있으며, 고구려 후기의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여호규,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體系와 軍事戰略」, 『韓國軍事史研究』3, 國防軍事研究所, 1999; 신형식 외, 『고구려산성과 해양 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2000; 여호규, 「고구려의 성과 방어체계」,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등이 있다.

5) 기존 방어체계인 요동지역의 제성들을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국내·북한·중국 학계의 주된 입장이다.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대당 전쟁에서 천리장성과 관련된 기록의 부재는 기존 연구가 고구려 산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

• 국내 학계에서의 연구에는 申澄植, 「高句麗 千里長城의 研究」, 『白山學報』49, 白山學會, 1997; 신형식 외, 앞의 책, 2000; 해외한민족연구소 외, 「高句麗는 왜 千

그러나 길림성~요녕성까지 토축으로 이어지는 邊崗(변강) 유적⁶⁾이 발견됨에 따라 이 변강을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보는 변강설⁷⁾이 새롭게

里長城을 쌓았는가: 안시성은 실제 어디에 있었나, 해외한민족연구소 외, 2008 등이 있다.

- 북한 학계에서의 연구에는 박창수, 「고구려 서북방 성방어체계의 위력」, 『조선고고연구』1988-3, 사회과학출판사, 1988; 박창수, 「고구려의 성 분포와 서북방어체계」, 『력사과학논문집』1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박진옥, 「요하류역의 고구려 성들」,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남일룡,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등이 있다.
- 중국 학계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山城聯防線說(산성연방선설)과 山城防禦組群說(산성방어조군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성연방선설에는 王健群, 「高句麗千里長城」, 『博物館研究』1987-3이 있으며, 산성방어조군설에는 陳大爲,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會論集』, 1985; 王綿厚, 「隋唐遼寧建置述考」, 『東北地方史研究』1986-1; 王德柱·梁振昌, 「高句麗千里長城考」, 『遼海文物學刊』1994-2; 陳大爲, 「遼寧高句麗山城再探」, 『北方文物』1995-3, 北方文物雜誌社, 1995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장성’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장성이란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 지역에 축조한 장벽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고구려 천리장성이 요동지역의 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미 기존의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수와의 전쟁에서도 역시 고구려가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에 와서야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요녕성 경내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이 수축된 것은 고구려가 완전히 요동군과 현도군을 장악한 405년 이후부터 7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쌓을 필요는 없었다.

- 6) 변강은 1971년 10월과 1983년 5월, 길림성 懷德縣(회덕현) 경내의 토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王健群, 앞의 글, 1987; 李健才, 「唐代高麗長城和扶余城」, 『民族研究』1991-4, 中國社會科學院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 1991) 대표적 인 명칭으로는 ‘老邊崗(노변강)’을 들 수 있으며, ‘邊(변)·崗(강)’ 혹은 ‘邊崗(변강)’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길림성·요녕성의 촌락에서 그 유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변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出版發行, 2010, 285쪽)
- 7) 변강설은 중국 길림성·요녕성 지역에서 발견된 변강 유적을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다만, 변강설 역시 아직까지 고구려의 유물이라 할 만한 것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국내 학계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여호규,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

주목받았다.

변강 유적은 요하를 도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동북~서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그 축조 방식과 형태가 길림성~요녕성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천리장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천리장성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⁸⁾ 특히, 여호규는 고구려가 요하 동안의 평원에 새롭게 천리장성을 축조한 까닭은 당의 조종을 받던 契丹(거란)의 침공에 대비하는 한편 靺鞨(말갈)의 이탈을 봉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설명⁹⁾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된다.¹⁰⁾

2장에서는 천리장성의 축조 전과 후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수와 당의 침입경로¹¹⁾를 비교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군이 요하 연안에서

景, 『國史館論叢』 91, 국사편찬위원회, 2000; 東潮·田中俊明지음, 박천수·이근우 옮김,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번역총서14, 동북아역사재단, 2008이 있다.

- 중국 학계에서의 변강설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李健才, 「東北地區中部的邊崗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1987-1; 李健才, 앞의 글, 1991; 李健才, 「再論唐代高麗的扶余城和千里長城」, 『北方文物』2000-1, 北方文物雜誌社, 2000; 魏存成, 『高句麗遺迹』, 文物出版社, 2000; 馮永謙, 「高句麗千里長城建置辨」, 『東北歷史与文化』 2002-1, 吉林省社會科學院, 2002; 姜念思, 「千里長城何處尋」, 『沈陽史話』, 沈陽出版社, 2008;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千里長城調查要報」, 『東北史地』 2010-3, 吉林省社會科學院, 2010;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出版發行, 2010; 崔艷茹, 「貞觀十九年唐軍攻打高句麗建安城的進軍路線考」, 『東北史地』2012-1, 吉林省社會科學院, 2012 등이 있다.

8) 李健才, 앞의 글, 1991; 여호규, 앞의 글, 2000;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등.

9) 여호규, 앞의 글, 2000.

10) 여호규는 요하동안에 고구려가 설치한 천리장성은 기존 산성들과의 거리가 멀어 지게 되며, 이에 따라 고구려가 기존의 방어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어체계를 확립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 지금까지 대수·당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수와 당의 침입경로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수와 당의 침입경로에 대한 연구로는 李丙燾, 「고구려 대 수·당 항전」,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池内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5-16, 太學社, 1979; 蒯中正, 『中國歷代戰爭史』,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高句麗 對隋·唐 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1; 임기환, 「고구려

보이는 특이동향을 중심으로 변강과 천리장성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변강에 대한 중국 학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奉天通志(봉천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변강에 대한 기록을 분석할 것이다.¹²⁾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기존의 방어체계인 요동지역의 성들이 아닌 고구려가 새롭게 축조한 장성이었음을 밝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새로운 長城의 築造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안타깝게도 이 밖에 천리장성이 언급된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¹³⁾

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4; 李昊榮, 「隋와의 戰爭」,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張文才, 『隋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 1998;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軍事科學出版社, 1998; 劉矩·姜維東, 『唐征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6; 張正岩·王平魯, 「新城道及新城道上諸城考」,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 哈爾濱出版社, 2007, 429~432쪽; 김창식,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이동준, 「隋煬帝의 高句麗 원정과 군사전략」, 『學林』30, 연세대학교, 2009;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10; 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한국사학보』50, 고려사학회, 2013 등이 있다.

12) 『봉천통지』에는 변강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강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조차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3)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59쪽 참조.

주요주장	천리장성의 성격	관련 논문
山城 聯防線說	서풍 성자산산성에서 요동반도 최남단의 비사성에 이르는 성들을 잇는 평원 산간 접경의 기존 성을 연결	양진경, 「고구려천리장성고」, 『요해문물학간』, 1994-2, 1994.
中間 防線線說	기존 산성과 요하 사이의 평원지대에 별도의 장성	진대위, 「요녕고구려산성재탐」, 『북방문물』, 1995-3, 1995.
双重防禦 障塞說	기존 산성 방어선 외에 요하 양안에 두 줄기의 방어선을 구축, 무려라가 요하 서쪽의 대표적인 방어선	왕면후, 「압록강좌안고구려산성종합연구」, 『요해문물학간』, 1994-2, 1994.

A-① 詔遣廣州都督府司馬長孫師，往收墜隋時戰亡骸骨。毀高麗所立京觀。建武懼伐其國，乃築長城。東北自扶餘城西南至海，千有餘里。¹⁴⁾

A-② 帝詔廣州司馬長孫師臨墜隋時戰屍。毀高麗所立京觀。建武懼乃築長城千里，東北自扶餘西南屬之海。¹⁵⁾

A-③ 十四年，唐遣廣州司馬長孫師臨墜隋時戰尸骸骨祭之。毀當時所立京觀。春二月，王動衆築長城，東北自扶餘城東南至海，千有餘里。凡一十六年畢功。¹⁶⁾

A-④ 二十五年春正月，遣使入唐朝貢。王命西部大人蓋蘇文監長城之役。冬十月，蓋蘇文弑王。¹⁷⁾

A-⑤ 蓋金又奏築長城，東北西南，時男役女耕役，至十六年乃畢。¹⁸⁾

이상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천리장성의 축조 배경은 당의 京觀(경관) 파괴라고 볼 수 있다.¹⁹⁾ ‘남자들은 부역에 나가고 여자들이 농사를 지었으며, 16년에 걸쳐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A-⑤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平原 土壁說	동안에서 요하 하구의 영구를 따라 평원을 잇는 경로에 축조. 공주령시 노변강 유적이 천리장성 유적	이건재, 『동북지구중부적변강화연변장성』, 『요해문물학간』, 1987-1, 1987.
補助 土壘說	장성은 이름뿐, 실체는 흙으로 만든 작은 방벽에 불과, 요동의 여러 성들을 연결한 보조시설	왕건군, 『고구려천리장성』, 『박물관연구』, 1987-3, 1987.
시대별 변화설	처음 동안-영구로 이어지는 강변길 보호성곽시설, 7세기 전반 신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새로운 장성 축조	신형식, 『천리장성』,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연구』, 백산자료원, 2000.
평원군사 방어시설	동안-영구에 이르는 충요대평원과 요하 동안을 따라 평원상에 구축된 새로운 군사방어선	여호규, 『고구려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배경』, 『국사관논총』 91, 2000.

14) 『舊唐書』卷 199, 東夷 高麗傳.

15) 『新唐書』卷 145, 東夷 高麗傳.

16) 『三國史記』卷 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4年 條.

17) 『三國史記』卷 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年 條.

18) 『三國遺事』卷 3, 「興法」, 寶藏奉老 條.

19) 『資治通鑑』에는 京觀의 파괴를 631년 8월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의 파괴와 천리장성의 축조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당서』·『신당서』·『삼국사기』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한 까닭이 당의 경관 파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경관의 파괴가 천리장성 축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천리장성의 축조는 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중대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미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고구려가 당이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새롭게 장성을 축조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필자는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한 또 다른 이유를 628년(榮留王11) 당에 보냈다는 ‘봉역도(封域圖)’와 연관 시켜보고자 한다.²⁰⁾ 건국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당과 고구려, 두 국가 간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²¹⁾ 이에 고구려는 봉역도를 보내 고구려의 세력권이 미치는 경계를 확실히 하였는데,²²⁾ 당은 廣州司馬(광주사마) 長孫師(장손사)를 파견하여 고구려가 세운 京觀(경관)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구려가 요하 연안에 천리장성을 축조한 까닭은, 새로운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당의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을 당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대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²³⁾과 비교해보면, 대당 전쟁을 앞두고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은

20) 『三國史記』 卷 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1年 條.

秋九月, 遣使入唐, 賀太宗擒突厥頡利可汗, 兼上封域圖.

21) 당은 628년(太宗 貞觀 2) 돌궐의 頡利可汗(힐리가한)을 사로잡았으며, 629년(太宗 貞觀 3)에는 영주 지역에 東夷校尉(동이교위)를 설치하는 등 점차 동쪽으로의 세력 확대를 꾀하는 모습을 보인다.

22) 628년(榮留王 11) 당에 보냈다는 봉역도를 당의 요청에 의하여 바쳐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李昊榮, 앞의 책, 1996, 126쪽), 이와는 달리 ‘봉역’이란 ‘흙을 쌓아서 만든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봉역도를 보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강역을 표시한 것이며 이는 당과 고구려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견해도 있다.(李龍範, 「高句麗의 遼西 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한국사학회, 1959, 225쪽; 서병국, 『고구려제국사』, 도서출판 해안, 1997, 240~242쪽)

23) 『三國史記』 卷 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年 條. ‘王聞陳亡大懼, 理兵積穀, 爲拒守之策.’ 陳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들은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천리장성의 축조와 같은 대규모

고구려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성을 축조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와 당의 고구려 침입경로를 비교하는 작업은 천리장성의 축조 전과 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 隋와 唐의 高句麗 침입경로 비교

먼저, 수의 침입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 1>은 수의 고구려 침입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隋의 침입경로²⁴⁾

시기	지 휘 관 및 침 입 경 로	遼河 도 하 지 점
598	(楊諒)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遼河	懷遠鎮
	(王世績) 涿郡→臨渝關→營州	X, 퇴각
	(周羅喉) 東萊→遼東半島 南端에서 풍랑을 만남	X, 水軍
612	(楊帝)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遼水→遼東城	懷遠鎮
	(宇文述 等) 遼東城→烏骨城→鴨綠水→薩水→平壤城→薩水	X, 별동대
	(來護兒) 東萊→涿水→平壤城	X, 水軍
613	(楊帝)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遼水→遼東城	懷遠鎮
	(宇文述) 遼東城→烏骨城→鴨綠水	X, 별동대
	(王仁恭) 遼東城→(扶余道)→新城	X, 별동대
614	(楊帝) 涿郡→臨渝關→營州→ 懷遠鎮	懷遠鎮
	(來護兒) 東萊→卑奢城→(平壤城)	X, 水軍

네 차례에 걸친 수의 침입경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의 육로군은 모두 탁군에 집결하여 병력을 점검하고 이후 임유관을 통과하여 동이교위가 설치되어 있던 영주를 통과하였다. 이후 회원진에서 요수를 도하하여 요동성을 공격한다. 물론, 별동대를 동원하여 평양을

국가 중대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24) 『舊唐書』·『新唐書』·『三國史記』·『資治通鑑』 등을 바탕으로 제작.

공격하거나 주변의 성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모두 요하 도하 이후의 행동이기 때문에 요동성까지의 침입경로는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²⁵⁾

수의 고구려 침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수의 침입은 주로 탁군→임유관→영주→회원진→요하→요동성의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수가 계속해서 요동성을 공격했던 까닭은 바로 이 요동성을 지나는 경로가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경로였기 때문이다.²⁶⁾ 당시 수의 주력은 대부분 關中(관중) 지역 출신들로 구성²⁷⁾되어 있어 추위에 약하였고, 보급선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지역의 겨울이 오기 전에 고구려의 도성을 점령하여야 했다. 둘째, 수의 2차 침입 당시 많은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요하에서 수의 도하를 저지하였다는 점이다. 요하라는 자연지형물에 의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수와의 전쟁 기록에서 이미 요동성·신성·비사성·개모성 등 요동지역의 산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와의 전쟁에서

25) 당과 마찬가지로 수 역시 고구려 침입에 水軍(수군)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수군은 동원 가능한 병력 및 공성장비가 제한적이었으며,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주력이 되어 단독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웠다. 그 예로 수의 1차 고구려 침입에서 수군은 풍랑을 만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2차 고구려 침입에서는 평양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당하였다. 4차 고구려 침입에서는 요동반도에 상륙하여 비사성을 함락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가 동원한 수군의 역할은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향해 진군하는 육로군에 안전한 보급선을 확보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6) 遼西에서 고구려의 도성인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보아 총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通定鎮에서 遼河를 도하하여 현재의 瀋陽·撫順·通化 또는 桓仁·集安을 거쳐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둘째는 遼河를 도하한 후 현재의 遼陽·本溪·丹東을 거쳐 鴨綠江을 건너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 마지막으로 遼澤을 가로지거나 海城·大石橋·岫巖·丹東을 지나 鴨綠江을 건너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 이 노선들은 현재에도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당시 이 지역에는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여호규, 『고구려성 II』,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1999, 61~72쪽; 김용만, 앞의 책, 2003, 67쪽; 이동준, 앞의 글, 2009, 153~154쪽)

27) 김선민, 『隋 煬帝의 軍制改革과 高句麗遠征』, 『東方學志』119, 동방학보, 2003, 176쪽.

이상의 성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16년 동안 축조하였다는 ‘장성’이 과연 요동지역의 산성들을 가리키는지는 의문이다.

거의 동일한 경로로 침입한 수와는 달리 당의 침입경로는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645년 침입 이후 당의 전략이 국지적인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그 침입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당의 침입경로를 분석하여 본다면 대체로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唐의 침입경로²⁸⁾

시기	지 휘 관 및 침 입 경 로	遼河 도하지점
645	(李勣)→通定鎮→玄菟城→新城→蓋牟城	通定鎮
	(太宗)→遼澤→懷遠鎮→遼東城→白巖城→安市城	懷遠鎮
	(張儉)→遼澤→遼水→建安城	遼澤 혹은 海
	(張亮)→東萊→卑沙城→建安城	X, 水軍
647	(李勣)→遼水→(遼東道)→通定鎮→南蘇城→木底城	通定鎮
	(牛進達)→石城→積利城	X, 水軍
648	(薛萬徹)→鴨渌水→泊汭城→大行城	X, 水軍
661	(蘇定方)→溟江→馬邑山→平壤城	X, 水軍
	(龐孝太)→溟江→蛇水	X, 水軍
	(蕭嗣業)→鐵勒과의 전투에 투입	알 수 없음
	(契苾何力)→? →鴨綠水→回鹘	알 수 없음
666	(契苾何力)→國內城의 男生과 회합	알 수 없음
667	(李勣)→(通定鎮)→新城(주변 16城)	通定鎮으로 추정
	(薛仁貴) 新城→南蘇城→木底城→蒼岳城	
668	(李勣, 契苾何力)→扶餘城→薛賀水→大行城→平壤城	알 수 없음

수와 당의 침입경로 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요하 도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수는 회원진을 통해서만 요하를 도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의 645년 침입경로를 살펴보면 회원진

28) 『舊唐書』·『新唐書』·『三國史記』·『資治通鑑』 등을 바탕으로 제작

뿐만 아니라 통정진·요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⁹⁾

이처럼 수와는 다르게 당이 여러 장소에서 요하를 도하한 까닭은 고구려 군을 분산시켜 천리장성으로 상정되는 고구려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³⁰⁾ 645년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통정진을 통하여 도하하는 당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천리장성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기존의 수성전을 통한 지연작전을 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천리장성에 관한 기록 역시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은 645년의 침입 이후 국지적인 소모전 양상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면서 요하 유역에서의 대규모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후 唐은 몇 차례 더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647년에 발생한 이세적의 침입을 제외하면 해로를 통한 침입으로 보인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양국의 대규모 군사 충돌은 661년(현경6)의 침입에서 확인된다.³¹⁾ 소정방이 이끄는 水軍(수군)은 요동반도에 상륙한

29) 물론, 요하를 도하하는 시점에서 수와 당이 차이를 보였던 까닭은 ① 수의 패배를 교훈삼아 당이 침입경로를 수정하였다. ② 수와 당의 병종구성 및 기본적인 군사전략의 변화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③ 수와 당의 고구려 침입 시점의 기후 조건 혹은 자연 환경의 차이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의 침입에 앞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천리장성의 축조 역시 당의 전략을 수정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30) 사카쿠라 아츠히데 지음, 유재춘·남의현 옮김, 『長城의 中國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246~247쪽.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는 경우 자주 시도하는 것을 ‘分道(분도)’라고 하는데 군대를 몇 개로 나누어 근처의 여러 개의 장소를 일제히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수비 측은 서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자신의 수비 범위의 방어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중략) 하나라도 파괴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대군이 일시에 장성 라인을 넘어서 남하해 오게 된다.

31) 尹秉模,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遼西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27, 한국몽골학회, 2009. 당과 고구려가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655년 貴端水(귀단수)와 658년 赤烽鎮(적봉진), 그리고 659년 橫山(횡산)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만 귀단수·적봉진·횡산은 동몽골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당서』와 『신당서』 열전 위정전에 기록된 653년 吐護眞水戰(토호진수전), 그리고 『신당서』·『책부원구』에 기록된 654년

것이 아니라 溟江(패강)에 상륙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도성이 포위당하는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연개소문이 방효태 군을 蛇水(사수)에서 전멸시키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³²⁾

그런데 당의 661년의 침입이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661년의 침입에서 주목할 점은 소정방의 평양공격과 동시에 계필하력과 소사업 등이 이끄는 부대 역시 압록수에서 남생의 고구려군과 공방전을 벌였다는 점이다.

661년의 침입에서 당이 요동을 통과하였다는 기록은 『구당서』·『신당서』·『삼국사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남생과 전투를 벌였던 계필하력·소사업 등이 鐵勒(철록)의 참전으로 철록과의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회군할 때도 요동을 통과하였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압록수에서 남생과 전투를 벌인 당군 역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요동반도에 상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³⁾

이후 요동 지역을 통한 당의 침입은 666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666년 이후의 전투는 남생의 배신으로 이미 여러 성들이 당에게 넘어간 후의 상황이므로 고구려 천리장성에서의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45년의 전투 이후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 요하 연안에서의 대규모 군사 충돌은 발생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천리장성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松漠新城戰(송막신정전) 역시 고구려 경내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의 전투는 요서 및 동몽골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와 이를 저지하려는 당의 전투이며, 그 전장은 요서 일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32) 당은 661년의 침입에서 요동반도에 상륙하던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평양 부근의 패강에 직접 상륙하였고, 평양을 포위하는 성과를 올린다. 그러나 결국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함으로써, 육로군의 지원 없이 수군만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김병곤, 앞의 글, 2013)
- 33) 『資治通鑑』卷 198, 『唐紀』14, 太宗 貞觀 21年~22年 條에 따르면 당은 645년의 침입이 실패로 돌아간 후 수많은 전선을 건조케 하였다. 이후 당이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遼河 연안에서의 唐軍의 동향

수와 당의 침입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던 곳은 요하 연안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 고구려가 요하 연안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음을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요하 연안에서는 침입경로의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군의 특이한 동향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요하 연안에서 발생한 당군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요하 연안에 구축된 천리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B-① 李世勣軍發柳城，多張形勢，若出懷遠鎮者，而潛師北趣甬道，出我不意。夏四月，世勣自通定濟遼水至玄菟，我城邑大駭皆閉門自守，副大總管江夏王道宗將兵數千至新城，折衝都尉曹三良引十餘騎直壓城門，城中驚懼無敢出者。³⁴⁾

B-② 時有獲高麗候者，稱莫離支將至遼東，詔儉率兵自新城路邀擊之，莫離支竟不敢出。儉因進兵遼遼，趨建安城，賊徒大潰，斬首數千級。³⁵⁾

B-③ 營州都督張儉將胡兵爲前鋒，進度遼水，趨建安城破我兵，殺數千人。³⁶⁾

상술하였듯이 당은 수와는 다르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하를 도하하였다. B-①과 B-②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하를 도하하는 당군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세적은 회원진에서 도하하는 척하면서 몰래 북쪽의 통정진에서 도하하였고, 당 태종이 이끄는 당의 주력 역시 요택을 지나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검은

34)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 條.

35) 『舊唐書』卷 83, 「列傳」3, 張儉傳.

36)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 條.

『舊唐書』卷 83, 「列傳」3, 張儉傳에 장검은 연개소문이 요동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新城道(신성도)를 통해 요하를 도하하려다가 연개소문이 나타나지 않자 요하를 건넌 다음 건안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막리지(연개소문)가 요동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新城路(신성로)로 나아가 연개소문과 싸우고자 하였으나 연개소문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요하를 건너 다음 건안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³⁷⁾

당이 고구려를 기만하고 고구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급작스럽게 도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의 주력이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병이었기 때문이다.³⁸⁾ 당 고조 李淵(이연)이 태원유수(太原留守)를 지내면서 이세민은 유목민족과의 전투를 경험해 보았으며, 당 건국 후 돌궐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당이 유목민족의 경기병 전술을 받아들인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이 회원진을 통해서 요하를 도하할 것으로 예상했던 고구려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당의 도하를 저지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B-③의 기록에서 ‘장검이 공격하여 수천 급을 참하였다’는 고구려 병사는 건안성을 지키던 병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645년의 전투에서 건안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비사성을 함락시키고 올라온 장량의 부대와 합세하여 건안성을 공격하지만 끝내 건안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장검이 공격하였다는 고구려 병사는 요하에서 당의 도하를 저지하려던 고구려 수비병

37) 盤山~牛莊의 南路에 대한 연구는 金毓黻, 『東北通史』, 洪氏出版社, 1976, 326~327쪽; 王綿厚, 『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1, 1986, 77쪽;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990, 140~152쪽을 참조.

여호규는 장검이 요하를 도하한 직후 건안성을 바로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반산~우장의 남로를 통해 도하하였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여호규, 앞의 논문, 2000, 179쪽)

38) 수말~당초 이세민의 군사 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여호규에 따르면 이세민이 거느린 騎兵은 ‘精騎’·‘輕騎’로 표현되고 있으며, ‘鎧馬’·‘具裝鎧’ 등 중장기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묘사되지 않았다. 실제로도 이세민은 輕騎兵으로 적진에 돌격하여 적진을 교란시킨 다음 승리하는 전술에 능하였으며 644년 7월에 장검에게 輕騎수천을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살피게 했다는 기록을 볼 때 唐의 기병은 중장기병에서 경기병으로 변모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동력 역시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여호규, 앞의 글, 2000, 181쪽)

39)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10, 135쪽.

으로 파악된다.

645년의 침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의 전략은 소규모 병력으로 소모전을 벌여 고구려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침입에서도 당군의 움직임은 645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④ 又以太子詹事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右武衛將軍孫貳朗等副之。將兵三千人，因營州都督府兵，自新城道入，**兩軍皆選習水善戰者**，配之。李世勣軍既度遼，歷南蘇等數城，皆背城拒戰，世勣擊破之。焚其羅郭而還。⁴¹⁾

B-④의 기록에서 이세적은 遼東道行軍總管(요동도행군총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신성도로 나아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회원진에서 요하를 도하한 이후 요동성을 공격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세적이 요동성이 아닌 남소성과 목저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아 회원진이 아닌 통정진에서 요하를 도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645년에 고구려를 기만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동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세적의 부대에 ‘물에 익숙하여 싸움을 잘하는 자’를 뽑아서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오는 당군이 통과해야 하는 큰 물은 바로 요하이다. 따라서 이러한 병력배치는 요하 연안에서의 전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B-⑤ 乾封元年，又爲遼東行軍大總管兼按撫大使。高麗有衆十五萬，屯於遼水。又引靺鞨數萬據南蘇城。何力奮擊，皆大破之，斬首萬餘級，乘勝而進，凡拔

40)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10, 寶藏王 6年 條.

六年，太宗將復行師，朝議以爲，高句麗依山爲城，不可猝拔，前大駕親征，國人不得耕種，所克之城，實收其穀。繼以旱災，民太半乏食。今若數遣偏師，更迭擾其疆域，使彼疲於奔命，釋入堡數年之間，千里蕭條，則人心自離，鴨渚之北，可不戰而取矣。帝從之。

41) 『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10, 寶藏王 6年 條.

七城。乃回軍會英國公李勣於鴨綠水，共攻辱夷・大行二城，破之。”⁴²⁾

이상의 기록은 666년의 기록으로 ‘고구려가 요수에 15만의 대군을 주둔시켰다.’는 기록이 눈에 띈다. 기존 연구에서는 ‘屯於遼水’를 요동지역의 고구려 제성들로 보아왔다. 장성은 일반적인 성과는 다르게 다수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612년에 벌어진 수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요하연안에서 수의 대군을 맞아 한 달 이상 도하를 지연시켰던 점⁴³⁾, ‘屯於遼水’를 요동지역의 제성들로 보기에는 요하와 요동지역의 제성들 사이의 거리가 짧게는 수km에서 길게는 수십km가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말갈의 병사는 남소성에 주둔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구려의 병사는 ‘屯於遼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다. 따라서 이는 요하 연안에 축조된 고구려 천리장성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⁴⁴⁾

이상에서 살펴본 요하 연안에서의 당군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조에 대항하여 당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기만하고 예상 도하처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육로를 통해서 침입한 645년과 647년의 당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모두 고구려의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 도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645년의 침입 이후 요동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침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후 몇 차례의 침입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해로를 통한 침입이었다. 셋째, 육로를 통한 침입에서 수전에 능한 자를

42) 『舊唐書』卷 109, 「列傳」59, 契苾何力傳.

43) 김창석,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5, 동북아역사재단, 2007, 123쪽.

44) 물론 고구려 천리장성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屯於遼水’가 고구려 천리장성에 주둔한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보완해야 할 문제인 듯하다. 다만, 이 ‘屯於遼水’가 요하연안에 축조된 고구려 천리장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고구려 천리장성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뽑아서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육로를 통한 고구려 침입에서 당이 만나게 되는 큰물은 바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하이다. 따라서 수전에 능한 자를 뽑았다는 기록은 요하 연안에서의 전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요하 유역에서 확인 가능한 당군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고구려 천리장성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요하 연안에 고구려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에서 확인된 요하 연안의 고구려 방어시설과 관련하여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변강유적과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遼河 유역의 邊崗 유적

가. 邊崗 조사 현황

변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80년대의 일이다. 변강에 대한 조사 결과는 『懷德縣文物志(회덕현문물지)』에 처음 수록되었다.⁴⁵⁾

45) 懷德縣文物志編寫組, 『懷德縣文物志』1985-12,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106~107쪽. 변강은 『봉천통지』 및 구 『회덕현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속칭 “노변강”이라고 부른다. 변강의 시발점과 종점, 주행방향과 수축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981년과 1983년의 조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변강은 회덕현 경내를 가로질러 秦家屯(진가둔)·雙榆樹(쌍유수)·四道崗(사도강)·老城堡(노성보)·邊崗屯(邊崗屯)·邊崗四隊(변강사대) 등의 마을을 지나 행복촌 뒤쪽에서 동북방향으로 바로 농안현 경내로 들어가는데, 길이는 모두 50여 리이다. (중략) 회덕현 외부의 변강 주행문제에 관한 조사에 의거하여 보면 변강의 서남은 동요하를 넘어 이수현의 토룡촌으로, 다시 남으로 이수현의 소성자, 창도의 팔면성을 지나 바로 요녕성의 영구로 들어간다. (회덕현의) 북으로 계속 이어져 농안현 경내로 연신 펼쳐진다. (중략) 변강은 농안현 경내로 들어온 후 덕혜를 우회하여 송화강까지 연신 펼쳐지며 흑룡강성 경내로 들어간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강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張福有 등에 의하여 조사가 재개되었다.⁴⁶⁾

1971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 참여한 王健群은 懷德縣(회덕현)의 四區(사구) 戩子街(등자가)에서 시작하여 18개의 마을을 지나고 있는 변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⁴⁷⁾ 李健才 역시 약 1년 반(1988.4~1989.10)에 걸친 조사에 참여한 이후 변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⁴⁸⁾

46) 이 조사는 2008년 5월 3일 길림성 조사를 시작으로 5월 20일 영구시에 이르러 종결되었으며, 다시 2009년 4월 3일에서 5일까지 요양·영구·개주 등의 지역을 조사하였다.

47) 王健群, 앞의 글, 1987, 850~851쪽.

이 邊崗은 東北~西南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길이는 약 50여리가 남아 있었는데 높낮이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끊어지지 않고 모두 이어져 있었으며 모두 판축으로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三皇廟(속칭 小邊)와 東黃花甸子 일대의 邊崗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당시 남아있던 유적은 기단의 넓이가 6m, 높이는 약 1m 정도가 남아 있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과거에는 높이가 3m 이상이었다고 한다. 발굴 결과 소량의 灰褐色 陶片이 발견되었지만 수량이 적고 표면이 磨滅되어 정확한 연대측정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이 밖에 발견된 다른 유물은 없다.) 각 마을의 노인들은 60년대만 하더라도 邊崗의 높이가 훨씬 높았으며, 民國年間에는 큰 수레를 이용하여 農安~營口까지 소금을 운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노인들은 東遼河 南岸의 土龍村·梨樹縣의 小城子·昌圖縣의 八面城을 지나면서 곧장 營口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는데 王健群은 1974년 이 루트를 답사하여 邊崗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였다고 한다.

다만, 王健群은 對唐 전쟁에서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邊崗에서 城門·閣樓·墩臺 등의 군사시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랜 시간동안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이 아니라고 파악하며 이 邊崗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기록과 유적이 일치하고 있는 산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48) 李健才, 앞의 글, 1991.

1988년 4월~1989년 10월까지의 조사에서는 農安縣 龍王鄉 북쪽 10여리 거리의 邊崗屯과 德惠縣 和平鄉 서쪽 20리의 西邊崗屯, 腰邊崗屯, 東邊崗屯 및 德惠縣 邊崗鄉의 東·西邊崗屯에서 西南의 방향으로 연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邊崗線은 郭家鄉 東屯 5km의 曹家屯 一帶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德惠縣 松花江鄉 老邊崗屯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밖에도 農安縣 前崗鄉의 북쪽 4km에 위치한 于家村老邊崗屯에서도 邊崗 유적을 발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李健才는 邊崗이라는 명칭이 있는 지역에서는 邊崗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

국내학계에서는 여호규가 王健群·李健才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덕의 노변강유적은 북류 송화강 남안에서 시작되어 飲馬河(음마하)~伊通河(이통하) 연안과 송화강~요하 분수령의 대평원을 가로 질러 요하 동안을 경유하여, 요하 하구인 영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농안~영구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경로와 거의 겹치기 때문에 고구려가 기존 산성방어체계와 성격이 다른 거대한 토축 성벽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고 추정하였다.⁴⁹⁾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張福有 등에 의하여 변강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최북단 지역인 덕혜현 松花江鄉(송화강향) 老邊崗屯(노변강둔)에서부터 농안현·공주령시와 이수현·창도현·개원시·철령시·심양시의 서쪽을 지나 요하 하구의 영구시까지 이르는 변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당시 대부분 훼손되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각 마을의 노인들에게서 邊崗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결 같이 이 邊崗은 懷德縣과 연결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德惠縣과 平鄉 서쪽 10km 거리의 西邊崗屯을 조사한 결과 마을 남쪽 밭에서 작은 토산(小土包) 형태의 邊崗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노인이 말하기를 매 2~3km 거리마다 이와 같은 작은 토산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西邊崗屯의 東北 2~3km 거리에 위치한 腰邊崗屯과 腰邊崗屯 東北 2~3km 거리에 위치한 東邊崗屯에서도 역시 작은 토산 형태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며 모두 烽火臺라고 칭한다고 한다.) 邊崗이라는 지명이 발견되는 마을의 60~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두 이 유적을 ‘邊崗道’라고 부르는데, 西南으로 懷德縣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邊崗道라고 불렀다고 한다.

德惠縣 邊崗鄉의 東·西邊崗屯 조사당시 마을 노인에게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邊崗을 뒤집었는데 이 邊崗의 양 측면은 부드러운 흙이었지만 邊崗상의 흙은 딱딱하게 다져진 흙이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德惠縣 松花江鄉 老邊崗屯의 조사에서는 邊崗 유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마을 농민이 말하기를 마을 안에서 땅을 팔 때 솥(鍋)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高麗鍋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鐵鑊, 大靑磚, 石白 등의 유물이 나왔는데 遼·金 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松花江鄉 老邊崗屯은 邊崗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最東北端이며 東北으로 7~8km를 가면 제2松花江이 있는데 강의 북쪽에서는 邊崗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 없다.

李健才는 邊崗 즉, 唐代의 고구려 천리장성의 동북단은 제2松花江의 南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9) 여호규, 앞의 글, 2000, 172~175쪽.

그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① 德惠市(덕혜시) 변강 유적

덕혜시에서 발견된 변강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덕혜시 경내의 변강 유적의 길이는 약 63km이며, 동북~서남의 주행 방향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도로를 만들고 경작지로 개간되는 등의 이유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음마하 양안은 잦은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 근처의 유적은 현재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산지나 구릉에 위치한 변강 유적만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둘째, 변강 유적은 흙을 다져 판축으로 완성하였다. 바깥쪽에 깊게 흙을 파고 안쪽의 흙을 다져서 만듦다. 일반적으로 ‘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등뼈 모양 같다. 셋째,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곳에서는 높이 약 1m, 기단부의 넓이가 약 5~8m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지점에 살고 있는 마을 노인들은 변강이 위치했던 장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적의 경로와 변강에 얽힌 고사를 기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老邊崗·邊崗·小邊 등의 지명이 발견되는 마을은 모두 노변강 유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으로, 변강 유적의 흔적이 반드시 발견되고 있다.

② 農安縣(농안현) 변강 유적

농안현에서 발견된 변강은 4개의 향과 진, 30여개의 둔을 지나며 그 길이는 약 75km에 걸쳐 있다. 농안현에서 발견되는 변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내의 변강은 동북~서남의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의 유적은 남아있지 않다. 특히, 이통하와 신개하의 교접지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유적은 이미 평평해진 상태이다. 둘째,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곳에서는 마치 물고기 등뼈 같은 ‘凸’자 형태의 변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은 三崗鄉 廟房子山頭村(삼강향 상방자산두촌)부터 구릉지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적의 상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속 이어져 공주령 경내로 들어간다. 셋째, 농안현 노변강의 축조 방식 역시 앞쪽으로 깊게 흙을 파서 판축을 한 형태로 덕혜시 경내의 유적의 축조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강과 邊道(변도)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촌락의 노인들은 현재는 파손되어 찾아볼 수 없는 변강의

50) 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을 참조.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각 마을의 명칭 역시 변강의 존재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다.

③ 公主嶺市(공주령시) 변강 유적

공주령시 경내의 변강은 현재 약 52km 정도가 남아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발견되는 유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서북⁵¹⁾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확인되는 유적은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는 높이 약 4m 정도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길림성~요녕성으로 이어지는 변강 유적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는 편이다. 이 지역의 유적 역시 ‘凸’자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등뼈와 같아 보인다. 셋째, 공주령시 경내의 邊崗·小邊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촌락에서는 역시 변강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촌민들 역시 이 변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유적에서는 황색의 아점토와 흑색의 흙이 뒤섞인 판축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황색의 아점토가 바깥쪽에 둘러져 있으며 흑색의 흙이 그 안쪽에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된다.

④ 梨樹縣·四平市(이수현·사평시) 변강 유적

이수현과 사평시 경내에서는 약 68km 정도의 변강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평시 경내의 변강은 약 13km 정도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 이수현 경내의 변강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마치 물고기 등뼈와 같이 ‘凸’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유적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사평시 경내로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유적이 파손되어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邊崗·小邊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촌락에서의 노인들은 변강의 위치와 방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⑤ 昌圖縣(창도현) 변강 유적

창도현 경내의 변강은 대략 35km 정도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의 유적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幸福村 西邊屯(행복촌 서변둔) 서북쪽 지역에서는 아직 물고기 등뼈와 같은 ‘凸’자 형태의 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창도현 경내에서 역시 夾槽(협조)·老邊(노변)·小邊(소변)·邊壕(변호)·老邊壕(노변호) 등의 지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泉頭鎮 紅山村(천두진홍산촌) 부근에서부터는 상술하였듯이 명 장성 유적과 혼용되어

51) 동북~서남의 오기로 보인다.

있기 때문에 변강 유적과 구분하기 어렵다.

⑥ 營口市(영구시) 변강 유적

해성시 우장진~영구시 경내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강이 약 39km 정도가 남아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변강 유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변강과 관련이 있는 촌락의 명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구시 老邊區 柳樹鎮 前崗子村(노변구 유수진 전강자촌)의 淤泥河(어니하) 북안에서 시작되어 북으로 가면서 后崗子(후강자)·小邊(소변)·小平山(소평산)·老斧廟(노부묘)·越平房(월평방)·老邊(노변)·孫家崗子(손가강자)·周家崗子(주가강자)·下土台(하토태)·前高坎(전고감)·后鋪子(후포자)·滾子泡(곤자포)·腰屯(요둔)·長屯子(장둔자)·旗口(기구)·前老牆頭(전노장두)·后老牆頭(후노장두)·腰會(요회)·小邊西(소변서)·二道邊(이도변) 등의 村屯이 발견된다. 이후 영구시계를 벗어나 안산시에 소속된 해성시 남쪽 경계의 西四方台(서사방태)·牛庄(우장) 등의 지역을 지나는데 이 지역의 유적은 후대의 명 장성 경로와 상접하고 있다.

張福有 등의 조사를 종합한 결과 변강 유적은 제2송화강~영구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변강 유적은 경작지로 개간되었거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지만, 과거에는 변강의 위로 수레가 왕래하면서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의 물자를 통하게 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유적이 지나가는 마을의 노인들은 그 주행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⁵²⁾

다음의 <표 3>은 張福有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변강 유적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52) 王健群, 앞의 책, 1987, 850쪽.

창도현 진가둔촌의 한 노인은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 변강도를 통해서 영구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변강의 높이가 지붕보다 높았다고 한다.

〈표 3〉 吉林省~遼寧省 소재 邊崗 구간의 정보⁵³⁾

위 치	길이 (km)	토 질	형 태
德惠市	63	黑灰色+灰褐色+黃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農安縣	75	未詳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公主嶺市	52	黃色亞粘土+黑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梨樹縣	68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四平市	13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소계	258		
昌圖縣	55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明 長城 구간	255	未詳	未詳
牛莊鎮~營口 前崗子	39	灰褐色	‘凸’자 모양 및 물고기 등뼈형태
소계	329		
총계	587		

고대 중국에서의 1리는 약 500m이었다.⁵⁴⁾ 따라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을 작성한 시기의 1천여 리는 500km가 조금 넘는 것이 된다. 현재 남아 있는 변강을 바탕으로 추정한 길이는 약 580여km로 ‘東北自扶餘城西南至海千有餘里’라는 당시의 기록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약 580여km에 달하는 변강의 모든 구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바로 유적의 형태와 판축기법이다. 일부 구간

53)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47~270쪽을 참고하여 제작.

이 책에는 심양·개원·요양 서쪽지역에 대한 실측조사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와 그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명대의 장성 유적과 혼용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王健群과 풍영겸은 자신의 글에서 1989년~1990년의 조사 당시 심양·개원·요양의 서쪽에서도 변강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王健群, 앞의 책, 1987; 馮永謙, 앞의 글, 1989)

54) 丘光明 외,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中州古籍出版社, 1990, 236쪽.

고대의 ‘1리’는 시대에 따라 길이가 변화하여 왔다. 기록에 따르면 진·한 시기의 1리는 415m, 수·당 시기에는 540m, 명·청 시기에는 576m이다. 따라서, 고구려 천리장성의 기록과 현재 남아있는 변강 유적 길이의 추정치는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에서는 회갈색 흙과 황색 흙을 서로 엇갈려 판축한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흑회색의 흙을 판축으로 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층의 두께는 15~20cm로 동일하다고 한다. 변강은 판축으로 다져져 주변의 흙보다 단단했기 때문에 마을의 건물을 짓거나 공사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파손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다.⁵⁵⁾

또한, 현재 확인이 가능한 유적은 대부분 ‘凸’자 모양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토축으로 축조된 장성의 특징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⁵⁶⁾ ‘凸’자 모양이 군데군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 등뼈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게 된 것이다.

변강이 고구려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왕조의 장성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연·진·한 장성과 북제·북주·수의 장성은 변강과 경로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⁵⁷⁾, 요·금·명·청의 장성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⁸⁾

55) 李健才, 앞의 글, 1991, 294쪽.

56) 사카쿠라 아츠히데 지음, 유재춘·남의현 옮김, 앞의 책, 2008, 243쪽.

변장을 선으로서 지탱해 주는 것은 전면에 파여진 호(壕)였다. 호를 파서 장벽을 대신하는 수법은 옛날부터 행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변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하였다. 전면을 파는 것은 변장의 높이를 증가시켜 보강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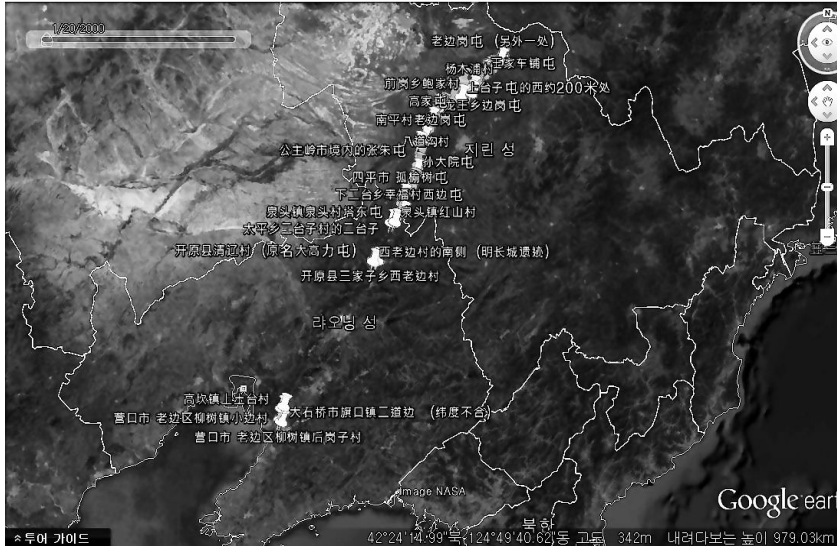
57) 馮永謙, 『東北古代長城考辯』, 『東北亞歷史與文化』 1991-12, 遼沈書社, 1991, 21~35쪽.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축조한 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연·진·한 장성은 요서지역의 요녕성·내몽고자치주 경계선 위쪽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요하 종류 西岸의 法庫(법고) 지역까지 장성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요하 동쪽에서는 혼하 연안을 따라 돈대 등이 점점이 발견된다. 북제·북주·수 등의 장성은 요서지역에서만 확인된다.

58) 馮永謙, 위의 글, 1991, 37~47쪽.

요대의 장성으로는 태조2년(961)에 쌓았다는 東海口(동해구) 장성과 성종대(태평 6년:1026)에 여진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混洞江(혼통강) 곧 송화강 유역에 쌓았다는 장성이 있다. 동해구 장성은 요동반도 서남단 또는 요동만 일대로 추정되며, 여진의 남침을 막기 위해 혼통강에 쌓았다는 장성은 제2송화강 북쪽에 축조한 성보, 장새, 봉화로 추정된다. 금대 장성은 대홍안령산맥 동쪽 산록에 동북~

〈그림 1〉 吉林省~遼寧省의 邊崗 분포 현황⁵⁹⁾



〈그림 1〉은 张福有 등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조사지점의 GPS 측정 좌표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⁶⁰⁾ 〈그림 1〉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명대 장성의 일부 구간과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다. 명 장성과 중첩되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장성들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왕조가 축조한 장성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변강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남 방향으로 기다랗게 자리잡고 있다. 명대 장성은 요서지역에서 요동만을 따라 오다가 의무려산을 에돌아 혼하·태자하 합류지점에서 요하를 횡단한 다음 북쪽으로 요하 동안을 따라 가다가 창도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 위원보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무순 일대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청대 柳條邊(유조변)은 요서지역에서는 요녕성·내몽고자치주의 경계선 일대를 따로 오다가 법고에서 요하를 가로질러 개원~위원보까지 온 다음 위원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대흑산맥 서북쪽 산기슭을 따라 동북방향으로 나아가 송화강 서안까지 구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길림합달령산맥의 지맥을 가로질러 혼하 상류를 거쳐 천산산맥 동남쪽을 따라 압록강 하구 서쪽에 이르게 된다.

59)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99~302쪽을 참고하여 제작.

60)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99~302쪽.

농안~영구까지 노변강·변강·소변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변강이 과거에는 농안~영구로 이어졌으며 소금 운송을 위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⁶¹⁾ 둘째, 길림성~요녕성으로 이어지는 변강 유적에서 동일한 판축기법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토벽에 사용된 토질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길림성~요녕성의 변강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²⁾ 셋째, 토벽의 방향이 요하를 건너오는 적을 방어하기 용이한 지점에 축조되어 있으며, ‘凸’자의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은 토축으로 축조된 장성의 특징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왕조의 장성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변강은 고구려가 축조한 천리장성일 가능성이 높다.

나. 『奉天通志』의 邊崗 관련기록 분석

『봉천통지』⁶³⁾에는 변강⁶⁴⁾ 관련기록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

61) 姜念思, 앞의 글, 2008, 49~50쪽.

62) 張福有·孫仁杰·遲勇, 앞의 책, 2010, 247~270쪽.

63) 『奉天通志』에 대한 설명은 바이두

(http://baike.baidu.com/link?url=7bg2Snpa9W3Ngjj516etFVF83tzu0T1RtXp_-FeTGnRakemK3ETSqzx18rW_f610H3xGfjVWimeREi9fWMI3La) 참고.

『봉천통지』는 전체 260권 100책에 달하며 총 수백만 자의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요녕지역의 역사연혁·산천지모·천문기상·풍토인정·물산자원과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의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자연과 사회 각 방면의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고대로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대사지와 인물지는 진·한에서부터 청말에 이르는 내정·외교·민사·군사 등의 각종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요녕의 2천년 역사상의 혼별·향환·문화·무제·사회명류 등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기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금석지에는 역대 금석비각과 다수의 문사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물산·조부·손세·직관·예문 등의 지는 균일하게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요녕 인민들의 각각의 역사 시기마다의 사회생활과 요녕 자연사와 사회사의 일부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편찬자 대부분이 만주 지역사 전문가들로서, 해당 지역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집록하였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변강과 관련된 기록들은 『奉天通志』 卷 74~76 山川志에 수록되어 있다.

64) 『봉천통지』에는 邊崗이 아닌 邊岡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

천리장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봉천통지』는 주목받지 못해 왔다.

다음의 <표 4>는 『봉천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강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⁶⁵⁾

<표 4> 邊岡 유적 현황⁶⁶⁾

邊岡 유 적 현 황							
懷德縣	2개소	開原縣	8개소	法庫縣	2개소	盤山縣	4개소
梨樹縣	2개소	鐵嶺縣	5개소	新民縣	3개소	海城縣	5개소
雙山縣	1개소	撫順縣	6개소	遼中縣	4개소	營口縣	2개소
昌圖縣	5개소	遼陽縣	7개소	台安縣	2개소		

『봉천통지』에 수록된 변강 관련기록은 약 60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 길림성~요녕성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고고조사 결과 역시 현재 남아있는 변강은 회덕현·이수현·쌍산현·개원현 등지를 경유하고 있다. 또한, 길림성~요녕성까지 노변강·변강 등의 지명이 들어간 마을에서는 과거 변강이 존재했거나, 아직까지도 변강 유적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봉천통지』의 기록과 張福有 등의 조사 결과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봉천통지』에는 변강 유적이 명 장성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다. 이는 고구려가 멸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변강과 명 장성의 일부 구간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통지』의 기록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변강의 주변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⁷⁾

에는 邊岡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혼란을 방지하고자 원문 인용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邊岡으로 통일하였다.

65) 일부 누락된 기록이 있을 수 있다.

66) 『奉天通志』 卷 74~76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지역의 명칭은 『봉천통지』에 기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67) 『奉天通志』는 中國邊疆史志集成 『東北史志』 第二部 4를 참고.

C-① 水自洶洶出屈折西南逕少樹台村南. 村有**古城基址**. 建置年代無考. [(중략) 隱崗間有**古城基址**. 猶可辨認大約口唐宋間物. 村人言係古**高麗城**. (중략) 今人見一故城曰**高麗城**. 遇一古曰口高麗口. 其至於不具城郭形象之斷垣. 殘壘亦必名之爲高麗口口高麗營. 高麗口口居於此矣.]⁶⁸⁾

C-② 又西南逕**高麗城子**村西, 村爲**明邊堡長定堡故地**. [(중략) 今村北有口口二土岡. 高皆二丈許. (중략) 村名以**高麗城**名者.]⁶⁹⁾

C-③ 清初設驛站, 西北接高平驛, 東南接牛莊驛後廢. 村西二里許有**古城**周二里. [建置無考. 俗呼爲**高麗城**.] 附近爲**明邊堡西平堡界**. (중략) 蓋昔之**邊台**所在今皆取爲村名也.⁷⁰⁾

C-①~C-③의 기록은 각각 『봉천통지』 쌍산현·요양현·반산현에 수록된 기록으로 ‘高麗城(고려성)’, ‘土岡(토강)’, ‘邊台(변태)’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오랜 시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려와 관련된 전승이 변강 근처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강이 고구려의 유적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쌍산현·요양현·반산현은 요하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변강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요하를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하다는 변강의 근처에서 고구려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변강이 확인되는 지역에서 다수의 ‘古城遺址(고성유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는 변강 유적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성유지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68)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雙山縣, 東遼河, 1728쪽.

69) 『奉天通志』 卷 75, 山川九, 各縣山水, 遼河流域三, 遼陽縣, 柳壕子河, 1803쪽.

70) 『奉天通志』 卷 76, 山川十, 各縣山水, 遼河流域四, 盤山縣, 小高麗房水, 1823쪽.

〈표 5〉 邊岡 주변 古城遺址 현황⁷¹⁾

邊岡 주변 古城遺址 현황							
懷德縣	2개소	開原縣	5개소	法庫縣	1개소	盤山縣	2개소
梨樹縣	1개소	鐵嶺縣	5개소	新民縣	0개소	海城縣	5개소
雙山縣	1개소	撫順縣	6개소	遼中縣	2개소	營口縣	2개소
昌圖縣	3개소	遼陽縣	5개소	台安縣	2개소		

〈표 4〉와 〈표 5〉를 함께 살펴보면 변강 유적 주변에서 다수의 고성유지가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천통지』에 수록된 고성유지에 대한 기록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④ 又西流屈而西南逕小城子村南. 村有古城遺址[懷德縣志城址在公主嶺西北土阜之南. 城寬長不及一里]建置年代無考.⁷²⁾

C-⑤ 邊岡迤南又西折逕戡子街南來注. 邊岡一帶爲古塞遺址. 南逾東遼河與梨樹境老邊岡街接. 北接縣治西南小邊. 又北至縣治西北大青山迤北入長春界. (중략)又西北流逕修家窩柵村南入老河, 主派流長五十三里, 過古塞遺址一.[邊岡一帶]⁷³⁾

C-⑥ 城東北五十里. 高約三丈周約六方里. 純係土岡由東北向西南起伏十餘里.⁷⁴⁾

C-⑦ 源出縣治東南十里老壕村中之涌泉. 村有古塞遺址. 東北接懷德境俗謂老邊岡者[판독불가]是也.⁷⁵⁾

C-⑧ 源出縣治北十五里. 八里台西南流沿明邊牆遺址外, 出平安堡村中. 又西南逕龍王廟南. 又西南出義和屯村中. 又屈曲西南逕正安堡村南. 右受土城子水. 土城子村[距河西岸八里]有故城遺址[周圍二里南一門]建置年代無考. (중략)又西

71) 『奉天通志』 卷 74~76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72)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懷德縣, 公主陵河, 1716쪽.

73)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懷德縣, 老河, 1718쪽.

74)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梨樹縣, 老邊岡, 1721쪽.

75)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梨樹縣, 老壕村水, 1725쪽.

南逕雙堆子村東. 村有**土堆**二座. 兩相對峙. 高二十丈餘. 因爲村名. 建置年代無考.⁷⁶⁾

C-⑨ 一名亮中河. 源出吉林省伊通縣西南境陳背嶺西北流逕孤榆樹村南. 又西北逕東沙河子村南距村東北八里高台子爲明邊台故址. [明口原口北邊口口陽口界. 今遼志口陽口所口有白塔口白塔口口等十三邊口.] 其西北白塔水口[伊通邊境]處明時有白塔空台. (중략)至縣東北二十二里**靠邊屯**北入境. 西流沿明障塞遺址. [明開原口北口口]⁷⁷⁾

C-⑩ 一名小清河. [(중략)]西流逕李家台村北. 又轉西北逕小三家子村東左受摩家溝水. 又北逕王卑城村西. 村東**平岡**上有**故城遺址**. [(중략)]又西北流逕古城子村西. 村北山上有**故城遺址**. 俗名榴城. 建置年代無考.⁷⁸⁾

C-④~C-⑩의 기록을 통하여 요하 유역 특히, 변강이 발견되는 지역 곳곳에서 古城遺址(고성유지)·古塞遺址(고새유지)·邊台(변태) 등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하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군사시설들은 요하 주변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다만, 발견되는 유적의 규모가 대부분 ‘둘레 1리’ 혹은 ‘둘레 2리’ 정도로 작은 것으로 보아 요하 주변 지역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세력권이 요하까지 미쳤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요동지역의 제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기존 제성들과 요하 사이의 지역을 방어하기 어렵다. 요하와 요동지역의 제성들 사이의 거리는 짧게는 수km~길게는 수십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방어와 관련하여 『봉천통지』에 수록된 변강 관련기록은 고구려 말기의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營口市 高坎鄉 太平堡村(영구시 고감향 태평보촌) 근처에서는 고구려

76)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昌圖縣, 平安堡河, 1732쪽.

77)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昌圖縣, 亮子河, 1733쪽.

78) 『奉天通志』 卷 74, 山川八, 各縣山水, 遼河流域二, 開原縣, 清河, 1738쪽.

평지성이 발견되었는데,⁷⁹⁾ 그동안 이 평지성 외에 요하 연안에서 고구려 평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리장성과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필자가 『봉천통지』에 나타나는 고성유지들과 관련하여 영구에서 발견된 이 평지성에 새삼 주목하고 있는 까닭은 이 평지성과 변강 주변의 고성유지들이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서부 전초기지에 관한 연구로 이성제의 연구가 주목된다.⁸⁰⁾ 이성제는 611년(대업7) 李景(이경)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武厲城(무려성)을 잃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무려라와 무려성이 다른 것이었음을 밝히고 고구려와 수의 국경선은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611년 수가 빼앗은 고구려의 무려성은 수의 보급 거점인 회원진을 견제할 수 있는 요서지역 무려현 故址(고지)에 고구려가 세운 거점성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성’과 ‘라’의 차이를 밝히면서 ‘라’는 요하 서안에 설치되어 도하를 감시하는 초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요서의 거점과 요동을 잇는 간선의 관진으로 기능했다고 보고 있다.

변강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관련 고성유지들과 영구시의 평지성 역시 요하 도하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평시에 요하 이서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교통의 간선을 보호하고, 요하 이서지역에 설치한 武厲邏(무려라) 등의 邏(라)와 요하 동쪽에 설치된 평지성 및 고성유지들로 요하를 감시·통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다가 戰時에는 요하 이서 지역의 거점은 요서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하다가 적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요하

79) 姜念思, 앞의 글, 2008, 50쪽.

이 평지성은 현재까지 요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평지성으로 이 평지성과 요하 사이의 거리는 채 10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성내에서는 고구려의 기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80) 李成制, 앞의 글, 2013, 1~28쪽.

이동으로 물러나 변강으로 상정되는 천리장성을 이용하여 적군의 도하를 지연시키고자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천리장성의 축조가 고구려 전술의 전반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던 당에 비하여 고구려가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도하하는 당의 병력을 천리장성에서 모두 막아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함으로써 평시에는 요하를 감시·통제하다가 전시에 적군의 도하 위치와 관련정보 등을 파악하는 전초기지·봉화대의 역할을 담당⁸¹⁾하며, 당의 도하를 지연시키면서 후방의 성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기 위한 보조 방어시설의 목적으로 축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술하였듯이 천리장성의 축조 배경 중 하나는 당의 경관파괴에 대응하여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세력권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 방어체계의 중심은 요동지역의 제성들이었으며, 천리장성의 축조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방어선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고구려는 중국 여러 왕조들의 침입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만의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당과의 전쟁에

81) 李健才에 따르면 덕혜현 和平鄉(화평향) 서쪽 20리의 西邊崗屯(서변강둔), 腰邊崗屯(요변강둔), 東邊崗屯(동변강둔)의 마을 주민들은 작은 토산형태의 변강 유적을 봉화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李健才, 앞의 글, 1991)

대비하여 축조한 천리장성은 7세기 초까지 유지된 기존의 방어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전의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장성’의 축조는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앞서 기존의 방어체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새로운 방어체계를 정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고구려 말에 새롭게 축조된 천리장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말기의 방어 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특징이나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는 기록이 소략하다는 한계 때문에 학계에서는 천리산성설과 변강설로 양분되어 왔다.

변강설에 따르면 변강이 길림성~요녕성까지 동일한 판축 기법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 위치가 요하를 도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 주행방향이 천리장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 천리장성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변강이 고구려 천리장성임을 증명해줄 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강과 고구려 천리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천리장성 관련기록을 바탕으로 기존 제설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와 당의 침입경로 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변강 유적에 대조시킴으로써 고구려가 축조하였다는 천리장성에 접근해 보았다. 수와 당의 침입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수와 당은 요하를 도하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당은 수와는 다르게 요하 유역에서 특이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구려군을 속이면서 여러 갈래로 요하를 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육로를 통한 침입에 수전에 능한 자를 뽑았다는 점, 해로를 통한 침입이 증가했다는 점 등의 기록들은 요하 유역에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축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3장에서는 정황상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여겨지는 변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변강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된 중국 학계에서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봉천통지』에 수록되어 있는 변강 관련기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변강의 주변에서 고려성, 고성유지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영구시에서 발견된 고구려 평지성과 유사한 방어시설들로 판단되며, 고구려가 요하 연안에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한 결과 요하 연안에 구축한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고구려가 새롭게 축조한 천리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천리장성의 축조가 고구려가 구축하고 있던 기존 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단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던 당에 비하여 전투인원을 동원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도하하는 당의 병력을 천리장성에서 모두 막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천리장성의 축조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요하, 요동, 고구려, 천리장성, 고구려 천리장성, 변강, 영류왕, 보장왕, 연개소문, 봉천통지

<ABSTRACT>

The Great Wall of Goguryeo in Liao-River Area

Woo, Seok-ho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reat Wall of Goguryeo that had been estimate constructed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ryu to King Bojang for 16 years(631~646). Due to the lack of related historical records, there have been three assumable theories about the Great Wall of Gogureyo, namely Sanseong-yeonbangseol(山城聯防線說) which assumption is the connected wall with the established wall in the past, Sanseong-bangeojogool(山城防禦組群說), and Byeongang(邊崗說). Reviewing the old documentary records and the archaeological data to examine the existing studies,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wo former theories are not valid.

Although the remains of the Great Wall of Goguryeo haven't been found,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prove the reliability of Byeongang theory. Firstly, the position of Byeongang was easy to prevent enemies crossing the Liao-River. Secondly, the position of Goguryeo's Great Wall was not overlapped in Liao-Dong, in which the great walls of other dynasties were built. Thirdly, The Direction and length of the Great Wall is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record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invasion route of Sui and Tang dynast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Wall of Goguryeo was built. The reason why I compared these two dynasties's invasion route is that there found in the historical records the fact that Goguryeo built the Great wall after its successive defence from Sui's attack. After the comparison, I found that Tang's invasion pathways to Goguryeo became

diversified and Tang's army changed their tactics after building the Great wall.

Next, this study also analyzed Chinese archaeological data and documentary records about Byeongang.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Byeongang site stretching a thousand li from the northeast to the southwest, was the same one so called, "Pancheck" which piled up the several earthen panel one by one, from Killim province to Yonyeong province.

Finally, I confirmed the fact that Byeongang site was mentioned in 『Bongcheontongji』 called as 'Goguryeo Castle', 'Goguryeo Tae', 'beacon', small the site of an ancient castle after analysing of the related old records.

Thus, it is certain that the Great Wall played the role of an auxiliary line in the existing defense system of Goguryeo. The purpose of building the Great Wall is presumed to guarantee the time for the rear's preparation and to inform the position as well as the condition of enemy troops to the existing defense system, the fortress.

Key Words : Liao-River, Liao-Dong, Gogureyo, Great Wall, Great Wall of Gogureyo, Byeongang, King Yeongryu, King Bojang, Yeon-gae-so-mun, Bongcheontongji

임진왜란 한·일 함선 전투력 지수 연구

정완희* · 민승식**

1. 서론
2. 적용 이론 및 연구 방법
3. 실험설계 및 수행
4. 기본가정 및 실험결과
5. 결론

1. 서론

함선은 해상교전의 기본 전투단위이며, 함선의 전투력은 해상교전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투의 결과는 개별 함선의 전투력의 합에 따른 결과이다. 적보다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 함선을 적보다 많이 투입한다면, 교전의 결과는 ‘승리’가 될 것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있었던 많은 해상교전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해군사관학교 작전학 조교수

* * 해군사관학교 물리학 조교수

임진왜란 시기의 조선수군 주력함인 판옥선, 거북선의 전투력은 일본 수군의 안택선(아다케부네), 관선(세키부네) 등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 조선 함선은 일본 함선에 비해 전투원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장기인 포술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었다. 이 같은 함선의 특징은 전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전투력은 교전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함선의 특징은 전투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적용하면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실제 교전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력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대의 전투력은 전투를 수행하여 군사적 목표인 승리를 달성해 가는 능력을 의미²⁾하기 때문에 전투수행 결과를 통해서 진정한 전투력을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의 해상교전결과를 통해서 양국 함선의 전투력 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던 함선의 전투력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2장은 정량적 평가를 위한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은 이론을 통한 실험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계했다. 4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내포된 의미를 찾고자 했다.

1) 장영호, “무기체계 측면에서의 임진왜란 고찰”, 『군사발전연구』 제3권 제1호, 2009년, 142~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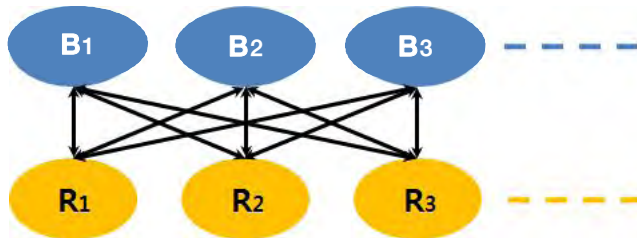
2)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육군인쇄창, 2006년, 565쪽

2. 적용 이론 및 연구 방법

가. 란체스터 방정식

임진왜란의 전투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란체스터 방정식이다. James R. Newman이 1956년 발행한 『The World of Mathematics』라는 책에서 영국의 공학자 Lanchester는 자군의 단위 시간당 전력 손실이 상대군의 전력에 비례한다는 이론을 제창하였다.³⁾ 예를 들어, 상대군이 100척의 함선으로 공격한다면 10척으로 공격하는 것에 비해 자군의 전력 손실이 10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림 1〉 블루군과 레드군의 대결 모형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루군과 레드군으로 불리는 두 군대가 전투를 수행할 때, 교전 양상은 화살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때 각 부대의 전투단위는 개인, 장비 등 여러 종류가 혼합될 수 있으므로,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블루군의 전력을 B_1, B_2, B_3 등으로, 레드군의 전력을 R_1, R_2, R_3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란체스터 방정식에 의한 블루군과 레드군의 단위시간당 전력

3) Lanchester, "Mathematics in Warfare", *The World of Mathematics*, Vol.4 (Simon and Schuster, 1956), pp.2138~2157

손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dot{B}_1(t) &= -\beta_{11}R_1(t) - \beta_{12}R_2(t) - \beta_{13}R_3(t) - \dots \\
 \dot{B}_2(t) &= -\beta_{21}R_1(t) - \beta_{22}R_2(t) - \beta_{23}R_3(t) - \dots \\
 \dot{B}_3(t) &= -\beta_{31}R_1(t) - \beta_{32}R_2(t) - \beta_{33}R_3(t) - \dots \\
 &\dots \\
 \dot{R}_1(t) &= -\rho_{11}B_1(t) - \rho_{12}B_2(t) - \rho_{13}B_3(t) - \dots \\
 \dot{R}_2(t) &= -\rho_{21}B_1(t) - \rho_{22}B_2(t) - \rho_{23}B_3(t) - \dots \\
 \dot{R}_3(t) &= -\rho_{31}B_1(t) - \rho_{32}B_2(t) - \rho_{33}B_3(t) - \dots
 \end{aligned}
 \tag{1}$$

$\dot{B}_i(t)$ 는 단위시간당 $B_i(t)$ 의 전력 손실,
 $\dot{R}_j(t)$ 는 단위시간당 $R_j(t)$ 의 전력 손실,
 β_{ij} 는 R_j 에 대한 B_i 의 전력 손실률,
 ρ_{kl} 은 B_l 에 대한 R_k 의 전력 손실률

이때 $\dot{B}_i(t)$ 와 $\dot{R}_j(t)$ 는 $B_i(t)$ 와 $R_j(t)$ 를 시간에 대해 한 번 미분한 항이다. 또한 β_{ij} 와 ρ_{kl} 은 해전의 경우 개별 함선의 전투역량과 관계되는 전력 손실률이다.

임진왜란에서의 전투 양상은 조선수군(블루군)의 경우 판옥선과 거북선을 전투 단위로 설정하였고, 일본수군(레드군)은 다양한 크기의 안택선(아다케부네)과 관선(세키부네)을 전투에 투입하였으므로 편의상 대선, 중선, 소선으로 전투 단위를 분류하였다. 즉, 조선수군은 B_1 과 B_2 로, 일본수군은 R_1 , R_2 및 R_3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함선의 전력 손실률이 주어졌을 때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바탕으로 한 전투 결과로부터 각 함선의

전력 손실률을 역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모형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단일한 종류끼리의 전투로 간략화하여 해법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식 (1)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어 해법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dot{B}(t) &= -\beta R(t) \\ \dot{R}(t) &= -\rho B(t) \\ &; \beta \text{는 블루군의 전력 손실률,} \\ &\quad \rho \text{는 레드군의 전력 손실률,} \\ B(0) &= B_0, \quad R(0) = R_0\end{aligned}\tag{2}$$

식 (2)를 시간에 대해 한 번 더 미분하면 레드군과 관계없는 블루군 자체에 관한 다음의 미분방정식이 도출된다. 이때 $\ddot{B}(t)$ 는 $B(t)$ 를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다.

$$\ddot{B}(t) = -\beta \dot{R}(t) = \beta \rho B(t)\tag{3}$$

일반적인 미분방정식 해법을 통한 식 (3)의 해는 다음과 같다.

$$B(t) = c_1 e^{\sqrt{\beta\rho}t} + c_2 e^{-\sqrt{\beta\rho}t}\tag{4}$$

; c_1, c_2 는 초기조건 $B(0) = B_0, R(0) = R_0$ 에 의해 결정됨

식 (4)를 식 (2)에 대입하면 레드군에 관한 식도 구할 수 있다.

$$R(t) = -c_1 \sqrt{\frac{\rho}{\beta}} e^{\sqrt{\beta\rho}t} + c_2 \sqrt{\frac{\rho}{\beta}} e^{-\sqrt{\beta\rho}t}\tag{5}$$

식 (4)와 (5)에 블루군과 레드군의 초기 전력 $B(0) = B_0$ 와 $R(0) = R_0$ 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가 도출된다.⁴⁾

$$\begin{aligned} B(t) &= \frac{1}{2} \left(B_0 - \sqrt{\frac{\beta}{\rho}} R_0 \right) e^{\sqrt{\beta\rho}t} + \frac{1}{2} \left(B_0 + \sqrt{\frac{\beta}{\rho}} R_0 \right) e^{-\sqrt{\beta\rho}t} \\ R(t) &= \frac{1}{2} \left(R_0 - \sqrt{\frac{\rho}{\beta}} B_0 \right) e^{\sqrt{\beta\rho}t} + \frac{1}{2} \left(R_0 + \sqrt{\frac{\rho}{\beta}} B_0 \right) e^{-\sqrt{\beta\rho}t} \quad (6) \end{aligned}$$

우리는 사료를 바탕으로 B_0 , R_0 , $B(t)$ 및 $R(t)$ 의 값을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판옥선(블루군)과 일본 함선(레드군)의 전력 손실률 β 와 ρ 값을 추정할 것이다. 즉, 판옥선과 일본 함선의 전투력이 사전에 주어졌을 때 교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전 결과로부터 당시 판옥선과 일본 함선의 전투력을 역추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사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판옥선과 일본 함선의 전투력 추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란체스터 방정식은 이상적인 전투상황을 전제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양군이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정해진 전력이 동시에 전투를 벌여야 란체스터 방정식으로 도출한 해석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 전투상황이 항상 이렇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부 전력은 순차적으로 참전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전투상황이 승·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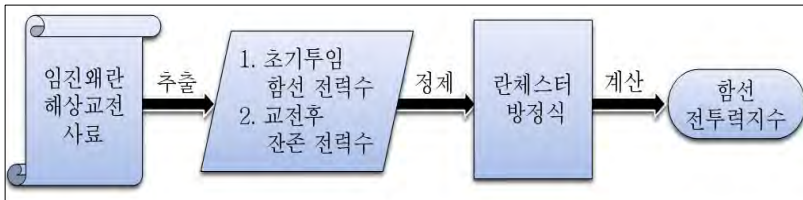
4) 정완희, 민승식,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 전투력 분석」, 『군사』 제91호, 2014 선조실록에 명시된 판옥선과 세키부네의 전투력 차이(5~8:1)를 근거로 $\beta=1$, $\rho=8$ 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실시간 조선수군(블루군)과 일본수군(레드군)의 전력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명량해전에서의 교전 초기조건을 조선수군 13척, 일본수군 133척으로 두고 계산한 결과 명량해전 격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3군데의 지점 중 울돌목의 입구 부분이 가장 합당한 격전지로 추정되었다.

나. 연구 방법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루는 변수는 양군의 초기 투입 전력수, 승리군의 잔존전력, 양군 함선의 전투력 지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함선의 전투력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값은 해상교전별로 양군의 초기 투입전력, 승리군과 패배군의 잔존전력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일어났던 해상교전의 결과를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원천자료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상교전에서 전투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함선의 전투력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적인 함선의 전투력이 발휘되는 작전 환경이 아닌 기습을 당한 경우는 일반적인 함선 전투력을 도출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해상교전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 함선 전투력 지수 연구 방법



연구목적에 맞도록 정제된 자료는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하여 함선 전투력 지수를 도출한다. 전투력 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실시한 해상교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전투력 지수를 산출한다.

3. 실험설계 및 수행

임진왜란 해전에서 조선수군의 승리 원인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많이 있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순신의 지휘통솔력과 해전술, 수군 무기체계의 상대적 우위 등이 언급되었다.⁵⁾ 기존의 연구는 해전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상황과 전투원의 능력을 분석하였다. 반면에 본 논문은 해전의 결과로부터 당시 전투원의 전투력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전투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연구된 승리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가. 실험설계

1) 란체스터 방정식 변수 식별

실험을 위해서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를 지정해야 한다.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는 어떤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조작된 변수를 말한다.⁶⁾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탐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통제하는 변수이다.⁷⁾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대상이다.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각 해전에서의 양군의 초기 투입한 전력수(B_0 , R_0)와 승리 군의 잔존 전력수(B 또는 R)가 해당된다. 각 해전별로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종속

5) 정진술, “임진왜란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의 원인과 역사적 의의”, 『학예지』 제19집, 2012년, 7~32쪽

6)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년 10월 30일

7)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 사전』, 2009년

8) 고영복, 위와 같음

변수 도출이 가능하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양군의 전력 손실률 비($-\beta/\rho$, 또는 ρ/β)이다. 전력 손실률을 재해석하여(아군 함선 전력 손실률은 적군 함선의 전투력) 양군의 함선별 전투력 도출이 가능하다.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통제변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전별 작전 상황을 보고, 적용가능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해야 한다. 그러한 예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해전상황을 들 수 있다. 양 군이 교전 발생을 상호 인지하고, 함선의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실험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

2) 란체스터 방정식 변수와 해상교전 전력

란체스터 방정식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해전별 양군의 투입된 함선의 전력수이다. 조선수군에게 해당하는 함선은 판옥선과 거북선이다. 판옥선은 전투를 위해서 개발한 함선으로 임진왜란 시기에 많은 기록(임진장초, 난중일기)에서 주 전투력으로 활용되었다.⁹⁾ 거북선은 귀선(龜船)이라는 말로 소개되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사천해전에서 최초로 참전하여 칠천량해전까지 약 2~3척이 투입되었다.¹⁰⁾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옥선과 거북선의 모습은 <그림 3, 4>와 같다. 란체스터 방정식에 입각한 분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투력지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는 함선의 종류와 해전에 투입된 함선의 수이다. 따라서 판옥선과 거북선의 세부적인 제원은 다루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값에 대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본수군의 함선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특징은 튼튼한 선체, 높은 함선의 크기, 우수한 화포술과 궁술 등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조선수군은 등선백병전을 벌이는 일본수군에 비해서 이격된 해전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9) 『명종실록』, 명종 21년 3월 13일

10) 『태종실록』, 태종 13년 2월 5일

〈그림 3〉 판옥선의 구조와 주요특징

판옥선 구조도(출처 : 각선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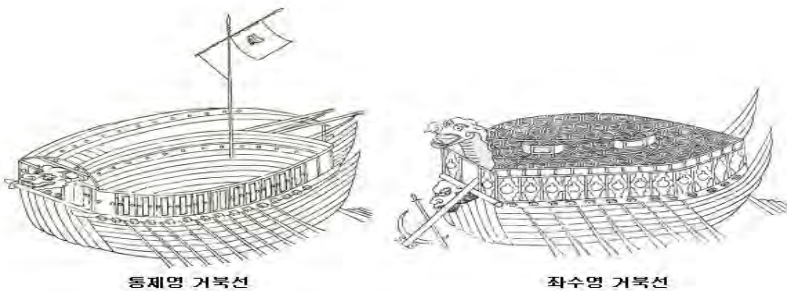


주요특징¹¹⁾

- 두꺼운 판재와 평평한 바닥
- 노 젓는 격군과 전투를 하는 군사를 분리
- 왜선에 비해 높아서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쏘기 용이
- 강력한 궁술과 화포술 보유

〈그림 4〉 거북선의 구조와 주요특징

거북선 구조도(출처 : 이충무공전서)



주요특징¹²⁾

- 튼튼한 선체, 빠른 선회 능력 보유
- 적진을 향해 맨 먼저 앞장서서 돌격하는 돌격선으로 활용됨
- 왜군의 백병전을 방어하기 위해 덮개에 칼과 송곳 설치
- 사망에서 천·지·현·황자 총통으로 함포공격 가능

11)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충무공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년 4월 28일, 79~80쪽

12) 상계서, 96~97쪽

일본수군이 임진왜란 시기에 사용했던 함선은 안택선(安宅船), 관선(關船; 세키부네), 소조선(小早船; 고바야부네)이다. 안택선은 16세기 일본의 축적된 수군 전법과 배 건조 기술이 결합하여 일본 함선 건조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대형 함선이다.¹³⁾ 이순신 장군의 2차 해전 때 언급한 “높이가 3~4장이나 될 듯한 높은 층루가 우뚝 솟았고, 밖으로는 붉은 비단 휘장을 두르고 취장의 사면에는 황자를 크게 쓴”이라는 표현과 “뱃머리에 따로 판자로 된 3층 누각을 만들어 세웠고, 단청한 흰 벽은 마치 불전과 같았으며, 앞에는 푸른 일산을 세우고 누각 아래는 검게 물들인 비단 휘장을 드리웠다”라는 표현의 대상을 안택선으로 보고 있다.¹⁴⁾

관선은 임란 당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일본의 주력 군선이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사료에서 언급된 대·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관선(세키부네)으로 보고 있다.¹⁵⁾ 소조선은 전투를 위한 목적보다는 대·중선 전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쾌속선으로 볼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전과를 보고했던 임진장초에는 대·중·소선으로 왜선을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일본 함선의 제원(크기, 형태)을 고려했을 때 대선은 안택선 또는 큰 관선, 중선은 일반적인 관선, 소선은 소조선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13) 상계서, 84쪽

14) 상계서, 82쪽

15) 상계서, 83쪽

〈그림 5〉 일본의 함선(안택선, 관선, 소조선)

안택선([선(船)] 석정겸치, 비전명호옥성도병풍(肥前名護屋城圖屏風))



- 2층 갑판으로 구성(노꾼과 전투원으로 구분)
- 재료가 약하여 조선 함선과 부딪칠 때 파손이 심함⁶⁾
- 검붉게 채색하고 각종 장식을 현란하게 함
- 외부 갑판이 함포 및 화살의 공격에 노출됨

관선(일본의 선, 관선의 범장 행선도)



- 상대의 배에 돌격하여 뛰어오르는 전법에 적합한 모양
- 최대 100개까지 노를 달아 함선의 속도가 빠름

소조선(문화콘텐츠닷컴 복원도¹⁷⁾)



- 선체가 가벼우며 뾰족하게 생겨서 속도가 빠름
- 민첩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제작, 정찰용 및 연락용으로 사용됨

나. 실험수행

1) 원천자료 추출

연구 원천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임진왜란 해상교전의 역사 기록자료는 난중일기, 임진장초, 선조실록, 이충무공전서 등이 있다. 난중일기는 해상교전의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기록한 일기이다. 난중일기의 부록에는 왕에게 교전과 관련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임진장초의 초안이 있다. 선조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왕이었던 선조 사후 실록청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이다. 이충무공전서는 1795년 국왕의 명령에 따라 난중일기를 유득공의 책임하에 편집한 역사서이다.

해상교전 원천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료의 신뢰성과 충분성이다. 가장 좋은 자료는 저자가 해상교전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 위치하여 보면서 기록하는 것이겠지만 수년이 지난 해상교전 자료를 이렇게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뢰성이 높은 자료는 해상교전에 깊게 관여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근접성)에서 공식적으로 남긴(공신력) 기록이 될 것이다.

〈표 1〉 연구 원천자료 추출 가능한 자료

자료명칭	작성자(육간이)	작성시기	종류	비고
난중일기(亂中日記)	이순신	1592.5~1598.10	일기	국보 제76호
임진장초(壬辰狀草)	이순신	1592.5~1598.10	보고서 초안	난중일기의 일부
선조실록(宣祖實錄)	실록청 역사가	1567.1~1608.1	실록	-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이순신(유득공)	1795년	유고전집	14권 8책

출처 :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2007.3.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용 종합)

16) 『숙종실록』, 숙종13년 1월 1일

17)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10&cp_code=cp0231&index_id=cp02310078&content_id=cp023100780001&search_left_menu=5(검색일자 : 2014년 6월 19일)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료의 충분성이다. 신뢰성 높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으면 활용을 할 수 없다.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가 여러 가지 충분히 추출되어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적합한 자료는 해상교전 전·후의 함선수와 교전의 작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료 추출 가능한 사료 중에 신뢰성과 충분성이 가장 우수한 사료는 임진장초, 난중일기로 판단된다. 난중일기는 해상교전에 근접한 시기와 장수가 기록되어 있지만, 해상교전별로 함선수가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으며, 개인이 기록한 일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성이 다소 부족했다. 선조실록은 우선 해상교전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에서 동떨어져 작성되었고, 내용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이충무공전서 역시 난중일기나 임진장초에 비해서 본 연구를 위한 신뢰성과 충분성이 미흡했다.

〈표 2〉 사료별 추출 적절성 판단 결과

(○ : 양호, △ : 보통, × : 불량)

사료명칭	신뢰성		충분성	
	근접성	객관성	함선수	작전상황
난중일기(亂中日記)	○	△	△	○
임진장초(壬辰狀草)	○	○	○	○
선조실록(宣祖實錄)	△	○	×	△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	○	△	△

전투력 지수를 추출하고자 하는 함선은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 일본의 대·중·소형 함선이다. 총 5가지 변수의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5개의 란체스터 방정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적인 결과는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단일한 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많은 교전 결과로부터 값을 추정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3〉 해상교전 자료 추출결과

(수치 단위 : 척수)

해전명	조선 초기전력	일본 초기전력	결 과(격파)
① 옥포	판옥선28*	전선 30여*	왜선 대13, 중6, 소2*
② 합포	판옥선28*	대4, 소1*	왜선 대4, 소1*
③ 적진포	판옥선28*	대9, 중2, 소2*	왜선 대9, 중2*
④ 사천	판옥선23, 거북선3*	대12**	왜선 대12, 기타1**
⑤ 당포	판옥선23, 거북선3*	대9, 중소12*	왜선 대9, 중소12*
⑥ 당항포(1)	판옥선48, 거북선3*	대9, 중4, 소13*	왜선 대9, 중4, 소13*
⑦ 한산도	판옥선56, 거북선3**	대36, 중24, 소13*	왜선 대35, 중17, 소7*
⑧ 안골포	판옥선56, 거북선3**	대21, 중15, 소6**	왜선 대21, 중15, 소6**
⑨ 울포	미상	대5, 중2*	왜선 대5, 중2*
⑩ 장림포	미상	대4, 소2**	왜선 대4, 중2**
⑪ 화준구미	미상	대5*	왜선 대5*
⑫ 다대포	미상	대8*	왜선 대8*
⑬ 서평포	미상	대9*	왜선 대9*
⑭ 절영도	미상	대2*	왜선 대2*
⑮ 부산포	전선74*	전선 470*	왜선 128*
⑯ 웅포	전선89*	전선 40*	왜선 3척 이상*
⑰ 당항포	전선124*	대10, 중14, 소7*	왜선 31*
⑱ 장문포(1)	미상	미상	왜선 2**
⑲ 칠천량	전선 180***	미상	조선전선 168***
⑳ 명량	판옥선13**	전선330**	왜선30**
㉑ 절이도	조명연합전선**	전선100**	왜선50**
㉒ 고금도	조명연합전선***	미상	왜선50**
㉓ 장도	조명연합전선**	미상	명사선19, 호선20**
㉔ 노량	조명연합전선***	전선 300**	왜선 200여척 격파, 왜선 50척 도주***

출처: *임진장초, **난중일기, ***선조실록

임진장초를 주 자료로 하고, 타 자료(난중일기, 선조실록 등)로 보완을 하여 교전에 의한 전과가 발생한 해상교전 자료를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총 24회의 해상교전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초기부터 당항포해전까지는 임진장초에 자세한 전력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조선수군은 주로 판옥선을 기본 전선으로 해상교전에 참전했으며, 거북선은 4차 사천해전 이후 2~3척이 일부 해전에 참전했다. 일본수군은 조선수군에 비해서 다수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종류 또한 대·중·소로 나뉘어서 다양했다. 교전의 결과는 칠천량해전을 제외한 전 해상교전에서 조선수군의 승리가 확인되었다. 명량해전 이후에는 명나라 수군이 참전하여 4차례 해전을 수행하였다.

2) 자료 정제 기준

추출된 자료를 정제하는 이유는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목적하는 결과값은 ‘일반적인 해상 작전상황에서 조선수군과 일본수군 함선의 전투력 지수’이다. 이를 위해서 자료를 정제하는 기준을 비정상적인 작전상황 여부, 란체스티 모형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료 여부, 목표값과 관계되는 자료 여부, 자료 자체의 부정확성 여부 등으로 정했다.

비정상적인 작전상황은 해상에서 양군이 교전 이전에 전투상황을 인지하여 전투준비태세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칠천량해전의 경우 야간에 정박하고 있었던 조선수군이 기습공격을 당한 해전이다.¹⁸⁾ 당시 조선의 함선인 판옥선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가 불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목적상 칠천량해전의 결과가 실험 모형에 대입하게 되면, 판옥선의 기본 보유 전투력을 도출하는데 신뢰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한다. 비정상적인 작전 상황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정박 중 노략질을

18) 『선조실록』 권90, 1597년(선조 30년) 7월 22일

하고 있던 일본 수군과 교전을 했던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 해전의 경우도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투태세를 칠천량해전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긴 항해를 하고, 피로도가 높아져 있고, 기본적인 경계태세도 안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야간시간에 발생한 칠천량해전은 전투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해전의 경우 일부 미비한 전투태세를 전투력 지수의 일부로 판단하여 란체스터 방정식에 적용하였으며, 칠천량해전은 적용대상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란체스터 방정식 모형은 동시에 교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대입하는 양군의 초기 투입전력이 동시에 교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잔존전력과 승리하는 군이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투 초기에 3척이 투입되어 1척만 교전을 하고 나머지 2척은 참전하지 않고 대기 후 1척이 침몰한 이후 교전을 했다면, 하나의 란체스터 방정식으로 3척을 대입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투입된 1척을 초기 전력으로 방정식을 도출하고, 나머지 2척을 초기전력으로 하는 다른 방정식을 도출해야 한다. 역사적 사료로부터 추출한 초기 투입전력이 동시에 참전하지 않고 순차적인 교전상황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란체스터 방정식 결과값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1594년 3월 4일에 실시한 당항포 해전의 경우 총 31척을 격파하였는데, 6척→2척→2척→21척을 순차적으로 격파하였다.¹⁹⁾ 따라서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31척을 초기 전력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4차례의 세부교전을 초기전력으로 대입해야 한다. 하지만, 4차례 교전별 조선 수군의 초기전력을 알 수 없어서 당항포 해전은 란체스터 방정식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가 되었다.

19) 이순신, 『난중일기』, 1594년 3월 4일

〈표 4〉 해상교전 자료 중 연구제외 해전

해전	연구 제외 사유	근 거
⑩ 장림포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⑬ 웅포	불필요한 자료(수륙협공으로 육상전력 참전)	임진장초(1593.4.6)
⑬ 당항포	란체스터 모형에 적용 불가(순차적 교전)	난중일기(1594.3.4)
⑨ 울포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⑪ 화준구미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⑫ 대대포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⑬ 서평포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⑭ 절영도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⑮ 부산포	란체스터 모형에 적용 불가(순차적 교전)	임진장초(1592.9.17)
⑮ 장문포	자료 부족(투입된 조선군 함선 초기 전력수)	-
⑲ 칠천량	비정상적인 해전상황(야간 기습공격)	선조실록
⑳ 명량	란체스터 모형에 적용 불가(순차적 교전)	난중일기(1597.9.16.)
㉑ 절이도	불필요한 자료(명나라 함선)	선조실록
㉒ 고금도	불필요한 자료(명나라 함선)	선조실록
㉓ 장도	불필요한 자료(명나라 함선)	선조실록
㉔ 노량	불필요한 자료(명나라 함선)	선조실록

한편, 목표값과 관계없는 자료는 제외되었다. 해상교전에서의 함선 전투력과 관계가 적은 수륙협공 작전을 실시한 웅포해전은 전과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함선뿐만 아니라 지상군 전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또한 실험 대상을 조선과 일본 수군 함선의 전투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 수군 함선이 참전한, 명량해전 이후의 해전을 제외하였다.

다. 자료 정제 결과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 가능한 해상교전 입력 자료는 〈표 5〉와

같이 정리되었다. 총 8번의 해전에서 도출된 자료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이 해전들은 정제 기준이었던 불필요한 자료의 포함, 순차적 공격상황, 비정상적인 전투상황(야간 기습), 자료부족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이다. 도출된 자료는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하여 함선별 전투력을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표 5〉 해상교전 자료 정제 결과

해전	조선 초기전력	일본 초기전력	결 과(왜선 격파)
① 옥포	판옥선28	전선 30여	대13, 중6, 소2
② 합포	판옥선28	대4, 소1	대4, 소1
③ 적진포	판옥선28	대9, 중2, 소2	대9, 중2
④ 사천	판옥선23, 거북선3	대12	대12, 기타1
⑤ 당포	판옥선23, 거북선3	대9, 중소12	대9, 중소12
⑥ 당항포	판옥선48, 거북선3	대9, 중4, 소13	대9, 중4, 소13
⑦ 한산도	판옥선56, 거북선3	대36, 중24, 소13	대35, 중17, 소7 격파 대1, 중7, 소6 도주
⑧ 안골포	판옥선56, 거북선3**	대21, 중15, 소6**	왜선 대21, 중15, 소6**

4. 기본가정 및 실험결과

가. 기본가정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함선들끼리 싸우는 복합전의 경우 초기 전투력과 전후 전투력만으로 각 함선들의 전력 손실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함선들을 합리적으로 단일화하여 전력 손실률의 최소 요구치를 찾고자 한다. 우선 거북선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거북선과 판옥선을 단일함선(판옥선)으로 가정하여 전투력을 측정할

것이다. 또한 일본 수군의 함선은 대형을 중형 또는 소형으로, 중형을 소형으로 변형하여 - 일본 함선의 전투력을 과대 계상하여 - 계산을 수행할 것이다. 즉, 일본의 전투력을 과대평가한 후 판옥선의 전투력 요구치의 하한선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가정 1 : 대선과 중선을 모두 소형화하여 소선으로 계산

(판옥선, 거북선, 대선, 중선, 소선)

→ (판옥선, 판옥선, 소선, 소선, 소선)

가정 2 : 대선을 중형화하여 중선으로 계산하고 소선은 무시

(판옥선, 거북선, 대선, 중선, 소선)

→ (판옥선, 판옥선, 중선, 중선, -)

가정 3 : 대선만 계산하고 중선과 소선은 무시

(판옥선, 거북선, 대선, 중선, 소선)

→ (판옥선, 판옥선, 대선, -, -)

한편, 조선수군의 피해는 없었으나, 전투력의 최소 요구치를 알고자 하므로 각 해전에서 1척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 표를 얻는다.

〈표 6〉 가정 1에 의한 초기전력과 전투 결과

: 대선과 중선을 모두 소형화하여 소선으로 계산.

숫자는 순차적으로 판옥선, 거북선, 대선, 중선, 소선의 척수임.

해전	초기전력	결 과 (손실전력)
① 옥포	28 0 0 0 30	1 0 0 0 26
② 함포	28 0 0 0 5	1 0 0 0 5
③ 적진포	28 0 0 0 13	1 0 0 0 13
④ 사천	26 0 0 0 13	1 0 0 0 13
⑤ 당포	26 0 0 0 21	1 0 0 0 21
⑥ 당항포	51 0 0 0 26	1 0 0 0 26
⑦ 한산도	59 0 0 0 73	1 0 0 0 59
⑧ 안골포	59 0 0 0 42	1 0 0 0 42

〈표 7〉 가정 2에 의한 초기전력과 전투 결과

: 대선을 중형화하여 중선으로 계산하고 소선은 무시.

숫자는 순차적으로 판옥선, 거북선, 대선, 중선, 소선의 척수임.

해전	초기전력	결 과 (손실전력)
① 옥포	28 0 0 28 0	1 0 0 24 0
② 합포	28 0 0 4 0	1 0 0 4 0
③ 적진포	28 0 0 11 0	1 0 0 11 0
④ 사천	26 0 0 13 0	1 0 0 13 0
⑤ 당포	26 0 0 15 0	1 0 0 15 0
⑥ 당항포	51 0 0 13 0	1 0 0 13 0
⑦ 한산도	59 0 0 60 0	1 0 0 52 0
⑧ 안골포	59 0 0 36 0	1 0 0 36 0

〈표 8〉 가정 3에 의한 초기전력과 전투 결과

: 대선만 계산하고 중선과 소선은 무시.

숫자는 순차적으로 판옥선, 거북선, 대선, 중선, 소선의 척수임.

해전	초기전력	결 과 (손실전력)
① 옥포	28 0 21 0 0	1 0 18 0 0
② 합포	28 0 4 0 0	1 0 4 0 0
③ 적진포	28 0 9 0 0	1 0 9 0 0
④ 사천	26 0 12 0 0	1 0 12 0 0
⑤ 당포	26 0 9 0 0	1 0 9 0 0
⑥ 당항포	51 0 9 0 0	1 0 9 0 0
⑦ 한산도	59 0 36 0 0	1 0 35 0 0
⑧ 안골포	59 0 21 0 0	1 0 21 0 0

나. 실험결과

란체스터 방정식의 해법을 통한 식 (6)에 세 가지 가정에 의한 초기전력과 손실전력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소선 vs 판옥선, 중선 vs 판옥선, 대선 vs 판옥선의 전력 손실을 비를 구할 수 있다.

〈표 9〉 가정들로부터 전력 손실률 비 계산

해전	소선 vs 판옥선 전력 손실률 비 (가정 1)	중선 vs 판옥선 전력 손실률 비 (가정 2)	대선 vs 판옥선 전력 손실률 비 (가정 3)
① 옥포	16.1	14.0	7.9
② 합포	0.46	0.30	0.30
③ 적진포	3.1	2.2	1.5
④ 사천	3.4	3.4	3.4
⑤ 당포	8.7	4.5	1.6
⑥ 당항포	6.7	1.7	0.9
⑦ 한산도	43.9	30.4	11.1
⑧ 안골포	15.1	11.1	3.8

〈표 9〉의 값들은 전력 손실률의 최소 요구치를 나타내므로 소선 vs 판옥선의 최소 요구치는 한산도대첩에서의 43.9가 된다. 마찬가지로 중선 vs 판옥선은 30.4, 대선 vs 판옥선은 11.1이 된다. 하지만 한산도대첩은 학익진 전법을 이용하는 등 세계 4대 해전으로 불리는 극적인 전투였으므로, 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로 큰 값들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소선 vs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비는 16.1, 중선 vs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비는 14.0, 대선 vs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비는 7.9가 됨을 알 수 있다.

전력 손실률은 상대 함선에 대한 방어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그 역수는 일종의 공격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동일 국가끼리는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중선, 소선의 전력 손실률 비를 직접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선, 중선, 소선 간 전력 손실률 비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 4 : Red1군과 Bule군의 전력 손실률의 비가 $r_1:1$ 이고
 Red2군과 Blue군의 전력 손실률의 비가 $r_2:1$ 이라면,
 Blue군에 대한 Red1군과 Red2군의 전력 손실률 비는
 $\sqrt{r_1}:\sqrt{r_2}$ 이고
 Red1군과 Red2군에 대한 Blue군의 전력 손실률 비는
 $\sqrt{r_2}:\sqrt{r_1}$ 이다.

가정 4의 의미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frac{\text{함선2에 대한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text{함선1에 대한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 \frac{\text{판옥선에 대한 함선1의 전력 손실률}}{\text{판옥선에 대한 함선2의 전력 손실률}} \quad (7)$$

앞의 가정들과 <표 9>의 값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전력 손실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용한 전력 손실률 계산 결과

구 분	소선 (가정 1)	중선 (가정 2)	대선 (가정 3)
판옥선과 일본 함선의 전력 손실률 비	16.1	14.0	7.9
일본 함선에 대한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1	1.07*	1.43**
판옥선에 대한 일본 함선의 전력 손실률	16.1	15.0†	11.3‡

* 중선에 대한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 $\sqrt{16.1/14.0} = 1.07$

** 대선에 대한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 : $\sqrt{16.1/7.9} = 1.43$

† 판옥선에 대한 중선의 전력 손실률 : $14.0 \times 1.07 = 15.0$

‡ 판옥선에 대한 대선의 전력 손실률 : $7.9 \times 1.43 = 11.3$

〈표 10〉에서 대선의 규모가 소선에 비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소선의 전력 손실률이 대선에 비해 1.43배밖에 차이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함선의 규모와 큰 상관없이 우리 함포의 공격에 일본 수군이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대선에 대한 판옥선의 전력 손실률이 소선에 비해 1.4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등선백병전에 유리한 일본 수군의 전략과 달리 화공전에서는 대선이 소선에 비해 공격력 우위를 크게 점하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 10〉의 수치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선, 중선, 소선에 대한 판옥선의 전투력은 각각 16.1, 14.0, 7.9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판옥선에 대한 소선, 중선, 대선의 공격력은 1(기준값), 1.07, 1.4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선, 중선, 대선에 대한 판옥선의 공격력은 16.1, 15.0, 11.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4에 의해 각 함선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같은 비율로 크거나, 작다고 계산한 것이다.

아군 함선에 대한 적 함선의 전력 손실률은 적 함선에 대한 아군 함선의 공격력이다. 유사하게 적 함선에 대한 아군 함선의 전력 손실률의 역수는 적 함선에 대한 아군 함선의 방어력이다. 따라서 〈표 10〉을 약간 변형하여 일본 함선에 대한 판옥선의 공격력, 방어력, 전투력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11〉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용한 공격력, 방어력 및 전투력 계산 결과

: A에 대한 B의 전투력은 B에 대한 A의 전투 손실률 비임

구 분	소선 (가정 1)	중선 (가정 2)	대선 (가정 3)
일본 함선에 대한 판옥선의 공격력	16.1	15.0	11.3
일본 함선에 대한 판옥선의 방어력	1 (기준값)	0.93*	0.70**
일본 함선에 대한 판옥선의 전투력	16.1	14.0	7.9

* 중선에 대한 판옥선의 방어력 : $1/1.07 = 0.93$

** 중선에 대한 판옥선의 방어력 : $1/1.43 = 0.7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 교전 사료를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하여 판옥선과 일본 함선 간의 전력 차이를 최종 도출하였다. 판옥선 1척의 전투력은 일본 소선 16.1척, 중선 14.0척, 대선 7.9척의 전투력과 각각 대응된다. 양국의 단위 함선의 전투력 차이가 대략 10배 이상 발생한 결과로써 당시 판옥선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교전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당시 양국 함정의 전투력 차이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판옥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수군의 함선 5~6척 내지 7~8척이 대적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²⁰⁾ 교전결과로 판단했을 때 사료의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판옥선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판옥선은 대선의 경우에도 7.9척이 대항해야 승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험결과와 역사적 사료에 나타난 전투력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란체스터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전투결과 자료가 없었던 점도 있다. 일부 해전에서 많은 수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수군이 소수의 일본수군과 교전을 벌였다. 이때 해상지휘관이 판단하기에 많은 수의 전력을 모두 투입시키기보다는 일부 전력을 투입시켜도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조선수군 함선이 모두 전투를 벌이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없었다. 결국 참전한 모든 함선을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 전투력과 실험결과와의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선을 대선, 중선, 소선으로 구분하였다. 함선의 크기와 전투력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판옥선 1척에 대한 전투력 분석결과는 '3 : 2 : 1'로 나타나지 않았다. 판옥선에

20) 『선조실록』 권3, 선조 29년, 12월

비교한 실제 결과는 ‘16.1 : 14.0 : 7.9’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전투양상이 ‘등선백병전’이 아닌 ‘화공전’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수군의 전투력은 기본전술이 ‘등선백병전’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에 있는 많은 전투원은 판옥선에 사다리를 걸고 이동해서 ‘백병전’을 해야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 판옥선에 접근하지 못하는 대선, 중선, 소선은 자신들의 본래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 함선은 크기가 크고, 많은 전사가 있더라도 ‘화공전’에서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함선은 일본수군의 함선에 비해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적 기록과 현재 역사가의 일치된 결론이다. 본 논문은 이 사실에 보강하여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량화된 수치는 당시 역사기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전투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함선의 전투력뿐만 아니라 전투원의 사기, 지휘자의 리더십, 당시 작전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함선 전투력을 제외한 다른 요소를 정량적 수치로 전환하여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이번의 연구결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 8. 20)

주제어 : 란체스터 방정식, 전투력 지수, 함선, 임진왜란

<ABSTRACT>

A Study on the Combat Power Index of Warship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Jeong, Wan-hee · Min, Seung-sik

This paper is about the combat power index(CPI) of two nation's warships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so called, Imjin-Waeran broken out the year of Imjin). The calculation model of CPI was utilized by Lanchester. In order to gain the proper input data, historical records of sea battles were classified and the controversial data which contain some abnormal operations and sequential attacks were excluded. After filtering the historical records, 8 kinds of battles are selected. These are the sea battles of "Okpo, Happo, Jeokjinpo, Sacheon, Dangpo, Danghangpo, Hansando, and Angolpo". The initial and the final numbers of ships for the 8 sea battles were applied into the Lanchester's model. Then, the CPIs of Japanese small, middle, and large warships are deduced to 16.1, 14.0, and 7.9, respectively. This means that 1 Korean warship(so called, Panoksun) was corresponded to 16.1, 14.0, and 7.9 Japanese small, middle, and large warships, respectively. Because the CPI of Korean warship was larger than that of Japanese warships, the Korean navy could overwhelm the Japanese navy during Imjin-Waeran.

Key Words : Lanchester's law, Combat Power Index, Warship, Panoksun,
Imjin Waeran

17C 조선의 포수 훈련방식과 군율

김 영 준*

1. 머리말
2. 17C 조선 포수의 훈련방식
3. 군율이 훈련방식에 미친 영향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 사학계에서 군사사에 대한 연구는 군사문제를 정치·제도사 측면에서 다루는 군제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군사제도는 무기·편제·훈련·전술 등 다양한 요소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군사기술이나 국제정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제도 연구는 지나치게 군의 편제나 군역제의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군사제도가 훈련이나 전술, 그리고 전쟁수행방식 등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몇 가지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서구 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교수의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¹⁾을 필두로 군사적 변혁을 근대국가 형성의 배경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식이 시도되었다.²⁾ 르네상스시기 절대왕정의 수립에는 군대의 팽창이라는 요소가 큰 기여를 했으며,³⁾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영국의 마이클 로버츠 교수는 이 시기에 등장한 화력무기인 머스킷(Musket)이 기존에 근력(筋力)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창검에 대해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이야말로 군사상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이 새롭게 등장한 보병집단은 표준화 된 화력무기를 토대로 짧은 시간에 양성되어 더 많은 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로버츠 교수는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라는 논문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군사혁명(軍事革命)’이란 용어로 정의하며, 이것이 단순히 군사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⁴⁾

1955년에 발표된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은 그 후 20년 동안 큰 반론 없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로버츠 교수의 이론에

1) “First came a Revolution in tactics : the replacement of the lance and pike by the arrow and mucket, as the feudal knights fell before the firepower of massed archers or gunners. associated with this development were a marked growth in army size right across Europe and the adoption of more ambitious and complex strategies designed to bring these larger armies into action.” ‘군사혁명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Geoffrey Parker, 『*The Military Revolution :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1500~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1.

2)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 2007, 23쪽 참조.

3) 페리 앤더슨 저, 김현일 역,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양서각, 2010, 51쪽 참조.

4) 로버츠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총포류가 창을 대신하는 무기상의 변화, 둘째, 군대 규모의 엄청난 증대, 셋째, 대규모의 복합적인 전술의 사용, 넷째, 사회에 대한 군대의 영향 증가 등이며, 그는 특히 네덜란드의 마우리츠 반 나사우(Maurits van Nassau)와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Gustav II Adolf)가 개발한 부대 대형을 주목했다.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187~188쪽.

처음 도전장을 내민 것은 조프리 파커(Geoffrey Parker) 교수였다. 파커 교수는 1976년에 「군사혁명-하나의 신화인가?(The Military Revolution-a myth?)」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을 검증하였다.⁵⁾ 하지만 파커 교수도 기본적으로 로버츠 교수의 이론을 수용하였으며, 오히려 파커 교수는 로버츠 교수의 이론을 확장·보완하여, 「나가시노 전투의 세계사 : 유럽군사혁명의 충격 1500~1800년」이란 논문을 통해 비슷한 시기 일본에도 ‘군사혁명’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파커 교수의 주장은 일본 사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중 구보타 마사시(久保田正志) 교수는 그의 저서 『일본의 군사혁명』을 통해 ‘군사혁명론’을 일본사에 도입시키는 과감한 시도를 하였다. 구보타 교수는 유럽에서 일어난 군사혁명이 과연 파커 교수의 주장대로 일본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검증함과 아울러, “일본의 군사혁명은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파커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구보타 교수는 “일본의 군사혁명은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혁명을 끝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주장하며, 특히 일본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유럽이 처한 역사적 환경이 달랐음을 제시하였다.⁶⁾

일본학계까지 영향을 미친 ‘군사혁명론’은 한국 사학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최근 들어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선의 군사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영구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⁷⁾ 군대의 훈련방식 및 전술운용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⁸⁾

5) 파커 교수는 특히 로버츠 교수가 “군사혁명의 원년을 1560년으로 설정한 것은 불행한 선택이었다.”고 혹평을 가했다. 이명환, 「근대 초 유럽의 군사혁명론」, 『서양사론』 제94호, 2007, 258~259쪽.

6) 구보타 마사시 저, 허진녕·박홍배·심호섭 역, 『일본의 군사혁명』 양서각, 2010, 247쪽.

7) 노영구, 「『군사혁명론(Military Revolution)』과 17~18C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 제36권,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2007, 참조.

8) 노영구, 「인조초-병자호란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한국사학보』 제41호, 고려사학회, 2010 참조.; 이종호, 「병자호란 개전 원인과 조·청의 군사전략 비교연구」,

아직까지는 연구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서양 학계에서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연구 방식에 대한 비판과⁹⁾ 전쟁을 문화적 관념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¹⁰⁾ 이제 한국 군사사의 연구 방법에도 연구주제에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군사적 변화들은 유럽학계에서 제시한 ‘군사혁명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중 특히 조총의 도입으로 인해 군사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7C 조선은 수천 정의 조총을 생산할 정도로 화기 개발에 적극적이었었으며¹¹⁾, 효종대에 표류해 온 네덜란드 선원 하멜(Hendrik Hamel)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보병들은 대부분이 머스킷으로 무장할 정도로 많은 수량의 조총을 확보하고 있었다.¹²⁾

조선 후기 화기의 도입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군사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영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의 역사적 흐름이 유럽과 달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럽과 비슷한 일련의 변화를 갖긴 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 또한 면밀히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군사기술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관념을 고찰해 봄으로써 당시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군사』 제90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참조.

9) 존 린 저, 박일송 역, 『배틀, 전쟁의 문화사』, 청어람미디어, 2006, 22~25쪽.

10) 이내주, 「서양사 속의 전쟁 : 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서양 현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서양사론』 제107권, 한국서양사학회, 2010, 참조.

11) 『인조실록』 권 19, 6년 11월 17일(갑술).

12) “철관과 뿔이 달린 투구와 갑옷을 입은 병사들도 있다. 이들은 화승총과 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다. 대장들은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있다. 모든 병사들은 화약 50발분의 총탄을 자비로 부담하며, 반드시 그것들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헨드릭 하멜 저, 김태진 역, 『하멜 표류기』 서해문집, 2003, 112쪽.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7C 조선군의 중핵을 담당했던 포수의 훈련방식과 군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먼저 본론인 2장에서는 포수의 훈련을 크게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격훈련과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진법훈련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다. 다음으로 본론인 3장에서는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규범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광의(廣義)의 군율로 포상제도 중 하나인 참수급제(斬首及第)와 처벌제도인 연좌제(連坐制)를 통해 군율 속에 나타난 문화적 관념이 훈련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본고의 연구 주제가 17C의 군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또 연구 대상이 포수에만 국한된 것은 본고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17C 조선 포수의 훈련방식

가. 사격훈련 방식

‘군사혁명론’에서 로버츠 교수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16C 말 네덜란드의 오라니엔 공(公)인 마우리츠(Mauritz)가 행한 군사 개혁은 당대 유럽에서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당시 화승총을 다루는 총병은 불을 붙인 화승을 왼손으로 계속 쥐고 있는 상태에서 화약과 탄환을 장전하고, 뇌관 역할을 하는 약실에 발화약을 채우는 작업을 하려면 세심하고 정확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2분가량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적의 기병이 돌격해오면 한 발 이상 발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우리츠는 적의 기병 돌격을 분쇄하기 위해 일제사격전술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백 발의 탄환을 개별적으로 쏘기 보다는 일제히 발사함으로써 집중된 화력을 발휘하여 탄막(彈幕)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탄막을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총병의 조직력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다. 후행사격, 즉 카라콜(Caracole) 기동이라는 이 방식은 머스킷 총을 든 병사가 대형을 짜고 전투에 임했을 때, 맨 앞 열의 병사들이 총을 쏜 후 자기가 속한 대열의 맨 뒤로 달려가서 재장전을 하는 동안 두 번째 열의 병사들이 총을 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첫 번째 열의 병사들이 재장전을 완료하자마자 다시 두 번째 열이 적에게 일제사격을 퍼부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열을 여러 개로 만들면 끊임없이 적에게 치명적인 교차사격을 퍼부을 수 있었다.

〈자료 1〉 파리 군사박물관에 소장된 마우리츠 훈련법 동판화¹³⁾



13) 이 동판화들은 오라니엔공 마우리츠의 사촌이자 긴밀한 협력자였던 나사우 백작 요하네스 2세가 야코브 드 헤인이라는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다. 이 그림들은 1607년에 한 권의 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폴리오 판형의 한 페이지 전체에 한 가지 자세를 싣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령을 덧붙였다. 윌리엄 맥닐 저, 신미원 역, 이대주 감수,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 185쪽.

따라서 총병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발사 → 우로회전 → 탄약 장전 → 위치이동 등의 동작을 순서에 맞게 시행해야 했으며, 이처럼 복잡한 기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반복연습이 필요했다. 따라서 마우리츠는 훈련교관들이 병사들의 각 동작이 제각각 이뤄지지 않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분당 발사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 각 동작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그린 동판화를 제작했다.

위 동판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우리츠는 화승 심지를 총에 꽂는 간단한 한 동작조차 5개의 구분동작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처럼 마우리츠는 적에게 신속한 사격을 가하기 위해, 머스킷의 장전과 발사에 요구되는 상당히 복잡한 움직임을 42개의 구분동작으로 분석하고, 각 동작마다 이름을 붙였으며, 그 동작을 하도록 명하는 적절한 구령을 정했다. 따라서 그의 병사들은 구령에 따라 일제히 각각의 동작을 취하였으며, 모든 병사가 한꺼번에 박자를 맞추어 움직이기 때문에 전원이 동시에 사격준비가 완료되었다. 즉, 유럽에서는 화승총이 가지는 기능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막을 형성하는 일제사격전술이 도입되었으며, 이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총병들은 명중률을 중시하는 개별적인 사격훈련이 아닌 신속한 탄막을 형성하기 위한 집체훈련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¹⁴⁾

한편 17C 조선의 군사적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신식무기인 조총을 다루는 포수의 창설이다. 포수는 기병보다 양성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¹⁵⁾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였다.¹⁶⁾ 특히

14) 사실 보다 정밀한 사격을 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일찍이 가늠자와 가늠쇠의 발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는 정밀사격이 특별히 중시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18C로 갈수록 집중사격과 신속한 사격을 위해 정밀 사격은 의도적으로 등한시된다. 한스 델브뤼크 저, 민경길 역, 『병법사』 제Ⅷ권, 한국학술정보, 2009, 44쪽.

15) “問于都監，則都監軍兵，各給三保，馬兵則加一保爲四保，故上馬只給豆九斗，下馬給

17C 중엽에 이르면 북벌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중앙군 소속의 보병들은 대부분 화승총으로 무장했으며, 1682년에 훈련도감의 편제를 보면, 마병 6초(哨)와 포수 20초, 살수 6초로 구성되어 사실상 사수가 누락되고 포수의 수효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추세는 그 후에도 계속되는데, 19C 초반의 기록인 『남한지(南漢志)』에 의하면, 삼군문(三軍門)의 무기 비축 내용 중 화기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¹⁸⁾ 17C 이후 조선군의 주요 전력은 포수라는 사실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조총은 본래 조선에 없던 무기였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포수의 훈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6C말 조선에 도입된 삼수병(三手兵)체제는 본래 명(明)의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저술한 『기효신서(紀效新書)』를 근간으로 한 것이므로, 포수의 훈련법 역시 대체로 『기효신서』에 의거하게 되었다.¹⁹⁾

(전략)...상격(賞格)을 마련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기효신서』에 ‘구중(九中)은 초등(超等), 팔중은 상상(上上), 칠중은 상중, 육중은 상하, 오중은 중상, 사중은 중중, 삼중은 중하, 이중은 하상, 일중은 하중, 무분(無分)은 하하이다. 중관(中貫)이나 중변(中邊)을 막론하고 상하(上下) 이상은 논상하고, 중상과 중중은 면책하고, 중하 이하는 차등 있게 논벌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조식(條式)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포수들의 경우 중관이 많은 자는 획수(畫數)가 우수하여 상등에 처하고, 중변이 많은 자는 중수(中數)가 중관한 사람보다

六斗, 別無給芻之事云矣, 敢啓”. 『승정원일기』, 효종 3년 9월 20일(무자).

16) 박제황, 「임진왜란기 한·일 양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 제6집, 한일관계사학회, 1996, 65~66쪽.

17)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상권, 창설조(創設條), 숙묘조(肅廟朝), 8년(임술) 3월 16일.

18) 『남한지』에 수록된 무기 비축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오종록,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 ; 오군영의 삼수병제와 수성전」, 『사총』 제33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88, 36~41쪽.

19) 『선조수정실록』 권 28, 27년 2월 1일(경술).

많아도 획수가 도리어 그 아래에 처했으므로 7획 이상은 제직(除職)과 면천(免賤)을 혼합하여 마련하고 상상등은 목면 1필을 더 주었습니다...(중략)...논상의 규정은 『신서』의 규식을 준용하되 중관·중변을 구분치 말고 단지 중(中)이 많은 것으로 상(上)을 삼아야 하니, 초등은 1등을 더하여 논상하고 상상은 제직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除職)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하는 한편, 살수도 같은 예로 논상해야 합니다.²⁰⁾

당시 실록에 나타난 훈련도감 포수들의 사격훈련 기록을 보면 『기효신서』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표적을 세우고 과녁을 명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지방군인 속오군의 경우 대개 훈련도감에서 교관을 파견하여 조련을 시켰기 때문에 지방군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훈련을 시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¹⁾

〈자료 2〉 『북정일기(北征日記)』에 기술된 함경도 포수들의 사격 훈련 현황²²⁾

차 수	일 자(1658년)	장 소	명중자수	명중률
1 차	4월 6일	회 령	51명	25%
2 차	4월 21일	회령부 남문루	기록없음	기록없음
3 차	5월 17일	송화강 영고탑	40명	20%
4 차	5월 18일	송화강 영고탑	65명	32.5%
5 차	5월 21일	송화강 영고탑	좌초 : 67명 우초 : 56명	평균 : 61.5%

실제로 17C 중엽에 이루어진 2차 나선출병 당시 함경도 지역 포수들의 훈련 방식을 보면 훈련도감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정일기(北征日記)』에 기술된 조선군의 사격훈련 기록에 따르면, 이 때 출병한 조선군은 총 5차례에 걸쳐 사격 연습을 하게 되는데,

20) 『선조실록』 권 62, 28년 4월 24일(병인).

21) 『선조실록』 권 62, 28년 4월 24일(병인).

22) 『북정일기』에 나타난 조선 포수들의 사격 훈련은 아래 표로 정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신류 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국역)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74~75쪽.

사격훈련 방식은 실록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표적을 세우고 조준사격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조선 포수들의 평균 사격실력은 약 25%의 명중률로 평가되었다.

〈자료 3〉 『병학지남주해(兵學指南註解)』에 기술된 ‘조총방법(鳥銃放法)’²³⁾

箭則心定而應 字彙云 黃帝之臣始作弓矢 周不勳則絕短 又云少昊之時始作紅高招調銃手 鳥銃火咒者 鳥銃火箭筒 砲佛狼機等 席蹲砲 長二尺重三十六斤上用鉄橫 而清名先用藥綿縛之次用火藥七人兩土隔少許五 黑旗調牌 牌形象 故取天開於 又云 牌上画北海 圓牌 以老粗藤如指大為骨藤纏中心空 子之意也 鬼之頭故也 圓牌 向外內空長三尺重九斤上下用二環 以便所用刀鉛子不可避鎗天可避也是以代甲冑之屬置於行伍之前 用牌 戈在於狼號之下出入陣中進退便利且衛且殺此南北方通用之咒 法 隔牌如雙閃牌如電起伏清宜聽身下露牌下露足跪伏委曲蛇行 鳥銃 魚息以擊空七尺之軀伸縮進退神出鬼沒縱橫於鋒鏑之間 放法 不搖頭不擡手前膝如銃當接腮面以後照星對前星以前照星對所付 之胸如法齊之則十發八九中也 赤賊於百步之外射能命中利能調中 白旗調刀 鈚手 刀鈚管殺 刀 握手刀 鎗鈚 長七尺六寸重五 小字中枝必高二寸若中鋒與左右枝齊則 紅旗調鎗手 鎗刀之形如火 不能深割故必高二寸可以加火前放也 鎗之鈚故也長 十五尺刀 鍊兵實記云 長一丈三尺 用法 正奇之威其進 重四兩 鍊兵實記云 長一丈三尺 用法 正奇之威其進 此楊家梨花之 藍旗調狼棍棒手 棍棒之 法天下無敵 屬火兵亦 狼號 長十五尺重七斤附枝九層十一層九妙枝頭有小鐵咒詠御 恭謹真 而不離赤賊然乃一軍之門戶行伍之藩籬層層密鎗不遺入枝

23) “鳥銃放法 不搖頭不擡手前膝如銃當接腮面以後照星對前星以前照星對所擊之物如法發之則十發八九中也。”『병학지남주해』, 조총방법.

17C 조선의 대표적인 병서 『병학지남(兵學指南)』의 해설서인 『병학지남주해』에 포수들의 사격자세를 살펴볼 만한 자료가 있다. 『병학지남주해』에 기술된 ‘조총방법(鳥銃放法)’에서는 조총의 사격 자세에 대해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손을 흔들지 말고, 앞의 무릎도 같다. 총은 마땅히 뺨면에 접붙이고, 이후로써, 조성(照星：가늌자)을 앞 눈금(가늌쇠)에 맞춰보고 전조성(前照星：가늌쇠)으로써 사물의 조준한 바를 맞춰본다. 법규와 같이 그것을 쏘면 곧 10발 중 8~9번 명중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머리나 손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앞무릎도 같다.’는 대목으로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체가 흔들릴 때 조준점이 미세하게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음으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총은 마땅히 뺨면에 접붙인다.’는 대목인데, 이는 조선군이 사용한 조총은 총기를 뺨에 최대한 밀착시키는 ‘면착식(面着式)’이었음을 시사(示唆)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계에서도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유입된 일본의 조총이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하는 ‘견착식(肩着式)’이 아닌, 개머리판을 뺨에 밀착시키는 ‘면착식’으로, 정교하고 명중도가 높은 수렵용 총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²⁴⁾ 따라서 사실상 일본의 조총을 모방하여 제작한²⁵⁾ 조선의 조총 역시 정교하고 명중도가 높은 ‘면착식’ 총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정교한 명중률을 자랑하는 총기 구조는 조선 포수들의 사격 훈련 방식에 매우 적합했고, 『병학지남주해』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명중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조선 포수의 사격훈련 방식은 명중률을 중시 여기는 방식이었고, 사용하는 조총 역시 명중률을 높이는데 적합한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4) 구보타 마사시, 앞의 책, 50쪽.

25) 『선조실록』권 46, 26년 12월 2일(신해).

나. 진법훈련 방식

17C에 널리 사용되던 화승총은 휴대용 화기의 초기 형태로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이 연기를 내며 소량의 화약이 들어있는 약실로 타들어 갔고, 그렇게 뇌관이 점화되면 총열의 끝에서 섬광이 일면서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이었다.²⁶⁾ 이처럼 화승을 이용해 점화를 한다는 방식 때문에 화승총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무기였다. 화승총은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장전 시 화약 가루나 불씨가 튀어 몸에 붙이 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²⁷⁾ 또 장약(裝藥)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생기면 불발이 나거나 심하게는 총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일쑤였으며, 이러한 사고가 부대 전체에게 치명적인 패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²⁸⁾ 따라서 화승총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성과 더불어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대형을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제히 발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²⁹⁾

조선 포수들이 명중률을 중시 여기는 조준사격에 중점을 두었다면, 유럽의 총병들은 명중률보다는 신속한 탄막을 요구하는 일제사격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신속한 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 대한 훈련 방법도 규율에 의해 개인에게서 최대의 힘을 이끌어내고, 각 부분을 정밀하게 조합하여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³⁰⁾ 따라서 이처럼 정교한 구조적 분할 방식의 훈련법인 ‘교련(Manoeuvre)’은 훈련을 통해서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고, 정교한

26) 영국 왕립 무기 박물관 저, 정병선 역, 『무기(WEAPON)』, 사이언스북스, 2009, 148쪽.

27) 한스 델브뤼크, 앞의 책, 43~44쪽.

28) 이궁익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1977, 265쪽.

29) 존 린, 앞의 책, 263~264쪽.

30)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242쪽.

지휘통제를 기반으로 병사들을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품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³¹⁾ 따라서 유럽의 사격 동작이 조선에 비해 3배나 많게 된 이면에는 각 동작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통제하려는 유럽인들의 전투문화가 담겨있는 것이다.

유럽의 총병이 화승총이 갖는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해 신속한 탄막 형성과 구조적 분할 방식의 훈련법인 교련을 선호했다면, 조선의 포수들 역시 조총의 화승식 발사 방식이 갖는 한계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법훈련을 필요로 하였다. 17C 조선 포수들의 사격훈련 방식을 다룬 또 다른 병서로, 1603년에 저술된 『신기비결(神器秘訣)』은 일반 병사들의 화기 운용과 훈련을 위해 화약 수의 분량이나 탄자(彈子)의 많고 적음, 화기 장방법(裝放法), 그리고 군졸 연습법 등을 기술한 병서였다.³²⁾ 이러한 병서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화기의 제작과 사용은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오히려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며,³³⁾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훈련을 통해 실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신기비결』에서는 조총의 사격 동작을 14개로 구분하였는데,³⁴⁾ 이는 명(明)의 『기효신서』에서 사격동작을 11개로³⁵⁾ 구분한 것을 좀 더 보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사격 동작을 확실히 구분한 이유는 각 동작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시행하여, 동시에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31) 윌리엄 맥닐, 앞의 책, 190~191쪽.

32) 허선도, 「〈신기비결〉연구(상)-한국화약병기의 장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권, 국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3, 58쪽.

33) 허선도, 「조선전기 화약병기의 발달과 그 금비책-국방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14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4, 25~26쪽.

34) “一洗銃 二下火藥 三以朔(木+朔)杖 送藥室 四下鉛子 五以朔杖 送鉛子 六下紙 七送紙 八開火門 九下線藥 十搖火門 使門藥 下合於身藥 十一仍閉火門 十二龍頭安火繩 十三聽令開火門 十四准賊人 舉發.” 한효순, 『신기비결』, 총가(銃歌).

35) 척계광, 『기효신서』 권 3, 「수족편(手足篇)」, 총가(銃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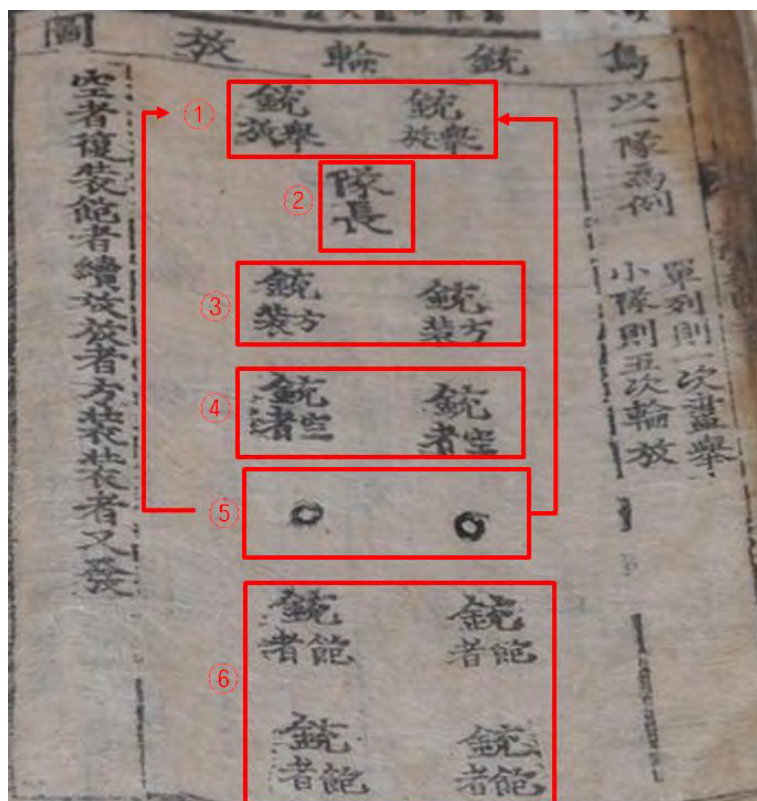
위험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포수들은 사격 훈련 시 명중률을 중시여기는 훈련을 받았지만, 진법 훈련에서는 집중 화력을 발휘하는 일제사격전술을 구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기비결』에 나타난 포수들의 훈련방식은 일면 마우리츠의 방식과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마우리츠는 총을 쏘기 위한 동작을 무려 42개로 나누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불과 1/3 수준인 14개 동작으로 나누었다. 물론 양측이 사용하는 총기의 종류가 완전히 같은 기종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여전히 화승총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며, 발사 방식 자체에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구분동작의 개수를 살펴보면, 마우리츠는 병사들의 매우 세밀한 동작 하나 하나까지 철저히 구분 지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14개의 동작을 제외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유럽의 총병들이 신속한 탄막 형성을 중시 여겼다면 조선의 포수들이 사용한 일제사격전술은 신속성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사격전술이 실제 전술에 운용된 대표적인 예로, 1636년 정온(鄭麟)이 개발한 삼첩진(三疊陣)이라는 2단 연속 일제사격전술을 들 수 있다.³⁶⁾ ‘삼첩진’에서는 포수를 2열로 배치하여 기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앉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연속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방어에 용이한 일제사격 전술로 판단된다.

36) 다만 삼첩진이 실전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할 듯 하다. “皆重行而坐. 放則立. 既放則坐...(중략)...彼若鶴翼而來. 則前隊炮一千先放. 放後坐而藏藥. 後隊一千又放.” 정온, 『동계문집(桐溪文集)』 권 3, 병자차자(丙子劄子).

〈자료 4〉 『병학지남(兵學指南)』에 기술된 조총운방도(鳥銃輪放圖)³⁷⁾



『병학지남』에서는 「조총운방도」를 통해 포수들을 5열로 배치하여 연속적으로 일제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조선의 일제사격전술은 적어도 17C 초반에 개념이 잡혀 있으며, 그것이 17C 중반 이후로 가면 구체화되어 훈련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 포수들이 평소 훈련에서 사격의 신속성보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도록 요구받았는데, 과연 실제 전투에서 운용된 일제사격 전술에서도 이러한 훈련목표가 관철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37) 『병학지남』, 권 3, 「영진총도[상]」, 조총운방도.

없다. 만약 조선의 포수들이 실제 전술운용에서 명중률을 무시한 채 유럽의 일제사격전술과 같이 신속한 탄막을 구사했다면, 앞서 언급한 사격 훈련방식들은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해 실전에서 행해진 조선 포수들의 전술운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광해군시기 명의 요청에 따라 요동으로 파병되어 후금(後金)과 일전을 벌인 사르후(Sarhu)전투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당시 요동으로 파병된 조선군은 약 1만여 명³⁸⁾의 포수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後金)의 군대를 맞아 대패하였다. 당시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던 종사관 이민환(李民煥)은 자신의 수기인 『자암집(紫巖集)』에 “지난해(1619년) 우리 군대는 오로지 포수에만 의지하였기에 적군의 돌격을 맞이할 때 미처 장전을 하지 못하여 적의 기병이 군진으로 들어왔다.”³⁹⁾라고 술회하였다. 이민환의 기록을 볼 때, 조선군의 사격 방식은 기병의 돌파력을 막을 만큼 신속한 사격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사르후 전투의 패전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1636년에 발발한 조·청전쟁 당시 동선령(洞仙嶺) 전투에서 도원수 김자점의 별장으로 출진했던 이완은 포수들을 협곡에 매복한 후 적을 유인하여 일제사격전술로 큰 타격을 주었다.⁴⁰⁾ 또 같은 해 평안병사 유림(柳琳)은 백동(柏洞) 일대의 고지에 진을 치고, 목책을 둘러 방호시설을 갖춘 후, 기습과 유격전으로 청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⁴¹⁾ 그리고 1654년에 청(淸)의 요청으로 영고탑(寧古塔)으로

38) 이민환, 『자암집(紫巖集)』 권 5, 잡저(雜著), 「책중일록(柵中日錄)」.

39) “上年. 我軍專恃砲手. 當兵衝突. 未及再藏而賊騎已入陣中矣”, 이민환, 『자암집』 권 6, 잡저, 「건주건문록(建州聞見錄)」.

40) “遂使砲手五百. 左右埋伏. 約曰. 聞吾號砲齊發...(중략)...遂與引賊入谷中. 發號砲. 伏兵齊發. 賊大衄. 入谷者無有得脫者”, 이단하, 『외계집』 권 10, 「우의정리공시장(右議政李公諡狀)」

41) “日晡時. 有白馬張馳進. 琳擇十卒. 使潛踰柵. 並發砲殺之”, 이궁익, 앞의 책, 586쪽.

출병한 조선군은 강변의 지세가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유봉(柳棚: 통나무 방패)을 설치하여 엄폐를 한 후, 일제사격을 가해 러시아군을 섬멸하였다.⁴²⁾

이상의 사례들을 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조선의 포수들이 지형지물이나 엄폐물을 이용하여 적의 돌격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나 17C 조선의 주적이었던 청이 기병전을 주특기로 한다는 점 때문에 사격속도가 느린 포수로 청의 기병을 막기 위해 요처에 보루를 쌓아 수성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⁴³⁾ 이는 신속하지 못한 사격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진법의 형태도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유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⁴⁴⁾ 즉, 조선의 포수들은 일제사격 전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속한 탄막 형성이 아닌, 다소 사격 간격의 틈이 있는 정확한 조준사격을 시행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형지물이나 엄폐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명중률을 중시여기는 조선의 사격전술은 매복이나 기습, 유격전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조선의 포수들이 그러한 전술을 사용할 시 적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군율이 훈련방식에 미친 영향

가. 참수급제(斬首及第)가 사격훈련에 미친 영향

유럽 총병들의 일제사격 전술은 병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42) 『효종실록』 권 14, 6년, 4월, 23일(정축).

43) 『광해군 일기(중초본)』 7권, 즉위년 8월 13일(정묘).

44) 『선조실록』 권 186, 38년 4월 20일(갑자).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선형전술(Linear Formation)이다. 이처럼 유럽인들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정형화된 대형을 선호하였던 것은 당시 절대주의 시대의 근본적인 발전 과정이자 중심이념인 ‘사회적 규율화’가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적·도덕적·심리적인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⁴⁵⁾

특히 마우리츠의 개혁이 온 유럽에 전파된 후 이제 전장에서 병사개개인의 기민함과 용맹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기사의 무용이나 개인의 용기는 군대의 딱 짜인 일과 속에서 거의 사라져갔고, 점차 규율과 조직력이 강조되었다. 단적인 예로, 이러한 변화들은 루이 14세 시절에 벌어진 열병식을 통해 극대화되어 표출되었다. 그저 숨소리 이외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통제된 열병식의 출현이야말로, 권력에 의한 강제성과 규율중심적인 군사훈련 의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⁴⁶⁾ 이처럼 유럽의 군대는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 군대의 군율과 전쟁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선에서 포수가 처음 창설될 당시,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극심한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특히 개전 초기 탄금대에서 조선이 믿었던 정예기병들의 참패는 조선 정부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정부는 군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참전동기를

45) 게르하르트 외스트라이히(Gerhard Oestreich)는 1968년 자신의 논문 「유럽 절대주의의 구조 문제」에서 기존의 절대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가기구와 통치의 영역에만 관심을 집중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절대주의 시기의 주요한 특징을 국가기구를 비롯한 교회·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서의 규율과 질서에 대한 요구의 증대에서 찾았다. 외스트라이히의 ‘사회적 규율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황대현, 「16~17C 유럽의 ‘교파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역사교육』 제100집, 역사교육연구회, 2006, 296~297쪽.

46) 어느 날 부대의 조련을 막 끝낸 미셸 대공(le grand-duc Michel)은 이렇게 말했다. “좋았어. 그들은 그저 숨만 쉴 뿐이야.” 이처럼 신체에 대한 철저한 규율과 통제야말로 당대 유럽의 군대가 추구했던 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앞의 책, 295쪽.

부여하기 위해, 상벌을 엄격히 하여 군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조선은 이전부터 행해오던 포상제도인 참수급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군공을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⁴⁷⁾

참수급제는 병사들로 하여금 군공에 대한 경쟁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섬멸전으로 전과확대를 유도할 수 있었다.⁴⁸⁾ 이러한 제도는 특히 사회적 하층민으로 구성된 병사들에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1646년에 일어난 관서지방의 반란을 토평(討平)하기 전에 비변사에서 반군을 회유하기 위해 보낸 격문에 보면, 반군 수괴의 목을 참획하여 올 시, 신분상승 내지는 상당한 재물의 포상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⁴⁹⁾ 물론 이것은 반군들을 회유하기 위해 보낸 격문이므로, 조선군 전체에 적용되는 군율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관군에게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심어주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적의 수급은 자신의 전공을 과시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조선의 포수들은 전투에서 일발필중(一發必中)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⁵⁰⁾ 물론 혼전이 벌어질 경우 포수들의 사격 명중률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앞서 언급한 백동 전투나 영고탑 전투에서와 같이 소규모 분견대(分遣隊)로 유격전이나, 매복, 기습과 같은 전술행위를 할 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즉, 참수급제는 당시 포수들에게 목표의식을 확립시켜 주고, 명중률을 중시하는 사격훈련 방식에 동기부여를 제공한 넓은 의미의 군율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7) 『인조실록』 권 15, 5년 3월 5일(임신).

48) 『선조실록』 권 125, 33년 5월 8일(경술).

49) 『인조실록』 권 47, 24년 4월 3일(기묘).

50) “殺賊於百步之外射能命中利能洞中.” 『병학지남주해』, 조총방법.

참수급제는 군인들의 참전동기를 독려하거나 군공을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분별한 살육을 유도했기 때문에, 평화기에는 장려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⁵¹⁾ 따라서 평시에는 참수급제를 대신하여 시취(試取)를 통해서도 군공을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군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확립하고자 했다. 국왕인 선조는 포수와 사수가 서로 경합(競合)하도록 하는 훈련 방식을 지시했는데, 이는 병사들이 상호간에 군공을 경쟁하는 심리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⁵²⁾ 이처럼 조선의 포수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사격술은 실전에서 자신의 전공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평소 훈련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무예(武藝)였다.⁵³⁾

그러나 17C 후반에 들어서면서 평화가 정착되자, 참수급제를 이용해 군공에 대한 경쟁을 독려할 기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8C 초에 벌어진 이인좌의 난에서 토벌대 사령관이었던 오명항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우려하여, 적의 수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적을 생포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⁵⁴⁾ 이는 인조 시기 비변사가 반군에게 보낸 화유 격문에서 적의 수급을 취해 올 때 포상을 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북벌정책이 종료된 17C 후반, 숙종 중엽에 이르면 참수급제는 더 이상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이

51)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선조 27년에 민간인의 수급을 일본군의 수급으로 속여서 거래하는 참수급제의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선조실록』 권 50, 27년 4월 18일(병인). ;인조 15년에 일어난 가도 함락 사건에서 조선군의 한인(漢人) 학살 또한 조정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나만갑, 윤재영 역, 『(국역)병자록(丙子錄)』, 정음사, 1979, 269쪽. ;군사편찬연구소, 『민족전란사(4)-병자호란사』, 국방부, 1986, 248쪽.

52) 『선조실록』 권 61, 28년 3월 23일(병신).

53) 조선후기에는 중일시(中日試)를 통해 무예포수를 선발하여 여러 가지 특전을 주기도 하였다. 《續》“砲手良人一次三中者, 兼司僕付料, 限一年, 二次三中者, 限己身無間, 連三次三中及貫三中者, 稟旨, 直赴殿試.” 『대전회통大典會通』, 「병전(兵典)」, 시취(試取), 무예포수(武藝砲手).

54) 『영조실록』 권 16, 4년 3월 24일(갑술).

종식되는 17C 후반부터는 영향력이 약화된 참수급제를 대신하여 무예를 겨루는 시취를 통해 군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 선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군공에 대한 경쟁 구도를 확립함으로써 명중률을 중시 여기는 사격훈련 방식을 지향했다는 점은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의 무용을 과시하는 행위보다 감시와 통제를 통해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려 했던 유럽의 군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다. 조선의 포수들은 유럽의 군대와 달리 개인의 무용을 과시하는 방법인 참수급제와 시취를 통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으며, 이러한 목표 의식은 조선 포수가 유럽의 총병보다 명중률에 더 집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나. 연좌제(連坐制)가 진법훈련에 미친 영향

전통시기에 대다수 국가들은 신분제 사회였고, 그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신분제적 질서가 중요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심했으며,⁵⁵⁾ 주로 하층민으로 구성된 일반 병사들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잔존해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병사들의 탈영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으며,⁵⁶⁾ 병사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장교로 하여금 제한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다.⁵⁷⁾

55) 페리 앤더슨, 앞의 책, 285쪽.

56) 1775~1777년까지 프랑스의 전쟁성 장관을 역임한 생제르맹(Sant-Germain) 백작은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을 “인간 쓰레기들이며 사회에 무용지물인 자들”이라고 묘사하여 일반 병사들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명예를 모르는 자들이라 여겼다. 존 린, 앞의 책, 254~255쪽.

57)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2세는 그의 저서 『전쟁의 일반원칙(Principes generaux de la guerre)』에서 야간 행군, 숲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군, 숲속에서의 야영, 적을 순찰하기 위한 순찰대의 파견, 추격전 등을 엄격히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조선에서도 역시 군대 내에서 신분제적 질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기병을 주력으로 삼았고,⁵⁸⁾ 따라서 군대의 내의 핵심 계층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부유한 양인이 주류를 이루었다.⁵⁹⁾ 그러나 『기효신서』의 도입으로 삼수병 체제가 완비되자, 군대는 보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사회적 하층민들이 군대 내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자료 5〉 「진관관병편오책」에 기록된 평안도 4개 군 속오군병의 신분별 구성⁶⁰⁾

직 책	신 분 구 성	총 수
영 장(營將)	守 門 將(4품 이상) 郡 守 (종 4품) 主 簿(종 6품) 出 身	4명
파 총(把總)	出 身 8명 主 簿 1명(義州 中司)	9명
초 관(哨官)	出 身 24명 甲 士 1명 保 人 2명 미 파 약 3명	30명
기 총(旗總)	良 人 92명 奴 1명	93명
대 총(隊總)	良 人 247명 奴 27명	274명

속오군의 창립 초기인 선조 29년(1596년)에 유성룡이 작성한 평안도 지방의 군안(軍案)인 「진관관병편오책」에 의하면, 영변·안주·귀주·의주 등 4개소의 평안도 속오군병의 신분별 구성은 양인이 73.8%이며,

참전동기가 낮은 병사들의 전선이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박상섭, 앞의 책, 176~177쪽.

58) 최형국, 「조선시대 기병의 전술적 운용과 마상무예의 변화-임진왜란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제38권, 역사실학회, 2009, 13쪽.

59)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해안, 2003, 52~53쪽.

60) 1596년에 유성룡이 작성한 평안도 지방 영변·안주·귀주·의주 등 4개소의 군안인 「진관관병편오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65~66쪽.

천인은 26.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나 속오군은 법적으로 천인의 입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천인의 비율은 후대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⁶¹⁾

속오군 내에서 천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양인, 특히 양반계층의 불만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수병 내에서 병과 배치를 신분제에 따라 구분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게 된다. 실제로 삼수병 내에서 각 병과가 갖는 신분제적 위상이 달랐는데, 삼수별 신분 구성에서 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살수의 경우 45%, 포수의 경우 40.5%인 반면, 사수는 9.2%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⁶²⁾ 물론 이것이 평안도 지방만 해당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토대로 새로 창설된 병과인 포수와 살수는 대개 사회적 하층민을 중심으로 모집된 반면, 전통적인 병과였던 사수의 경우 적어도 양인 이상의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궁술은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무예였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도 무예를 연마한 전문 무인층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삼수병 내에서 사수와 포·살수 간의 신분적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⁶³⁾

양인과 천인들이 서로 혼합되어 편성된 속오군의 특성상 그 내부에서 신분제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1627년에 새로 선발된 출신(出身)·무학(武學) 등으로 별도의 부대를 만들어 양반을 속오군에서 제외시켰으며,⁶⁴⁾ 영조 12년인 1736년 무렵에 이르면

61) 영변·안주·구성 등지에서는 천민이 대총(隊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총이 대원의 지휘는 물론 속오군이나 봉족(奉足)을 뽑는 데도 관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민이 대총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변동의 가능성과 양민에 대한 평등의식을 느끼기에 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해안, 1999. 46쪽.

62) 김우철, 앞의 책, 65~66쪽.

63) 위의 책, 80쪽.

64) 서태원, 앞의 책, 49쪽.

속오군은 국가적인 조치로 천예화(賤隸化)가 이루어졌다.⁶⁵⁾ 이와 같은 속오군의 천예화는 단순히 양반과 양인들의 군역기피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하층민과 함께 속오군에 편성된 양반과 양인들의 신분제적 갈등양상과 그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중앙군인 훈련도감에서 역시 포·살수는 사회적 하층민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사수들은 전문 무인층으로 구성되었다.⁶⁶⁾ 이 때문에 국왕 선조의 포수에 대한 우대정책은 무인들로 구성된 사수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 시켰는데⁶⁷⁾ 이 불만은 단순히 전통 병기인 궁시를 소홀히 한 정책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신분제적 질서에서 온 갈등이었다. 창설 당시 훈련도감의 포수들은 사회적 하층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사천 노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신성분에 대해 양반관료들은 많은 비판을 하였고,⁶⁸⁾ 결국에는 선조도 훈련도감에 사노비들의 입대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⁶⁹⁾

〈자료 6〉 「강희이년계묘식년 북부장호적」에 기록된 훈련도감 군병 신분 구성⁷⁰⁾

	처(妻) 신분			소유奴婢
초관 1戶	氏 1명(妻父：進士)			42명
포수 27戶	良女 11명	私婢 14명	無 2명	0명
사수 1戶	良女 1명			0명
마병 29戶	良女 15명	私婢 13	未娶 1명	9명
별무사 5戶	良女 5명			8명
故 포수의 처 1戶	私婢 1명			0명

65)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출판부, 1995, 123쪽.

66) 김종수, 앞의 책, 84쪽.

67) 『선조실록』권 68, 28년 10월 29일(무진).

68) 『선조실록』권 87, 30년 4월 13일(계유).

69) 『선조실록』권 167, 36년 10월 7일(기축).

70) 김종수, 앞의 책, 129~134쪽.

사노비들의 입대를 금지하는 조처 이후에도 여전히 훈련도감 병사들의 전반적인 신분은 사회적 하층민인 경우가 많았다.⁷¹⁾ 17C의 한성부 호적인 「강희이년계묘식년 북부장호적」에 의하면 이 중 사비(私婢)를 처로 둔 비부(婢夫) 도감군이 44%에 달하고 있었다. 물론 이 자료 역시 17C 말엽 훈련도감 군사 중 극히 일부만의 호적 자료이므로 훈련도감 전체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 자료 이외에 17C 훈련도감의 다른 호적자료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훈련도감 병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군대 내에 사회적 하층민과 천인의 입속 비율이 높아지자 부유한 양인이 나 양반으로 구성된 지휘관 계층은 병사들에 대해 일정한 불신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에 대한 편견은 17C 초반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훈련도감 병사들의 탈영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때 훈련도감의 병력충원은 모병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병사들 중 상당수가 연고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다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훈련도감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에 대해 “본디 의지할 것 없이 결식하고 다니던 따위들로 아침·저녁의 끼니나 얻어먹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며 경멸했고,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⁷²⁾

전쟁이 치열했던 17C 초 병사들에 대한 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지휘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거한 지연적·혈연적 연대의식의 강화였다. 물론 이러한 연대 의식 강조가 그동안 전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 말 사병을 혁파하면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장수와 병사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은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과의

7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 73, 5년 12월, 28일(신해).

7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 73, 5년 12월 28일(신해).

전쟁을 겪으면서 장수와 병사간의 결속력이 부족한 것을 개전초기 패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대의식 강화가 강조되었다.⁷³⁾

유성룡은 속오군을 결성할 시 각 리(各里)나 각 촌(各村)의 주민이 가까운 데로 합쳐 대오를 구성하도록 권장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편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훈련할 때나 유사시 군병을 동원할 때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같은 시각에 도착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⁷⁴⁾ 또 부대원 간의 연대의식은 단순히 지연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혈연(假血緣)으로도 나타났는데, 장수는 사졸을 자제(子弟)같이 여기고 사졸은 장수를 부형(父兄)같이 여기게 하는 등 상·하간의 인적 유대관계 형성을 중시하였다.⁷⁵⁾

부대원 간의 유대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연좌의 책임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제승방략』에 기록된 금령 27조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대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 간에 강력한 연좌책임을 강조하고 있다.⁷⁶⁾ 특히 『기효신서』에서도 부대원 간의 단결력을 위해 연좌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좌제의 활용은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⁷⁷⁾

연좌책임을 단순히 군대 내의 부대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의 수령과 군역자원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형성되었다. 모병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훈련도감에서 병력충원 방식을 모병제와

73) 『선조실록』 권 48 27년 2월 27일(병자).

74) 유성룡 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국역)서애집』 제Ⅱ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7, 267쪽.

75) 『선조실록』 권 51, 27년 5월 30일(정미).

76) 이일 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역, 『(국역)제승방략』,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99, 150~153쪽.

77) 척계광, 『기효신서』 권 1, 「속오편(東伍篇)」, 편오해(編伍解).

더불어 승호제(陞戶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탈영병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연좌 책임을 물었다.⁷⁸⁾ 그리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 17C 중엽에 이르면 탈영률은 호전되어 훈련도감의 군액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⁷⁹⁾

연좌제는 병사들로 하여금 부대 구성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가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의 영예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투에 임했던 사상자들에 일종에 보훈 처리로 복호제(復戶制)를 실시했다. 그중 특히 전사자에 대해 수령이 직접 제문을 짓고 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무로 강조하고 실천했다.⁸⁰⁾ 이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연좌책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병사들의 희생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조선군은 연좌제라는 엄정한 군율로 병사들의 이탈을 막고 부대원간의 단결을 도모했으며, 이로 확보된 병사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야전에서 유격이나 기습, 매복과 같은 유연한 전술들을 구사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의 지형 특성이 이와 같은 전술들을 시행하는데 유리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병사들의 탈영을 두려워해 이러한 전술행위를 금지했던 유럽의 사례로 볼 때, 이는 조선의 군율이 유연한 전술운용을 시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정형화된 선형전술과 대비되는 다양한 진법훈련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78) “式三年內若有冒點現發及逃亡未捉者則使該邑以他.” 『훈국사례촬요』, 포보(砲保), 당영(當英), 15년(기미), 5월 11일.

79) 김종수, 앞의 책, 105쪽.

80) 임용한, 「조선전기 군 사상자에 대한 보상제도 연구 -복호제를 중심으로-」, 『군사』 제80호, 국방부, 2011, 90~91쪽.

4. 맺음말

지금까지 17C 조선 포수들의 훈련방식과 군율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을 맞아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중국의 병법체계와 일본의 신무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포수의 훈련법은 『기효신서』에 의거하여, 표적을 세우고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이었으며, 집단 훈련인 진법은 포수들을 여러 층으로 배열하여 일제히 사격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일제사격술은 유럽에서 행한 것과 같은 신속한 탄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실전에서도 명중률에 상당히 구애를 받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의 병사들은 군공에 대한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포상제도인 참수급제로 인해 강력한 참전동기를 부여받았다. 포수들은 유격·매복·기습과 같은 상황에서 적의 수급을 취해 자신의 전공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고, 이러한 동기부여는 평소 훈련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는 사격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당시 병사들은 대개 사회적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양반계층으로 구성된 지휘관들로부터 편견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군율인 연좌제를 강력히 적용하게 되었다. 연좌제를 통해 병사들의 탈영률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병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자 유격·매복·기습과 같은 유연한 전술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성 확보는 포수들의 진법훈련이 유럽의 총병들처럼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진법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군사기술인 조총과 『기효신서』의 도입으로 17C 조선의 군사적 환경은 급변하였지만, 그 활용방식 이면에는 참수급제나 연좌제 같은

전통적인 군율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율들로 무장된 조선의 포수들은 전장에서 놀랄 만큼 위력을 떨쳤다.⁸¹⁾ 17C 조선의 군사적 변혁으로 탄생한 포수는 외래의 군사기술들을 모방하여 그대로 이식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든 것은 단순히 군사기술상의 혁신이 아닌 엄격한 군율 속에 내재된 문화적 관념이었다. 조선 포수들의 훈련방식은 군율 속에 내포된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전투에서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예’였으며, 유럽식의 정교한 구조적 분할 훈련법인 ‘교련’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상의 내용들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역사적 환경이 다른 집단들의 상황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 연구의 내용이 포수에만 국한되었다는 점, 자료의 한계성과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일부 자료를 논지 전개에 확대 적용하는 무리가 따랐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성으로 인정되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앞으로 군사사의 연구를 단순히 정치·제도·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전했던 당사자들의 참전동기,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 관념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문화적 전환의 시도야말로 기존 군사사 연구가 갖는 한계성을 넘어 연구주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포수, 훈련방식, 군율, 조총, 참수급제, 연좌제, 군사문화, 군사혁명

81) 『선조실록』 권 102, 31년 7월 19일(임인).

<ABSTRACT>

Training methods and military discipline of Chousun musketeer around the 17th century

Kim, Yeong-joon

This study is analysis on the training methods and military discipline of musketeer responsible for a key figure in Chousun army around the 17th century.

Since it was founded, Chousun dynasty faced the most complicated crisis around the 17th century when it had been invaded by Japan in 1592(임진왜란 壬辰倭亂) and Chung Dynasty in 1636(병자호란 丙子胡亂).

The military system of Chousun at that time was almost collapsed by the Japanese army's early offensive and it was very necessary for it to design a new one for substituting the old system.

According to its need, Chouson dynasty published the Training Book(훈련도감 訓練都監) in which Musketeer appeared as its key change.

Actually, the weapon called Musket was not at all new to Chousun because it had already used gunpowder. However, Chousun's army hadn't yet developed proper military tactics to utilize Musket systematically and organizationally.

On the contrary, the Japanese army had developed strong and effective heating tactics on the basis of the Musket imported in Europe, which affected one of causes that Chousun army was beaten in early stage of war.

However, we should notice that the Musket used in East-Asia then was different from that was used in Europe. And these differences were not only distinct from kinds of just a weapon,

but had an strong impact on military tactics and the way of war execution adapted by both countries. Thus, this study, by noticing these differences, analyzed the reason why Chouson dynasty had chose the Musket of other kind from the West as its major individual weapon system.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cultural concept affecting those who conducted the war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ifference between military tactics.

For the reason, this study sought to find a cultural notion made up of such a military environment as well as the military history is not limited just to Military weapon systems, a combat or the military institution.

Key word : Musketeer, Training methods, Military Discipline, Musket, Reward system(Head hunter), Implicative system, Military culture, Military revolution.

러일 비밀협약과 러시아의 몽골*정책

석 화 정**

1. 머리말: 러일 비밀협약(1912)과 동북아 ‘세력권’ 분할
2. 러일협약 체결의 국제적 배경
3. 러일협약 체결과 러몽조약
4. 제1차 세계대전과 카흐타 삼국(러·중·몽)조약
5. 맺음말

1. 머리말: 러일 비밀협약(1912)과 동북아 ‘세력권’ 분할

1912년 제3차 러일 비밀협약은, 기존의 협약(1907/191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두 나라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극대화 시켰다. 일본은 한국 병합 이후 내친김에 남만주 병합까지 고려했고,

* 외몽골의 국명 즉 몽골리아는 오늘날까지 영어권과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몽골을 비하한 중국식 명칭인 몽고를 지양하고, 몽골인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국명인 몽골로 통일한다. 본고는 몽골, 몽골리아, 외몽골, 내몽골로 지칭하며, 국명의 변화와 그 의미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른 국명들도 원칙적으로는 시기에 따라 구분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중국, 한국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역사교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중국에 21개조안(1915)을 강요하여 결국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켰다.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북만주와 외몽골 병합을 고려했다. 일본의 한국 병탄 직후 이루어진 러일의 이 같은 행보가 다시 제3차 러일협약의 체결을 낳았고, 동북아에서의 두 나라에 의한 제국주의적 분할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제3차 러일 비밀협약은 두 나라의 ‘특수이해’를 더욱 진전시키는데 합의한 뒤, 내몽골을 동서로 양분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내몽골은 현재 중국에 속해 있지만, 외몽골의 경우에는 러일협약 이후 러시아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몽골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신해혁명으로 중국이 곤경에 처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몽골리아(현 몽골)’의 독립 선언(1912)을 유도했다. 이는 외몽골을 중국의 오랜 통치로부터 이탈시켜, 러시아의 영향권 내로 편입시켰음을 의미했다. 결국 러일협약을 계기로 외몽골은 내몽골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몽골 전체의 통일이 포기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사실 러일 비밀협약은 내·외몽골뿐만 아니라, 당시 러일 두 나라의 ‘특수 이해’였던 중국, 만주, 한국의 운명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 기폭제였다. 러일협약 전반에 관한 최초의 중요한 기초 자료와 시각을 제공한 프라이스(E.B. Price, 1933)는 일본의 한국 병합이 러일협약의 직접적 결과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일찍이 레닌은 제1차 러일협약(1907)의 제국주의적 거래가 결국 몽골과 한국의 ‘맞교환’이었다¹⁾고 단정지었고, 이 주장은 그리고르제비치(S.S.Grigorzevich, 1965)와 꾸따코프(L.N.Kutakov, 1988)에게로 이어졌다.²⁾ 러시아사가들의 이 같은

1) В.И.Ленин, Тетради до империализму Т.28,С.669,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1983), с.242.

2) С.С.Григорцевич, *Дальневоосточная Полититика И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 жав в 1906~1917гг.*(Издательство То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мск(1965); Л. Н.Кутаков, *Россия и Япония*(гладная редакцияА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1988).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면서도 그 연계성이 모호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 모든 논란은 1910년과 1912년 러일협약에서 몽골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데서 비롯한다. 이 논문은 1912년 러일 비밀협약 체결의 국제관계와 러일협약 결과로 나타난 러시아의 외몽골 정책을 구명함으로써 러일협약이 몽골과 한국의 맞교환이었음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이미 1907년 제1차 러일협약의 교섭단계에서부터 외몽골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만드는 대가로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에 동의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³⁾ 이는 일본외교문서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1910년 러일협약에서 외몽골에서의 〈특수이익〉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러시아는, 1912년 협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몽골 서부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받았다. 1912년 비밀협약에 외몽골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내몽골 서부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내몽골 북서쪽에 위치한 외몽골은 자연히 러시아의 세력권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몽골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 몽골리아로 만든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패턴과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러시아 대외정책상에 패턴이 있었다면 러몽 관계와 구 한러관계에 어떤 유사성이 있었는가 하는 단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⁴⁾

러일협약은 본고에서 다룬 제3차 러일협약을 포함, 총 네 차례 체결되었으나, 협약 연구는 여전히 제1차(1907년)와 제2차(1910)협약에

3) 石和靜, <國際關係から見た日露協約と日本の韓國併合>, 「ロシア史研究」第72號(2003); 석화정, <러일협약과 일본의 한국 병합> 「역사학보」 제184집(2004); Huajeong SEOK, Russo-Japanese negotiations and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Rethink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5*, Edited by Rotem Kowner (Global Oriental, 2007), pp.401~13.

4)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몽골 국립도서관과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공문서관에서 자료 수집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일부 러시아 자료들은 일본 와코대학의 유효종교수, 모스크바대학의 박종효교수를 통해 입수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집중되어 있다. 연구의 대부분이 러일협약의 관련국들인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몽골에서 나왔다.⁵⁾ 제4차 러일동맹(1916.6. 20./7.3)에 관해서는, 미국의 피터 버튼(Peter Berton, 1956)의 연구⁶⁾가 독보적이다. 최근에는 러일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최고 우의인 동맹으로 확대된 과정에 대한 러시아 신진연구자들의 연구가 두드러지는 추세이다.⁷⁾ 근자에 들어 러일의 내몽골 분할 협약 연구⁸⁾가 나왔지만, 제3차 러일 비밀협약(1912) 자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⁹⁾, 러일협약과 외몽골과의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1912년 러일협약의 파급 효과를 러시아의 외몽골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寺本康俊, (1999), 석화정(2003), 최문형(2004), 야로슬라브 솔라토프(2007), 최덕규 (2008), 벨라 박(2008), 몽골의 바자이칸 Ookhnoi Batsaikhan(The Russo-Japanese Agreement and Mongolia, 2008), 중국의 권혁수(2008)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6) Peter Berton, A New Russo-Japanese Alliance?: Diplomacy in the Far East During World War I, *Acta Slavica Iaponica*, No.11(1993), pp.57~78; Berton, *Russo-Japanese Relations, 1905~1917, From Enemies to Alliance*(NY Routeledge, 2011).

7) I.R. Saveliev, Y.S., Pestushko, Dangerous Rapprochement: Russia and Japan in the First World War, 1914~1916, *Acta Slavica Iaponica*, Vol.18(2001), pp.19~41; Eduard Baryshev, Russo-Japanese Rapprochement during the First World War: World System Factors, *Social and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Kyushu University, 2005, No.17, pp.93~100; Baryshev, Russko-Yaponskaya Polithichskaya Konvensiya ot 3 yulya 1916 goda I ee Mezhdunarodno-polithicheskii smeisl, Yaponiya(Ezegodnik, 2006), cc.243~256; Baryshev, *NichiRo omei no Zidai 1914-1917* (Fukuoka:Gashoin(花書院), 2007); Я. А.Шулатов, На пути к сотруничества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905-1914гг.(Хабаровск-Москва, 2008); Василий Молодяков, Россия й Япония: золотой век(1905-1916)(Москва:просвещение, 2008).

8) 최덕규, <러일의 내몽골 분할협약 연구(1912)>, 「영토해양연구」 Vol. No.5(2013).

9) Frederic R.Dickson, Japan Debates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Second revision of 1911, Phillips Payson O'Brien Edited, *The Anglo-Japanese Alliance 1902~1922*(Routeledge Curzon, 2004), p.104.

2. 러일협약 체결의 국제적 배경

러일 비밀협약의 체결은, 러·영·일, 러불, 영일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였으며, 영미 중재조약(1911.8.13), 영일동맹 갱신(1911.7.13), 신해혁명과 청제국 붕괴라는 1911년의 일련의 국제관계와도 직결된 국제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일본의 한국 병합 이후의 국제관계가 초래한 변화와 직결되어 있었다. 두 나라의 비밀협약을 가능케 했던 국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미 양국이 미국의 발의에 따라 포괄적인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제2차 러일협약 직후인 1910년 8월 초였다. 당시 미일관계는 녹스의 만주정책과 이민문제로 긴장되어 있었으므로 만에 하나 미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영국은 동맹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을 적으로 돌려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민문제를 둘러싼 미 캘리포니아에서의 미일관계 악화는, 영국의 외교정책이 일본과 그 보조를 맞추려 하는 한, 곧바로 영미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은 영일 대 미국과의 전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⁰⁾

이에 영국의 그레이(Sir Edward Grey) 외상은 영국주재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영국이 미국과 무제한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9. 26). 만일 영미 무제한 중재재판조약이 체결되면 영일동맹에 저촉될 뿐 아니라, 모순도 있었기 때문이다.¹¹⁾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1911년 1월 초 중재재판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미국정부에 제기했다.¹²⁾ 일본이 중재재판조약을 인정한다면, 즉 만에

10) British Foreign Office(이하 F.O), 29768/29768/10/45,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the War, 1898~1914*, Vol.VIII, No.447, Mr. Bryce to Sir Edward Grey, August 9, 1911, pp.541~42.

11) 黒羽 茂, 『日英同盟の軌跡(上)』(文化書房博文社, 1988), pp.207~09.

12) 일본이 영미중재조약의 체결에 반대한 명분은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로서는 자국이 미국과 또는 다른 강국과의 사이에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할

하나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일본은 영국의 원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영국 역시 미일 전쟁 시에 일본을 지원해야 하는 동맹 조항에 따라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영미 중재재판 조약(1911.8.3)은 결국 미 상원의 비준을 받지는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일동맹 개정 교섭과 병행적으로 이루어져 1912년 러일협약의 체결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한국 병합과 관련한 두 번째 국제관계 변화는 영미중재조약 체결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영일동맹 갱신, 즉 제3차 영일동맹의 체결(1911.7.13)이다. 영일동맹 갱신 논의는 이미 영미중재조약의 논의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일본 정부는 1911년 4월 5일의 각의를 통해 영일동맹의 갱신 방침을 결정했다.¹³⁾ 동맹 갱신의 목적은 제2차 영일동맹(1905)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와 인도에서의 일반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중국의 독립과 영토보전, 문호개방정책을 확인하며, 동아시아와 인도 및 두 나라의 이 지역들에서의 특수한 이해들과 체약국들의 영토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⁴⁾

제1차 영일동맹(1902)이 러일전쟁을 초래했다고 할 정도로¹⁵⁾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고, 제2차 영일동맹(1905)이 방어적인 성격을 넘어 공격적인 동맹으로 확대되었던데 비하면, 제3차 영일동맹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달랐다.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승인한 점 말고는 영일동맹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에서의

뿐만 아니라....., 백인종과 황인종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중재재판조약은 모두 백인종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며, 혹 일본이 중대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의 유일한 법정투쟁은 결국 전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日本外交文書(이하 日外), 第44卷, 1911년 1월 17일, 小村외무대신이 영국주재 加藤대사에게 보낸 전보, pp.333~34; 黒羽 茂, p.207.

13) 日外, 第44卷, 1911년 4월 6일, 小村외무대신이 영국주재 加藤대사에게 보낸 전보, pp.341~335.

14) 日外, 第44卷, 1911년 3월 31일, 영국주재 加藤대사가 小村외무대신에게 상신한 전보, p.340.

15) Wood, p.129.

영일 양국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동맹이 지속되려면, 미일 무장 갈등의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다.¹⁶⁾ 영국은 미일 전쟁 시에 일본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전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¹⁷⁾ 이 때문에 영일동맹의 적용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미국을 배제시킨 제4조(제3국과 중재조약을 체결한 계약국은 그 열강과 전쟁에 연루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다)가 영일동맹 갱신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¹⁸⁾

영국외교문서에 따르면, ‘영일동맹은 한국 병합 이후의 상황 변화 즉, 동맹 제3조(한국병합 조항)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¹⁹⁾ 그러나 그레이외상과 가토 타카아키(加藤高明) 주영대사 사이에 체결된 제3차 영일동맹(1911.7.13)²⁰⁾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병합되었고, 영국은 일본의 한국 병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accept) 때문이다.²¹⁾

한국 병합에 관한 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일동맹 연구가인 구로바네 시게루(黒羽茂)는 ‘영국은 영일동맹을 존속시키기 위해 만주에서 자국의 폴링회사의 법고문철도의 부설을 허가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일본의 최대관심사였던 한국 병합에 대해서는

16) F.O. 371/925, 35403/35403/10/23, BD, No.405, No.407, Sir Edward Grey to Sir C.MacDonald, pp.503~05.

17) F.O.12605/1827/11/23, BD, Vol.VIII, No.417, Sir C. MacDonald to Sir Edward Grey, April. 5, 1911, p.512.

18) Ge-Zay Woo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nglo-Japanese Alliance*(New York: Fleming H.Revell Company, 1921), p.71.

19) F.O.371/878/31016/988/10/12, BD, Vol.VIII, No.402, Sir Edward Grey to MacDonald, August 25, 1910, pp.500~501 ;No.407, Grey to MacDonald, June, 20,1911, pp.504~05.

20) 日外, 第44卷, 영국주재 加藤 대사가 小村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 1911년 7월 13일, pp.377~80; F.O.28077/1827/11/23, BD, Vol.VIII, No.435, Sir Edward Grey to Mr.Rumbold, July 13, 1911, pp.531~533.

21) F.O.371/877/27519/988/10/12, BD, Vol.VIII, No.399, Sir Edward Grey to Sir C.MaDonald, August 5, 1910, pp.497~98.

늘 호의적이었다²²⁾고 평하였다. 그러나 영국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병합 직전까지 영국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영국은 오히려 계속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일본의 한국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한국에서의 일본의 지위 강화와 공고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경제적인 이유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세 적용은 상당한 반감을 야기하게 될 것’²³⁾이라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미국 및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처럼 항의할 것’이라며, 치외법권의 측면에서 일본의 한국 병합문제를 숙고해 본 적이 없다²⁴⁾며 계속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은 한국에서의 기존 관세가 조약에 의해 지지될 것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일본은 향후 10년간 한국에서의 관세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²⁵⁾ 한국 병합에 대한 영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일본이 동맹을 갱신하려 한 최대 목적은, 중국에서의 분규 시에 일본의 대륙정책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⁶⁾ 그러나 중국에 관한 한, 1911년의 영일동맹 조약은 아무 것도 변화시킨 것이 없었다.²⁷⁾ 일본의 “특수이익”은 남만주에 있다고 동맹조약에서 규정했지만, 일본의 요구를 지지해 줄 만한 문서적 증거를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미 중국공사가 영일동맹을 ‘동아시아에서의 이해를 보호하려는 영일의 호전적인 조치(a warlike measure)’²⁸⁾라고 비난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영일동맹 갱신에 결사반대했다.

22) 黒羽 茂, p.204.

23) BD, Vol.VIII, No.392, Sir Edward Grey to Sir C.MacDonald, July 14, 1910, p.489.

24) BD, Vol.VIII, No.392, pp.489~490; No.399. Sir Edward Grey to Sir C.MacDonald, p.498.

25) Peter Lowe, *Britain in the Far East*(Longman, London and New York, 1981), p.83.

26) 角田順, 『滿洲問題と國防方針』(原書防, 1967), pp.622~29.

27) Chung-Fu, Chang, *The Anglo-Japanese Alliance*(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31), p.223.

28) Wood, p.93.

그에 따르면, 영일동맹은 (1)중국의 동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협약에서 중국을 언급했고 (2)중국의 영토적 존엄성을 위반하여 영일동맹의 축 아래 두었고 (3)영일 모두 가맹한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과 영일동맹의 양립이 불가하며 (4)중국의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5)영일동맹의 지속은 중국에서의 일본의 우위와 지배를 지속시키는 것이며 (6)궁극적으로 영일동맹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유지가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²⁹⁾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관영통신 노보예 브레냐(Novoe Vremya)는 제3차 영일 동맹 갱신으로 달라진 두 가지 점을 정확하게 평가했다. 첫째, 영국은 미국과 일반중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타 열강과의 전쟁 시에 일본을 지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일본은 더 이상 인도 서북부 국경에서의 분규 시에 영국에 무장 지원하지 않아도 되었다.³⁰⁾ 그러나 동맹 제1조에 의거, 만일 적의가 인도북서부가 아닌, 동아시아로 확산되어 홍콩이나 위해위(威海衛)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영국은 일본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³¹⁾ 실제로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인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이해에 관한 자국의 근심을 덜었던 것이 사실이다. 1911년의 영일동맹은 일본에게는 아시아대륙에서의 일본의 공격적인 정책을 지원한 셈이었고, 타 열강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계획을 개시하려는 일본 군부를 고무시킨 것이었다.³²⁾

그렇다면 러일 비밀협약은 과연 영일동맹의 배반일까 영일동맹의 확대였을까. 아니면, 러시아의 저명한 언론가의 언급처럼, 영일동맹은 일본이 한국 병합의 목적을 이룬 이상, 동맹 본래의 취지가 사실상 크게

29) Wood, p.114.

30) BD. Vol.VIII, No.440, Sir G. Buchanan to Sir Edward Grey, St.Petersburg, July 18, 1911, p.535.

31) BD, Vol. XI, Sir Edward Grey to Sir C.Green (Tokio), August 3, p.298; Chang, p.175.

32) Chang, p.199.

퇴색된 동맹 또는 사실상 사문화된 동맹이었는가.³³⁾ 1912년 러일 비밀협약은 제3차 영일동맹의 보완이자, 남만주 병합 및 한국의 식민정책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 중에는 21개조안(1915.5.7)을 중국에 강요할 명분을 주었다. 일본이 중국에 21개조안을 강요하는데 대해 러시아는 침묵했다.³⁴⁾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영국 및 일본과의 사전 이해를 근간으로’ 북만주와 몽골에서 세력권 확장을 실행하고자 했다(물론 영국도 이에 못지않게 티벳에서의 몫을 쟁겼다). 결국 러일협약은 영일동맹의 배반 또는 사실상 사문화된 동맹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동맹의 확대의 기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직후, 러시아는 북만주와 외몽골 병합을, 일본은 남만주와 몽골 동부 병합을 고려했고, 러일 비밀협약은 결국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러시아는 영일동맹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외몽골 및 내몽골에 대한 팽창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러일 비밀협약의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체결과정과 내용도 사전에 영국과 프랑스에 통보되었던 점에서³⁵⁾ 러일 비밀협약은 영일동맹 및 러불동맹과 상호 관련을 가진 다면적이고 이중적인 것이었다.

33) E.J.Dillon, New China and the Re-Grouping of the Powers, *Contemporary Review*, Jan. 1, 1912, p.728.

34) Ken Shen Weigh, *Russo-Chinese Diplomacy*(The Commercial Press, Limited, Shanghai, 1928), p.165.

35) Sazonov to the Russian Ambassador in London, Telegram, June 19-July 2, 1912, No.1233, Benno Aleksandrovich de Siebert and George Abel Schreiner,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p.39; 日外, 第45卷 (1913), pp.86~90.

3. 러일협약 체결과 러몽조약

원문이 붙어인 제3차 러일 비밀협약(1912.7.8)의 전문과 3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러시아 제국 정부와 일본 제국정부는 1907년 7월 30일 협약과 1910년 7월 4일 협약에서 체결된 비밀협약 조항을 명확하게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만주와 몽골리아에서의 양국의 특수 이익에 관한 모든 오해를 피하기 위해, 1907년 협정에서 추가 조항으로 확정된 경계선을 연장하고, 내몽골에서의 특수이익권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굵은 글씨-필자)

제1조. 경계는 내몽골과 외몽골 사이 국경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내몽골과 흑룡강 성 사이의 국경선을 따른다.

제2조. 내몽골은 북경 자오선(116.27도)의 동서로 나눈다. 러시아는 일본의 내몽골 동부에서의 권리 인정하고, 일본은 내몽골 서부에서의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 협약은 극비에 부친다.³⁶⁾

사조노프(Serge Sazonov) 외상과 모토노(本野一郎) 주러 일본 대사는 1912년 7월 8일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1907년의 비밀조약에서 경계 지었던 몽골국경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비밀협약의 주목적은, 1907년, 1910년 협약에서 체결된 비밀협약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1907년 협정의 추가조항에서 확정된 경계선을 연장하며, 나아가 내몽골에서의 러일 두 나라의 특수이익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 비밀협약으로 양국은 만주를 남북으로 나누고 북서쪽으로 분계선을

36) Price, pp.117~20; Benno Aleksandrovich de Siebert and George Abel Schreiner, pp.17~40; 日外. 第45卷(1913), pp.91~92.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몽골에서의 세력권 분할을 단행하여, 만몽에서의 러일 간의 오해의 원인을 제거했다. 협약 문안에서 외몽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제2조에서 러시아가 내몽골 서부의 권리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즉 외몽골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뜻이 된다. 사조노프 외상은 이 비밀 협약을 통해 러시아에 보다 유리하게 몽골에서의 이익을 구분하는데 마침내 성공한 셈이다.³⁷⁾

러시아는 사실상 19세기 내내 광물자원의 보고인 외몽골(현 몽골)을 주로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병합을 고려해왔다.³⁸⁾ 1850년대에 아무르를 획득한 무라비요프(N.N.Muraviev)시베리아총독은 몽골을 러시아 무역에 개방시킨 뒤, 중국에서의 혼란(태평천국난-필자)을 이용하여 몽골을 보호령으로 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1854).³⁹⁾ 그 뒤 러중북경조약(1860.11.14)으로 몽골에서의 직교역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도 우르가(Urga)에 첫 영사관을 개설(1861)한 러시아는, 러중 육로통상장정(1862)을 통해 외몽골에서 무관세 무역권을 획득했다.⁴⁰⁾ 이어 러시아는 중국과의 이리분쟁을 해결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조약(1881)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1890년대에 위페(Sergei Yu. Witte) 재무상은 몽골까지 독점적인 철도를 부설하여 러시아와의 통합을 진흥시키고자 했다.⁴¹⁾

러시아가 몽골로 팽창하려 한데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전략적 요인도 작용했다. 외몽골과 내몽골은 지리적으로는 고비사막으로 구분되는데, 칭기즈칸 사후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지배해 원나라를

37) Berton(2011), pp.6, 96.

38) A.L.Попов, Царская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 в 1913~1914гг. cc.7~9, Paine, p.288.

39) Sharad K. Soni, *Mongolia-Russia Relations*(SHIPRA, 2002), p.25.

40) 위의 책, p.26.

41) 이는 러시아화한 부리야트 몽골인 바드마예프(Petr A.Badmaev)의 ‘러시아에 의한 몽골과 티벳 병합안(1893.2)’에 영향받은 것이었다. 석화정, 「위페의 동청철도 부설경위」, 『중소연구』, 제20권 제3호(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96), pp.178~79.

세웠다(1279~1368). 그러나 만주족이 내몽골(1636)과, 북경(1644) 장악에 이어 점차 외몽골까지 정복해나간 1691년 이래로, 외몽골은 1911년까지 200여 년 동안 만주족의 주권을 수용해왔다. 말하자면 외몽골은 19세기 말까지 독립적이었다지만, 사실상 중국의 조공체제하에서 국경을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에게 몽골은 전략적으로 볼 때 ‘믿음직한 완충국’이었다.⁴²⁾

러일전쟁 이전까지 몽골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교묘했다. 그것은 식민화를 자제하고 광활한 몽골 지역을 무주지(no man's land)로 방치해둠으로써 전략적 진공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방임정책이었다. 당시 외몽골 남성 성인의 45%, 내몽골 남성의 35~65%가 승려직에 있었으며, 차남은 무조건 사원으로 보내야 했으므로 몽골의 인구는 눈에 띄게 격감하고 있었다.⁴³⁾ 사원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면제받는 등 중국 행정의 부패가 만연했다. 그러므로 단일종족의 사회가 아닌,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행정체계가 뒤섞인 몽골에서는 주기적으로 반청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1861, 1864, 1870, 1890, 1901)

러시아, 몽골, 중국관계에 변화가 오게 된 분수령은 러일전쟁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외몽골을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 모두가 변화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특수철도이권과 경제적 침투에 관한 한, 만주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전후에는 몽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⁴⁴⁾ 러일전쟁 이후 외몽골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힘의 진공상태를 메우려는 러·중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⁴⁵⁾

중국의 방임적 태도에 가시적 변화가 온 것은 1907년 이후였다. 몽골의

42) Кушеле Ю., Отчет о поездке в Монголию с военно-нучной целью,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Азии*, СПб, с.287, Кузьмин, Ю.В.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Иркутск, 2002), СС.24~25, 34.

43) Dillon, p.583.

44) Soni(2002), p.26.

45) Soni(2002), p.27.

행정체계를 중국 본토의 행정구역인 성(省)으로 편입시키고, 몽골지방에 대한 한족의 식민화를 고무시키는 이중정책이 그것이다. 한족에 의한 식민화와 행정 개혁정책은 중국이 만주와 몽골 모두에서 사용한 방법이었지만, 만주와는 달리 몽골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즉 한족에 의한 식민화정책은 러시아의 몽골로의 팽창을 막기는커녕, 몽골이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보호를 구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의 외몽골에 대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단호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칼간 - 우르가철도 부설 계획과 상공은행 개설계획으로 상징되는 ‘새 정책’이 그것이다.⁴⁶⁾ 이미 북경에 ‘몽골리아식민국’을 설립(1906)했던 중국은, 우르가에 내몽골 식민화를 촉진시키는 식민국을 설립했다(1911).⁴⁷⁾ 청 제국 붕괴 직전에 중국 정부는 내몽골과 외몽골이 공식적으로 중국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1911.7). 당시 몽골의 소규모 토착귀족들이 우르가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도 중국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다.⁴⁸⁾

그러나 중국의 신정책은 거꾸로 외몽골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폭 증가시켰고, 중국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꾀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과 행정 변화에 직면한 몽골인들은 러시아가 두 개의 악 가운데 덜 해로운 악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다. 옥죄어드는 중국의 장악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몽골은 러시아를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립과정에서 몽골의 군사적 취약성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켰다. 몽골인들에게 대외정책의 우선적

46) Soni(2002), pp.28~29; Peter S.H.Tang, Philip E.Mosely, *Russian and Soviet Policy in Manchuria and Outer Mongolia 1911~1931*(Duke University Press, 1959), p.295; Soni, *Mongolia-China Relations*(Pentagon Press, 2006), pp.30~31.

47) Soni(2002), p.31.

48) Thomas E.Ewing, *Ching Policies in Outer Mongolia, 1900~1911*(Modern Asian Studies, vol.14, no.1980, p.157; Soni(2002), p.33.

문제가 러시아와의 연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 점에서 몽골의 대러시아 태도는 구한말 한국이 청으로부터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했던 사실과 상당히 흡사하다)

짜르에게 몽골의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서한(1911.7.17일자)을 지닌 몽골사절단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1911.8.2/14)⁴⁹⁾ 러시아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동아시아 팽창론자 옥톰스키공(Prince Esper Ukhtomsky)과 코코프초프(Vladimir Nikolaevich Kokovtsov) 재무상은 스톨리핀(Pyotr Arkadyevich Stolypin) 수상에게 그들을 맞이하도록 설득했다.⁵⁰⁾ 한토 진완(Hanto Chin-Wan) 공을 대표단으로 한 몽골 사절단은 중국의 침투를 저지해 줄 러시아의 거중조정(good offices)을 기대하였다.⁵¹⁾ 이에 러시아는 몽골독립문제에 관한 특별각료회의에서 ‘전통적인 몽골인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도록 몽골에서 중국의 ‘새 정책’ 이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⁵²⁾ 외무성사무국장이자 외상대리 네라토프(Anatoli Anatol'evich Neratov)는 짜르의 승인(1911. 8. 6/18)을 거쳐 주중공사 코로스토베츠(Ivan Iakovlevich Korostovets)를 통해 이 방침을 중국 외상에게 통보했다.⁵³⁾

이 시기까지도 러시아의 정책은 중국과 몽골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국의

49) Robert A. Rupen, *Haw Mongolia is Really Ruled*(Hoover Institution Press, 1979), pp.60~61; G.D.R.Phillips, *Russia, Japan and Mongolia*(London Frederick Muller Ltd.,1942), p.21;Soni(2006), p.33.

50) Rupen, p.6.

51) Weigh, p.156.

52) Tang, no.7, p.297;Soni(2002), p.33.

53) ‘이민, 군대 훈련, 행정 개혁에 관한 몽골에서의 중국의 정책이 몽골을 침해할 경우, 몽골인들이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우려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한족 식민주의자들을 이주시켜 칼카(외몽골)를 중국의 한 성으로 바꾸고, 중국 정규군이 몽골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면, 러시아에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Tang, p.297; Soni(2002), pp.30~31. Soni(2006), pp.33~34.

세력권 확대를 꾸준히 모색하면서도, 가능하면 외몽골에서의 독점적인,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신중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와중에서 신해혁명의 발발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1911년 10월 초 중국에서의 소요가 점증하자, 러시아는 우르가에서의 중국 영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몽골에 군대를 파견하였다.⁵⁴⁾ 외상대리 네라토프가 짜르에게 보고 (1911.11.18)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의 정치적 붕괴를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몽골에 자국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했다.

“우리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청제국 붕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강화하고 해결하는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 같은 상황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관심이 현재 중국 본토와 만리장성 이북 지역을 통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⁵⁵⁾

한편, 몽골은 신해혁명을 계기로 어떻게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외몽골은 중국 통감을 몰아내고 자치를 선언하며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했다. 몽골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지원’과 ‘보호’를 원했지만, 러시아는 몽골을 보호령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1912년 러일 비밀협약 이후 외몽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외몽골에 대한 보호권 수립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보호권 수립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러시아는 외몽골의 ‘자치’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책을 다시 전환했다.

신해혁명 직후 새 몽골정부는 “몽골리아제국(the Empire of Mongolia)”의 이름으로 중국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다

54) Tang, no.7, p.298; Soni(2002), pp.30~31.Soni(2006), p.34.

55) ‘Всепоподанней шая записка упр. мин. ин. дел’, “Китайская революция 1911 года” 78~79, Paine, p.289.

(1911.12.29).⁵⁶⁾ 이른바 몽골에서 ‘1911년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독립선언은 몽골이 더 이상 거의 220년간 내려왔던 중국의 일부가 아님을 천명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같은 날, 후툽투(Khutukhtu)가 라마교회와 국가의 수장으로서 몽골리아황제에 즉위했다. 몽골은 5개의 행정기관으로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이흐 후레’(현 울란바타르)를 수도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대는 우르가에 있는 황실을 호위하고 중국 관리를 축출하며 새 몽골정부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처음부터 개입했다. 러시아는 정부 수립을 돕는 한편, 11명의 군사교관을 파견하여(1912.3) 몽골군 창설을 즉각적으로 도왔다.⁵⁷⁾ 사조노프 외상은 몽골이 러시아에게 독립 선포에 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점차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사조노프 외상은 1912년 4월 26(13)일 국가두마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과 칼카(외몽골) 사이의 협약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발적 행정을 확립하는데 칼카가 우리의 지원과 협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과 병력 지원은 몽골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⁵⁸⁾

사조노프의 언급에 따르면, 칼카(외몽골)에서의 러시아의 정책 목표는 ‘이 국경 지역에 강력한 군사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세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1)칼카(외몽골)에서의 몽골인 행정 유지 (2)그 곳에서의 중국 군대의 군사작전 방지 (3)중국인에 의한 몽골 영토 식민화 배제가 그것이다. 사조노프는 중국과

56) Soni(2002), p.32; Soni(2006), pp.35~36.

57) 러시아는 1913년 초에 200만 루블을 몽골 군대에 제공하는 동시에 17명의 장교와 42명의 하사관들을 파견하였다. 차관의 1/4은 러시아 교관하에 몽골의 군대 수립에 쓰고, 나머지는 몽골 정부 조직과 무기 구입에 쓰도록 했다(Benno Aleksandrovich de Siebert and George Abel Schreiner, p.40; Paine, p.290).

58) С.Д.Сазонов, “Речьъ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хъ Дел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 венный Думы 13 апреля 1912 года”, сс.82~83, Paine, p.287.

몽골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외몽골 자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외몽골을 궁극적으로 자국의 방어체제의 일부로서 하나의 완충지대로 변형시키고자 했던 러시아는 몽골리아와 중국 사이의 분쟁의 중재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몽골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은밀하게 개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외몽골의 완전 독립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몽골의 독립을 후원하기보다는, 몇몇 고문관과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몽골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의 기초는 러일 비밀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과의 비밀협약 이후 러시아의 몽골정책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실현되었음을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 대통령은 처음에는 설득(persuasion)으로, 그 다음에는 친밀함(intimidation)으로, 마지막으로 ‘회유(seduction)’로 외몽골을 중국의 한 성으로 되돌리고자 했다.⁵⁹⁾ 이 모든 것이 실패하자, 그는 독립을 주장하는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몽골이 중국의 일부라고 선언하는 칙령을 선포했다(1912.8.19). 중국이 외몽골 정규군의 내몽골 침략에 대해 러시아에 항의하자, 러시아는 몽골 정규군이 아니라 비적떼라고 반박했다.⁶⁰⁾

러일협약 직후 러시아의 몽골정책은 몽골에 자치권을 주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코코프초프 재무상이 우르가를 방문하고(1912.8.23)⁶¹⁾ 일주일 뒤에 사조노프 외상이 우르가의 러시아 총영사에게, “몽골 각료들은 러시아가 제공한 러시아 라이플 소총으로(중국에

59) Thomas E.Ewing, Russia, China, and Origins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1911~1921: A Reappraisal,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July 1, 1980, Vol.58, No.3, p.405.

60) S.C.M.Paine, *Imperial Rivals-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New York: M.E.Sharpe, 1996), p.291.

61) Rupen, p.110.

저항하기 위한 것이지-필자) 내몽골 무장에 쓸 수 없으며……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외몽골(칼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몽골인들이 우리의 지원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⁶²⁾ (8.31)임을 환기시킨 것이다. 러일협약 체결의 파문이 즉각 러시아의 정책에 반영된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도 몽골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분리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분리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대몽골 정책에 동의하였다.⁶³⁾ 물론 이는 러시아가 내몽골 동부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인정한 대가로서였다.

러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몽골 독립과 관련하여 러시아에게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 첫째,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의 통합을 주장하지만, 이는 내몽골에서의 일본의 세력권을 손상시킬 수 있었다. 내몽골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비밀 협약 과정을 감안해 볼 때, 러시아는 몽골리아를 통합시키려는 몽골의 요구를 지지할 입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를 지연시켜야 했다. 둘째, 몽골이 독립하려면, 타 열강이 그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 시도가 있어야 했다.⁶⁴⁾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 선진국들과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는 없으므로, 직접적인 군사 개입도 아니고 열강의 많은 관심을 받아서도 안 되며 외몽골에서의 현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는 정책을 따랐다. 결국 러시아 정책의 두 가지 딜레마가, 필요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러몽조약(1912.11.3(10.21)⁶⁵⁾이 그 단적인 예이다. 러일협약의 실질적 결실이라 할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몽골의 독립을 기정사실화하며 노골적으로 자국의 의도를 드러냈다.

62) Benno Aleksandrovich de Siebert and George Abel Schreiner, p.40.

63) Soni(2002), p.34.

64) Paine, p.292.

65) MacMurry, II, 992; British Parliamentary Papers, Cd.6604;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no.4(Oct., 1916), 239~241; 日外. 第45卷 第二冊, pp.740~741.

‘외몽골에서의 러시아의 적극 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던’⁶⁶⁾ 러시아 전권대표이자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1907~1914)는 우르가에서 러몽조약을 체결했다. 전문과 3개조로 이루어진 러몽 조약의 전문은 우선 “몽골리아와 중국 사이의 오랜 관계”를 종식시킨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러시아는 외몽골 내몽골을 구분하지 않고, “몽골리아”로 표기했다. 몽골의 영토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⁶⁷⁾ 그러므로 러시아 제국정부는 중국 군대의 유입과 중국인에 의한 몽골 식민화를 막기 위해, 몽골의 자치(autonomy)를 보전하고, 몽골리아 군대의 유지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했다(제1조). 러시아가 구상하는 몽골의 범주에서 몽골리아가 탄생한 것이다. 즉 조약은 몽골리아의 자치(autonomy)권에 대한 러시아의 보호를 언급하였으나, 특정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갈등 시에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 대한 확고한 보장은 명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몽골]의 범주를 결정할 근거는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다고 협정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에서의 러시아의 상업적 특권을 강조한(2조) 독점 조항과 함께 러시아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몽골이 중국과 교섭하는 것을 봉쇄했다.(3조)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부가의정서(Protocol Annexed to Russo-Mongolian Agreement) 17개조⁶⁸⁾를 통해 무관세 교역권과 토지 매입 및 건물건축 허가권, 항행 및 교량 건축권, 전신망 등 광범한 상업적 특권을 확보하였다. 러시아가 이후 육로를 폐쇄하며 몽골에 대한 중국 수출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러몽조약은 러시아가

66) Rupen, p.5.

67) Soni(2002), p.50.

68)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no.4(Oct., 1916), pp.241~246; Phillips, p.23; Tennyson Tan, *Political Status of Mongolia*(Shanghai The Mercury Press, 1932), p.49; MacMurray, vol.2, 992-6; 일본은 러몽조약에서 러시아가 몽골에게 어떤 보장(garantie)을 해주는지, 러일협약과 배치되는지, 러몽조약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日外. 第45卷 第二冊, pp.731~36)

유일한 몽골 자치의 보장국이므로 〈사실상 de facto〉 그 지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 레닌은 러몽조약을 러시아황제의 부드러운 포용〈нежным обниманием〉⁶⁹⁾이었다고 규정했지만, 실상은 분명 몽골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러시아가 빼앗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러몽조약은 중국으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포함, 완전 독립 또는 범몽골리아를 지향했던 몽골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몽골인들은 [몽골리아]와 자치(autonomy)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으며, 몽골 텍스트에서는 ‘몽골국(МОНГОЛ УЛС)’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즉 독립의 의미로 해석했다.⁷⁰⁾ 우르가의 자치정부는 내몽골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그 계획마저 봉쇄했다.⁷¹⁾ 러몽조약에 실망한 몽골은 1912~14년에 러시아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북경 주재 서방 외교가와 접촉하거나, 티벳과 상호 독립 인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1912. 12. 24)⁷²⁾,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⁷³⁾

몽골로서는 전 몽골의 통합에 대해 러시아가 지지를 거부한 것이 불만족스러웠지만, 지리적 특성, 희박한 인구, 가난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 당시 사조노프 외상은 자국의 지원 없이는 몽골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⁷⁴⁾ 결국 몽골인들은 전 몽골을 중국의

69) В.И.Ленин, *Обновленный Китай* Т.22, с.189,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1983), с.242.

70) 러시아의 저명한 법률가 마르텐스(Fedor Fedorovich Martens)는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 내에서 자치 지역이라며 자치와 주권이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梶誠, “ボグド=ハーン政權の第12次遣露使節と帝政ロシア” 『史觀』 154 (早稻田大學史學會, 2006.3), p.37.

71) Fedor Fedorovich Martens, *Лекции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праву*, Paine, p.294.

72) Ken, pp.171~72.

73) Ewing(1980), p.404.

74) Paine, p.293.

한 성으로 급속하게 전환시키기보다는 러시아의 보호 하에 외몽골 자치를 결정했다. 이로써 몽골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몽골인들은 이제 중국 상인들이 아니라 러시아 상인들에 의존하게 된 것 이외에 자신들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⁷⁵⁾

독립된 몽골리아는 경제 금융 면에서 더 러시아에 의해 좌우되었다. 독립선언 이후 러시아는 첫 차관으로 200만 루블을 제공했는데 이는 몽골의 광산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⁷⁶⁾ 짜르는 외몽골군대가 내몽골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인들에 의한 몽골군 조직을 허용한다면, 추가 차관과 무기 제공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다. 러시아가 몽골사절단을 받아들인 것은 몽골문제에 관한 교섭에 중국이 응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⁷⁷⁾ 외몽골은 1913년 말에 가서야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러시아는 차관을 3백만 루블로 확대시켰다.(1914.1)

몽골은 자국의 지위를 놓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의견이 대립했다. 몽골은 완전한 독립을 희구했으며, 외몽골뿐만 아니라, 내몽골까지 포함한 범 몽골주의에 입각한 독립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러몽 조약을 인정하길 거부했고, 러시아 역시 자국이 제외된 별도의 중국-몽골 협약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러몽 조약에 대한 중국내 반발은 심했다. 중국 전역에서 외몽골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시위가 있었고, 반러시아 보이콧이 베이징과 칭따오 등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정부를 공격하는 글이 신문에 게재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몽조약을 중국에 비우호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어떻게 해서든 외몽골에 대한 명확한 주권 설정에 관한 언급을 넣고자 했다.⁷⁸⁾ 러시아 역시 중국의 참여 없이는 중국적으로 몽골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러몽조약 체결

75) Phillips, p.24.

76) Ken, p.159.

77) 様誠, pp.42~54.

78) 日外. 第45卷 第二冊, pp.762~65.

직후 곧바로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1912.11.30~1913.5.20)된 것도 이 때문이다.⁷⁹⁾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던 1913년 초에 사조노프가 두마에서 한 연설에 따르면, 러몽조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몽골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대 중국정책 역시 자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었다. 사조노프 외상이 표현한 바와 같이, ‘외몽골의 자치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제국정부의 결정에는, 몽골을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첫째, 몽골리아는 중국 영토의 일부로서 인정되어야 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몽골리아의 전통적인 유대를 붕괴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둘째, 중국은 외몽골의 자치를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몽골인들에게 자국 영토의 방위와 질서 유지의 책임, 군정 조직의 유지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는 영사관 병력을 제외하고 외몽골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넷째, 러시아의 대몽골 거중조정권 유지, 다섯째, 러몽조약에서 체결된 외몽골 내 러시아인들의 상업적 우위를 부여한다는데 중국정부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⁸⁰⁾

중국의 위안스카이 정부는 처음엔 러시아의 협상 제의를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듭된 제의 끝에 두 나라는 북경에서 러중 공동선언(Declaration and Exchange of Notes by Russia and China, 1913.11.5/10.23)을 발표했다.⁸¹⁾ 몽골은 배제한 채,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 크루펜스키(B.Krupensky)와 중국외상 쑨 빠오치(Sun Pao-chi, 孫寶琦)가 이루어낸 야합이었다. 러중 공동선언은, 외몽골(Outer Mongolia)의 자치와 동시에 외몽골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외몽골이 중국의 ‘종주권(suzerainty)’하에 있음을 인정하고(제1조), 중국은 외몽골의 ‘자치(autonomy)’를 인정한다

79) 様誠, p.41.

80) Ken, pp.177~178.

81) MacMurray, vol.2, 1066~67; Tennysan Tan, Political Status of mongolia (Shanghai:The Mercury Press, 1932), p.51.

(제2조)고 선언했었다.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중국의 종주권 하에서의 ‘자치’ 보장이었다.⁸²⁾ 중국은 몽골의 독자적인 내정과 상공업, 군대를 인정하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몽골리아에 식민화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거나 교관을 파견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제3조). 중국은 러몽조약에 부응하여 외몽골과 러시아 사이에서 수립된 러시아의 거중조정(good offices)을 인정하였다.(제4조)

그렇다면, 외몽골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이 공동선언은 과연 중국의 외교적 승리였을까. 중국측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었다. 중국측 교섭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몽골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기를 원했으며, 몽골 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은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섭권을 갖기를 바랐다. 그러나 중국은 외몽골이 중국의 일부로 유지되는 것과, 러시아의 군대, 식민주의자들 및 행정관을 추가로 몽골리아에 파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관철된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⁸³⁾

4. 제1차 세계대전과 카흐타 삼국(러·중·몽)조약

최초로 러일협약 연구를 집대성한 프라이스마저도, 러시아의 동아시아에서의 이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슨 계획이 되었건 무한정 연기된 것으로 평가하였다.⁸⁴⁾ 그러나 몽골정책에 관한 한, 대전 중의 카흐타삼국조약을 통해 러시아의 정책은 더욱 확고해졌다. 유럽 전선에 집중해 있던 러시아에게 대전은 오히려 중소국경문제의

82) Translated for the *China Year Book*, 1914, pp.633~65;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no.4(Oct., 1916), pp.246~49.

83) Paine, pp.295~96.

84) Price, pp.76~77.

평화와 카흐타삼국조약 체결을 더욱 시급한 문제로 만들어 주었다.

러시아는 러몽조약의 여세를 몰아 몽골에서의 자국의 상업적 특권을 중국이 인정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대전 중에 러시아는 러몽철도협정(1914.9.30/17)⁸⁵⁾을 비밀리에 카흐타에서 체결하여, 러시아국경과 몽골과의 연결 철도를 부설하게 되었다. 중국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조약의 사본을 요구했을 때, 러시아측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체결된 기정사실(fait accompli)’이라며 발뺌하며 사본도 내놓지 않았다.⁸⁶⁾ 이 같은 러시아의 몽골 팽창 방식은, 만주를 관통하는 시베리아 철도(일명 동청철도, 현 중동철도)를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부설한 뒤, 그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정규군을 활용하여 만주 전체를 장악하여 러일 전쟁 발발을 자극했던 선례와 흡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동청철도에는 조차기간을 정해놓았던데 반해, 몽골내의 철도 구간에 관한 한, 몽골의 영속적인 통제권(perpetual rights)을 러시아가 인정했다(제1조)는 점이였다.⁸⁷⁾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몽골과 체결한 모든 조약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5년 6월에 몽골리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에 관한 카흐타 삼국조약(몽골리아, 러시아, 중국, 1914.9.9~1915.6.7(5.25))으로 공식 인정되었다.⁸⁸⁾ 카흐타 삼국조약은 이후 러·중·몽 삼국 관계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1917년 볼셰비키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유지되었다.⁸⁹⁾

카흐타 삼국조약에서 외몽골은 중국의 종주권(suzerainty)을 인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외몽골의 자치(autonomy)를 인정하였다(제2조).⁹⁰⁾

85) MacMurray, vol.2, 1178~79;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no.4(Oct., 1916), pp.249~50.

86) 러몽철도협정 제4조에 따라 양측은 조약의 밀봉한 사본 1부를 몽골리아 외무성에, 다른 한 부를 밀봉한 채 몽골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에 보관하기로 되어 있었다.

87) Попов, A.L. “Царская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 в 1913~1914 гг.”, 51, Paine, p.299.

88) MacMurray, vol.2, 1239~44; Phillips, p.24;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no.4(Oct., 1916), pp.251~58.

89) 중국은 러시아혁명이라는 러시아 내의 동요를 틈타 몽골의 자치를 몽골인들이 ‘자발적으로’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Weigh, no.43, pp.183~84).

90) Soni(2002), p.36.

전문과 22개조에 달하는 조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은, 제3조 즉 자치 몽골리아(Autonomous Mongolia)는 정치나 영토문제에 관해 열강과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 몽골은 상공업상의 모든 이권에 관한 국제조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제5조), 정치적, 영토적 권한에 관한 조약은 외국과 체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러중 선언에서 인정된 외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자치 몽골리아의 공식 경계는 향후 2년 이내로 중국, 러시아, 자치 몽골리아의 특별위원단이 획정하기로 하였다(제11조). 중국과 외몽골의 국경 획정에 러시아 대표단이 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러중 선언 이후 내몽골은 이미 지역 자치권을 상실하고, 세 특별구로 분할된 채 중국에 통합되었다.

외몽골은 카흐타조약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치라는 명분하에 중국의 종주권과 러시아의 보호령이라는 이중의 속박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몽골의 통합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내몽골과 외몽골로 완전히 나뉘어졌다. 외몽골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카흐타조약은 중국과 분리된 영토로서의 현 몽골리아(외몽골)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결국 세 나라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몽골측은 어쩔 수 없이 외몽골만을 중국 영역 안의 자치국가가 되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카흐타조약의 중요회담에서 번번히 제외되곤 했던 몽골은 회의 자체를 거부하려 했으나, 몽골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간에 중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러시아의 위협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⁹¹⁾ 일본으로부터 ‘21개조안’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중국으로서는 카흐타조약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몽골리아의 독립 선언을 무효화시키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중국의 성장(省長, Governor-General)은 폐지되고 영사직으로 대체되었다. 반면, 러중

91) Paine, pp.288~89.

선언보다 앞선 러몽조약이 카흐타조약에서 재확인되지 않았던 점은 분명 러시아로서는 카흐타조약에서 잃은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흐타조약의 실체는 몽골리아를 중국, 영국, 일본에 대한 완충국가로 삼으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실현된,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를 위한’ 조약이었다는데 있다.⁹²⁾ 러시아 재정고문이 광범한 경제적 권한을 가지게 되며, 몽골 국립은행, 특수철도 부설권, 전신권이 러시아에 양도되며, 러시아 상인들의 상업적 특권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⁹³⁾ 아직 열강 사이에서 영토도 확정되지 않은 몽골리아가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보호령으로 묵인 받은 것이다.⁹⁴⁾

이 점에서 몽골을 중국의 세력권에서 독립시켜 몽골리아로 만든 것은 러시아의 일관된 전략의 소산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에게는 성공적이었다. 한 러시아 외교관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는 어떠한 적의나, 영토 병합, 또는 국제적인 분규를 야기하지 않고 그 광대한 몽골 지역을 러시아의 정치와 상업에 문을 열게 해 주었다. 열강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이미 종결되었으며……우리는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⁹⁵⁾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는 결국 러일협약의 직접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결과였던 셈이다.

몽골 역사가 바아바(Baabar)가 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러시아의 정책은 몽골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중국에게는 몽골리아에 대한 중국의 법률적 주권을 인정해주는 더블 게임이었다.”⁹⁶⁾ 이에 대해서는

92) Alicia Campi and R.Baasan, *The Impact of China and Russia on United States-Mongolian Political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The Edwin Mellen Press, Lewiston*Queenston*Lampeter, 2009), pp.6~7; Tan, p.55.

93) Ewing(1980), pp.404~05.

94) Soni(2002), p.35; Violet Conolly, *Soviet Economic Policy in the East*(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p.95.

95) Paine, p.304.

96) Alicia Campi and R.Baasan, p.7.

러시아 사가들도 바야바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벨로프는 1911년에 독립을 선포했지만 1915년 카흐타조약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몽골이 추구한 독립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⁹⁷⁾고 평가했다. 마스니코프도, 몽골이 신해혁명을 계기로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러시아 세력권이 되었다고 하나, 카흐타조약으로 여전히 중국의 영역 안에 있음이 재확인 되었다고 보았다.⁹⁸⁾

몽골은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약화를 이용하여 중국과 화해를 추구했다.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몽골이 택한 생존방식이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 혁명의 정정 불안을 이용하여 몽골의 자치를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1918년 말에는 우르가에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며 카흐타조약을 축소시켰다.⁹⁹⁾ 1920 년대에 들어서며 내몽골문제를 포함한 몽골리아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의 치열한 각축전이 재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결국 외몽골은 1924년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하에 몽골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재선포하여, 사실상 러시아의 첫 위성국이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자리한 몽골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몽골의 독립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그리고 그 배후에 영국과 일본)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영국, 러시아, 일본, 중국 사이의 내부 거래(영일동맹, 러일협약, 러중조약)와 러몽협약이 동시에 전개된 것은 몽골에서의 중국의 주권을 잠식시켰다. 결과적으로 러일협약과

97) Е.А.Желов,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1911~1919 гг.)*, (Москва, 1999), с.6; С.Г.Лузянин,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 (Москва, 2000), сс.16~17.

98) В.С.Мясников,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XVII-XX вв.* (Москва, 1996) с.341; Лузянин,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 (Москва, 2000), с.18.

99) A. Lobanov-Rostovsky, *Russia and Mongolia*, *Slavonic Review*, January 1, 1926, p.518.

러중 협력은 몽골인의 완전독립과 주권을 부정했다. 몽골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강제 병합과 국가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러·중·일의 공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몽골은 열강의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 위에 생존할 수 있었던 셈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1912년 러일 비밀협약의 국제적 배경과 협약의 실질적 파급효과로서 러 몽조약과 카흐타 삼국(러·중·몽)조약으로 상징된 러시아의 외몽골 정책을 고찰해 보았다. 1912년 러일협약으로 러일관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러일 재전(再戰)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하며 러일동맹의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만주와 내몽골은 물론, 외몽골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사이의 행동의 연대가 뚜렷해졌다. 그리고 러일의 동북아 세력권 분할의 배후에는 영일동맹, 러불동맹이라는 19세기 말의 제국주의적 국제 질서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러일관계는 최고조에 달했고,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침탈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러일 비밀협약으로 동북아는 러일에 의해 실질적으로 분할되었다. 1910년 러일 공개협약에서는 만주에서의 〈현상〉 즉 각자의 세력권을 유지 옹호하기로 합의했지만, 비밀협약에서는 만주에서의 각자의 세력권 ‘그 이상의 진전(further development)’을 공고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¹⁰⁰⁾ 외몽골에서의 러시아의 ‘특수 이익’을 인정해 준 대가로,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러시아의 묵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1912년 러일협약은 만주와 외몽골에서 기존의 러일협약을 재확인하고, 내몽골에서의 두 나라의 〈특수이익〉을 양분하였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 러시아는 외몽골이

100) 石和靜, (2003)(2004)(2007).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함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다.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외몽골은 중국 통감을 몰아내고 자치를 선언하며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했다. 러시아는 외몽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외몽골에 대한 보호권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보호권 수립이 무산되자, 러시아는 외몽골의 ‘자치’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러시아는 몽골의 완전 독립과 국권을 부정하고, 외교권을 확보하는 보호령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사전 조정을 거치고 중국과는 타협함으로써 몽골의 취약한 군사력과 민족주의를 심각하게 조장하면서 몽골 통합을 저지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만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사조노프외상, 코로스토크 몽골 영사, 코코프 초프재무상은 러시아의 편견과 오만의 대명사로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의 몽골 팽창은 동아시아에서의 두 주요 열강, 즉 일본과 영국과 타협함으로써 가능했다. 일본의 한국 병합 이후 동북아에서의 세력권 분할이 더욱 심화된 것은 러시아가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와도 긴밀히 협력한 결과였다. 사조노프 외상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즈볼스키가 외상으로서 이룩해 놓은 영국 일본과의 협약이 러시아 외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하였다.¹⁰¹⁾ 이는 사조노프가 러일 양국 조약보다 영일동맹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데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이즈볼스키외상부터 사조노프외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외교가 삼국협상(러·불·영) 진영, 나아가 일본을 포함, 이른바 아시아에서의 사국협상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1912년 제3차 러일협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병합과 관련한 제1, 2차 러일협약에서의 비밀 거래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졌다. 제2차 러일협약 직후 한국 병합을 단행했던 일본은 ‘**한국 병합 시에 러시아에 약속했던 바를** 러시아가 이행할 시기가 왔다’¹⁰²⁾ 고 언급함으로써 러시아가 북만주와

101) S.D.Sazonov, *Fateful Years 1909~1916*(Ishii Press International, 1928), pp.21~22.

102) Sazonov to Russian Ambassador at Tokio, Telegram Nov., 27(Dec., 10), 1910,

몽골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도록 면죄부를 제공했다. 이는 1910년 제2차 러일협약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병합을 ‘묵인’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 결정적인 증거이다. 한국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는 1912년 러일 비밀협약이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몽골문제를 해결하려는 러시아에게 카흐타조약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여 몽골문제를 러시아를 위한 조약으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러일 비밀협약을 통해 러일 두 나라가 ‘21개조안’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중국에 들이민 셈이다. 대전 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하에 몽골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재선포한(1924) 몽골은 러시아의 첫 위성국으로서 20세기 말 러시아가 붕괴될 때까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남았다. 그리고 이 같은 러시아의 대몽골정책의 패턴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으로 만들었던 과정의 역사적 선풍이 되었다.¹⁰³⁾ 결국 내몽골과 외몽골의 분리 독립과 자치, 영토보전 문제에 관한 러일의 비밀 야합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결과의 근본적 토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림 1〉



〈그림 2〉



No.1742, Benno Aleksandrovich de Siebert and George Abel Schreiner, pp.27~28.

103) Zoltan Barany, Soviet Takeovers: The Role of Advisers in Mongolia in the 1920s and in Eastern Europe After World War II, *East European Quarterly*, XXVIII, No.4, January 1995, p.414.

〈그림 1〉 러일협약에 대한 중국의 항의

변발한 모습의 한 중국인이 〈러일협약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적은 무언가를 어깨에 걸친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버거워하는 거구의 중국인에 비해 러일 양국인의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대비된다. 러일협약이 중국의 이해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일본 언론이 풍자한 것이다. 〈二六新報〉 1910년 7월 25일자, 湯本豪一, 『諷刺漫畫で日本近代史がわかる本』(草思社, 2011), p.103.

〈그림 2〉 러시아의 노보예 브레먀 지는 1913년 10월 7(20)일자에서 접시 위에 몽골인의 다리 한 쪽을 잘라 올려놓고 그것을 포크로 먹으려 하는 중국을 비난하는 정치풍자화를 게재했다. 이 적의에 찬 이미지에는 몽골인을 잔혹하게 다루는 중국이 “몽골을 먹고 나서 유럽식으로 살려고 할 것”이라는 사진 설명이 달려 있다. 엽기적인 인육접시를 앞에 두고 곧 먹기라도 할 듯한 중국인이,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양복과 기괴한 모습으로 유럽식 삶을 지향한다고 힐난한 것이다. 몽골을 둘러싼 러중 양국의 각축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몽골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반중(反中) 풍자화를 관영통신에 게재하였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러일 비밀협약, 러일협약, 영일동맹, 영미중재조약, 몽골리아 (몽골, 외몽골), 러몽조약, 카흐타 삼국조약, 러중북경선언, 사조노프, 일본의 한국 병합, 삼국협상

<ABSTRACT>

The Russo-Japanese Secret Agreement and Russia's Policy toward Mongolia

Seok, Hua-jeong

The third secret treaty which Russia and Japan signed on July 8, 1912 maximized their imperial interests in East Asia, and precisely defined their boundaries in Mongolia compared to the previous Treaty of 1907. After the secret agreement with Japan, Russian government readily made Mongolia as a buffer area against China through Russo-Mongolian Treaty in 1912 and the Declaration and Exchange of Notes by Russia and China in 1913. 'Autonomous Mongolia' under the suzerainty of China was ratified in 1915 at the Tripartite Treaty of Kiakhta by Mongolia, Russia, and China. In reality, Russia had assumed that China would played a role in acting as the guarantor of Outer Mongolian autonomy. Inner Mongolia, however, lost its local autonomy forever. Mongolia might think that it cleverly was making use of China and Russia to advance its own interests, but it was evident that these two big power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ad their own agendas for holding their private negotiations on Mongolia's sovereignty. In short, the Russo-Japanese Secret Treaty and the Russo-Chinese cooperation as their outcome, served to deny Mongoli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s the pawn of imperialistic geopolitics, Mongolia had to bear the result of the Russian-Japanese-Chinese conspiracy and cooperation over it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try to barely survived on the edge of the balance of power.

Key words : Russo-Japanese Secret Agreement, Russo-Japanese Agreement (Convention), Anglo-Japanese Alliance, Anglo-American Arbitration, General Arbitration Treaty, Mongolia(Mongol, Outer Mongolia), Russian-Mongolian Treaty, Declaration and Exchange of Notes by Russia and China, Tripartite Treaty of Kiakhta,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riple Ententes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에 관한 연구

- 태평양전쟁기와 미 군정기 미국의 승인 정책을 중심으로* -

김 영 호**

1. 서론
2. 미국의 정부 승인 정책
3. 태평양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정책
4. 미 군정기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
5. 결론

1. 서론

1905년 11월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직후 루트(Elihu Root) 미 국무장관은 서울 주재 모건(Edwin V. Morgan) 공사에게 공사관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¹⁾ 을사늑약에 의해 조선은 외교권을

*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1) Root to Morgan, 24 November 1905,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p.259.

박탈당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미국의 조약상 권리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도쿄 주재 미국 공사관이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 본국의 지침에 따라 11월 28일 모건 공사는 공사관의 모든 재산과 문서들을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이관하고 조선에서 철수했다. 그는 조선 외부대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을사늑약에 의해 조선의 외교와 업무는 일본 외무성이 통제하고 지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조선으로부터 철수했다. 이로써 1882년 5월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에 의해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관은 철수했고 사실상 양국간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이러한 외교관계의 단절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 왕조에 의해 국권을 회복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 헤이그 밀사 파견 등을 통하여 펼쳐졌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이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커다란 분수령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왕정복고에 반대하고 주권재민의 원리에 기초한 공화국의 건설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승인 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뚜렷한 주체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후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미국에게 집중되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에 매우 동정적이었다고 임정 지도자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포함되었던 미국의 중재 조항에 희망을 걸고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의 한국 승인 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함께 불승인에서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을 거쳐 법률적 승인(de jure

recognition)이라는 점진적 변화를 겪게 된다.

승인 문제는 구한말 이후 우리 민족이 추구해온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근대국가는 영토와 주민 등 국가의 구성요건을 갖추므로써 국가 건설 단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근대국제정치체제의 특성상 타국에 의한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그 존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사실상 조선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철회하도록 했다. 그 이후 조선은 국제무대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은 승인이 갖는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체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승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망명 상태에서도 줄기차게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현대사 연구는 분단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초점이 두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전개된 외교적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연구는 등한시되었다. 특히 미국은 전시와 8·15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의 망명 정부에 대한 승인 거부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유럽의 망명 정부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승인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8·15광복 후 성립된 미 군정은 남한에서 스스로를 주권기관으로 자임하고 심지어 일본인 귀속재산까지 관리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이런 상황은 국제법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미국의 불승인 정책은 일제로부터의 8·15광복과 함께 즉시 독립을 바랬던 우리 민족의 열망에 배치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전시 외교정책과 미 군정의 대한정책은 미국의 정부 승인에 관한 방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는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갖고 있다.²⁾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은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국가 승인과 관련된 1차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대한민국 승인 문제를 미국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함으로써 기존 독립운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완하여 승인 문제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8·15광복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국의 정부 승인 노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미국의 정부 승인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 두 시기에 걸친 미국 승인 정책의 연구는 미국의 정책을 시기적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국가들의 승인 정책은 국제법의 원리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점에서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글은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 승인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익의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정부 승인을 위한 한국 지도자들의 주체적 노력의 성과와 한계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이 글은 미국의 건국 이후 미국의 정부 승인 정책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승인 정책은 국제법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국익에 따라서 융통성있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정책을 태평양전쟁 시기에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8·15광복 이후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미 군정이 남한의 주권기관으로 자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할

2)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제2장; 고정휴, “태평양전쟁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외교활동”, 『한립일본학』, 제9권 (2004), pp.119~142 등을 참조.

것이다. 나아가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과 5·10총선거 이후 미국이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먼저 부여하고 나중에 법률적 승인을 부여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유엔을 통한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노력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2. 미국의 정부 승인 정책

미국 정부의 승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와 국제법에서 논의되는 승인 문제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국가성(statehood)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효율적 통치체제의 구성이기 때문에 국가 승인은 정부 승인을 동시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고 그 이후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효율적 정부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인 문제는 정부 승인 여부와 시기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에서 승인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주권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승인과 관련해서는 구성적(constitutive) 이론과 선언적(declaratory) 이론이 각각 존재한다.³⁾ 선언적 이론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국가와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면 다른 나라의 승인없이도 그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3)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과 관련된 이론적 문제에 관해서는 Mikulas Fabry, *Recognizing States: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States since 177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22.

근대국제정치체제의 출발점이 된 베스트팔렌체제에 따르면 승인이 국가 존재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 타국에 의한 이러한 승인 행위가 영토, 주민, 효율적 통치력과 함께 국가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승인을 강조하는 입장을 구성적 이론이라고 부른다.

주권의 구성적 특징은 근대국가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베버(Max Weber)는 “일정 영토 내부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로 근대국가를 정의하고 있다.⁵⁾ 그의 정의는 근대국가는 영토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버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해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국가이다. 나아가 국가는 물리적 행사를 실효적으로 독점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국가성의 확보는 물리적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들 상호간 주권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구성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고 권력 창출을 위한 정치적 절차를 거쳐서 지배의 정당성이 확립되고 물적 토대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국가들에 의해 주권을 인정받지 않고서는 근대국제정치체제의 특성상 근대국가 형성이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의 경우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내적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권은 국가 간의 상호 인정 행위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기대감에 의해

4) Daniel Philpott, *Revolutions in Sovereign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18, 92~95;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14~20.

5)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78.

생겨난 제도이다.⁶⁾ 근대국가를 주권국가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대국가는 영토와 국민이라는 물리적 측면과 상호인정을 그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주권 개념은 국가들이 특정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해 배타적 권력 행사를 독점한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권의 상호인정 행위는 주권 개념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권의 구성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정부 승인의 문제인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다른 정부에 대한 승인 여부, 원칙과 시기는 승인을 부여 하는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건국 이후 미국의 외국 정부 승인 정책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원칙(de facto principle)’을 채택한 바 있다.⁷⁾ 이 원칙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에 의해 성립된 정부는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 여부가 정부 승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필수적 사항이었다. 이런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 측면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1900년 국무부 정부 승인 지침은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사실상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국제적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미국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

그 이후 미국 남북전쟁 시기와 윌슨 대통령에 의해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에는 미국의 승인 정책은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6)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1992), p.412; Thomas J. Biersterker and Cynthia Weber,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1~2.

7) “Recognition of New Governments”, PPS/24, March 15, 1948, Anna Kasten Nelson, ed.,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7~1949*, Vol. 2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6), pp.136~141.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⁸⁾ 이러한 정책은 외국 정부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불승인 정책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사실 불승인 정책은 정치적 무기로써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국무부 내부의 평가였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개입과 미소 냉전의 전개와 함께 미국의 승인 정책은 주민의 자결권의 존중과 정부의 효율적 통치 능력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 미국의 입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승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1941년 8월 발표된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에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경우 전후 추구할 구체적 청사진을 밝혔다.⁹⁾ 이 선언의 핵심은 전후 모든 식민지는 해방될 것이며 그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치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대서양헌장은 향후 미국의 외국 정부 및 망명 정부의 승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45년 4월 루스벨트 사망 직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Harry Truman)은 대서양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은 외부 세력의 무력에 의해서 강요된 어떠한 정부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했다.¹⁰⁾ 이것은 동구권이나 북한처럼 소련의 군사적 점령 하에서 강압적으로 성립된 소비에트 위성국가들의 정부는 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유고 공산당 지도자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와의 면담에서 “이번 전쟁은 과거와의 전쟁과 다르다.

8) 이러한 미국의 전통과 관련된 논의는 Francis Fukuyama, *State-Building*(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114 참조.

9) 이 헌장의 내용은 <http://avalon.law.yale.edu/wwii/atlantic.asp>(검색일: 2014년 3월 5일) 참조.

10) 이 연설문은 <http://millercenter.org/president/speeches/detail/3342>(검색일: 2014년 3월 5일) 참조.

군사력으로 영토를 점령한 자가 누구든지 자신의 사회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¹¹⁾ 소비에트체제를 주입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사고는 미국이 제시한 대서양헌장의 정신과 트루먼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인식의 차이가 전후 미소 냉전 대결을 불러왔다. 냉전의 전개는 미국의 정부 승인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미 국무부는 미국의 국익에 대한 고려가 승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²⁾ 또한 그러한 정책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에 적용할 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미국이 국가 승인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제법의 원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동시에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 국무부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이 외국 정부를 승인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¹³⁾

- (1) 공공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영토의 사실상(de facto)의 통제 능력
- (2) 국제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
- (3) 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승인

미 국무부는 국가이익에 따라서 특정 정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 기준들에 따르면 외국 망명정부의 경우 영토와 주민에 대해서 실질적

11)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Michael B. Petrovich, tra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2), p.114.

12) Anna Kasten Nelson, ed., *op. cit.*, pp.139~140.

13) *Ibid.*, p.140.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미 국무부는 이 세가지 요인들이 망명 정부 승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망명 정부에 대한 승인은 오직 정치적 고려와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결론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승인 정책은 국제법 일반 원칙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전시 중에는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쟁 수행과 냉전 시기에는 대소련 봉쇄정책이라는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태평양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정책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고 대서양헌장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정책은 결정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하여 미국에게 정식으로 승인을 요청해 옴으로써 미국은 한국과 관련한 승인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3·1운동은 이상주의자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짓는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당시 파리강화회의에서는 민족자결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유럽의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획득했다. 북해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파리강화회의에서 독립을 획득했다.¹⁴⁾ 특히 주변 열강에 의해 세 차례 걸쳐 분할되어 독립을 잃었던 폴란드는 123년만에 독립을

14) R. R. Palmer and Joel Colton, *A History of the Modern World Since 1815* (New York: McGraw-Hill, 1992), p.727.

획득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의 운명을 폴란드의 그것과 자주 비교했다. 폴란드의 독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제정된 임시헌장에 국제연맹 가입 규정을 두고 새로운 국제정세와 파리강화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¹⁵⁾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을 통해서 월슨 대통령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가 전한국민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정치체로서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과 그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¹⁶⁾ 나아가 그는 한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인 새로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위에 의하지 않은 국제협약과 계약은 한국민에 의해서 향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규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규식은 클레망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5월 24일자 이승만의 편지 내용을 상기시키고 파리강화회의가 한국인들의 자결권에 관한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¹⁷⁾ 그러나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승전국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승인과 관련된 편지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미국은 조선의 외교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공사관을 서울로부터 철수시킨 바 있다. 미국은 조선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15) 이 점은 신우철,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제)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제헌과 건국』, 한국미래학회 편(서울: 나남, 2010), 104쪽 참조.

16) Syngman Rhee to Wilson, 24 May 1919, 『이승만 영문 서한집』, 제4권,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2009, 190~191쪽. 이 편지는 영국의 로이드 조지 총리와 프랑스의 조지 클레망소 수상에게도 보내졌다.

17) Kiusic Kim to Clemenceau, June 11, 1919, *op. cit.*, p.222.

외교적 사안들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미국은 파리강화회의에서도 기존의 방침에 따라서 파리강화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을 뿐 그 구체적 대응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리강화회의 이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에 대하여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정책은 미국이 1941년 3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제정하여 연합국에 대규모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941년 8월 전후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대서양헌장을 발표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대서양헌장은 전후 제국주의하에 신음하는 모든 민족은 연합국이 승리할 경우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선언은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국이 될 것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카이로선언은 대서양헌장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식민지 해방의 원칙을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사례였다. 또한 대서양헌장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식민지 해방과 함께 수립될 새로운 국가와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그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서양헌장의 이 조항은 미국의 신생 정부 승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고 미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결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소련은 전후 국제정치질서 구축과 승인 정책에서 미국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소련 지도자 스탈린은 유고 공산당 지도자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와의 면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동서간 이념전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후 공산주의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토를 점령한 국가가

자신의 정치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⁸⁾ 소비에트체제를 점령 지역에 주입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사고는 민족자결주의를 강조한 미국의 대서양헌장과 정면으로 대치되었다. 이러한 양국 지도자의 인식의 차이는 전후 미소 냉전 대결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로 인하여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양과 한국 정부의 승인 문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과 관련된 입장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하여 일본과 전쟁상태에 돌입함으로써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일어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장 조소앙은 한국민은 주축국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대일전쟁 선포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¹⁹⁾ 1942년 2월 루스벨트는 전시중 행한 그 유명한 라디오 연설에서 한국인과 만주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압정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인이 일제 하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공개적으로 미국인들과 전세계인들에게 언급했다.²⁰⁾ 또한 이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전후 질서의 목표로 내세운 대서양헌장은 대서양에 연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루스벨트의 연설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동정적이었던 한 미국인은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의 승인 요청이 국무부 내부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이 임시정부를 즉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그는 중경에 머물고 있는 미국 군사고문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협조하여 한국군을 양성하여 전쟁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²¹⁾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과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표명

18) Djilas, *ibid.*, p.114.

19) So Wang Tjo to Roosevelt, December 10, 1941, 『이승만 영문 서한집』, 제7권, 111쪽.

20) Radio Address by Franklin Roosevelt, February 23, 1942, <http://www.mhric.org/fdr/chat20.html>(검색일: 2014년 3월 10일).

21) Harris to Roosevelt, March 6, 1942, 『이승만 영문 서한집』, 제7권, 122쪽.

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1944년 9월 김구와 조소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편지를 받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편지를 접수했을 뿐 뚜렷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²²⁾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에 매우 동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었다.²³⁾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국무부를 상대로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1945년 2월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위원장 명의로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불승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임정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빌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동의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후 미국이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법적(de jure) 승인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사실상(de facto) 임정 승인을 요구했다.²⁴⁾ 또한 이승만은 1945년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립 총회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이 초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²⁵⁾ 자신의 편지에 대한 국무부의 답변이 없자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던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서 1945년 2월 알타협정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선언의 입장과 다른 비밀협정이 체결

22) "Ambassador in the United Kingdom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9, 194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로 약칭) 1945, Vol. V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1026.

2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Ballantine)", February 5, 1945, *FRUS* 1945, Vol. VI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1019.

24) 이 편지 내용은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China (Hurley)", February 20, 1945, *ibid.*, p.1022 참조.

25)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20, 1945, *ibid.*, p.1027.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강대국 비밀외교의 희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엔회원국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유엔회원국은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엔 가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에 의해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것을 의미했다.

백악관은 이승만의 편지를 국무부를 통해서 알타협정과 승인 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²⁶⁾ 우선 미국은 알타회담에서는 카이로선언과 반대되는 어떠한 비밀협정도 체결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초청된 창립 회원국가들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통치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타 한국 단체들은 미국에 의해서 통치체로 인정을 받는 데 필수적인 자격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하는 임정 요인들을 임정의 관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도록 했다.²⁷⁾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영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한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고 해외망명 한국인들 사이에서 초자 그 추종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 주민들이 세우고 선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형태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미국

26)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hee)”, June 5, 1945, *ibid.*, pp.1029~1030; 이러한 입장은 미국인의 문의에 대해서도 되풀이되었다. 이 점은 Joseph W. Ballantine to Merriman, early 1945, 『이승만 영문 서한집』, 제7권, 244~246쪽 참조.

27)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China (Hurley)”, March 20, 1945, *FRUS* 1945, Vol. VI, p.1025.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축국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들과 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주민들에게 대해 갖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여타 국가와 달리 한국을 차별 대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대서양현장의 정신에 입각한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임시정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폴란드의 망명 정부 등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²⁸⁾ 만약 미국이 해방 이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있기 이전에 특정의 망명정부를 외교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주민들에게 특정 망명정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서양현장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망명정부의 경우도 정치적 판단과 국익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련, 영국, 중국과 함께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즉시 독립보다는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수 없었다. 나아가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소련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유럽 지역의 점령국가들에게 소련이 자신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은 전시중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임정 요인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28) 이 점은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서울: 일조각, 2006), 90쪽 참조.

4. 미 군정기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

8·15광복과 함께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에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함으로써 미국의 승인 정책은 또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군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구체적 지침없이 남한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전시중 한국의 어떤 망명 정부 혹은 단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국가와 정부의 부재로 인하여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선언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성(statehood)은 타국들의 인정없이 선언만으로 확보될 수 없었다. 더욱이 미 군정이 한반도에 독립국가로 새로 건설될 때까지 주권적 기관임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승인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 군정 법률고문이었던 프랭켈(Ernet Fraenkel) 박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상황은 종전과 함께 강제 병합 이전의 조선 왕조가 부활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²⁹⁾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연합국들 사이의 마지막 국제적 합의였던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영토를 본토 네 개 섬들과 연합국이 정하는 군소도서들로 정한다고 선언했다. 동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소멸되었고 그 결과 조선은 사실상(de facto) 일본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또한 프랭켈은 1910년 8월 29일 체결된 강제합병 조약은 아직 무효화되지 않았고, 한국의 독립은 한인 주도의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29) "Struct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ay 22, 1948, 『韓國分斷史料集 III-1』(원주문화사, 영인본, 1993), 30~32쪽.

중심의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의사와 달리 8·15광복 직후 조선 반도는 국제법상 무주지(no man's land)로 분류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국이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와 정부가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군사점령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통상적으로 국제법상 주권은 피점령국의 정부에게 있었다. 그렇지만 8·15광복 직후 한국에는 연합국에 의해 승인받은 그러한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 국제법 규범이 적용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남한의 경우 미 군정이 남한 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 생겨났다. 그 당시까지 국제법상으로는 한국과 미 군정의 사례와 같이 토착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나라에서 점령국가가 사실상 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국제법의 구체적 조항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미 군정은 일본인 귀속재산 관리를 떠맡게 되었다. 귀속재산 관리는 군정의 전통적 권한이 아니었고 점령국에 대한 일반적 행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군정은 남한 재산의 많은 부분을 신탁받아 관리해야 하는 전례없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이런 한국의 법적 지위는 유엔감시 하의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남한의 주권은 미 군정이 떠맡았다는 것이 프랭켈의 입장이었다.

미 군정은 한국에 새로운 국가와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고 귀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미 군정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 지침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달리 북한의 소군정은 미국과의 구체적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점령 직후부터 소련의 국익에 부합되는 공산정권을 수립에 즉시 착수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공개된 소련의 극비문서들은 보여주고 있다.³⁰⁾ 이처럼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과 승인과 관련하여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여 한반도상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 군정에 보낸 최초의 구체적 점령정책에 대한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유사한 어떤 정치조직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또한 정치적 목적들을 위해서 동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³¹⁾ 미국이 승인해야 하는 정부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등 4대국의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를 거친 이후 수립되어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얻는 독립된 한국의 새로운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후 역사의 전개과정이 보여주듯이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의도대로 실현 되지 못했다.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신탁-반탁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었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격화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는 모두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 미국의 새로 수립될 한국 정부의 승인 문제는 미국의 승인 정책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점령군 사령관 하지는 유엔이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

30) 이와 관련된 소련의 극비 문건들과 그 분석은 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도정책”,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이인호 공편(서울: 기파랑, 2009), 55~92쪽 참조.

31)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n Occupied by U.S. Forces (SWNCC 176/8)”, undated [October 13, 1945], *FRUS*, 1945, Vol. VI, p.1081.

하자는 미국의 안에 반대하고 또한 소련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유엔 감시단 없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헌의회를 구성할 것을 워싱턴에 촉구했다.³²⁾ 유엔은 1947년 11월 11일 결의안을 통과시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결성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5·10총선거는 소련의 거부로 인하여 남한에서만 실시되어 새로 구성된 한국의 제헌의회가 새 정부 구성에 착수하게 된다. 그 이후 미국의 대한민국 승인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5·10총선거 이후 미국은 국익과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국무부,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국무부 법률고문, 한국 현지 상황을 승인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 군정 사이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승인 정책의 윤곽이 잡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승인 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정치적 판단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유엔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미국은 정부 수립 이후 조속한 승인을 바라는 한국 지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전시와 8·15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결정할 때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새로운 한국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³³⁾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카이로선언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의 당사자이며 직접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와 유엔 감시하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유엔과도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국무부는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소련의 선거 거부로 인하여 선거 범위와 효율적 통치권의 영역에서 사실상 남한에

32) "Hodge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November [3?], 1947, *FRUS*, 1947, Vol. VI, p.853.

33) "Memorandum by Butterworth to Gross", May 25, 1948, *FRUS*, 1948, Vol. VI, pp.1204~1206.

대해서만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한반도에 대해서 지배권을 주장하는 북한 정권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러한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승인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 승인 정책과 관련하여 승인 보류, 즉각적인 승인, 제한적 승인이라는 세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장단점들을 검토했다. 우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유엔총회가 받아들일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 이와 달리 즉시 승인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 정권과의 대결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과 위신이 한국 정부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여부는 미국의 위신의 손상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은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미국의 책임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장단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국무부는 미국의 위신과 새 정부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새 정부를 즉시 승인하는 것이 불승인정책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지만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승인문제가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국이 새 정부에 대해서 제한적 승인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에 국무부 법률고문과 미 군정의 입장을 문의했다.

미 국무부 법률고문 그로스(Ernest A. Gross)는 한국의 경우 승인 문제는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³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선언들에도 불구하고

34) "Memorandum by Gross to Butterworth", June 1, 1948, *ibid.*, pp.1211~1213.

하고 일본 제국으로부터 한국을 영구히 분리시키는 구체적 조치가 아직 취해진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을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는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국가 승인은 제한된 형식을 띠어서는 안되고 한국을 독립국가로 완전히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정부 승인의 경우 인정을 부여하는 국가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라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완전 승인 또는 부분적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부분 승인, 즉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완전 승인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사실상 승인의 경우 미국은 승인과 함께 외교 공관을 설립하고 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조치는 완전 승인, 즉 법률적 승인(*de jure* recognition)이 주어질 때 취해진다. 한국을 사실상 승인할 경우 미국은 특별 대표 책임하에 특별 대표부를 설립하면 된다. 또한 미국이 사실상 승인을 부여한 한국 정부에게 미 군정은 그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나중에 한국 정부가 법률적 승인을 받으면 미 군정과 한국 정부 사이에 맺어진 합의는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미 군정 정치고문 제이콥스(Joseph E. Jacobs)는 유엔총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완전 승인보다는 부분 승인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³⁵⁾ 법률고문 그로스의 지적처럼 유엔 결정에 상관없이 미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유엔의 지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부여하고 대사급의 한국 주재 특별 대표를 임명하여 미 군정의 권한 이양 작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마찬가지로 하지 점령군 사령관도 승인이 늦어지면 주한미군

35)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8, 1948, *ibid.*, pp.1216~1217.

철수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유엔총회의 결의 이전이라도 사실상 승인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³⁶⁾

드디어 1948년 6월 25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5·10총선거가 위원단이 접근가능했던 지역에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6월 30일 한국의 제헌국회에 참석하여 발표했다.³⁷⁾ 위원단의 최종보고서는 5·10총선거가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는 첫 번째 조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³⁸⁾ 또한 위원단은 제헌국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했다. 이로써 유엔총회의 한국 정부 인정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유엔회원 우방국가들의 견해를 파악하도록 미국의 해외 공관들에게 지시했다.³⁹⁾ 유엔총회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약 2~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이나 유엔 회원국이 한국의 새 정부를 제한적으로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위신과 권위의 약화는 북한 정권에게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에 소련의 조치를 의식할 필요없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승인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영국, 호주, 인도, 캐나다 정부는 유엔총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조차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⁴⁰⁾ 또한 영연방에 속한 이들 국가들은

36)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0, 1948, *ibid.*, p.1220.

37)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30, 1948, *ibid.*, pp.1231~1232.

38)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5, 1948, *ibid.*, pp.1260~1261.

39) "Secretary of State to Certain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rs Abroad", July 10, 1948, *ibid.*, pp.1235~1237.

40) "Dougla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13, 1948, *ibid.*, pp.1239~1240;
"Nielse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14, 1948, *ibid.*, pp.1241~1242;
"Donova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19, 1948, *ibid.*, pp.1246~1247;

한국 정부가 마치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표현인 “National Government of Korea” 또는 “All Korea”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미국은 국익과 새로운 한국 정부의 위상과 남한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승인을 부여하고 싶었지만 영연방 국가들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부는 1948년 8월 12일 새로운 한국 정부를 사실상 승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⁴¹⁾ 이것은 유엔총회 결의안이 같은 해 12월 채택되기 4개월 전이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자유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8월 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게 5·10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의회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성명은 또한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토의되기 이전에 미국은 무초(John J. Muccio)를 특별 대표로 서울에 파견하여 미 군정의 권한 이양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초는 대사급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4월 28일 무초를 한국 대사로 임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둔 바 있다.⁴²⁾ 그러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우선 부여한다는 국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무초는 대사로 발표되지 않고 특별 대표로 발표되었다.

8월 12일 중국(대만) 정부도 한국 정부를 사실상 승인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사급의 특별 대표를 한국에 파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⁴³⁾ 전시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Pearson to Harrington”, August 13, 1948, *ibid.*, pp.1274~1275.

41) “Policy toward Kora(August 12, 1948)”,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ust 22, 1948, <https://archive.org/stream/departmentofstat1948unit#page/814/mode/2up> (검색일: 2014년 3월 12일).

42) “Memorandum by Lovett to President Truman”, July 28, 1948, *ibid.*, pp.1264~1265.

43) “Stuart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13, 1948, *ibid.*, pp.1272~1273.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승인을 미루고 있던 중국(대만)은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한국 정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은 유엔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한국 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이 한국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부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승인 조치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경비대, 경찰, 조선해안 경비대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한 정부의 권한을 한국 정부로의 이양을 미 군정에게 요청했고 하지 사령관은 이를 수용했다.⁴⁵⁾ 이처럼 정부 권한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결의안 제195호(III)를 채택하여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했다.⁴⁶⁾ 이 결의안 제2항은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하나의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이 결의안은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당하게 표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합법) 정부”라고 선언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안 통과 이후 1949년 1월 1일 미국은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정식으로 승인했다. 중국(대만)은 1월 4일 한국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유엔총회 이전 사실상 한국 승인을 반대했던 영연방 국가들은 유엔총회 이후 대부분 한국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영국은 1월 18일, 캐나다는 4월 9일, 호주는 8월 15일 각각 한국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44) “Douglas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13, 1948, *ibid.*, p.1273.

45)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9, 1948 and August 10, 1948, *ibid.*, pp.1268~1269, 1271.

46) 이 결의안은 <http://www.un.org/documents/ga/res/3/ares3.htm>(검색일자: 2014년 3월 13일) 참조.

맺었다. 이로써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직후부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의 노력은 5·10총선거와 유엔총회 결의안 통과 이후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과정에 그 어떤 국가보다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5. 결론

미국의 한국 승인 정책은 미국의 대일본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미국은 조선의 외교적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한국과 관련된 이권을 처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파리강화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고무된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파리에서 미국에게 국제연맹 가입을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의 서한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미국의 무시정책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함께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대서양헌장을 통해서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카이로선언을 통하여 처음으로 식민지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획득할 것이라는 약속을 연합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승인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이 대서양헌장이라는 이상과 국익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승인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딜레마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남한 내에서 상대할 수 있는 주권 국가와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스스로 미 군정을 주권 기관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법상 전례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물론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 점령과 뒤이어 발생한 미소 냉전으로 인하여 미국의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시중 대한민국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승인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및 현실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었다고 한다면 점령 직후의 혼선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양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소련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회원국들을 설득하여 5·10총선거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수립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유엔총회의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엔총회에 의한 한국 정부의 승인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과 공모하여 6·25전쟁을 일으켰을 때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만약 한국이 유엔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미국과 유엔의 전쟁 개입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유엔총회 이전 한국 정부 승인 문제를 다룰 때 제기된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의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은 이들과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들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인내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유엔총회에서 서방국가들의 한국 승인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남침시 유엔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 5·10총선거 이후까지 한국 승인 문제를 두고

무시정책, 불승인정책 표명, 사실상 승인, 법률적 승인이라는 점진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한 후 종전과 함께 한미군사동맹을 체결했고 양국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발전했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적 승인, 정부 승인, 국가 승인, 사실상 승인, 법률적 승인, 대한민국, 유엔, 파리강화회의

<ABSTRACT>

A Study of US Policy on the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ntered on the
US Recogni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of the Military
Occupation in Korea

Kim, Yeong-ho

After the protectorate treaty was signed by Japan forcibly with Korean Imperial in 1905, the United States withdrew the American legation from the capital, Hanyang. It resulted in the severance of US-Korean diplomatic relations. And it also meant that the US did not recognize Korea as an independent sovereign entity. The independent movement of the 1st of March in 1919 was a watershed event because it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bjec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Chousun dynasty and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a Republic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Korean penins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meant that there emerged a Korean national political entity with the ability to pursue the diplomatic recognition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Provisional Government made great diplomatic efforts to achieve diplomatic recognition of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1919 which held after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But these diplomatic efforts failed. Since the Peace Conference, the diplomatic effort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centrated o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leade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very sympathetic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fter President Woodrow Wilson's proclam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The American policy of state and government recognition began to chang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according to its foreign policies. Specifically, the US recogni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ncrementally changed from non-recognition to de facto recognition and finally de jure recognitio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id not recognize any political groups in Korea and declared itself as the sole sovereign entity and assumed the responsibility even for the properties reverted to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This situation wa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policy of diplomatic non-recognition of Korea went against the hope of the Korean people who wanted an immediate restoration of sovereignty and diplomatic recognition. The policies of the US on diplomatic recognition on Korea during the wartime and post-World War II periods were closely related to its general policies on diplomatic recognition.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the US policies on diplomatic recognition of Korea during wartime and after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begins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American diplomatic recognition policies after its foundation. Next, the article analyzes US recognition polici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rom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is article will also explain the reason why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clared itself a sovereign entity without diplomatic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is article will also research the process of US recogni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proceeded from de facto recognition

to de jure recognition after the free elections in South Korea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ited Nations in May 1948. This article will conclude by the impact of US recogni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help of the United Nations.

Key Words :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iplomatic Recognition, Governmental Recognition, State Recognition, De Facto Recognition, De Jure Recogni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Nations, The Paris Peace Conference

한국의 평화유지활동과 내전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KMAIR* · 김인수**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거버넌스 향상 지역의 한국군 활동: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4. 거버넌스 하락 지역의 한국군 활동: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문제제기

탈냉전 이후 나타난 안보환경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내전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내전은 한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 KMAIR(Korea Military Academy International Relations)은 육군사관학교 71기 국제관계 전공생도들로 구성된 연구팀이다: 류인호, 고유진, 김창엽, 나예찬, 박지은, 송승욱, 안민수, 윤계진, 윤재형, 이상훈, 이진현, 임광채, 임채범, 전형규. 본 논문은 2014년 1학기 육군사관학교 4학년 국제관계 전공 「국제안보협력론」 수업의 연구과제로 김인수 교수의 지도로 작성되었다.

** 육군사관학교 사회학 부교수, 교신저자, kma6453@gmail.com

발생시킨다.¹⁾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내전을 평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우선 내전이 계속해서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력이 사용될 수 있다. 군사력의 사용을 통한 강압적 개입은 민주적 제도의 도입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내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²⁾ 내전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분쟁 자체의 종식 보다는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평화유지(peace keeping)로부터 평화재건(peace building)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누가 권력을 갖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³⁾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는 평등, 정치적 참여, 다원주의, 투명성, 법치주의, 책임성 등을 증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수 있는 의회, 독립적인 사법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전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거버넌스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1) Constance V. Elliott and V. Lani Elliott, “The Economics of Sustaining the Peace: Breaking the Conflict Trap-Civil War and Development Policy,” in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in Post-War Societies: Sustaining Peace*, eds., T. David Mason and James D. Meernik(NY: Routledge, 2006), p.240.

2) James D. Meernik, Steven C. Poe, and Erum Shaikh,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Promote Human Right,” in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in Post-War Societies: Sustaining Peace*, eds., T. David Mason and James D. Meernik (NY: Routledge, 2006), pp.160~175.

3) Sam Egere, *Promoting Good Governance: Principles, Practices and Perspectives* (London: Publications unit Commonwealth Secretariat, 2000), p.23.

아니다. 국제사회는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 즉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보다는 분쟁의 종식, 즉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정착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 1항을 토대로 1993년 이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재건, 의료 지원 등 인도적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확산과 군사교류 협력의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또는 재건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⁴⁾ 이에 따라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한 국가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향후 이들 국가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전개해야 할지를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한국군이 파병된 소말리아,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레바논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한국군 파병국가에서 거버넌스 수준이 향상 또는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4) 이러한 문제는 미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교육, 보건, 농업 분야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교사를 구하지 못해 학교 건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Oxfam International, “Whose Aid is it Anyway? Politicizing Aid in Conflicts and Crises,” *Oxfam Briefing Paper*, p.20, <http://www.oxfam.org>(검색일: 2012. 12. 1).

2. 기존 연구 검토

가. 한국군 파병지역의 거버넌스 변화

본고는 한국군 파병국가의 거버넌스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작성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ex: WGI)를 활용하였다. WGI는 사회적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법치주의(rule of law), 규제 효율성(regulatory quality), 부정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 6가지 지표로 구성된다.⁵⁾ WGI는 2.5에서 -2.5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에서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WGI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분석 자료가 가용한 시기에 한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진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 등 6개국을 대상으로 WGI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유지활동이 종료된 아이티와 이라크의 경우 파병 이전의 6년과 파병 기간의 WGI 평균값을 비교하였다.⁶⁾ 둘째, 현재 평화유지활동이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소말리아의 경우 파병이 실시되기 이전의 6년과 파병 이후 2012년까지의 WGI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셋째, 동티모르의 경우 한국군이 파병된 1999년 이전의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기간

5)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검색일: 2014.3.12)

6) 본고에서는 내전 중의 정치·사회 변화를 검토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비교 단위를 6년으로 설정하였다. Mark J. Mullenbach, "Reconstructing strife-torn societies: Third-party peacebuilding in intrastate disputes," in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in Post-War Societies: Sustaining Peace*, eds., T. David Mason and James D. Meernik(NY: Routledge, 2006), pp.53~80.

(1999~2003)과 파병 종료 후 6년에 해당하는 WGI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표 1〉 한국군 파병기간 중 파병국가의 WGI 지표별 변화량

구 분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부정부패 통제	전체 평균
동티모르	0.20 (0.02)	0.69 (0.19)	0.14 (0.01)	1.31 (0.67)	0.45 (0.08)	0.31 (0.04)	0.52 (1.00)
아프가니스탄	-0.07 (0.04)	0.00 (0.00)	0.01 (0.00)	0.31 (0.82)	0.10 (0.01)	0.09 (0.01)	0.05 (1.00)
아이티	0.12 (0.04)	0.55 (0.78)	-0.22 (0.12)	-0.02 (0.00)	0.13 (0.04)	0.09 (0.02)	0.11 (1.00)
이라크	0.50 (0.14)	-0.99 (0.53)	0.26 (0.04)	0.60 (0.20)	-0.38 (0.08)	-0.22 (0.03)	-0.04 (1.00)
소말리아	-0.27 (0.62)	-0.15 (0.19)	0.02 (0.00)	0.06 (0.03)	-0.03 (0.01)	0.13 (0.15)	-0.04 (1.00)
레바논	0.03 (0.00)	-0.89 (0.75)	-0.11 (0.01)	0.13 (0.02)	-0.38 (0.13)	-0.30 (0.08)	-0.25 (1.00)

자료: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검색일: 2014.3.12)

참고: () = 각 지표의 변화량이 전체 변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분석 결과 한국군이 파병된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의 거버넌스 변화량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이티에서는 거버넌스 수준이 향상된 반면,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에서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악화되었다.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영역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1〉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WGI 전체 변화량 중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⁷⁾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법치주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아이티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 지수가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이라크와 레바논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고, 소말리아에서는 사회적 책임성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7) 법치주의 지표의 변화량 $|^2 / \sum |$ 각 지표의 변화량 $|^2$

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건

오늘날 대부분의 내전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독립한 신생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 세기에 걸친 국가 형성의 기간을 가졌던 국가들과 달리 이들 신생국은 빠른 시간 안에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는 상대적으로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회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의 근대국가 체제를 탄생시킨 서유럽의 국민국가 발전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유럽에서 국가의 탄생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 없이는 불가능했다. 국가 건설과정이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화된 사회구조로부터 그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국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중앙집권화 된 정부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존재하던 많은 실력자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강력한 국가의 등장에 반대하면서 저항하였다.⁸⁾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여 톨리(Charles Tilly)는 내전의 필연적 조건으로 이중 주권(dual sovereignty)의 상황을 제시하였다.⁹⁾ 이중 주권은 정부가 상당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적대세력을 제압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 주권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대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 때 군사력의 사용은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실제로 냉전기에는 대부분의 내전이 군사적 승리를 통해 종식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는 협상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¹⁰⁾ 메이슨과 페트(T. David Mason & Patrick J. Fett)는 다음과

8) Charles Tilly,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71.

9) *ibid.*, p.194.

10) Caroline A. Hartzell, "Structuring the Peace," in *Conflict Prevention and*

같은 기대효용 모델(expected utility model)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¹¹⁾

$$EU_{cw} = P_V(U_V) + (1 - P_V)(U_D) - \sum_{t_i=0}^{t_v} C_{t_i} \quad ①$$

$$EU_S = U_S + \sum_{t_i=0}^{t_v} C_{t_i} - \sum_{t_i=0}^{t_s} C_{t_i} \quad ②$$

①번 공식에서 EU_{CW} 는 내전이 재발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효용을 의미한다. U_V 는 내전에서 승리했을 때의 효용, P_V 는 내전에서 승리하게 될 확률을 말한다. U_D 는 내전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의 효용을 의미하고, C 는 현재($t_i=0$)부터 내전에서 승리할 때(t_v)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②번 공식에서 EU_S 는 평화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을 의미한다. U_S 는 평화를 선택했을 때의 효용을 말한다.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t_s)까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내전에서 승리할 때(t_s)까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메이슨과 페트의 모델에 따르면 내전 당사자는 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선택할 때의 기대효용(EU_S)이 내전을 재발시킬 때의 기대효용(EU_{CW})에 비해 크다고 생각할 때 평화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유리한 조건

구 분	내전 승리 가능성(P_V)	내전 승리 효용(U_V)	내전 종식 효용(U_S)	내전 승리 비용(C_i)	내전 승리 기간(t_v)
조 건	저(low)	저(low)	고(high)	고(high)	장(long)

Peacebuilding in Post-War Societies: Sustaining Peace, eds., T. David Mason and James D. Meernik (NY: Routledge, 2006), p.36.

11) T. David Mason and Patrick J. Fett, "How Civil War End: A Rational Choic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0(1996): 546-568.

첫째, 내전 당사자가 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P_i)은 이들이 보유한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군사적으로 열세인 내전 당사자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군사적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평화보다는 군사적 충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 세력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내전 승리 가능성을 낮춰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니아 내전을 들 수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992년 2월 세르비아가 중심이 된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였던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스르프스카(Srpska)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보스니아 무슬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계는 내전 1년 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영토의 70% 이상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1995년 7월 발생한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 등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나토(NATO)는 1995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르비아계의 군사작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습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세르비아계가 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사라졌고, 1995년 12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둘째, 내전 승리에 따른 효용(U_V)과 내전 종식에 따른 효용(U_S)은 내전의 정치적 목적 달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사회는 분쟁 당사자가 내전에서 승리하더라도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내전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캄보디아 내전을 들 수 있다. 폴 포트(Pol Pot)의 크메르루즈(Khmer Rouge) 반군이 1975년 캄보디아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민간인을 학살하자, 베트남이 1978년 캄보디아에 훈센(Hun Sen)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이에 맞서는 망명정부, 크메르인민해방전선(Khmer People's Liberation Front), 캄보디아 인민군(Cambodia People's Armed Forces) 사이에 내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하자, 베트남의 후원을 받던 훈센 정권의 당면 과제는 내전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훈센 정권을 붕괴시키는 대신 반군과 정치권력을 공유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분쟁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¹²⁾

셋째, 내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희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내전 승리 비용(C)과 내전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소요되는 내전 승리 기간(t_v)은 내전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는 12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175,000명이 사망한 이후 본격적인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8년 이상 지속된 내전으로 500,000명 이상이 사망한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¹⁴⁾ 그러나 막대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인종 / 종족 분쟁은 보복 행위의 가능성 역시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피해의 규모와 폭력 행위 중단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낮추거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내전 종식에 따른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12) Thijs W. Brocades Zaalberg, *Soldiers and Civil Power: Supporting or Substituting Civil Authorities in Modern Peace Operatio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0), pp.7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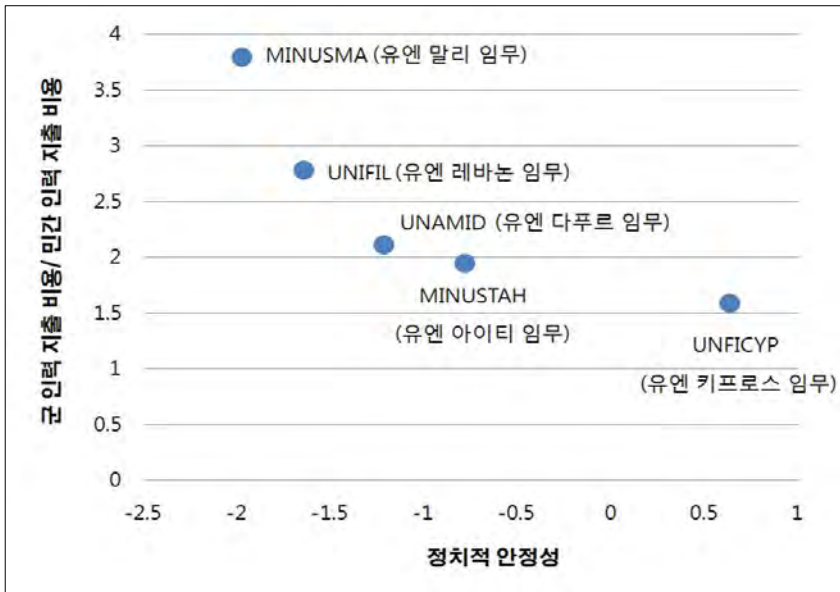
13) Mason and Quinn, *op. cit.*, p.22.

14) Mullenbach, *op. cit.*, pp.62~67.

다. 국제사회의 개입 유형과 성과

사회·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는 내전국가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은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개입이 반드시 거버넌스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내전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엔의 예산 내역을 분석해보면 내전국가의 정치적 안정도에 따라 군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 정치적 안정성과 군 및 민간 인력에 대한 지출 비용



자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 (검색일: 2014.6. 2)

정치적 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말리에서는 군 인력에게 지출한 비용이 민간 인력에게 지출한 비용의 약 4배에 달했지만, 정치적 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키프로스에서는 군 인력에게 지출한 비용이 민간 인력에게 지출한 비용의 1.5배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도가 낮은 국가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이 반드시 국가별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병력의 안전 등 정치·군사적 이익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는 군사적 개입 보다는 내전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집중하여 내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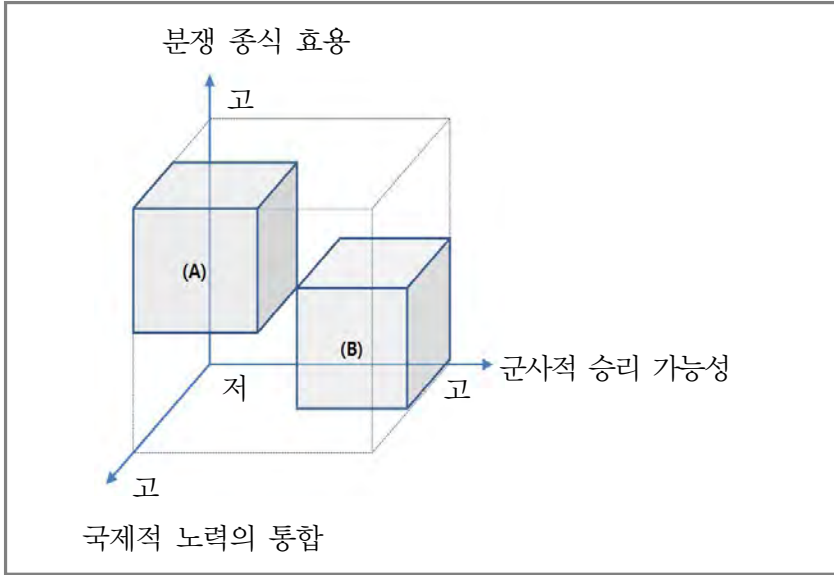
둘째, 국제사회의 개입은 거버넌스 수준을 하락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전의 원인을 경제적 저성장에서 찾고자 하는 일부 국제기구도 내전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영화 개혁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 기능의 축소와 시장 기능의 확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경제적 개입은 정부가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의 분배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상실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치력을 약화시킨다.¹⁶⁾ 정부 통치력의 약화는 내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적 빈곤은 내전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갖지 않지만, 내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내전을 재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¹⁷⁾

15) 이러한 모순을 ‘나이팅게일의 위험’(Nightingale’s risk)으로 설명한다. 부상자를 치료하여 전장으로 돌려보낸 나이팅게일의 행위는 한 편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전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제공하여 전쟁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가 계속되도록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Helen Yanocopoulos and Joseph Hanlon, *Civil War, Civil Peace*(OH: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9), p.47.

16) *ibid.*, pp.59~60.

17) P. Collier et al., *Breaking the Conflict Trap: Civil War and Development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그림 2〉 내전국가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그림 2〉에 거버넌스 향상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분쟁 종식에 따른 효용을 증가시키고, 분쟁 당사자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통합된 국가에서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2의 A 영역〉. 둘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통합되지 않고, 분쟁 종식에 따른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분쟁 당사자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제한하는데 실패한 국가에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2의 B 영역〉. 여기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이 A 영역에 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파병부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군의 파병부대는 재건부대와 보병부대로 구분된다. 재건부대는 의료 및 공병부대로 구성되어 지역 재건,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담하는 부대를 말한다. 반면 보병부대는 전투병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치안 유지 및 평화정착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거버넌스가 의회,

사법부 등 국가 통치기구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안 유지 및 평화정착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보병부대가 파병된 지역에서 거버넌스의 향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분쟁 당사자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 분쟁 종식에 따른 효용, 국제사회와 통합된 한국군의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군 파병국가의 거버넌스 변화를 살펴보았다.

3. 거버넌스 향상 지역의 한국군 활동: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가. 동티모르

동티모르는 1975년 11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다. 같은 해 12월 공산화 방지를 명분으로 동티모르를 침공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묵인으로 1976년 7월 동티모르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0여 년간 지속된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커지고,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해지자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유엔은 1999년 6월 유엔 동티모르 임무단(U.N. Mission in East Timor, 이하 UNAMET)을 설치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78.5%의 투표자가 독립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공표되자,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민병대가 살상·방화·약탈 등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은 1999년 9월 15일 호주 주도의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병을 승인한데 이어, 10월 25일 유엔 과도행정기구(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이하 UNTAET)를 설립하여 동티모르가 완전 독립할

때까지 인프라 시설 건설과 입법·행정·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9년 9월 28일 상륙수 부대를 파병하였고, 2003년 10월 23일까지 연인원 3,328 명이 동티모르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국군 파병기간(1999~2003)과 파병이 종료된 이후 6년간(2004~2009)의 WGI 변화를 비교한 결과 한국군이 파병된 기간 중 동티모르의 WGI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법치주의 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티모르의 거버넌스가 향상된 이유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이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약화시켰으며,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으로 내전 종식에 따른 효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유엔은 연인원 9,150명이 참여한 동티모르 다국적군(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이하 INTERFET)을 창설하여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폭력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다른 국가와 달리 동티모르의 법치주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INTERFET를 주도한 호주군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⁸⁾ 과거 식민지 지배 경험이 풍부한 영국군 교리의 영향을 받은 호주군은 파병 초기부터 친인도네시아 민병대를 체포·구금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일간지 『New East Timor』를 3개 국어로 발간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한 편, 전단 및 포스터 등을 통해서 살인과 고문 등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였다.¹⁹⁾

18) 소말리아에서도 호주군은 자국 병력의 안전을 위해 주둔지에 머물렀던 미군과 달리 통치 질서 재건을 위해 광범위한 순찰, 반군의 무장해제, 소말리아인의 범죄행위 단속과 처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주군이 담당하 바 이도아(Baidoa)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 안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KMAIR·김인수,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군사』88호(2013), pp.108~110.

19) James Cotton, “Australia’s East Timor Experience: Military Lessons and Security Dilemmas,” www.nids.go.jp/english/.../sympo_e2002_10.pdf(검색일:

둘째, UNTAET의 활동으로 민주적 정치제도가 정착되고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분쟁 종식에 따른 효용이 증가하였다. UNTAET의 주요 활동은 “동티모르의 영토에서 안보를 제공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창설하고, 시민·사회적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며, 인도적 구호활동과 개발 원조를 제공·조율하고, 정부의 자치능력 강화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로 구성되었다.²⁰⁾ 이에 따라 어떤 사회적 집단도 동티모르의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동티모르 독립 이후 친인도네시아 성향의 주민들에 대한 보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병대 지도자와의 협상, 홍보, 화해모임 주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²¹⁾ 또한 국제사회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동티모르에 제공한 경제적 지원 규모는 인구 1인당 8,000불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였다. 1999년 동티모르의 1인당 GDP는 456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티모르 국민 전체가 17년간 벌어들여야 할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²²⁾ 동티모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거부하며 무력 충돌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다.

셋째,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 상륙수 부대의 활동은 호주군의 활동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1999년 10월 4일 보병 전투부대를 동티모르의 라우템(Lautem) 지역에 파병하여 치안유지활동 및 인도적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상륙수부대는 책임지역에서 국경선 통제, 치안 유지, 민사작전 및 핵심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

2014. 6. 2).

20) 유엔 평화유지활동 홈페이지,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past/etimor/UntaetM.htm>(검색일: 2014. 6. 2).

21) 김우선, “또 다른 문명화 사명?: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본 유엔의 동티모르 통치(1999~2002)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9권 2호(2009), p.150.

22) Guteriano Leves, “Timor: Where has all the aid gone”,
http://fpif.org/timor_where_has_all_the_aid_gone/(검색일: 2014. 6. 2)

으며, 불법무기 소지자 및 잠재적 위협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 및 주거지역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하였다. 이는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 활동과 일치하는 방향이었고, 결과적으로 동티모르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동티모르에서는 2002년 이후 평화 유지군이 잇따라 철수하고 국제사회가 경제적 지원을 국가재건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내전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²³⁾

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내전은 1979년 소련이 공산주의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하고, 미국이 이슬람 저항세력인 무자헤딘(mujahedin)을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89년 소련군이 철수함에 따라 무자헤딘이 1992년 4월 카불을 점령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정당들은 1992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과도정부를 구성하였으나, 파키스탄과 알카에다(al-Qaeda)의 지원을 받는 탈레반(Taliban) 세력이 1996년 카불을 점령하면서 이슬람 정권이 출범하였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 정권은 각종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중·소 부족의 연합체인 북부동맹(Northern Alliance)이 결성되어 탈레반 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탈레반 정권을 후원하는 알카에다가 2011년 9·11 테러를 일으키자,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탈레반 세력은 2006년 이후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끊임없는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과 2003년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단을 파병하였으나,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피랍·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군

23) OECD, *Investing in Security: A Global Assessment of Armed Violence Reduction Initiatives, Conflict and Fragility*(OECD Publishing, 2011), p.70.

장병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2007년 철수하였다. 하지만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이하 ISAF)을 설치하고 회원국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0년 재건지원단 오쉬노(Oshino) 부대를 다시 파병하였다. 오쉬노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시기(2010~2012)를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거버넌스가 소폭 향상되었으며, 법치주의 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의 거버넌스가 향상된 이유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이 탈레반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약화시켰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민주적 정치체제가 기틀을 잡게 됨에 따라 내전 종식에 따른 효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2001년 나토(NATO)의 주도로 창설된 ISAF에는 49개국 87,207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대한 교육·훈련과 반정부 세력 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²⁴⁾ ISAF 활동은 2003년 유엔 안보리의 승인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남부와 동부 아프가니스탄에서 광범위한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둘째, 국제사회는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을 파견하여 지방 행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출범한 현 정부는 탈레반의 테러와 빈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그 통치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파견한 PRT는 탈레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지방 행정의 기틀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국제사회는 2004년과 2009년 대통령선거, 2007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적 정치체제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

24) NATO,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Key Facts and Figures", http://www.nato.int/isaf/placemats_archive/2013-08-01-ISAF-Placemat.pdf(검색일: 2014. 6. 2).

2,800만 명 중 1,053만 명이 2004년 선거에서 유권자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41.4%가 여성 유권자이며, 72만 명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슬람 원리주의와 오랜 내전으로 여성과 난민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향후 아프가니스탄의 거버넌스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 철수할 때까지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Parwan) 주에 PRT를 파병하여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였다. 한국의 PRT는 현지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직업훈련센터와 보건 및 의료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지방·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새마을 사업으로 농촌을 개발하고 빈곤을 타파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개발과 재건을 지원하였다. 한국의 PRT는 민간이 주도하고 군의 역할은 자체 방어와 PRT 요원의 보호, 자위권의 행사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군 지휘관이 재건 활동을 주도하는 미국의 PRT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PRT 활동은 파견 국가와 활동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군사력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²⁶⁾ 한국군은 다른 IASF 부대와 달리 탈레반 세력과의 직접적인 교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지방행정과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5) 외교부 홈페이지, “아프가니스탄 개황,” <http://www.mofago.kr>(검색일: 2014. 6. 11).

26)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PRTS),” <http://www.understandingwar.org/provincial-reconstruction-teams-prts>(검색일: 2014. 6. 5).

다. 아이티

아이티에서는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뒤발리에 부자(Francois Duvalier & Jean-Claude Duvalier)의 독재정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6년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이 발생하였으며, 1990년 12월 아리스티드(Jean Bertrand Aristede)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91년 9월 진보적인 개혁정책을 문제 삼은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붕괴시키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아이티 군부에 압력을 가하여 민정 복귀를 시도하였다. 아이티 군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은 30개국 2만 2천명 규모의 다국적군이 아이티에 파병되어 쿠데타 세력을 축출하고 아리스티드에게 권력을 이양하였다. 아리스티드는 2000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4년 2월 일단의 무장군인들에 의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축출되었다.

이후 아리스티드의 지지 세력과 아리스티드를 축출한 반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었고, 유엔은 2004년 다국적임시군(Multinational Interim Force, 이하 MIF)과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U.N.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이하 MINUSTAH)을 편성하였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으로 아이티 상황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10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유엔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아이티 지진피해를 복구·재건하기 위한 공병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레오간(Leogane) 지역에 파견하였다. 한국군이 아이티에 주둔한 기간을 그 이전의 6년간과 비교해볼 때, 아이티의 WGI는 전체적으로 0.11 정도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전체 변화의 78%에 차지하는 정치적 안정성의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국제사회의 개입이 정치적 안정성의 향상으로 이어진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는 1994년 내전이 발생한 직후 다국적군을 파병한데 이어 2004년에도 MIF와 MINUSTAH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내전에 개입하였으며 폭력사태를 저지하는 임무에 주력하였다. 2009년 승인된 안보리 결의안 1892호에 따르면 MINUSTAH에 부여된 28개의 임무 중 치안과 관련된 임무는 15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²⁷⁾ 둘째, 군사적 개입 외에도 유엔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엔 아이티 임무단(U.N. Mission in Haiti: UNMIH), 유엔 아이티 지원임무단(U.N. Support Mission in Haiti: UNSMIH), 유엔 아이티 이행임무단(U.N. Transition Mission in Haiti: UNTMIH), 유엔 아이티 민간경찰단(U.N. Civilian Police Mission in Haiti: MIPONUH) 등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티에서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과 시민사회의 성장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²⁸⁾

반면 단비부대의 활동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거리가 멀었다. 단비부대의 주요 임무는 공병지원, 의료지원, 민사작전, 군사교류로 구성되었다. 공병지원은 잔해 제거, 도로 복구, 부지 정리, 하천 복구, 심정 개발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료지원은 환자 진료와 콜레라 예방을 위한 난민촌 방역과 같은 구호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민사작전은 초등학교, 고아원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생필품, 식수, 과자 등을 제공하였으며, 한국과 단비부대를 소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비부대는 군사교류를 위해 MINUSTAH 파병국 상호 방문, 정세·정보교환, 상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단비부대의 활동은 MIF에 참여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들의 활동과 통합될

27)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62호, <http://www.refworld.org/docid/4ad886272.html>(검색일: 2014. 6. 5).

28) 유엔 평화유지활동 홈페이지,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minustah/background.shtml>(검색일: 2014. 6. 5).

수 없었고, 결국 단비부대는 아이티의 거버넌스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었다.

4. 거버넌스 하락 지역의 한국군 활동: 이라크, 소말리아, 레바논

가. 이라크

이라크에서는 1958년 군주제를 붕괴시킨 쿠데타 이후 아랍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68년 사회주의 정당인 바트당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후세인(Saddam Hussein)은 1979년 집권한 이후 반체제 세력과 시아파 이슬람 세력, 쿠르드족의 반란을 강압적으로 진압하였다. 1991년 이라크의 걸프전 패배로 이라크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시아파의 반란이 일어났지만, 후세인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의 통치 질서가 붕괴되고 후세인이 처형되면서 시아파의 저항이 다시 시작되어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2003년 10월 결의안 1511호를 통해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주둔시켰으며, 미국은 이라크 정부와 통치기구를 재건하기 위해 안정화 작전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자유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하였으며, 2004년에는 이라크 평화지원단인 자이툰 사단을 추가로 파병하였다. 한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진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이전의 6년간과 비교해볼 때, 이라크의 WGI는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전체 변화의 53%에 해당하는 정치적 안정성의 하락이었다. <표 1> 참조

〈표 3〉 국가별 이라크 최대 파병 병력 규모(해당연도)

구 분	미국	영국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일본
병 력	250,000 (2003)	46,000 (2003)	3,600 (2004)	2,300 (2003)	1,657 (2005)	600 (2006)

출처: Christopher M. Blanchard and Catherine Marie Dale, "Iraq: Foreign Contributions to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6, 2007, pp.11~18

국제사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성이 악화된 이유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안정화 작전(stabilization operations)을 재건(reconstruction)과 안정화(stabilization)로 구분한다. 재건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인프라를 재구축 하거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영토를 활용하는 활동을 말하고, 안정화는 폭력사태의 재발이나 법질서의 붕괴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관리하고 줄여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²⁹⁾ 미국의 이라크 지원은 안정화 보다는 재건에 집중되었다. 이는 베트남전 이후 미군 교리에는 군사작전과 통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관행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³⁰⁾ 미국은 초기에 이라크 구조재건기금(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 IRRF)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약 21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군·경 연수와 장비 지원 등 이라크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2007년 이후였다.³¹⁾ 또한 미군을 포함하여 이라크에 파병한 연합군의 병력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표 3〉 참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후세인 정권이 붕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장 저항세력의 등장, 시아파의 보복 살해 등 치안 공백에 대한 대비를 갖추지 못했다.

29)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Stabilization Operations(FM 3-07)*, October 2008, pp.1~12.

30) Zaalberg, *op. cit.*, pp.66~69.

31) 외교부 홈페이지, “이라크 개황”, <http://www.mofa.go.kr>(검색일: 2014. 6. 5).

한국 정부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였지만, 인도적 지원과 재건 활동에 치중하여 이라크의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자이툰 사단은 지역 주민들과의 친화를 목적으로 현지의 문화, 관습, 종교의 존중을 강조하는 한편, 병원과 학교시설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안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장비를 지원했다.³²⁾ 이러한 활동은 이라크 재건이라는 국제사회의 노력 방향과 일치하였지만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인 종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라크와 같이 정치적 안정성이 낮은 내전국가에서는 무장 세력들을 무력화하고, 강력한 통치기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보병부대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소말리아

소말리아에서는 1991년 무장군벌인 아이디드(Mohamed Farrah Aidid)가 22년간 소말리아를 통치한 바레(Maxamel Siyaad Barre)를 축출한 이후 무장군벌간의 권력투쟁이 본격화되었다. 1991년에는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십만 명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1992년 7월 군벌간의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 Operations in Somalia, 이하 UNOSMO)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군벌들이 구호물자를 약탈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11월 미국 주도의 통합특수임무군(Unified Task Force, 이하 UNITAF)을 추가 파병하였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으로 소말리아의 상황이 안정되자 유엔은 1993년 UNITAF의 임무를 UNOSMO II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3년

32) 김병춘, “이라크 自由作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補完해야 하는가?(民軍作戰을 中心으로)”, 『軍事評論』第383號(2006), p.151.

아이디드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 수행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1995년 3월 모든 평화유지군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내전이 지속된 소말리아에서는 2000년 과도의회가 소집되어 하산(Abdul Kasim Salad Hassan)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법정연대(ICU: Islamic Courts Union) 세력과 과도정부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였다. 2009년 유엔의 중재로 ICU의 지도자인 아흐메드(Sheik Sharif Ahmed)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소말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경제난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소말리아의 군벌들은 해적조직을 결성하여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2008년 해적 퇴치를 위해 회원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1993년 7월 UNOSMO II에 상륙수부대를 파병하였으나, 소말리아의 치안 상황 악화로 1994년 3월 철수하였다. 이후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09년 해군 함정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다시 파병하였다. 한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진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이전의 6년간과 비교해볼 때, 소말리아의 WGI는 소폭 감소하였고, 사회적 책임성 지수와 정치적 안정성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말리아의 거버넌스 수준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해적 소탕에 집중됨에 따라 알-샤바브(al shabab) 등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활동을 차단하는데 실패했다. 소말리아의 해적은 내전이 시작되던 1990년 초부터 발생했다. 초기 자신의 해역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해적활동은 점점 성격이 변질되어 이제는 각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8년부터 해적활동을 막기 위한 다국적 연합 함대를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 보내 연합해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소말리아의 정치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995년 평화유지군 철수 이후 미국의 소말리아 개입은 경제적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8천만 달러를 제공하였고,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역시 소말리아에 매년 5,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³³⁾ 그 결과 과격 이슬람 단체와 반정부단체의 협박 및 위협에 위기를 느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과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국제 구호단체들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³⁴⁾

둘째, 소말리아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 2009년 소말리아 의회는 이슬람 법정연대(Islamic Courts Union, 이하 ICU)의 성직자인 아흐메드(Sharif Sheikh Ahmed)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2009~2010년 과도정부 예산의 70%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고, 2011년 전체 예산의 4분의 1가량이 정부 각 부처에서 흡수되었다.³⁵⁾ 이에 따라 다국적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감시그룹(International Security Group)은 2012년 8월자 보고서에서 “정치권은 철저히 분열돼 있고, 투명성도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된 채 의회가 소집됐다. 이들의 손으로 부패로 얼룩진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소말리아의 향후 정치 상황이 과도정부 시절과 다를 것이란 보장은 없다”³⁶⁾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패정치의 결과 2012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33) Tom Watkins, “After more than 2 decades, U.S. recongizes Somalia”, CNN, January 17, 2013.

34) 손현정, “소말리아 무장세력, 월드비전 등 3개 구호단체 철수 요구”, 『크리스찬투데이』, 2010년 8월 11일자.

35) 정인환, “20년 핏빛 내전 거쳐, 다시 혼란의 처음”, 『한겨레 21』 제927호, 2012년 9월 10일,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2846.html(검색일: 2014. 6. 11).

36) *ibid.*

아흐메드는 학자 출신의 하산 셰이크 모하메드(Hassan Sheikh Mohamud)에게 패배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안보리 결의 1816호에 따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아덴만에 파병하였다. 청해부대는 전투부대이지만 해적퇴치를 통해 자국선박 보호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소말리아의 거버넌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오히려 청해부대의 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소말리아의 거버넌스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소말리아에서는 해적이 되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말리아의 청년들은 해적이 되기 위해 무장군벌들의 세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해적행위를 차단하면 해적들이 내륙으로 들어와 약탈을 하거나 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말리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적의 퇴치와 더불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평화유지활동의 유형과 지원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다. 레바논

레바논은 1926년 시리아에서 분리된 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1943년 독립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독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세가 안정된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다. 이러한 혼란의 배경은 레바논의 독립을 원하는 기독교 세력과 아랍세계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이슬람 세력 간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사회집단의 대립은 주변국의 개입과 맞물려 1·2차 내전으로 발전하였다.³⁷⁾ 1차 내전은 1975년 기독교 세력이 레바논을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이 거점으로 삼으려던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습격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이에

37) 국방연구원 세계분쟁DB, http://www.kida.re.kr/wowww/dispute_detail.asp?idx=26
(검색일: 2014. 8. 8).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레바논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구소련과 미국이 다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UN은 1978년 유엔 레바논 임시군(U.N. Interim Force in Lebanon)을 파병하고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지와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1차 내전은 1990년 타이프 평화조약(Taif Peace Accord)으로 종식되었다.

2차 내전은 헤즈볼라(Hezbollah)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레바논 정부의 친시리아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2006년 7월 레바논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다. UN은 2006년 8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정전을 요구하는 UN결의안 1701호를 통과시키는 한편, UNIFIL의 병력 증강을 위해 유엔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결정하였고, 2007년부터 동명부대가 레바논 남부의 티르 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군이 레바논에 주둔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레바논의 WGI는 그 이전의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안정성 지수는 크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UN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된 이유는 먼저 레바논 내전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인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시리아로부터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일개 무장단체의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³⁸⁾ 그러나 헤즈볼라 또는 레바논 정부군이 군사력이 아랍권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해 온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사력 사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었다. 둘째, 국제사회가 군사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기독교 세력과

38) 여시동, “빈민구호로 충성심 확보 다양한 게릴라전술 배워”, 『조선일보』, 2006년 8월 8일자.

이슬람 세력의 갈등이라는 종교적 분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레바논 내전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폭력적인 보복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³⁹⁾

이러한 레바논의 사회·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레바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역시 서구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UN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1978년 UNIFIL이 처음 설치될 당시의 임무는 레바논 남부로부터 이스라엘의 철수 확인,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레바논 정부의 레바논 남부에 대한 통치권 확립 등 폭력사태를 중단시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었다.⁴⁰⁾ 이러한 임무는 2006년 2차 내전의 발발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구권 국가들과 수니파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레바논 정부에 의한 전후 복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 및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이란 등 시아파 이슬람국가들은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 있다.⁴¹⁾ 또한 OECD의 개발지원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대부분 UN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DAC의 비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대부분 UN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⁴²⁾ 따라서 레바논에서 폭력사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UN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은 UNIFIL의 일부로 레바논 내전에 파병된

39) UNIFIL 홈페이지, <http://unifil.unmissions.org/>(검색일: 2014. 6. 5).

40) 유엔 평화유지활동 홈페이지,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ifil/mandate.shtml/>(검색일: 2014. 6. 5).

41) Emile Combaz, "International Aid to Lebanon", www.gsdc.org/(검색일: 2014. 6. 5).

42) *ibid.*

한국 동명부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2006년 8월 UN이 UNIFIL의 증강을 위한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2007년 동명부대를 레바논에 파병하였다. 동명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의 감시정찰, 레바논 정부군의 남부지역 배치 지원, 민사작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임무에 따라 동명부대는 불법 무장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무기의 반입을 통제·감시 하는 등 작전 책임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Peace Wave’ 작전으로 불리는 민사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동명부대는 2009년 UNIFIL 사령관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UN을 중심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UNIFIL은 레바논의 정치적 안정성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고에서는 한국군이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한 국가에서 거버넌스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의 수준은 국제사회가 분쟁 당사자들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분쟁 종식에 따른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법치주의가 향상되었고, 아이티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반면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말리아에서는 사회적 책임성이 악화되었다. 둘째,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 국제사회의 노력과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이 국제사회의 노력과 통합되었는지 여부는 거버넌스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내전국가에서 활동 중인 국제사회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통상 내전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협 수준이 낮은 지역에 파병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실제로 아이티에 재건지원 부대를 파병한 한국은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한국군 파병 기간 중 아이티의 정치적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최근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활동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유엔의 요청에 따라 남수단의 재건 및 의료지원을 위해 한빛부대를 파병하였다. 유엔 남수단 임무단(UN Mission in South Sudan, 이하 UNITAF)의 임무는 남수단에 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키고,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2013년 남수단의 수도 주바(Juba)에서 시작된 폭력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유엔 안보리는 2014년 UNMISS에 부여된 임무의 우선순위를 난민 보호, 인권 감시, 인도적 지원 물자의 전달 지원으로 전환하고 군과 경찰 병력을 증원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는 주요 활동 방향을 난민 보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빛부대의 임무를 인도주의 및 재건 지원으로부터 분쟁 당사자의 내전 승리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군사적 개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건지원 부대로 파병된 한빛부대가 분쟁지역 감시, 난민 구조 등 폭력 행위로부터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⁴⁶⁾ 한빛부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43) 황진환 외, 『新국가안보론』(서울: 박영사, 2014), p.299.

44) 유엔 평화유지활동 홈페이지,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miss/> (검색일: 2014. 6. 5).

45) 유엔 안보리 결의 2132호(2013년 12월 24일)와 유엔 안보리 결의 2155호(2014년 5월 27일) 참고.

46) 김병륜, “한빛부대 파병 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빛’ 되다”, 『국방일보』 2014년 4월 3일자.

사회와 통합된 노력을 제공하기 위해 UNMISS에 부여된 임무를 재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부대의 성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내전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거버넌스 수준이 향상된 동티모르, 아프간, 아이티에서는 INTERFET, ISAF, MIF 등 다국적군이 투입되었다. 반면 한국군은 파병 병력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도주의 및 재건 지원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해왔다.⁴⁷⁾ 따라서 한국이 내전국가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군사력 활용과 관련된 교리 발전과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말리아와 동티모르의 평화유지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호주군의 교리와 교육 훈련 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군이 내전국가의 통치 질서 회복을 위한 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보다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진 지역에 우선 파병되어야 한다. 한국군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도주의 및 재건 지원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이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내전국가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엔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기 보다는 파병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정화작전 등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이에 따라 파병 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을 체계화

47) 황진환 외, 앞의 책, p.299.

48) KMAIR · 김인수, 앞의 글, pp.97~125.

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한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군 파병 지역의 거버넌스 수준과 내전국가 전체의 거버넌스 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파병된 지역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내전국가의 경우 지역별 통계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군의 활동이 거버넌스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둘째, WGI의 6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분쟁 당사자의 내전 승리 가능성과 분쟁 종식 효용을 중심으로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지수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발전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전국가에 대한 통계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파병 인원들의 경험은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축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개입 유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참여한 6개 사례 외에 다른 내전 사례들로 분석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파병 국가의 군사적 교리나 정책적 선호에 따라 개입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또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평화유지활동, 거버넌스, 기대효용모델, 내전 승리 가능성, 내전 종식 효용

<ABSTRACT>

ROK's PKO and Governance Change in Countries experienced civil war

KMAIR • Kim, In-soo

The achievements of ROK's Peace-keeping activities have been evaluated just by humanitarian performance or its contribution to promot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place this perspective with new approach for two reasons. Firstly, PKO is supposed to help establish sustainable peace in the countries in the middle of civil war. Secondly, it is widely accepted that good governance is a requirement for sustainable pea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ROK's PKO improved governance in six countries to which South Korea sent troop to participate in UN PKOs (East Timor, Afghanistan, Haiti, Iraq, Somalia, and Lebanon). The analysis on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demonstrates that governance was improved in East Timor(rules of law), Afghanistan(rules of law), and Haiti(political stability), even though a specific area of governance that experienced improvement varied across countries. In Iraq and Lebanon(political stability) and in Somalia(social accountability), however, governance was deteriorated in spite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order to explain this variation, this study used Mason and Fett's expected utility model to suggest two hypotheses. Major findings go as follows. Firstly, governance was improved where international society successively decreased possibility that civil war parties win military victory and increased utility that is expected to get from international society by ending the use of violence. Secondly, military engagement by international forces was helpless unless it can prevent civil war party from using violence to win military victory.

Thirdly, South Korean PKOs have not necessarily been integrated into international effort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However, this was not decisive factor to improve governance in civil war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regarding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ROK's PKO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Key words : PKO, Governance, Expected Utility Model, Probability of military victory, Utility of terminating civil war.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 이라크 전쟁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

설 인 효*

1. 서론
2. 전쟁 분석의 틀
3.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 이라크전 실패 이유 분석
4.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전 이후의 전쟁 예측
5. 결론 및 함의

1. 서론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전쟁은 당신이 원하면 시작할 수 있으나 당신이 원한다고 끝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과 이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전쟁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은 미래의 전쟁에도 계속 적용된다. 인간의 행동에는 교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국방연구원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국내의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미친 세계사적 영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전쟁사적으로도 이라크 전쟁은 많은 가설과 주장들이 시험된 무대였고 이제 그 유효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¹⁾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미친 세계사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평가와 고찰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근욱은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실패를 분석한 논문 및 저서에서 ‘전쟁의 미래(the future of war)’와 ‘미래의 전쟁(future war)’의 구분을 제안한 바 있다.²⁾ 미국은 새로운 군사력과 전쟁수행방식으로서 ‘군사혁신(Ré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³⁾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미래’, 즉 전쟁 수행 방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했지만, ‘미래의 전쟁’, 즉 전쟁을 둘러싼, 전쟁의 전반적 양상을 규정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국이 실패한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다.

1)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최근 『뼈아픈 교훈(Hard Lessons): 이라크 재건의 경험』 보고서를 번역 발간한 바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뼈아픈 교훈(Hard Lessons): 이라크 재건의 경험』(2013, 10). 본 보고서는 미 국방부 예하 ‘이라크 재건 특별감찰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수백 명의 인터뷰 내용과 수천 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정치 및 군사적 교훈을 주제별로 제시한 것으로 이라크 전의 정치, 군사적 교훈을 집대성하고 있다. 또 손석현은 이라크 전쟁의 안정화 작전 국면의 교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저서를 발간하고 있다. 손석현,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2)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7권 1호 (2010, 봄), pp.137~161; 이근욱,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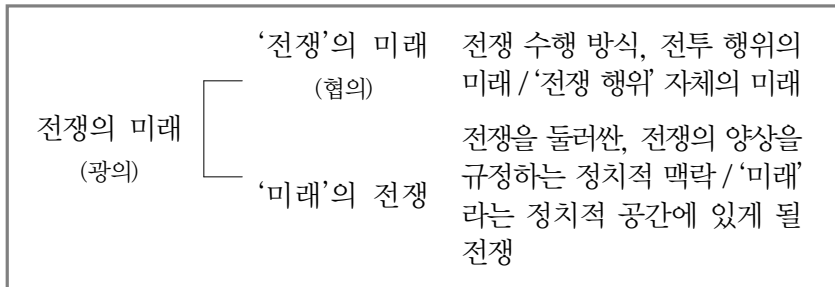
3) 군사혁신이란 기술, 무기체계, 교리, 조직 등 군사 분야 전반(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이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수렴되었다. Eliot Cohen,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Military Affair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7, No. 3. (September 2004), pp.395~407.

이러한 구분은 단지 탈냉전기 미국 국방개혁의 비전이자 구호로서 ‘군사 혁신’을 분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 일반을 분석하는 훌륭한 틀이 될 수 있다. 정치집단 간의 조직적 무력 투쟁으로 정의되는 전쟁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금언을 빌릴 필요도 없이 정치적 공간에서 시작되어, 정치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정치현상이다. 요컨대 전쟁의 양상은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결코 이해되고, 예측될 수 없다.

동시에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에는 정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없는 ‘군사의 독자적 영역’이 존재한다. 예컨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전력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상 정치적 요소와는 독자적인 현상이다. 그 결과 전쟁의 정치적 측면은 ‘미래의 전쟁’으로, 군사적 측면은 ‘전쟁의 미래’로 포착,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쟁의 정치적 측면이 전쟁의 군사적 양상을 규정하기도 하며, 군사적 측면이 특유의 정치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하나의 전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포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단어 사용의 일반적 용례를 고려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전쟁의 미래’라는 말 속에는 이근욱의 정의에 따른 ‘전쟁의 미래(협의)’와 ‘미래의 전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의의)‘전쟁의 미래’를 일반적인 전쟁의 미래 예측을 위한 개념으로 상정하면서 협의의 ‘전쟁의 미래’는 ‘전쟁’에 초점을 둔 미래를, ‘미래의 전쟁’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벌어질 전쟁의 양상을 예측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개념 구분



한 번의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에 대비하면서 ‘전쟁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난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그 전쟁을 대비하며 구상했던 ‘전쟁의 미래’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는가가 될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이 구성된다.⁴⁾ 나아가 이러한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라크전 이후의 전쟁에 대한 예측은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전쟁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교훈을 어떻게 도출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작업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먼저 분석의 틀로서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을 보다 엄밀히 정의하고 체계화한다. 이는 근대 이후 전쟁의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입각한 분석이 될 것이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을 다룬다. 이는 주로 이라크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4) 이근욱의 분석과 같이 이라크전의 전체적 맥락은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구상, 이에 임하는 전략적, 군사적 준비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전쟁 구상과 실제 이라크 전쟁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⁵⁾ 제IV장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전쟁의 미래 양상에 대한 예측으로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를 주제로 분석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의 분석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것이 향후 한국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2. 전쟁 분석의 틀

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근·현대전쟁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서양의 군사고전으로서 짧은 한 연구에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측면과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론이 제시하고 있는 근대 이후 전쟁의 기본적인 분석틀이다. 이라크 전쟁의 정치, 군사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굳이 별도의 장을 통해 근대 이후 전쟁의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라크 전쟁의 진면목은 바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 전쟁론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며 전쟁론 분석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축적되어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론이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해석을 통해 근·현대적 전쟁으로서 ‘국민전’

5) 이는 주로 이근욱의 논지를 따르고 있으며 이라크전 이후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을 보다 정교히 하고 분석틀의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전쟁의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은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전’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접근법의 유용성과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더불어 이라크전은 이와 같은 분석기법이 적용됨으로써 그 본질적 특성이 드러나는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 이후 전쟁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로서 ‘(전쟁의) 기묘한 삼위일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806년 당시 아우구스트 황태자의 부관으로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다가 치열한 패전을 경험하고 포로로서 1년 간 파리에 억류되었던 클라우제비츠는 프로이센 패전의 원인, 나폴레옹의 승전 원인 분석이라는 필생의 과제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1년간의 억류 기간 동안 프랑스 혁명군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군사제도와 군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정치, 사회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⁶⁾ 이를 통해 그는 당시까지 유럽의 전쟁사에서 이론으로서만 존재했던 ‘국민전’⁷⁾이 실제로 나타났으며 그 정치,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부들이 국민과 함께 가지 않고 스스로가 국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한 전쟁은 오로지 정부만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1793년 모든 상상력을 무색케 하는 힘이 출현하였다. 갑자기 전쟁은 국민 전체, 즉 모두가 자신을 시민으로 여기는 3천만 국민의 일이 되었다... 국민전체의 무게가 저울로 던져지게 되었다. 이제 확보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은 재래적인 한계를 모두 넘어서게 되었다. 어떤 것도 전쟁수행에 수반된 활력을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프랑스의 적들은 결정적인 위협에 처했다.⁸⁾

한편 전쟁론은 그 전체성, 분석의 체계성, 명료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저작은 아니다.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클라우제비츠는 원고의

6) Peter Paret, “The Genesis of *On War*”,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 Peter Pare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5~6

7) 이에 대해서는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제7장 ‘1. 국민전 개념의 이론적 전망: 계몽주의에서 클라우제비츠까지’를 참고할 것.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1996).

8)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4), pp.589~592.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관찰은 마치 칸트나 헤겔이 자신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프랑스에서 현실로 나타난 시민혁명을 관찰하면서 개념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에 비견되는 것이다. 박상섭, 1996, p.193.

9) Peter Paret, 1984, p.3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연 병사했기 때문이다. 1827년 쓴 것으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의 서문에 따르면 당시 그가 도달한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제1편 1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정되어야 할 미완의 원고 상태다.¹⁰⁾ 16년 이상의 장고한 집필과정의 산물일 뿐 아니라, 사고의 변화가 전작에 반영되지 못한 “전쟁론”의 미완성은 이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¹¹⁾

전쟁론 전반에 걸쳐 일견 모순돼 보이는 많은 명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1편 제1장에 제시된 종합적 시각에 입각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²⁾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행위로 정의되는 ‘전쟁’은 기본적으로 ‘결투’에 비유된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개념상 극단까지 치닫게 되는데 이는 내가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적이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개념상 이렇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한 번에 동원하여 일전을 벌이게 되는 ‘절대전쟁’이 된다.

그러나 현실의 전쟁은 ‘절대전쟁’까지 치닫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10) Clausewitz, 김만수 역, 『전쟁론 제1권(Vom Kriege)』 (서울: 갈무리, 2006), p.38

11) Aron은 심지어 “전쟁론”을 읽으면서 탐정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Raymond Aron, trans by Christine Booker & Norman Stone.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83), p.8. 전쟁론의 미완성은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크레펠트는 이에 대해 전쟁론에 제시되어 있는 상반된 명제의 존재가 인간 실존의 다이내믹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는 생명력을 획득하게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Martin van Creveld. “Eternal Clausewitz”, *Clausewitz and Modern Strategy*, ed. Michael I. Handel. (London: Frank Cass & Company Ltd, 1986). 저작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Clausewitz의 생애 및 지적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학자로 독일어 제5판 “전쟁론”을 출간하고 있으며 그의 저작집을 집대성하여 발간하고 있는 Whemer Halweg와 영미권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Peter Paret을 들 수 있다. Carl von Clausewitz, *Historical and Political Writings*, eds and tras. Peter Paret and Daniel Mor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12) Clausewitz, trans. by Paret, 1984, Book One. On the Nature of War, 1. What is War?

상대와 상황에 대한 정보도 불완전하고, 모든 힘을 한 번에 모을 수도 없으며, 동맹국의 지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 번의 승리가 최종 결과는 아니며 패배한 국가는 종종 일시적 불행으로 여기고 재기를 노리기 때문에 이번 전투에 투입할 힘을 제한하고 미래를 기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상의 ‘극단성’이 현실적 ‘개연성’으로 대체된다. 전쟁은 절대전쟁이 아닌 ‘현실전쟁’이 된다.

전쟁이 현실전쟁이 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전면에 나오게 된다. 전쟁의 극단성은 전쟁의 원래 목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한되고 조절될 계기를 얻게 된다. 내가 적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적을수록 상대의 요구도 적어지는 기제가 작용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전쟁의 본래의 동기인 정치적 목적이 전쟁행위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 뿐 아니라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정치적 행위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만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대중의 성격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매우 작은 정치적 동기가 그 자체로 전쟁의 본질을 뛰어넘는 효과,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생각할 때 전쟁은 곧 정치이며, 정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발현되는 진정한 정치가 된다.¹³⁾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전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독특한 본질상 전쟁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정치적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목적이 마치 횡포를 부리듯이 무조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은 선택된 수단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하며,

13)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일 뿐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수단이고 정치적 접촉의 연속이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되는 정치적 교류의 연속이다. Clausewitz, trans. by Paret, 1984, pp.86~87.

전쟁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은 과감하게 바뀔 수도 있다... 만일 정치가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특정한 군사적 이동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군 지휘관에게 엉뚱한 결과를 요구한다면 정치적 결전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마치 외국어를 완전히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그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¹⁴⁾

이와 같이 정치와 군사, 국민이 지닌 고유한 원리가 역동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전쟁은 클라우제비츠에 의해 카멜레온으로 정의된다. 전쟁은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마다 자신의 특성을 바꾸기 때문이다. 전쟁은 첫째, 증오와 적대감, 원초적 폭력성, 맹목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둘째, 전쟁은 개연성과 우연의 도박인데 여기서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개입된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종속성에 의해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도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전쟁의 세 가지 속성은 각각 국민, 군인(장군), 정치가에 의해 대변된다. 이것이 전쟁의 기묘한 삼위일체이다.

나.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현대전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클라우제비츠의 분석틀을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전쟁의 삼위일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전쟁 자체가 초래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요컨대 클라우제비츠가 원래 목적했고, 구상했던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제시한 ‘전쟁의 역동성’은 현대전쟁을 분석하는데도 훌륭히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전쟁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측면들을 조명하고 강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상술한 바 이근욱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실패 원인을 탈냉전

14) Clausewitz, trans. by Paret, 1984, p.608. 이러한 전쟁의 군사적 고유성은 일반적 으로는 ‘전쟁술’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최고지휘관의 요구에 의해 반영된다고 한다.

이후 미국이 시도해 온 국방개혁 비전으로서 ‘군사혁신 비전’의 한계로부터 찾고 있다. 이근욱의 분석은 미국이 군사혁신의 성공과 그로 인한 전투효율성 및 효과성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파국적인 결과에 처하게 된 것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규정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게 되는 정치적 맥락으로 이근욱이 강조한 것은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힘의 배분 상태이다. 즉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인데, 미국의 군사혁신론에는 이러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미래’ 예측에는 단순히 무기체제와 전략, 전술과 같은 군사적 요소뿐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또는 국제정치적 공간, 전쟁의 양상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전쟁의 삼위일체에 이러한 국제체제 수준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는 앞 절의 짙막한 소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 자체에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정치의 영역이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전쟁 자체가 두 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가 벌이는 대결이라면 이미 국제정치적 현상이다. 그는 전쟁에 작용하는 정치의 원리 중 하나로 ‘극단까지 치닫게 되는 폭력현상’과 대비되는 ‘내가 더 적은 희생을 요구하면 상대도 더 적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기한 바도 있으며 동맹의 원조를 전쟁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요컨대 클라우제비츠의 직접적인 지적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사고로부터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고려요소로서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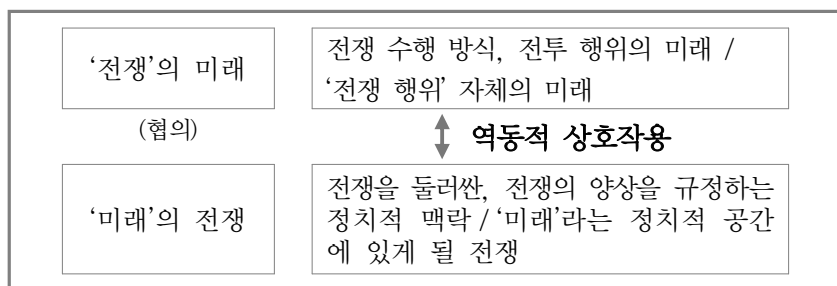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으로서 ‘국내정치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함은 이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바이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 패전 이후 미국은 하나의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에 임하는 정치적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모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초로 작성된 ‘와인버거 독트린’은 클라우제비츠의 명제에 대한 통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⁵⁾

요컨대 우리는 클라우제비츠의 논지로부터 그 동안 전쟁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전쟁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군사영역은 ‘폭력의 사용’이라는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독자성을 누린다. 그러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된 ‘전쟁술’의 영역조차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영역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전쟁의 고유한 영역에서 시작된 전쟁술의 변화와 전쟁 양상의 변화가 ‘전쟁의 미래’라 할 때 이렇게 변화된 ‘전쟁의 미래’가 미래의 정치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과거 전쟁사에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쟁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일시에 변화시켜 국제질서의 판도를 변화시키곤 해왔다. 따라서 미래 전쟁의 예측에서 ‘미래의 전쟁’ 만큼이나 ‘전쟁의 미래’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분석 및 예측도 필요하다.

〈그림 2〉 전쟁 분석의 종합적 틀



15) Michael I. Handel, 박창희 역, 『클라우제비츠, 손자 & 조미니(Clausewitz, Sun Tzu & Jomini)』 (서울: 평단문화사, 2000), p.57

결국 우리는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미래 전쟁을 예측하기 위한 ‘역동적인 분석의 틀’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동원된 무기체계와 군대, 전술, 전략적 요인들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국내,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의 총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은 특히 이라크 전쟁과 같이 세계사적 맥락을 결정하는 전쟁의 분석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 이라크전 실패 이유 분석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이끄는 알카에다에 의해 테러 공격을 당한 미국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1800년대 초 영국과의 전쟁 후 미 본토를 공격당해 본 적 없는 미국으로서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량살상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최우선적 안보위협 중 하나로 규정했다.

‘테러’는 현대 국방의 기본 메커니즘인 ‘억제(deterrence)’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도전이었다. 억제가 기본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이 초래할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그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으로 정의¹⁶⁾된다

16) Avery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35.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격에 대해 강력한 보복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격 행위 자체를 단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테러리스트들은 보복의 실체가 불분명해 이러한 억제가 어렵다. 이로부터 테러리스트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는 국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테러리스트에게 대량살상무기를 넘겨줄 가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전쟁’도 정당화되었다.¹⁷⁾

‘테러’라는 현상이 세계와 미국 안보의 핵심 주제가 된 것은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정치 및 국제정치적 환경의 본질적 특성과도 직결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소련이라는 양극의 한 축이 사라짐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T 산업의 폭발적 발전과 함께 이룩된 미국의 국력신장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국력격차를 더욱 현격한 것이 되도록 했다. 이로서 어떤 국가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자들이 힘을 모아, 잠자는 동안 등 뒤에 칼을 꽂을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와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이제 미국에 대한 국가적 도전이 좌절된 상황에서 ‘테러’는 미국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초유의 군사강국으로서 미국이 일개 테러집단에게 일격을 당한 것은 마치 강자가 잠자는 동안 등을 찔린 것에 비유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테러와의 전쟁이었다.¹⁸⁾ 문제는

17) 이진수, “미국의 대 이라크전 수행에 관한 연구: 정치적 목적과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3권, 1호(봄 2005), pp.192~193.

18) 홉스의 비유가 암시하는 바는 강자도 ‘리바이어던(중앙 권위)’의 창설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 국제사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리바이어던(Leviathan on the world level)’ 창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일방주의 보다는 국제사회의 동의에 기반한, 미국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정치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선택한 대응은 일방주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2차대전 후 국제사회가 이룩한 많은 국제법적, 제도적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며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배제하면서 ‘자위권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기존 국제법은 상당 부분 손상되게 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과감하게 나서게 되는데 일조한 것이 미국의 ‘군사혁신 성공’이었다. 군사혁신이 촉발된 것은 정보혁명에 의한 신기술이 군사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부터였다. 미국의 ‘국방개혁 담론(discourse)’으로서의 군사혁신은 소련의 붕괴로 적을 잃어버린 미국이 국방비의 감축을 요구하는 여론에 맞서 제시한 새로운 대안의 성격이 강했다.¹⁹⁾ 어쨌든 미국은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90년대 동안 눈부신 전승을 거두었다. 이라크전 결정의 중요한 한 원인이 ‘군사적 낙관론’이라 할 때²⁰⁾ 이는 군사혁신의 성공에 기인한 바 크다.

실제로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다국적군의 전격적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큰 어려움 없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독재자 후세인을 생포하였으며, 43일 만에 주요 전투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적 성공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0년 8월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활동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쟁은 지루하게 계속되었으며, 이라크 현지인 뿐 아니라 미국 군과 다국적 군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었다. 공언했던 대량살상무기조차 발견하지 못한 미국은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침략자로,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하는 학살자로 전락했다.

19) 설인호,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pp.9~10.

20) 이근욱, 2011, pp.87~93. 물론 이러한 낙관론에는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기대 외에 미국의 전쟁이 ‘민주주의 해방전쟁’으로 받아들여져 이라크 내에서 환영을 받으며 쉽게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실패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소위 이라크 해방작전 IV 단계에서 미 육군이 노정한 다양한 문제는 이제까지 상당한 수의 문헌들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라크전에 임하는 미 육군의 구조, 문화, 인적자원 및 그 관리체계, 무기체계 및 군사교리, 유관기관과의 협조 능력 등을 지적해왔다.²¹⁾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 자체보다 이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실패 원인을 이라크 전쟁의 양상을 규정할 정치적, 국제정치적 공간의 변화를 미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특히 탈냉전기 미국의 ‘미래전쟁 구상’, 즉 ‘군사혁신 담론’의 한계에서 찾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지적 및 분석은 향후 ‘전쟁의 미래’를 구성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이룬다.

상술한 바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혁신은 정보혁명에 의한 신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적 군사혁신을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진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은 소련과 대결하던 서유럽의 전장에서 처음 구상된 것으로 알려진다.²²⁾

21) 부형욱,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문제점 분석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전쟁사 연구 워크숍 - 미국의 정책결정과정과 안정화작전 분석』 (2012. 11. 22).

22)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군사혁신은 1970, 80년대 소련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소련은 미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센서 기술을 결합하여 ‘정찰-타격 복합체계(reconnaissance-strike complex)’를 구축할 경우 전장에서 지상군의 진격 없이 후방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의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Andrew W. Marshall, ‘Forward’, *The Military-Technological Revolution: A Preliminary Assessment*(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02).

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정규적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 간의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냉전이 끝난 후 미 국방당국의 고민은 소련 위협의 소멸로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함께,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였다. 그 이유는 군사혁신의 과거사에 관한 연구들이 한결같이 한 시대의 최대 군사 강국은 결코 군사혁신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어 왔기 때문이다.

군대는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조직이다. 한편 강대국의 군대는 지난 전쟁에서 승리한 무기체계와 조직,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한 시대의 최대 군사 강국의 군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조직에게 시험되지 않은 새로운 전쟁 개념을 기초로 무기를 바꾸고, 조직을 혁신하고, 인적 구성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군사혁신은 주로 지난 번 전쟁에서 패배한 2위 그룹의 국가 군에서 나타났다.²³⁾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과 함께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을 눈부시게 성공시켰다.²⁴⁾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이후 코소보전, 아프간전 등에서 군사혁신의 놀라운 군사효과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은 첨단무기에 의한 정밀타격, 효과중심의 선별적 파괴에 의한 마비의 달성이라는 점에서 초기 군사혁신 전문가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대부분의 군사효과성을 달성한,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의 완성’이었다고

23) Richard O. Hundley,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What Can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Tell Us About Transforming the U.S. Military?*(Santa Monica, CA: RAND, 1999).

24) 미국이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을 성공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이 베트남전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일련의 국방개혁을 단행했었던 점,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은 소련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던 냉전 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점, 미국의 자유주의적 사회분위기와 군대문화가 혁신을 환영하고 또 정보혁명에 의한 군사혁신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적 성공이 역설적으로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는 몇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전쟁의 승리는 군사작전 이외의 많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라크 전의 군사작전은 전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고려와 준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컨대 초기작전에서 첨단무기에 의한 정밀타격과 지상군 투입을 동시에 실행하여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조성하는 복합적 작전이 구사되었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가 동원되어 3,000만 명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고 대민 방송을 통해 후세인 일가의 호화생활을 공개한 점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⁵⁾

그러나 이러한 고려와 조치로 전쟁의 전 양상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이라크 현지의 정치적 상황과 종파분쟁, 특유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전투능력의 압도적인 향상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흔히 미 육군의 ‘기술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향’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미 육군의 오랜 전통이거니와 군사혁신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는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단연 불확실성에서 찾았다. 따라서 그의 전쟁 개념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전쟁의 ‘동태적 상(象, dynamics of war)²⁶⁾’과 함께 ‘전쟁의 안개(fog of war)’ 개념이다. 전쟁의 안개란 전장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통칭하는 것이다. 탈냉전기 미국적 군사혁신 개념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오웬스 제독의 저술 제목이 ‘전쟁에서 안개의 제거(Lifting the fog of war)²⁷⁾’인

25) 김호삼, “이라크전의 교훈과 미래전 전망”, 『군사연구』 제119집(2003. 12), pp.34~35.

26) 여기서 ‘동태적 상’이란 어느 한 측면에서만은 이해할 수도 포착할 수도 없는 전쟁의 동태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는 ‘전쟁의 삼위일체’ 개념에 압축되어 있다.

27) William A. Owens, *Lifting the Fog of War*(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군사혁신의 성공이 가져온 ‘자신감’이 전쟁을 지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오만함을 낳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혁신 담론은 미국 단일패권 하 미국이 수행하게 될 전쟁 형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았다. 군사혁신 담론의 형성 초기에 ‘정보혁명에 의한 군사혁신’은 흔히 군대에서 인력의 비중을 낮춰 국방비를 혁신적으로 삭감하고 적은 희생으로 신속한 전승을 달성하도록 할 비전으로 소개되곤 했다. 이는 인력의 손실을 극히 기피하는 미국적 문화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첨단기술에 의한 전투효과성의 눈부신 향상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육군 병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하였다.

미국의 군사력 구성에서 병력의 경시는 탈냉전의 진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이익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진 미국에게는 주요 거점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이동하여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소규모 원정군(small scale expeditionary forces)’이 필요했다. 정치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세계 모든 곳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부대가 소규모화하면서 약화된 화력은 첨단무기의 정밀성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이 마주한 전쟁은 충분한 인력의 투입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비정규전,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이었다. 이것은 탈냉전 후 조성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벌어질 전형적인 전쟁의 양상이었다.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정규군을 동원하여 정면 대결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 국가들은 다른 형태의 전쟁을 구상해야 하며 그것은 곧 게릴라 전쟁과 테러리즘의 형태를 띤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전쟁 실패’는 이렇게 전쟁의 양상 자체를 규정하는 ‘정치적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것은 상당 부분 역설적으로 ‘전쟁의 군사적 영역’에서의 눈부신 성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오만함, 자신감을 국제체제의 특수한 형태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행위패턴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²⁸⁾ 즉 미국의 오만함은 군사혁신의 성공이나 기술 중심의 군사문화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극체제 하의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동선은 양극체제나 다극체제의 경우 체제의 한 극을 이루는 강대국이 항상 다른 강대국들을 의식해야만 하지만 단극체제에서는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권국은 ‘야심, 안이함, 자부심’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전쟁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패권국은 단순히 적 군사력의 격퇴뿐 아니라 정권교체까지 이루려는 ‘야심’을 갖게 되고, 우월한 국력으로 목표를 쉽게 달성할 것이란 ‘안이함’ 속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며, 높은 ‘자부심’으로 쉽게 패전을 인정하고 전장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4.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전 이후의 전쟁 예측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미국은 현재 최악의 재정 적자 상황을 겪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쓴 전비는 약 4조 4천억 달러(약 4,697조원)로 2012 회계연도 미 연방 총 예산 3조 7,290억 달러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현재 물가로 계산한 2차 대전 시의 전비 4조 1천억 달러마저 웃도는 수치이다.²⁹⁾ 미국은 2013년

28) 이동선, “21세기 국제분쟁의 새로운 양상과 국제적 대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심으로,”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2011. 8).

29) 미국 브라운 대학교 왓슨국제연구소 발표(2011.6.29)의 ‘전쟁비용’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철군 시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정부 공식 전비는 약 1조 달러이다. 『경향신문』, “미 연구소, ‘9.11테러 이후 전비 2차 대전 맞먹어’” (2011.7.1).

3월 ‘예산자동삭감조치’인 ‘시퀀스트레이션(sequestration)’ 발동 이후 10월에는 연방정부 폐쇄를 겪는 등 최악의 재정 적자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연방재정 상황은 국방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은 향후 10년 간 4,870억 달러,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매년 대략 미 국방비 10% 수준의 삭감을 의미하는 액수이며 이것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³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전쟁이었다면 이라크 전쟁은 패권국 미국의 오만함이 더욱 드러난 전쟁이었던 것으로 혹평되기도 한다.³¹⁾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보다 더욱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은 것은 이라크였다. 지난 10여 년의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고, 201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강대국의 흥망과 관련된 케네티의 ‘군사적 과대팽창(military overstretch)’ 개념³²⁾을 떠올리게 한다. 패권국은 확장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상회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지점을 넘어서면 팽창을 통해 거둬드리는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모든 패권국은 언젠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전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 미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성이 무너질 경우 그 영향은 모든 지역에 미치게 되므로, 미국은 어느 한

30) 미 국방부는 2013년 초반부터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여파를 분석한 자료들을 제공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3/0213_sequestration/

31) 이근욱, 2011, p.27.

32)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New York: Vintage Book, 1988).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재정 악화 상황에서 이러한 책임의 이행은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기피, 실패는 이러한 현상의 전조(前兆)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는 소위 패권국가의 ‘내적 피로(internal fatigue)’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³³⁾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강대국 부상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양극체제의 등장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이나 구성주의 계열의 이론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해도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탈냉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시각이 우세했으나 최근 미국 내에서도 미중 간 갈등을 전망하는 시각이 다시 우세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이 ‘판다’인가 ‘용’인가의 논쟁에서 중국이 ‘용’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닌 것이 되었다.³⁴⁾ 양국의 국방, 군사정책이 점차 ‘접근’ 대 ‘반접근’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³⁵⁾

33) ‘내적 피로’ 또는 ‘패권적 피로(hegemonic fatigue)’란 패권국 국민이 세계적 패권을 운용하는 부담감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세계적 개입에 대해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이론의 일부로 다뤄진다. ‘군사적 과대팽창’이 주로 과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한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내적 피로’ 개념은 ‘의지’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 Kevin Rudd, “Beyond the Pivot: A New Road Map for U.S.-Chinese Relations”, *Foreign Affairs*, Vol. 92, No. 4.(March/April 2013).

35) 최근 중국의 군사전략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Access/Area-Denial)’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김제엽(2012),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만일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시키고 미국이 ‘군사적 과대팽창’과 ‘내적 피로’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함으로써 국제체제의 구조를 사실 상의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전환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라크전 이후의 ‘(광의의)전쟁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해야 할까? 먼저 전쟁의 양상을 규정하는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국제정치적 공간(미래의 전쟁)’에 대한 고찰로부터 분석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근옥은 양극체제가 1945년에서 1991년 사이의 냉전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강대국 사이의 전면전 보다는 양 강대국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전쟁의 양상에 주목했다.³⁶⁾ 이는 강대국 사이에는 핵무기에 의한 ‘상호 억지’가 작용하여 사실 상 전면전이 회피될 것이고, 마치 냉전기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근옥은 향후 가장 주목되는 전쟁 양상은 강대국 간 전면전보다 강대국 중 어느 한쪽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제한전’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강대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약소국이 저항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³⁷⁾

한편 이동선은 앞서 단극체제 하 ‘전쟁의 장기화’ 원인을 패권국의 행태로부터 분석한 논문에서 향후 양극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쟁은 다시 단기전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는 국력의 쇠퇴와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 연구』 제54호(겨울 2012). 이는 중국이 자신의 이익권 내에 미국의 군사적 투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어세이머는 2001년 저서에서 미국이 ‘중국판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에 대해 대비해야 함을 말한 바 있다. John J. Mearsheimer,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2001), pp.401~402. ‘먼로독트린’이란 미국이 19세기 초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패권국이 성장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전형적인 정책 유형을 상징한다.

36) 이근옥, 2011, p.32.

37) 그러한 점에서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에도 많은 시사점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한다. 이근옥, 2001, p.32.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경험으로 미국의 야심과 안이함, 자만심이 감소될 것이며, 또 새롭게 부상할 중국이나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해, 또는 상호 전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력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적 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⁸⁾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제한전의 양상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강대국 사이의 전쟁양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핵무기의 존재로 인하여 강대국 간의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³⁹⁾ 그러나 양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결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니다. ‘냉전’이라는 용어가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전쟁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군사적 갈등과 적개심이 팽배한 시대’로 정의된다고 할 때 양 극을 이루는 초강대국 사이의 ‘가상대결’과 이에 입각한 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그 양상은 중대한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각 진영을 상대로부터 보호하고 따라서 그 진영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권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를 겨냥한 군사력의 개발과 전략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일정한 방식을 통해 상호 비교될 것이고, 그 결과가 전 세계적인 세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대결 양상의 전개과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38) 이동선, 2011, pp.389~394.

39) 강대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부상국이 패권국 국력의 70%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전쟁이 발발한다고 예측한다. 다만 이러한 이론은 모두 핵무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과거의 사례에 입각하여 구축된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핵전쟁에 이르지 않는 매우 제한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방식의 소규모 분쟁과 군사적 대결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문제나 센카쿠 문제 등을 둘러싼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의 ‘접근’ 및 ‘접근거부’ 능력의 상대적 우위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단순히 국제체제 상의 극성의 변화 및 그 결과 즉, ‘미래의 전쟁’ 뿐 아니라, 전쟁 수단과 수행 방식 상의 변화인 ‘(협의의)전쟁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전쟁의 미래’로서 현재의 ‘군사혁신’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몇 가지 수준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군사혁신의 전파’ 양상 및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군사혁신이 ‘전쟁수행 방식의 극적인 변화’로 정의된다고 할 때 군비경쟁은 ‘군사혁신이 발생한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군사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표준적인 전쟁과 군비’ 모델⁴⁰⁾에 입각하여 군사력 건설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군사혁신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표준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군사력 보유 수준 보다 ‘군사혁신의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해진다.⁴¹⁾

이와 같이 한 장소에서 발생한 군사혁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군사혁신의 전파’로 정의한다. ‘군사혁신’ 현상과 별도로 ‘군사혁신의 전파’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군사분야에서 발생한 혁신적 변화가 주변국가로 전파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군사적 변화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²⁾

필자는 이와 같이 탈냉전 이후 미국이 추진해 온 ‘군사혁신’의 전파에 관한 한 논문에서 ‘군사혁신의 전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국가에서

40) 여기서 ‘표준적인 전쟁과 군비’ 모델이란 당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군사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그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별 국가의 군사태세와 군사력 건설은 각 국가들이 처한 위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무기체계, 훈련방식, 전술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41) 국제정치에서 ‘군사혁신’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군사혁신’이 발생할 경우 세력균형이 일시에 크게 변경된다는 점이다. 설인호, 2012, p.143.

42) 설인호의 위 논문을 참고할 것.

이루어진 ‘군사혁신 수용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됨을 주장한 바 있다. 전쟁 수행 양상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혁신은 처음 성공한 나라의 정치, 사회, 군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 한 채 다른 나라로 전파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프러시아 모델의 전파과정에 관한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사혁신 전파 / 수용의 완전성’이 ‘군사효과성’의 엄밀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1865년에서 1870년의 ‘독일통일전쟁’ 기간 동안 몰트케가 이끄는 프러시아 군의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은 그 탁월한 군사효과성으로 인하여 세계 육군의 표준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00년이 되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도 상 모두가 이 모델에 기초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프러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총참모부(general staff)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완전히 구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⁴³⁾ 특히 프랑스의 경우 군주국 독일과는 다른 공화정 체제 하에서 총참모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1차 대전의 초기 국면에서 프랑스는 독일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고, ‘참호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프러시아 모델’의 군사효과성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전쟁 초기 신속한 동원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독일의 전술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전쟁은 독일의 계획과 달리 장기전, 총력전이 되었다.⁴⁴⁾

이러한 사례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과정에 주는 함의는 뚜렷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방력과 군사력을 측정할 때 ‘미국이 이룩한 군사혁신 모델’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 여전히 열세에 있는

43) 이 모델의 전파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일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인호, 2012, pp.149~156.

44) 설인호, 2012, pp.156~158.

첨단 감시자산 및 정밀타격무기 보유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열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충분한 차단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도 이러한 사례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군사혁신의 전개양상과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준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이 ‘군사혁신의 진정한 완성인가’에 대한 평가이다. 군사혁신의 실체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해 온 군사혁신은 대체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인 것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혁신의 역사적 사례들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의 군사혁신이 과연 정보혁명의 군사적 잠재성을 완전히 구현한 ‘군사혁신의 완성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 이유는 군사혁신의 과거 사례에서 많은 경우 하나의 혁신은 진정한 혁신의 시작일 뿐, 혁신의 최종 형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났기 때문이다.⁴⁵⁾ 예컨대 현재의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군사전력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즉 사이버전이 진정한 군사혁신의 완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기체계 자체의 속성 및 전장 고유의 논리로서 ‘공격과 방어의 상대적 우위’에 관한 분석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추구해온 군사혁신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감시 및 정찰 자산, 모든 전장의 구성요소를 하나로

45) 예컨대 탱크의 경우 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이었지만 그것의 군사적 잠재성을 완전히 구현한 것은 ‘전격전’을 완성한 독일이었다.

46) 다음 세대의 군사혁신으로서 유력한 것들로 ‘전 세계 실시간 타격력’과 ‘로봇전’ 등을 들 수 있다.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 상대의 방공망을 자유자재로 돌파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같은 탁월한 군사효과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혁신을 실현한 측과 그렇지 못한 측 사이의 전쟁에서였다. 상술한 바 군사혁신이 전파되어 주요 강대국이 유사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전장의 양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공자(功者)와 방자(防者) 중 어느 편을 더 유리하게 하는가이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쪽이다. 세력권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세력 투사를 막는 측이다. 연안을 방어하는 측이 고도의 스텔스 기능으로 무장한 화력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 이를 뚫고 침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⁴⁷⁾

한편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결의 양상과 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해진다. 즉 양측 군사력 건설의 ‘상대적 경제성’에 대한 평가이다. 예컨대 냉전기의 마지막 순간 ‘전략방위 구상(SDI)’을 둘러싼 군비 경쟁에서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밀린 소련은 결국 스스로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미국은 천문학적 자원을 쏟아 부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침투 무기와 사이버 전으로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값싼 수단이 개발될 경우, 전력과 전략의 균형은 일시에 뒤바뀔 수 있다. 공자와 방자의 ‘상대적 경제성’은 무기체계의 속성과 전장의 고유한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47) 이것이 현재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의 ‘공해전투’의 대결이다. 이 대결의 특수성은 공방 양자가 공히 장거리 정밀공격능력을 포함한 첨단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군사혁신이 추진되기 시작한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5. 결론 및 함의

요컨대 향후 이라크 전쟁과 그 결과로 초래될 ‘전쟁의 미래’는 양극체제의 도래와 함께 양대 강대국의 가상전쟁과 군비경쟁 및 이들의 주변부에서 발생하게 될 제한전의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양대 강대국 사이의 군사적 경쟁은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혁신’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또는 ‘군사혁신의 진정한 완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현재의 군사혁신을 양측 모두 실현한 경우 공격과 방어 중 누가 유리한가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에 의해 상호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회피되면서 중, 장기적인 군비경쟁의 양상에 따라 승패가 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양측 군비경쟁의 ‘상대적 경제성’이 그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강대국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기본적으로 ‘제한전’이 될 것이며 양 강대국 사이의 첨예한 경쟁에 따라 장기전이 되기보다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에 개입하는 양 강대국은 단극체제 하의 미국과 달리 야심과 안이함,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쟁에서도 강대국과 주변국 사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정규전, 대반란전은 중요한 전쟁의 일부가 될 것이며, 양 강대국은 상호간의 경쟁에 몰두한 사이 또 다시 이러한 전쟁양상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라크전에서의 교훈은 미래의 전쟁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표준을 따라가면서, 또한 한국이 처한 특수성 속에서 국방과 군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⁴⁸⁾ 따라서 미래 전쟁의

48) 여기서 ‘세계적인 군사표준’이란 1990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이룩해온 정보혁명에 기반한 전쟁수행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후 일련의 전쟁에서 기존의 전쟁수행 방식을 압도하는 탁월한 군사효과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은 전세계로 힘을 투사하고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를 반영한

양상을 전망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 및 군사발전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첨단의 군사력으로서,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체제의 구축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군대를 하나의 표준이자 준거로서 삼아 국방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 한국의 국방현실이 충분히 고려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국방발전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특히, 이라크전 실패의 교훈은 미국의 군사력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며, 미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로 인해, 국제체제의 패권국으로서 체계적으로 범하게 되는 오류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앞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전력과 전략의 우수성은 수용하되 한국과의 차이, 고유한 취약성은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수정,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⁴⁹⁾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현실에서 대비해야 할 다양한 분쟁 및 전쟁 양상에 대해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라는 두 측면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우리 고유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국제관계이론과 전쟁사 분석의 교훈이 상호 교류하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동안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전쟁사에 대한 보다

것으로 모든 측면에서 우리 군에 유효한 것인지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 49) 예컨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인도적 지원, 대량살상무기 제거, 북한 내 질서회복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수행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지상전력의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ruce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Report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3).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군의 ‘군사 개혁 비전’은 여전히 ‘정예화된 첨단군’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입각해 볼 때 첨단 전력으로서 미국군의 면모 보다 이라크전 실패를 거울삼아 안정화 작전 발전에 주력했던 미국의 노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 이라크전 이후 전쟁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고려사항의 일부를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다. 향후 전쟁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이론의 연구뿐 아니라 전쟁사의 다양한 교훈과 전장 고유의 논리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이라크 전쟁, 전쟁의 미래, 미래의 전쟁, 군사혁신, 군사혁신의 미래,
미중 군사경쟁 제한전, 안정화 작전

<ABSTRACT>

The Iraq War and the Future of War: The Implication of Iraq War on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Seol, In-hyo

This study analyzes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of Iraq War by the framework which divides the concept of 'the war of the future' meaning the mode of war conditioned by surrounding future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concept of 'the future warfare' implying the simple aspect of warfare, aspects of fighting itself which reflects on the innovation of measure of warfare. Moreover the paper anticipates 'the future warfare and future war' by using the same framework and relat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e failure of U.S. intervention in Iraq War originated in preparing for war based on the wrong future war image. The U.S. RMA,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 which is a defense reform project after the demise of Cold War, successfully anticipated the future warfare, but it failed to prepare the country for the war of the future. Under the unipolarity formed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U.S. should be prepared for both the asymmetric warfare and guerrilla warfare because there has been a huge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U.S. and other states, which lead into that the mode of war became a typical asymmetric warfare and guerrilla warfare. The war of the future after the Iraq War should be anticipa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lative decline of U.S. power and rise of China was happened as the result of Iraq War, so the bipolarity has been come again. Under this bipolar circumstances,

first virtual military conflict, which means there will be no real war with the existence of mutual nuclear deterrence and competition of military buildups between U.S. and China, will be central issue, and the limited war between two super powers and regional small powers will be possible in terms of future war scenarios. Especially the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will be shaped by the result of the second stage of RMA, the result of diffusion of RMA which was first started by U.S.

Key words : Iraq War, the war of the future, the future warfar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the future of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limited warfare, stabilization operation.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중국 광복군 유적지 현장조사/ 군사과학원 학술교류 방문
 - 기간 : '14. 6. 10 ~ 6. 13(3박 4일)
 - 장소 : 서안(광복군 유적지), 북경(군사과학원, 독립운동 유적지)
 - 인원 : 연구소장, 김경록 연구원
 - 내용 : 광복군 유적지 현장조사/ 자료수집
 한·중 군사연구 학술교류 증진
 자료협력 구축 및 공동사업 모색
 - * 중국 참석인원 : 곡애국 부장(군사과학원), 왕메이 부원장(서안 역사박물관) 등 30여 명
- 중국 『제9회 국제 손자병법 심포지엄』 참가
 - 기간/장소 : 8. 24 ~ 27 / 중국 칭다오
 - 참가인원 : 군사사부장(양영조), 국제분쟁사 책임연구원(손석현)
 - 발표주제 : 손자병법의 전략적 지혜와 적용
 (전쟁관과 평화사상을 중심으로)

○ 제40회 국제 군사사학회 참가

- 기간 / 장소 : 8.30 ~ 9.7 / 불가리아 베르나
- 인원 : 연구소장, 서상문 책임연구원
- 내용 : 군사사 연구의 국제적 동향 파악
각국 군사사 관련 기관 및 인사와의 교류

○ 2014년 편집위원 위촉

- 위촉기간 : '14. 8. 1 ~ '17. 7. 31
- 위촉인원 : 10명(재위촉 포함)
기광서, 김용달, 김종수, 김태국, 이근욱, 이민웅,
이재범, 정용욱, 진석용, 홍규덕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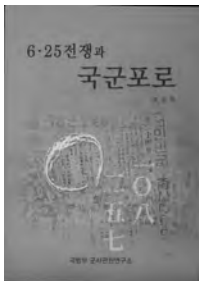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6·25전쟁과 국군포로 • 조성훈(국방사부) • 신국판 • 2014. 6. 30. 	이 책은 ‘돌아오지 않는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미군, 공산권 자료 등을 기초로 포로의 발생배경으로부터 한국군과 유엔군포로의 규모, 포로수용소 위치와 대우, 수용 중 사망자, 북한군 편입과정과 규모, 미귀환 포로규모와 북한 생활, 귀환대책 모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했음. 또한 국군포로 외에도 유엔군포로의 고통과 희생을 곳곳에 반영하여 그들도 기억하려 노력했음.
통계로 본 6·25전쟁 • 박동찬(전쟁사부) • 신국판 • 2014. 6. 30. 	본서는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전11권)』 연구편찬사업의 성과를 종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본서는 기존의 6·25전쟁 관련 통계를 2000년도 이후 공개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최신화하였고, 미국은 물론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음. 또한 본서는 국군과 유엔군은 물론 경찰, 민간인, 공산군의 각종 현황과 전쟁기간 중 정치·경제·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음. 본서가 우리 국민들이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국내외 전쟁사 연구자들에게 연구자료 활용되기를 기대함.

구 분	내 용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 • 손석현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4. 7. 24. 	현대전에서 안정화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 본 연구소에서는 이라크 전쟁사 연구의 일환으로 이라크 재건 사업을 다룬 『빼아픈 교훈(Hard Lessons)』을 2013년에 번역·발간하였고, 이번에 미국의 안정화작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을 발간하였음. 본서는 미국의 공간사와 해외의 우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편찬하였으며, 향후 한반도에서의 안정화작전 수행을 위한 연구와 전사연구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함.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82(2012. 3), p.40.
 -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 Mcgrow-Hill, 2010), pp.100~110.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 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군사지 편집간사)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종수(군산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명환(前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재범(경기대학교)
정용욱(서울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편집간사

한환구(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4/9(第92號)

2014년 9월 10일 印刷

2014년 9월 15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發行人 李 陽 九

印刷處  14088696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92. 2014. 9

- | | |
|-----------------------------------|---|
| Lee, Nae-joo | The Peace Movement in Britain and Norman Angell's Ideas on Peace, 1900~1920 |
| Oh, In-hwan | The July Crisis and the Causes of the First World War Revisited: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s of Germany and Russia |
| Lee, Sin-jae | A Study on the Korea Force Vietnam Network(KFVN)'s Installation and Operation during the Vietnam War |
| Woo, Seok-hoon | The Great Wall of Goguryeo in Liao-River Area |
| Jeong, Wan-hee,
Min, Seung-sik | A Study on the Combat Power Index of Warship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 Kim, Yeong-joon | Training methods and military discipline of Chousun musketeer around the 17th century |
| Seok, Hua-jeong | The Russo-Japanese Secret Agreement and Russia's Policy toward Mongolia |
| Kim, Yeong-ho | A Study of US Policy on the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ntered on the US Recogni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of the Military Occupation in Korea |
| KMAIR · Kim, In-soo | ROK's PKO and Governance Change in Countries experienced civil war |
| Seol, In-hyo | The Iraq War and the Future of War: The Implication of Iraq War on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